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440-11

2022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2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간사

오늘날 우리 군은 지난 70여 년과 다름없이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사명을 지속 수행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약적인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위협에 비전통적 위협이 더해지고, 끊임없는 '경쟁(Competition)'과 함께 회색지대 분쟁이 일상화되는 등 안보환경은 갈수록 복잡하고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커지고, 주요 군사강국 간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략적 관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 테러,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위를 향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은 전략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통합·능동 방위'가 가능한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닌 힘의 우위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우리 군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적시적·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선도적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최적화되도록 군구조와 교육훈련 전반을 발전시키는 한편, 국방 R&D체계와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이 가능한 국방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고 범정부적인 방산수출 지원에 앞장섬으로써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 안보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국방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와 재외국민 보호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의 군대로서의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국방운영의 투명성 증진 등 건강한 민군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장병 의식주와 의료지원체계, 인권보호체계를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국방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대해 국민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방분야의 정책과 현안의 세부 내용을 이번 「**2022 국방백서**」에 소상히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국방백서가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국방정책과 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국방부장관 이 종 섭

목차

01 안보환경

제1절 세계 안보정세 008
제2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012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021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제1절 국가안보전략 036
제2절 국방전략 039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제1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046
제2절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057
제3절 포괄적 안보위협 대응능력 강화 063
제4절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078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082
제6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보장 097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제1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106
제2절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111
제3절 국방 AI·디지털 전환 추진 115
제4절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121
제5절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 128
제6절 예비전력 정예화 134
제7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139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제1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152
제2절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대응능력 강화 160
제3절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166
제4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170
제5절 국방교류협력 심화·확대 174
제6절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재외국민 보호 197

06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제1절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214
제2절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221
제3절 국민과 상생하는 군 운영 239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합리적 배분 252

07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제1절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 264
제2절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 및 보상 강화 269
제3절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 281
제4절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290

특별부록

1.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300
2.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309
3.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319
4.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323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330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 현황 332
3.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333
4. 남북 군사력 현황 334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335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336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337
8.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평가 338
9.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341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342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352
12.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 353
13.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유형 354
14.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55
15.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61
16.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367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369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370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371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373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374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375
23. 국방기구도 376
24.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378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98

제1장

안보환경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제2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UN총회 기조연설(2022년 9월) /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23년 1월) / 한-아세안 정상회의(2022년 11월)

제1절

세계 안보정세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영유권 분쟁, 국가 간 현안 등 갈등요인으로 인한 지역별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1.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 증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 간 힘의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정책에 있어 핵심지역으로 상정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을 중심으로 협력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동맹국 간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등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등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1] 회원국과 결속을 다져나가면서 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인프라 투자확대 등 친중화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와 자국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과 식량 수급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북대서양조약기

1)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상호협력과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2001년 6월 15일 설립한 다자안보협력기구

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2],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 지역별 전통적 안보위협의 지속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권 분쟁, 국가 간 현안 등 갈등요인으로 인한 지역별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지역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3]하는 등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자국 전력증강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군사력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보편적 가치, 항행의 자유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일본·호주·인도·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 등으로 인해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경제난 해소 및 민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실리외교를 우선시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4])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의 점진적 축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예멘과 시리아의 정세 불안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 악화 등으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종파·국가 간 협력과 경쟁 관계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정치세력 간 권력 투쟁, 경제성장 지체,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 폭력적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내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2020년 11월 시작된 에티오피아 내전이 휴전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22년 11월 다시 극적으로 휴전한 가운데 말리·부르키나파소 등 사헬지역에

2) 2002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공화국 6개국이 체결한 집단안전보장 조약

3) 프랑스(2019년 5월), 독일(2020년 9월), 네덜란드(2020년 11월), 영국(2021년 3월), 유럽연합(2021년 9월), 체코(2022년 9월)

4)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P5+1(미,중,러,영,프,독)과 이란 간 체결된 이란 핵 활동 제한과 이란 제재 해제를 포괄하는 내용의 합의 문서

서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 등 유혈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도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비전통적 안보위협 증가와 국제사회 공조 노력

전통적인 정치·군사 분쟁이 상존하는 가운데 감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또한 심화되고 있다. 2019년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국토지형 변화, 이상기후 등의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발고도가 낮은 피지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은 기후변화를 국가 존립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군 자산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 국제 해커조직의 랜섬웨어 유포와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개별 국가나 일부 지역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22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시장 안정 노력 등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달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Conference Of the Parties 27)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지속가능한 조치 내용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정상회의를 통해 2022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하고, 사이버 위협을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응해야 할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내 사이버안보 분과회의(Experts'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에서 회원국들은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국제 원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간총회,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 사이버워킹그룹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 및 복구지원을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지역재난지원협조센터(RHCC: Reg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 Coordination Center),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산하 지역협의체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간 공조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확대장관회의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분과회의를 통해 향후 개최될 도상 및 기동훈련(TTX/FTX: Table Top Exercise/Field Training Exercise) 실시와 역내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안보·정치·경제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복합적인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는 등 관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가고 있다.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안보·정치·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5] 특히, 주요 군사강국들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위치해 있어 정치·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등 지역 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물류 통로가 다수 존재한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정치·경제·군사 분야로 확대되는 등 복합적인 안보도전이 증대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역내·외 주요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주요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고, 2022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 증진, 역내·외의 관계망 구축, 미국의 번영 지속, 동맹·파트너국의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유럽지역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여 2019년 프랑스, 2020

5) 2020년 7월 기준 (출처 :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년 독일과 네덜란드, 2021년 영국과 유럽연합(EU), 2022년 체코가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경제, 해양,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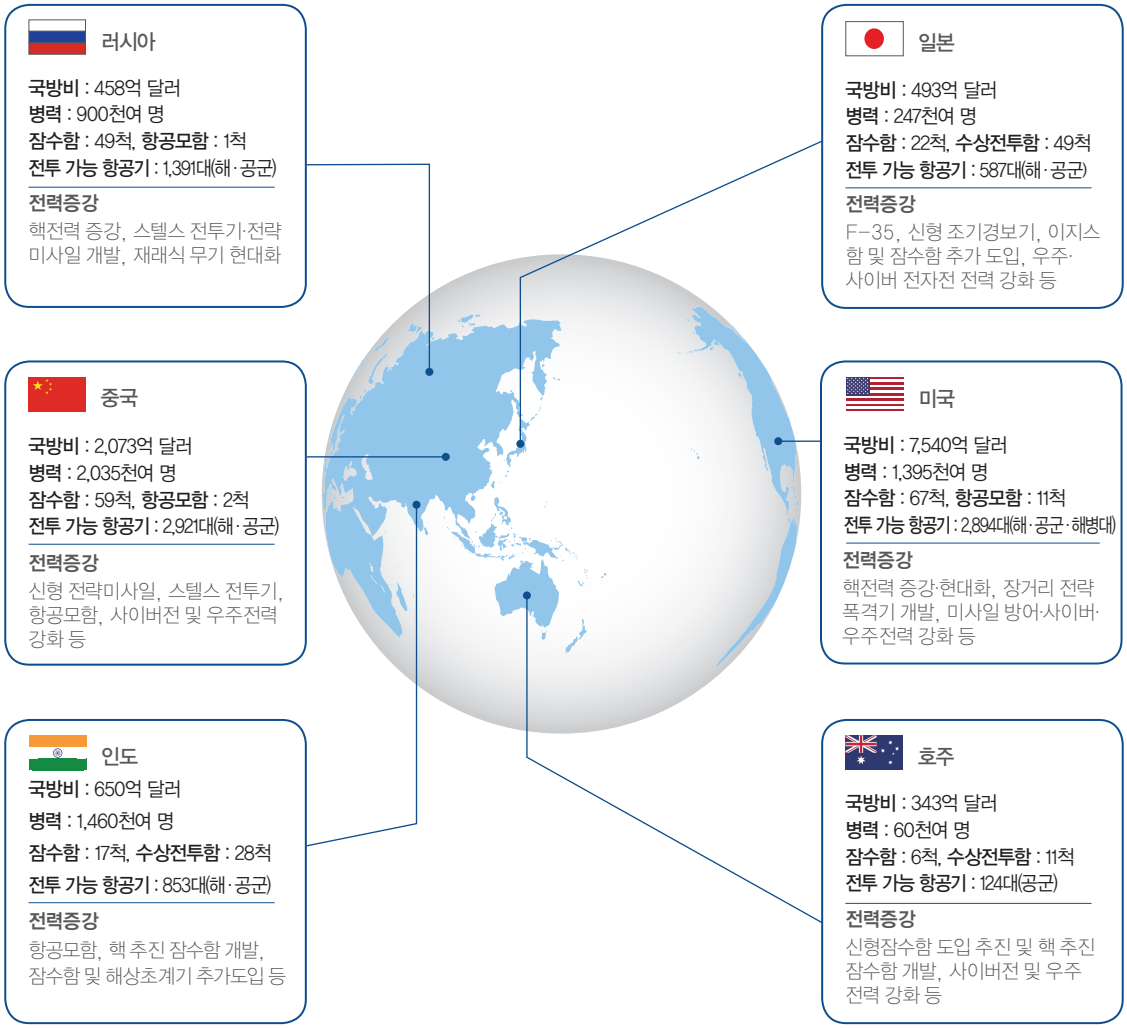
아세안은 지역 내 안정을 위해 아세안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투명성, 개방성 강화 및 규칙 기반 질서 구축 등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감으로써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군사동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도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군사강국이면서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6개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1]과 같다.

[도표 1-1]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군사력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2」(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2월)

미국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을 통해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미국의 중장기 도전으로 설정하고, 중국에 대한 억제력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여 NATO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중·러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견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합동전영역작전(JADO: Joint All Domain Operations)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합동전투수행개념(JWC: Joint Warfighting Concept)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동작전개념을 체계화하는 노

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군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첨단 전장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각 군별 군사 역량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군의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공군의 신속전투배치(ACE: Agile Combat Employment),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전력 3축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전략폭격기를 현대화하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핵심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발효하며, 전년 대비 11.7%, 897억 달러를 증액한 총 8,579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중·러와의 전략적 경쟁, 군사기술 혁신, 미국 전력 현대화를 핵심우선순위로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병력은 현역 기준 총 1,316,944명으로 전년 대비 31,096명이 감축되었다. 육군은 33,000명, 해병대는 1,500명, 공군은 3,876명 감축되었으나, 해군은 7,080명, 우주군은 200명 증가되었다.

이 법안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차원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명시하였다.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영역작전합동군사령부(All Domain Operation Joint Forces Headquarters)를 설치하며, 전지구적미군전투태세(GFP : Global Force Posture) 검토를 명시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준비태세, 역량, 작전활동 향상을 위해 태평양억제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예산을 115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미 의회는 육군 현대화 관련 6가지 우선순위[6]에 대해 동의하면서 헬기, 장거리 타격무기, 방공무기 등의 획득 예산으로 231억 달러를 반영하였다. 해군에는 함정 11척, 항공기 77대 등의 획득을 위해 520억 달러, 공군에는 F-35, EC-37B 등의 획득을 위해 211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우주위협대응체계, 우주로켓발사 프로그램, 군사위성통신체계, 특수우주활동 등 우주군 획득예산으로 41억 달러가 반영되었으며, 사이버사령부 작전수행, 공군 사이버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6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한편, 극초음속미사일

6)
미 육군의 6대 현대화 목표
① 장거리 정밀 화력
② 차세대 전투차량
③ 미래 수직이착륙 헬기
④ 차세대 전술네트워크
⑤ 대공 및 미사일 방어
⑥ 전사 전투력 향상
(미 육군성 「토탈 아미」 비전, 2018)

대응을 위한 미사일방어 시스템 개발, THAAD 미사일 추가 구매 등으로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방어 예산이 반영되었다.

중국 중국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대규모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병력 30만 감축을 선언한 이후, 합동작전지휘기구 설립, 6개 군종(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연근보장부대[7])으로의 전환,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의 재편 등 구조 개혁을 완료하였고, 국방정책·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전략적 요구에 따라 '지역방위에서 전역작전형(全域作戰型)'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거 집단군–사단–연대–대대에서 집단군–여단–대대로 작전지휘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차륜형 자주포 등 경량무기체계 도입과 중형 헬리콥터 작전배치를 통한 원정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에서의 국익수호'가 가능하도록 현대화된 해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전략핵잠수함과 강습상륙함 등 대형함 건조를 통해 원양작전능력을 향상하고 신속한 전력투사를 위해 해군육전대와 항공전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공군은 '항공–우주통합(天空一體), 공방겸비(攻防兼備)[8]'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경보·공중타격·항공방어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원거리 작전능력과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로켓군(火箭軍)은 '핵·재래식 미사일 능력 겸비와 전지역 억제'를 목표로 핵 억제·반격능력과 중장거리 정밀타격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며,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항공·우주, 사이버작전, 정보수집, 전자·심리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군과 민간의 접점 분야인 인공지능(AI), 무인기·무인시스템, 정보과학기술,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우수기술 도입, 국방과학역량 강화, 해외 첨단기술 획득 등을 통해 민군융합을 강화하고 있다.

연근보장부대는 전군의 작전·훈련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후방군수지원능력 통합과 신속수송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동원능력 강화를 위해 동원역량 확충을 중점으로 긴급상황과 전시 대비 준군사조직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예비 역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상 민병은 정찰·위장·양동작전·군수지원 등 군사작전

7) 중앙군사위원회 직속부대로 전군 및 각 전구별 전투근무지원을 담당

8) 항공과 우주 전력을 정보화·일체화하고, 공격과 방어 능력을 겸비한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략 공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

수행이 가능한 규모와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대만과의 협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남중국해 인근 초계활동, 태평양 원해훈련 등 군사활동과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9년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군사교류협력과 첨단기술교류를 확대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외견상 중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유엔의 대러 규탄 결의안에는 기권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8월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실시한 합동훈련과 미사일 시험 발사(대만 포위 군사훈련)는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2022년 10월에 개최한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일국양제 관철 및 대만독립 반대'를 최초로 당장(黨章)에 명문화하고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는 등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결정하고 시진핑 주석 중심지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기존 대내·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경제적 변혁으로 현격한 국제적 위상 하락을 겪었으나, 2000년대 고유가 호황기를 지나며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군은 차세대 전투플랫폼 신규 도입을 대신하여 구형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한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는 사거리와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킨 개량형 장비로 대체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M'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해군은 전략핵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신형 킬로급 잠수함사업 및 구축함 개량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완료하였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핵추진 수중드론 등 첨단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중국 해군과 정례적 연합해상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장비의 현대화와 첨단 항공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실전배치하였으며, 장거리·전략 폭격기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공군과 정례적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전략미사일군은 지속적으로 구형 ICBM을 도태시키고,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무력화 기능이 향상된 차세대 ICBM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에 걸쳐 러시아는 군사력 현대화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9]지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지역으로서,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지역의 안정을 자국 안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보고, 동 지역에서 정세 안정 유지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 유지·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동맹블록을 견제하기 위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10] 등의 다자협의체를 통해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 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친러 진영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하에 '전수방위'[11]를 견지해온 일본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12]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즉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2027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대비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명시하고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반격능력' 보유를 최초로 공식화하였다.

일본은 안보 3문서를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주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탠드오프[13] 방위능력 확보 등 7개 분야[14]에 대한 방위력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 자위대는 안보 3문서에 근거하여 통합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 통합작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상자위대에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부대와 극초음속 유도탄을 보유한 장사정유도탄부대를 편성하여 스탠드오프 방어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영역 횡단 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대공 전자전부대와 정보수집·공격기능을 보유한 다용도 무인항공기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는 상시·지속적인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 활동,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초계기부대와 잠수함부대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공모함 개조와 신형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 수상함 전력증강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한, 호위함 등에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탑재하고 수중 및 해상 전력의 우위와 인적 자원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각종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9)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국가들의 협의체

10)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

11)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보존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준거한 수동적인 방위전략의 자세

12) 자위대법·선박검사활동법·국제평화협력법·무력공격사태법·중요영향사태법 개정 및 국제평화협력지원법 신설 등

13) 적 함정, 전투기 등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14)
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확보
② 통합 방공미사일 방위능력(IAMD) 확보
③ 무인자산 방위능력 확보
④ 영역 횡단작전 능력 강화
⑤ 지휘 통제기능 강화
⑥ 기동전개 능력 및 국민보호 능력 보강
⑦ 지속성 및 강인성 확보

무인 수상정(USV: Unmanned Surface Vehicle), 무인 잠수정(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등을 보유한 무인기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광대한 공역의 효과적 방어를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운용 능력 향상과 상대의 위협권 내에서 목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무인기(UAV)를 도입하고, 작전 정보부대를 편성하여 부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기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자위대는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신설한 우주작전대를 2021년 우주작전군으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수집, 통신, 측위(測衛)[15] 등의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

호주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경쟁을 호주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평가하며,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일본 등 역내 주요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호주는 「2020 신국방전략(Defence Strategy Update)」을 발표하고, 역내 전략적 경쟁으로 호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의 국방력을 호주 국토와 인접 지역[16]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약 1,900억 달러)를 국방력 증강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제시한 예산 대비 40% 증가한 규모에 해당한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23년 3월 발표를 목표로 「국방전략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의 전력 구조, 전력 태세, 대비 역량,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담고 있다.

또한, 호주는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을 위해 호주 군사력의 중요 축인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11년 합의한 '미군 전력태세 구상(USFPI: US Force Posture Initiatives)'을 토대로 2012년부터 2,000여 명의 미 해병대 병력이 순환배치 형태로 호주 다윈(Darwin)항에 주둔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전력태세 구상(Force Posture Initiatives)'을 통해 주호주 미군 배치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 3자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여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그 외 인공지능·양자 기술, 사이버안보 기술을 비롯해 극초음속 무기 및 극초음속 무기 방어체계 구축, 전자전 역량 강화 등을 위한 3국간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주는 최근 역내 우방국 중에서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5) 적의 기습적인 공격으로부터 이동 중이거나 정지하고 있는 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그 부대의 측방에서 작전하는 경계 부대

16) 인도양 북동지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해상 및 육지를 거쳐 파푸아뉴기니 및 서남태평양 지역

2022년 1월, 양국 공동훈련 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호·일 원활화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제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외에 제3국과 공동훈련을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이다. 2022년 10월에는 2007년 체결한 호·일 '안보협력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Cooperation)'을 개정하면서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조치 검토를 위해 일본과 협의할 것이며, 미국·일본과의 3자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인도

인도는 서쪽으로 파키스탄, 북동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방글라데시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3차례 전쟁을 치른 파키스탄과는 카슈미르 분쟁[17] 등으로 양국 간 팽팽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과는 1962년 중인전쟁[18] 시 중국이 점령한 인도 일부 지역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양국 간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갈등의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과거 비동맹 중립외교에서 탈피하여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실용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 유지, 전쟁억제력 확보,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는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항공모함·핵추진잠수함 확보와 탄도미사일 개발, 미사일 요격체제 구축 등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일변도의 무기체계 도입에서 탈피하고자 2016년 1월에 자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무기·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무기체계의 70%에 육박하는 러시아(구.소련) 무기체계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급망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밀란(Milan) 연습, 미국·일본과의 말라바르(Malabar) 연습 등 역내 다양한 국가들과 해군 연합연습을 실시하면서 해양안보 측면에서 자국의 '인도·태평양 해양구상(Indo-Pacific Oceans' Initiatives)'을 구현하고 있다.

17)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후 카슈미르 지역(인도·파키스탄·중국에 걸친 산악지역)에서 현재까지 지속 중인 인도-파키스탄 간 영유권 다툼

18) 1962년 중국과 인도 간 히말라야 일대에서 벌어진 국경분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은 티베트를 재합병하고, 인도는 네팔과 부탄을 관리하는 것으로 양국 간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북한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대미협상에 임하였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자 2020년 1월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분야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선별적인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해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정세 북한은 2011년 김정은의 정권세습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을 포함한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대미협상에 임하였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미·북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자 같은 해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핵 억제력 동원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자력으로 국방·경제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정면돌파전'[19]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국방분야 전략적 과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년 3월에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설립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르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데 이어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공세적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고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의 질량적 갱신·강화'와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의지를 표출하였다.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고 공세적 핵전략에 기초한 대남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을 2023년 국방분야의 중심방향으로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형 ICBM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중점과업으로 제시하였다.

19)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19.12.28.~31.) 결정서를 통해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며 군사력 강화 및 자립경제를 위한 분야별 정면돌파 노선 채택

한편, 북한은 정치적으로 당 중심의 통치체계 확립에 주력하였다. 2016년 5월에는 1980년 이후 35년간 개최하지 않았던 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를 정례화하였다.

북한은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정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 및 자원의 동원과 고위급들의 경제현장 방문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지닌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부사조 유입으로 인한 사상이완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공표한데 이어 전 사회적 기강확립을 위해 2021년 1월에는 규율조사부·법무부 등을 신설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열병식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2020년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북한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대동란'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내 모든 시·도를 봉쇄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뿐만 아니라 군 의료인력까지도 대거 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주력하였다. 8월에 소위 '방역전쟁 종식·승리'를 공식화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한 가운데 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의 극복과 체제결속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사상무장 및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 분야 전략적 과업[20] 달성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시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①초대형 핵탄두 생산, ②1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③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④수중 및 지상 고체추진 ICBM 개발, ⑤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을 포함하여 국방분야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대남정책 2018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은 2018년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고, 9월에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등 남북대화 및 교류에 냉담한 태도로 변화하였으며, 이후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및 협력 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2020년 6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9월에는 서해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 이후 우리 국민 피격사건과 관련된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남북통신연락선 차단과 복원을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21)]

한편, 북한은 2022년 5월에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의 국방정책을 집중적으로 비난하였으며,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대남사업을 '대적투쟁'으로 변경하였다. 2022년 8월에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핵·개방·3000[22)]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하였다. 이후, 한미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을 비난하면서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수의 소형무인기로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등 「9.19 군사합의」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대남 '정면승부 대적투쟁' 원칙을 재강조한 가운데, 우리를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2022년 4월에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핵전투무력 동원'을 언급하였고,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공간 확장, 적용수단의 다양화' 등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12월 '600㎜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서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 '전술핵 탑재 가능'을 주장하는 등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21) 북한은 2021년 7월에 13개월 동안 차단되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남북 간 소통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8월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하였음

22)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구상임 남북한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남북한의 공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개방'과 국민소득 증대가 필요조건이며,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이 될 때 통일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구상된 전략임

대외정책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자주·평화·친선'의 외교 원칙을 내세우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대외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관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있다. 2020년 초에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는 한편, 2021년에는 제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통해 미국의 양보 없이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북한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대화 제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며, 2022년 3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여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였고, 2018년에 폭파장면을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였다. 11월에는 화성-17형 ICBM을 재차 발사하며 강대강 대응 의지를 표출하였다.

일본과는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23]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지속적인 정상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 청산, 대북정책 전환 등의 선결을 주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방위전략 개정을 통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데 이어,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에 먼저 방문하면서 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전통적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 간 친서·축전 교환 등을 지속하였으며, 2022년 들어서는 국경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연대를 도모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와 2014년 북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2015년 3월에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기본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 주요 기념일에 축전을 교환하며 친선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요 인사의 연쇄 회동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23) 북한과 일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장급 회담(2014.5.26.~28.)에서 '납치자 조사 및 대북제재(유엔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조치 불포함) 해제'에 합의하였음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군사전략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24]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정권세습 이후 2015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북한군은 기습공격, 배합전, 속전속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과 핵무력 전략에 기초하여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핵·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전자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증강과 함께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고 있으며,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길 것'이라는 내용을 당 규약에 포함시켜 무력에 의한 통일전략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화한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하면서 핵사용 위협을 증대하고 있다. 향후 북한은 대외 전략적 환경변화와 경제난 등 대내 여건을 고려하여 군사전략의 변화를 지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지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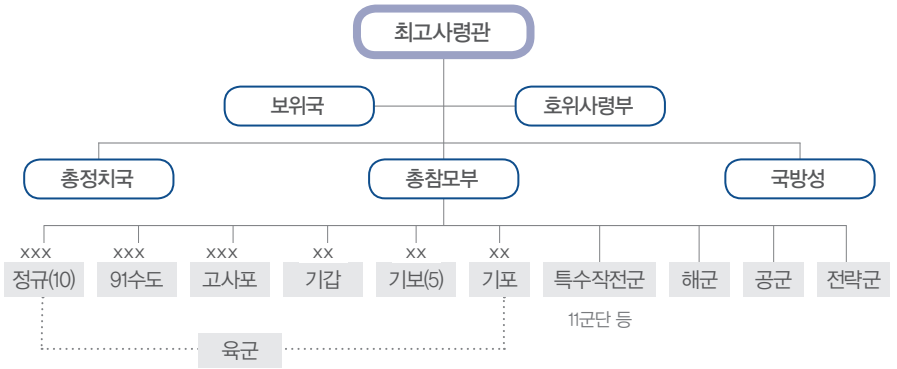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국방전력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의 총정치국은 군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며, 육군·특수작전군·해군·공군·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예산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보위국은 군 내부 감시 및 통제,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고, 호위사령부는 최고 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경계와 관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며 유사시 반체제 쿠데타 진압을 수행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24) 북한헌법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xxx : 군단 xx : 사단

3. 군사능력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5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기계화포병사단[25]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방성 예하에 도로건설군단, 총정치국 예하에는 공병군단 등 전문건설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최근 사거리 신장 및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 방사포[26]와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로 주장하는 600㎜급 단거리탄도미사일[27]을 개발하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6,9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다양한 대전차미사일·기동포를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하여 일부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와 최근 식별된 주요 신형장비는 [도표 1-3] 및 [도표 1-4]와 같다.

25) 기존 1개 기계화보병사단과 1개 포병사단을 개편 및 통합하여 기계화포병사단으로 창설

26) 2012년부터 수차례의 시험발사를 실시 중이며, 2015년 10월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실 장비를 최초 공개, 2020년 10월 75주년 열병식에 개량형 장비를 공개

27) 북한은 2019년 8월 시험발사 이후 초대형방사포로 명명하였으며, 2020년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실 장비 최초 공개

[도표 1-3]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

전차	장갑차	야포	방사포
4,300여 대	2,600여 대	8,800여 문	5,500여 문

[도표 1-4] 조선인민혁명군 설립 90주년 열병식(2022.4.25.)에서 식별된 육군 주요 신형 장비

전차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자주포	방사포

특수작전군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28]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수전 부대는 11군단[29]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각군 및 제대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중 및 해상·지상 침투훈련과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하여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북한 특수작전군 활동은 [도표 1-5]와 같다.

[도표 1-5] 북한 특수작전군 활동

특수작전군 기(旗)	지상 타격(습격)훈련	도서 점령훈련	공중 침투(강하)훈련

28) 11군단, 해상·공중 저격여단, 특수작전대대 등을 특수작전군으로 분류, 별도 사령부 미편성/사령관 미식별

29) 전략적 특수전부대, 일명 폭풍군단

해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체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은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4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일부 함정 노후화에 따라 신형 함정을 건조 및 작전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함정은 신형 대함미사일[30]을 장착하여 원거리 공격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소형 잠수함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 해상교통로 차단,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하도록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를 진행하는 등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고속 소형함정으로 수상전력의 엄호 하에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방어전력은 동·서해 해안을 따라 다수의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여 해상에서 접근하는 함정을 공격하고 대상륙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대함미사일[31]의 성능을 개량하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등 연안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 및 지대함미사일은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북한 해군의 주요 함정 및 지대함미사일

전투함정 4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지대함미사일

공군

공군은 공군사령부[32]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57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

30) 북한은 2015년 2월 6일 원산 근해에서 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였으며, 사거리는 약 100㎞로 추정됨

31) 정권 설립 70주년(2018년 9월 9일) 행사 시 신형 지대함미사일을 공개하였고, 당 설립 75주년 행사 시에는 발사관 4개 증가(4→8개), 발사차량(TEL)은 신형으로 교체한 개량된 지대함미사일을 공개하였으며, 사거리는 약 200㎞로 추정됨

32) 기존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를 공군사령부로 명칭 변경(2022년 4월)

에 전진 배치하여 기습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후 훈련기 도태, AN-2기와 경항공기의 추가 생산 및 배치, 다양한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 개발 등 공군전력 효율화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신규 전투임무기 도입이 제한되어 신형 지대공미사일 개발 및 배치 조정 등을 통해 방공력을 보강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33]와 SA-5[34]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35] 지대공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 및 지대공미사일은 [도표 1-7]과 같다.

[도표 1-7]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및 지대공미사일

전투임무기	정찰기	공중기동기	헬기	지대공미사일
810여 대	30여 대	AN-2 포함, 350여 대	해군 포함, 290여 대	

전략군 북한은 별도의 군종사령부인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 ICBM 및 작전 운용에 유리하고 정확성과 요격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kg,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ium)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고려 시 핵무기 소형화

33) 최대사거리 56㎞의 중·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2 : Surface to Air-2)

34) SA-2 보완용으로 개발된 최대사거리 250㎞의 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5 : Surface to Air-5)

35) 최대사거리 25㎞의 중거리, 저·중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3 : Surface to Air-3)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공개적으로 폭파하였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노동, 무수단을 작전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500㎞의 스커드-C를 작전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을 작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작전 배치하였으나 2016년 성능시험에 실패하였다.

북한은 2012년부터 신형 액체·고체추진 탄도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은 2016년 개발에 성공한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개발하여 201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정상각도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시험발사를 하였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2017년에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2022년 2월부터 화성-17형 발사를 수차례 시도하였고 11월에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하였다.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능력은 보여주었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은 202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시험발사하는 등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은 작전운용상 액체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2019년부터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뢰도가 검증되었다고 자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또한, 발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한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600㎜)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019년부터 수차례 시험발사 후 2022년 12월 군에 인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노후화된 전략군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2022년 12월에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형 고체모터 연소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고체추

36) 중거리탄도미사일

진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36] 및 ICBM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북극성 계열과 잠수함 발사형 전술유도탄(북한판 이스칸데르 파생형)을 시험발사 하였으나, SLBM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은 개발 단계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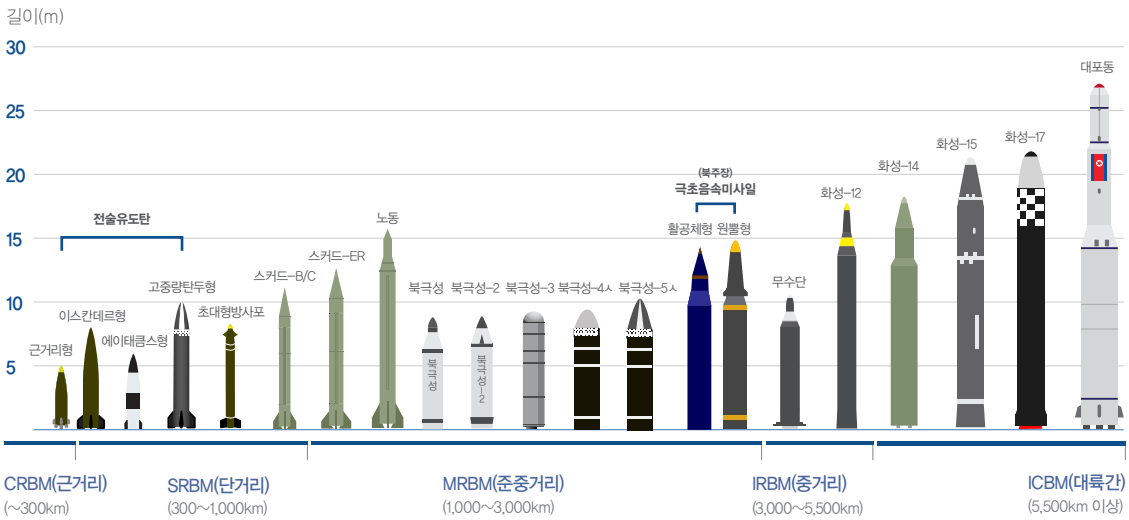
한편,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여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한 이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발사하였고, 2022년 11월 2일에 미사일 1발을 의도적으로 NLL 이남 26㎞ 공해상에 발사하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대함 위주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이용하여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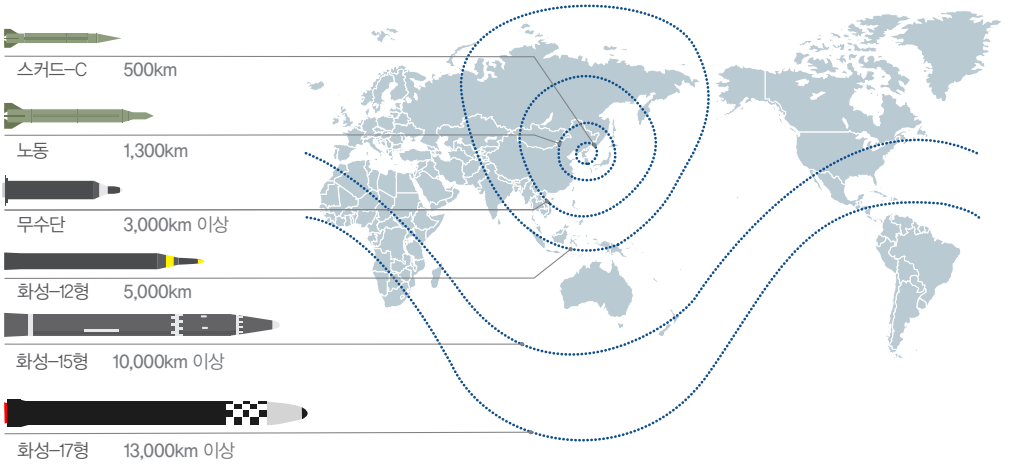
향후에도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과업 완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현재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는 [도표 1-8] 및 [도표 1-9]와 같다.

[도표 1-8] 북한이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도표 1-9]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비전력과 전쟁지속능력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으로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10]과 같다.

[도표 1-10] 북한 예비전력 현황

구분	병력	비고
계	762만여 명	
교도대	62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17~50세 남자, 17~30세 미혼여자)
노농적위군	572만여 명	지역예비군 성격(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청년근위대	94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4만여 명	호위사령부, 사회안전성 등

북한은 전시에 약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전시 단기간 내 전환 가능한 100여 개소 이상의 민

수용 공장을 포함하여 약 300여 개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유사시 신속하게 군수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전시동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군수물자 생산 및 비축시설은 지하 요새화되어 전시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전투임무기를 제외한 주요 무기 및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난과 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군수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전쟁지속능력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튼튼한
2022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제1절 국가안보전략

제2절 국방전략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2022년 7월)

제1절

국가안보전략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키고 실용과 가치의 외교로 지구촌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음 3가지의 국가안보목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핵·WMD 등 비대칭·재래식 위협,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는 미래 잠재적 위협, 재난·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으로부터 주권과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우선 우방국·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여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과 함께 통일미래의 기반을 조성한다.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장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나간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신안보 위협대응, 국제개발 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선정하였다.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상호 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주요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국가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질서·신안보 위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강한 국방력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한반도 평화안착을 위한 토대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강도 높은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미래형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방위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확충하고 실전적 교육훈련과 투철한 대적관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여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민·관 협업으로 공급망, 핵심기술, 에너지 등에 대한 다층적인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규범·프로토콜 형성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제경제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선점하고 문제해결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비전통적 안보 현안들에 대한 위기 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감염병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전략

국방부는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목표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방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방전략에는 국방차원의 전략·정책 추진의 방향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국방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 차원의 국방정책중점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재난·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 특히,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핵 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평화통일 뒷받침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변국과 군사적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과 국방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2. 국방전략

국제질서의 유동성 증대, 병역자원의 감소,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대내·외 국방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향점으로 국방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방전략목표 국방전략목표는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방목표 등 상위지침에 반영된 국토방위, 안전보장, 평화통일, 세계평화 등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으로 구분하여 다음 4가지를 선정하였다.

[도표 2-1] 국방전략목표

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통합·능동 방위가 가능한 국방태세 확립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WMD 능력 고도화, 기후변화·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위협의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동시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효과적인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방위요소의 유기적 결합,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별 능력과 각 영역 간의 연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등의 통합을 통해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된 능력을 토대로 상황발생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사시 신속한 결심과 자위권 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최소 피해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해야 한다. 국방부는 통합·능동 방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국방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대칭 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 육성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국가 재정여건의 악화 등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우리 군에 신속하게 접목시켜 규모는 줄이면서도 능력은 강화된 저비용·고효율의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③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역내의 외교·안보, 경제·기술, 가치·규범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및 주요국가들의 군비경쟁 심화, 북한 핵·WMD 능력의 고도화 등 안보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대외전략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방산수출, 공동 재난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④ 국민안전, 국민신뢰,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구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군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

민적 기대가 점차 확대되면서 민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연재난, 테러,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군의 중요한 임무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군 가족의 일원으로서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지속적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병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방정책중점

국방부는 국방목표와 국방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단기 정책목표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설정하였다. '튼튼한 국방'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강군'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시에 국방에 접목하여 경쟁 우위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방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중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협에도 적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투임무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장병 정신전력 교육 개선을 통한 대적관 확립 등 무형적 대비태세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②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인 「국방혁신 4.0」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경쟁 우위의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③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잠재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정례·수시협의와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등 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방국과의 호혜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지속 심화·확대하여 국익 증진과 역내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④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사회여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방운영을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 특성에 맞게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군내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예산 배분을 통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장병 의식주를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내 인권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군 복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전사자, 순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국방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전적 R&D(Research and Development) 환경을 조성하면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발전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면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OKAF
039
해병대
해병대

제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제1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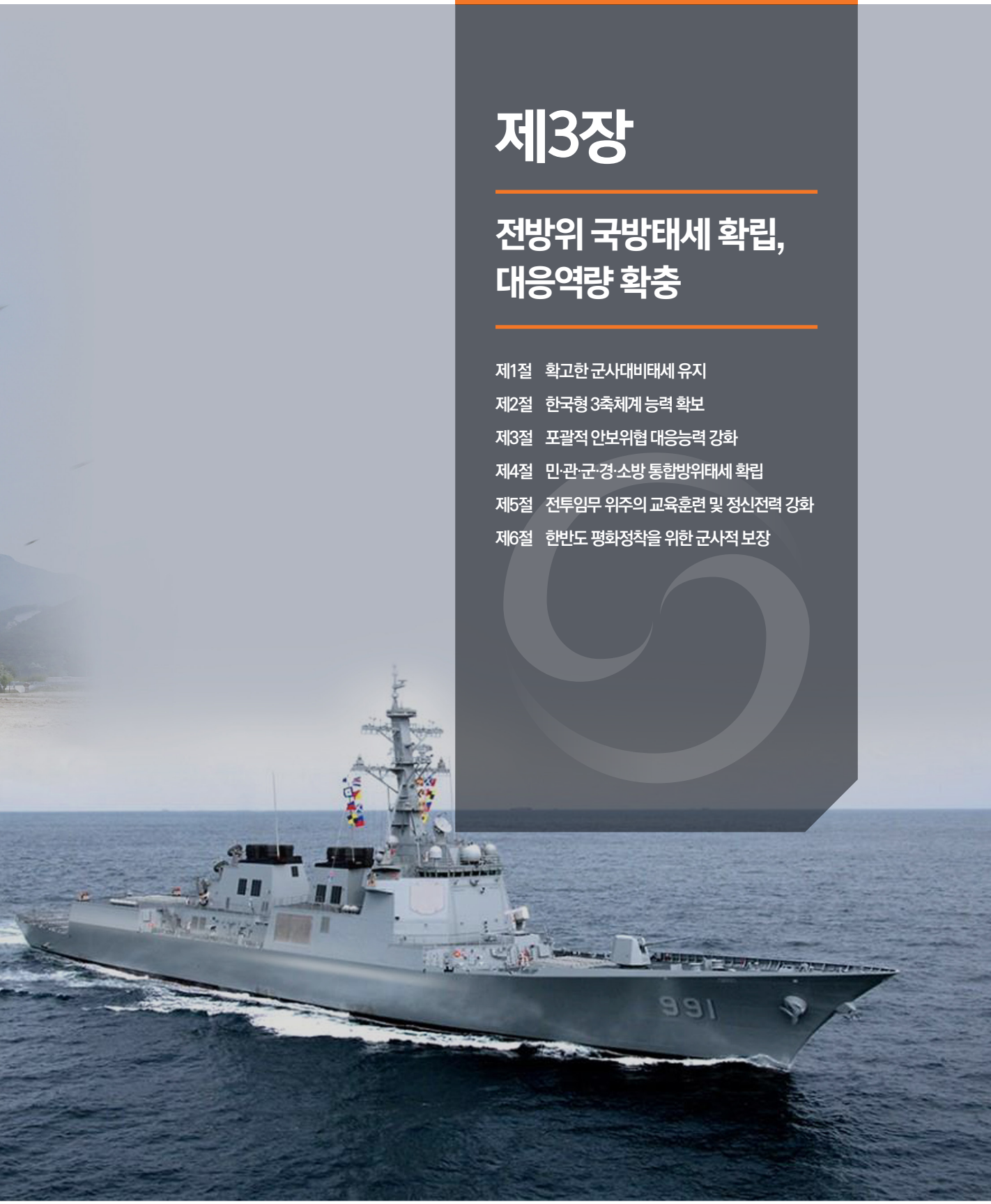
제2절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제3절 포괄적 안보위협 대응능력 강화

제4절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제6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보장



제1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감행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면전 감행에 대비하여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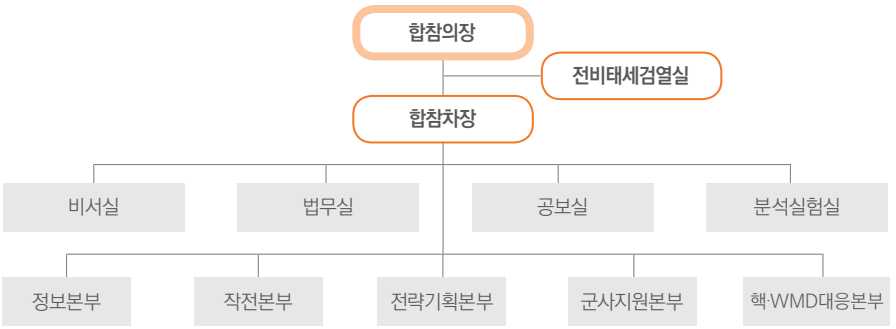
1.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1]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2]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과 계엄업무 등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3]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1차장 5실 5본부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1) 합참의장이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행사하는 지휘권한(합동교범 0 군사기본교리, 2022년 8월)

2) 합동작전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

3)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

우리군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합참은 2023년 1월 '핵·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개편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우리 전략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참은 우주·사이버 등을 포함한 전 전장영역에서의 전구작전지휘체계와 합동작전개념 기반의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편성과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육군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미사일전략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전차, 장갑차, 야포/다련장은 해병대 전력 포함
* 항공작전사령부 → 항공사령부[4](2021.12.2.), 미사일사령부 → 미사일전략사령부[5](2022.4.1.) 개편

국군 홍보영상

육군 홍보영상

4) 해군잠수함사령부와 같이 특정 분야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

5)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개편하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 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변경

지상작전사령부는 작전지역 내에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다양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으로 합동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고, 특수전사령부는 전시 특수작전과 평시 평화지원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항공사령부는 항공작전을 수행한다.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 동원전력의 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도록 관장하고, 그 외 사령부는 인사 및 군

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 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신속결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를 개편하고,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다련장로켓 등 기동 및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기반의 Army TIGER(Army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y Revolution technology) 4.0, 정찰·공격·전자전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봇 전투체계[6],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와 연계하여 부대·전력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해군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병력은 해병대 2만 9천여 명 포함
* 항공전단 → 항공사령부(2022.7.15.) 개편

해군 홍보영상

해병대 홍보영상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7], 대잠작전[8], 기뢰작전[9],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 해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을 운용하여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며, 항공사령부는 해상항공전력을 운용하여 해상항공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전략도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를 운용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확보하여 입

6) 공중 및 지상전에서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하나로서 정찰, 공격,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체계들의 모든 센서와 실시간 연동되는 AI 기반 C4I체계가 통합되어 최적의 작전을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체계

7)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8)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9) 기뢰를 사용하여 적 해군세력을 차단 또는 무력화하거나 적의 기뢰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

체 전력을 통합 운용하며,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다목적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 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공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방공유도탄사령부→미사일방어사령부[10](2022.4.1.) 개편

공군 홍보영상

공군작전사령부는 항공작전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며, 제공작전[11], 항공차단작전[12], 근접항공지원작전[13]을 비롯하여 핵·미사일·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공중전투사령부는 공군작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부여된 전투임무를 수행하여 전투임무기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공중기동 및 공중급유,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항공통제, 특수임무 및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하여 공중기동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 감시를 통해 복합·광역·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를 지속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공중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며, 복합·광역·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 미7공군사령부, 주한미우주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10) 적의 다양한 공중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전 공역을 복수의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고도별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작전' 수행부대로 개편하는 한편 최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배치 등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보다 향상된 전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명칭 변경

11)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항공 우주력과 방공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CA: Counter Air)

12) 적의 군사력이 사용되기 이전에 차단·교란·지연·파괴하여 적 전력의 증원·재보급·기동성을 제한하는 작전(AI: Air Interdiction)

13)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공격, 반격 또는 방어작전을 지원하는 작전(CAS: Close Air Support)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국의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국의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14]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15]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고,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되며, 육군사전배치재고(APS: Army Pre-positioned Stocks)[16] 등을 통해 전쟁물자가 지원된다.

우리 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미 증원전력 전개계획 발전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14) 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

15)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 목록과 제원

16) 유사시 미 육군이 분쟁지역에 투입 시 신속히 전개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분쟁 예상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사전 저장하여 관리하는 장비 및 물자

2.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우리 군은 복합적 안보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상시 연합정보감시태세 및 경보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정보자산 외에도 대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체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경계시스템 개선 우리 군은 적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GOP(General OutPost), 해·강안 등에 철책과 초소를 설치하여 경계작전을 수행해 왔으나, 2004년과 2005년에 연이은 귀순 및 월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육군 5사단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고, 경계력 향상과 경계병력 감소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2016년까지 전체 GOP를 대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후 군은 수명주기가 도래한 감시·감지 장비의 교체와 잦은 오경보로 인한 경계요원의 피로도 해소 등 경계작전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최신 기술의 카메라와 AI 영상분석 기술 등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2026년까지 전체 GOP를 AI 기반 경계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해안지역의 경계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시체계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AI 융합 해안경계시스템 실증사업을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해안감시부대를 대상으로 AI 융합 해안경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군은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하여 AI 기반의 감시·경계작전 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지상·해상·공중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은 지·해·공역에서 「정전협정」, 「남북불가침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력시위성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서북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와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 영역에 대한 감시·결심·타격체계를 최적화하고,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할 것이다.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수도권과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민·관·군·경·소방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양한 도발 유형별 작전계획 및 대응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을지연습, 화랑·충무훈련 등 각종 통합방위연습 및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단위별로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역군사령관 중심의 대테러작전부대 통합운용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대테러작전부대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을 통해 대테러작전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위협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관·군 간 사이버위협을 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운용에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위기관리체계 발전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주도의 위기관리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연합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22년 11월 「국방위기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국방부와 예하부대 및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위기관리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연합위기관리연습을 강화하고, 한미 공동위기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표 3-6] 국군이 수호해야 할 우리의 영역

*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 우리 군은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매년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이를 검증 및 보완하고 있다.

한·미는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양국 국방부 차원의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Strategic Planning Guidance)에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2010년 한·미가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한 이후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 구조의 변화, 연합사 존속에 따른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변화 등 제반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한·미 합참은 전략기획지시(SPD: Strategic Planning Directive)를 작성하였고, 2022년 3월에 한·미 합참의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한·미 군사당국은 합의한 전략기획지침(SPG)과 전략기획지시(SPD)에 기초하여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공동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는 작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장병들의 전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연습명칭을 연합지휘소훈련(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로 변경하여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하였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현시하였다. 또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시행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시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여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다.

전쟁지속능력 확충 전쟁지속능력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쟁수행 요구능력으로써 국가잠재력과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요망되는 수준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군은 전시 소요와 현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장비, 탄약, 유류, 병력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쟁수행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다.

장비 분야에서는 전·평시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17], 스마트팩토리[18], 원격정비지원체계[19] 등으로 핵심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신

17) 무기체계에 내장된 각종 센서 또는 계측장비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상태평가를 통해 필요에 근거한 정비를 수행하며, 데이터와 프로세서, 기술 및 지식기반 능력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결함을 사전 진단하고 예측하여 최적의 정비시점을 결정하는 정비절차 또는 능력

18) 노동집약적 정비 공정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정비현장에 적용하여 장비별 정비공정을 실시간대로 관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정비환경을 구축하는 것

19) 정비지원부대와 멀리 떨어져 해상에 위치한 함정 및 격오지부대(레이더기지, 방공포대)의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예방점검을 위해 장비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 으로 감지하고 장비의 결함 발생 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뢰성기반비용관리(RAM-C: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Cost)[20]를 활용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21]을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탄약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탄약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에 필요한 긴요 탄약을 확보하고 저장관리, 성능유지 및 폭발물처리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류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부 비축물량, 방위예비량, 산업동원으로 전시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상작전은 물론 해상 및 공중 연합작전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작전에 제한이 없도록 기동, 함정, 항공기 등 장비운용 연료를 적시에 확보·지원하고 있다.

수송 분야에서는 통합 수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송화물의 표준화, 고기동·다기능 중형 수송차량 확보, 수송자산 실시간 위치 추적체계 구축, 민·관·군 수송수단 통합 활용 등 전·평시 수송지원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력 분야에서는 현행 및 장차 작전을 보장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인, 군무원, 근로자 및 기술인력을 포괄하는 신분별 획득 및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무 분야에서는 전시 작전부대 근접 의무지원을 위하여 사단의무대에 이동 전개형 의무시설을 추가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환자처치·후송을 위해 전투중대급 부대 위주로 응급구조사를 신규 배치하고, 의무후송전용헬기 및 신형구급차를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해 나가고 있다.

동원 분야에서는 매년 각 지역별 충무훈련을 통해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또한, 국방병력동원발전회의[22](병력동원분야), 국방동원자원조사[23] 및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24](물자동원분야)을 통해 유사시 계획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병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기관, 전력, 교통, 공항, 항만, 수원, 지하 공동구 등)과 전시 군 긴급복구 목표(공병부대 복구책임 대상 시설과 지휘시설, 항만계류시설, 비행장, 포로수용소, 비상활주로 등)의 지속능력 발휘를 위해 시설별 평가기준 적용과 피해 및 복구 현황 파악 등 다양한 지속능력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은 기존의 군사영역에 한정된 전쟁지속능력의 정의와 포함요소를 정치·경제·사회·외교 영역까지 확대하여 재정립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속능력 분석·평가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

20) RAM 목표를 충족하면서 수명주기비용(Cost) 최소화 대안을 제공하는 공학적 분석 기법

21) 주요군수품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을 위해 군수지원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군은 목표가동률 등 성과측정지표를 제시하고 계약업체는 군수지원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그 수행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

22) 병력동원에 대한 소요와 지정에 관한 제도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 군과 병무청이 참가하는 회의

23) 비상사태시 국방분야에 소요되는 인력 및 물자의 지정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매년 5월경 지정된 업체의 생산능력, 인적자원 관리 등을 조사함.

24) 전시 부대 또는 지자체 등 기관에서 필요하여 동원 지정된 인력, 물자,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연중 정기적으로 민·관·군 합동 점검하는 것

은 변화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최적화된 국방전략의 수립에 도 기여할 것이다.

국방부 전쟁수행능력 강화 국방부는 합참, 국직부대 및 기관들의 전시 임무와 과업을 구체화하여 2021년 12월 「국방전쟁수행지침」과 「국방지휘본부 운영예규」를 개정하였다. 특히, 국방지휘본부가 전시에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전시 3대 기능(전쟁지도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을 구체화하고 전쟁단계별 결심목록을 재검토하는 등 국방부 전쟁수행체계를 재정립하였으며, 정부연습 및 연합연습 시 국방지휘본부의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제2절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고 우리 군의 공격, 방어, 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25]'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 구성되며,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작전개념과 계획발전을 포함한 즉응작전태세를 균형되게 완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능력 확보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이며, 이를 통해 '거부적 억제'[26]개념을 구현한다.

킬체인(Kill Chain)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발사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탐지·교란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전 지역의 고정·이동표적에 대한 신속한 감시정찰과 초정밀 타격을 위한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4D) 전략'과 연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신속하게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는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해 나갈 것이다.

25)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하며, 거부적 억제 차원의 Kill Chain(공격), KAMD(방어)와 응징적 억제 차원의 KMPR(응징보복)로 구성

26)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

감시정찰 능력 강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사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심표적과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정찰 및 우주 무기체계를 확충하는 등 영상·신호정보 획득역량과 정보융합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먼저, 우리 군은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High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지상·해양 및 공중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탐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호정보를 보다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등 기존 신호정보 수집체계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 및 항공정찰 자산 등을 통해 획득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하고 전쟁지도부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이다.

초정밀 교란[27]·파괴[28] 능력 확충

북한은 미사일 전력의 생존성·은밀성 증가를 위해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해양·공중 타격수단을 다양화하고 고정·이동 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고위력·초정밀의 교란·파괴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고정표적에 대해서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고위력미사일 등으로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이동표적에 대해서는 5세대 전투기 전력보강 및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의 확보를 통해 정밀타격능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상초계기, 잠수함 등의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잠수함 탐지 및 타격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군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리적 타격수단과 더불어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전자전기 등 신개념의 비물리적(non-kinetic) 공격수단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후 신속하게 교란·파괴할 수 있는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의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27) 북한 미사일의 위협(크기, 집중도, 적시성, 정확도 등)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북한 미사일 활동을 저해시키기 위해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지상 건축물 등 고정된 기반시설을 타격하는 개념

28)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 활동을 제거하기 위해 탄도미사일과 이를 이동·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발사대 등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개념

2.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우리 측으로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방어체계[29]를 말하며, 킬체인(Kill Chain)과 함께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태세 강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수직적(고도) 차원에서 수평적(거리) 차원으로 미사일 방어개념을 확장하고, 능력 강화 측면에서는 미사일 조기탐지와 다층화된 요격능력 확보 및 첨단기술 기반의 기술도약적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복합 다층 방어개념 발전

북한은 활공 및 공력비행 등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형태의 변칙기동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종의 미사일을 혼합사격하는 등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직적 차원의 방어개념을 수평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미사일 요격 확률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혼합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복합방어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고, 독자 개발한 지상기반 상·하층 방어체계 레이더를 효율적으로 통합(네트워크화)운용하여 작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핵·미사일 낙탄, EMP(ElectroMagnetic Pulse) 피해 등의 최소화를 위한 방호능력과 태세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상·해상·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탐지 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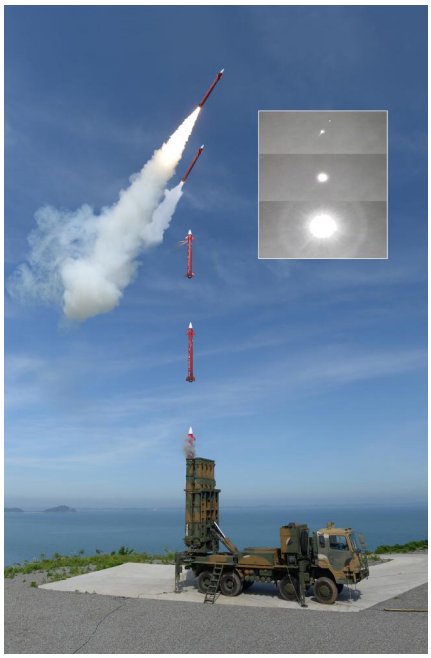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조기탐지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조기탐지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신속히 탐지하며, 발사원점 식별을 통한 공격작전의 즉응성 향상을 위해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위성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전력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천후 미사일 조기탐지 능력 확보

29) 다층방어는 요격고도가 다른 복수의 방어체계로 적 미사일과 최소 2차례 이상 교전이 가능한 방어체계, 복합다층방어는 탄도미사일 다층방어체계와 장사정포대응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를 의미

노력과 함께 탄도탄방어 지휘통제 능력의 강화를 위한 탄도탄작전통제소[30] 성능개량도 추진하여 탐지체계와 방어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우리 군은 한반도 전 지역 방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복합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패트리어트의 성능개량 및 요격미사일을 확충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Ⅱ를 전력화하는 등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하층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 안전보장에 필수적인 종말단계 상층요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L-SAM 전력화 및 성능개량을 추진함으로써 종말단계 상하층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방사포의 혼합사격에 대한 동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 전력화하여 복합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독자적인 복합 다층방어능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동맹의 대응능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고출력 레이저 요격 무기체계 등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연구개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3.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응징적 억제'[31]개념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략적

30)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 Korea Theater Missile Operation Cell) : 탐지체계로부터 적 탄도탄의 항적 자료를 수신 및 처리하고, 요격체계에 대한 교전 통제를 수행

31) 보복 위협을 통해 예상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사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핵사용 억제 개념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사용 억제·응징보복을 위해 미사일 사거리 증가, 위력증대, 대량사격 등 압도적 타격 능력을 강화 중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기 및 잠수함과 같은 은밀 침투·타격 수단 등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사용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F-35A Elephant Walk[32]

장거리·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확충

우리 군은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압도적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 특히 파괴력이 증대된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여 작전적 효율성과 융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량사격 등 압도적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지상·해양·공중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갱도 및 건물파괴가 가능하도록 파괴능력을 강화하고,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무 지대지 탄도미사일

특수전 및 은밀침투 능력 강화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존성이 보장된 침투능력의 보강과 첨단전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수부대가 위험지역에 은밀하고 신

32)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짧은 간격의 밀집 대형으로 이동 후, 출격명령에 따라 잇달아 이륙하는 훈련

속하게 공중침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작전용 수송기(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 등을 전력화할 것이다. 또한, 특임여단 능력보강을 통해 특수전부대의 전천후 침투 및 타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강력한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4.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전략적 능력 통합운용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전력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역량에 관한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사이버 전력과 우주·전자기스펙트럼 전력, 이밖에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우리 군의 역량 확충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편성 및 운용해 나갈 것이다.

단계적 창설 추진 국방부는 합동성을 기반으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한다. 1단계로 2023년 1월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확대개편하였고, 2단계로 작전계획 수립, 지휘통제기반 구축, 운용능력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전략사를 창설한다. 창설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 및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능력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3절

포괄적 안보위협 대응능력 강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 안보위협을 넘어 사이버공격, 테러, 재난, 화생방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사이버 기술의 발전추세 등을 고려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및 체계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작전부대의 조직·인력·장비·물자를 보강하는 등 대테러작전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화생방 위협 및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비태세를 발전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국방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발전

국방 사이버 정책 및 임무수행체계 발전

국방부는 2019년 10월 국방 사이버안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목표와 발전계획을 제시한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를 발간하였다. 「국방사이버안보정책서」는 정확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국방사이버공간의 창출·유지·보호, 국방사이버공간에서 우리의 활동 보장 및 적의 활동 거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수행체계 발전, 사이버전 수행인력의 전문화·정예화,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국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담고 있다.

2019년 2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사이버 작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각 군의 '사이버방호센터'를 '사이버작전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이버 작전수행에 적합한 조직구조로 발전시켰다.

또한, 2021년에는 그동안의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식별하여 사이버작전 최상위부대로서 작전, 기획, 연구개발, 사업관리, 교육훈련 등 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다.

앞으로도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수행체계와 사이버전 수행인력의 전문화·정예화를 지속 추진하고, 사이버전 임무수행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발전

사이버작전 분야는 다른 전장보다 인력의 전문성에 의해 작전역량이 크게 좌

우되는 영역이다. 국방부는 사이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획득-교육-보직-진급'이 연계되는 종합적 인사관리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먼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 위협의 탐지 등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숙련된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사이버 전문인력을 우선 보직하여 활용하는 '사이버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사이버 전문인력의 선발·분류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사이버 특기 및 2020년 3월 사이버 직렬 신설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체계를 정비·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이버작전 형태와 교육 대상자의 임무역량 수준에 맞는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군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예방적 활동에 관한 각 군 차원의 사이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전군 차원의 사이버 안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특화된 사이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전문교육의 경우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 분야별, 수준별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정예 사이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최상위 수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육군 정보통신학교에 고등군사반 과정을 신설하여 사이버 장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군 자체교육·평가만으로 정보보안 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가상의 사이버 전장환경을 구성하여 실전적 공방훈련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국방 사이버훈련장을 구축하고 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실전적 공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우수인력 발굴을 통한 국가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해킹방어 대회이자 컨퍼런스인 '화이트햇 콘테스트(White Hat Contest)'를 개최하였다.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를 바탕으로 대회가 진행되어 참가자의 경험 확대와 사이버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총 302개팀 653명이 참가하는 등 대회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 해킹방어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정예 사이버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국방 사이버 인력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체계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다양한 사이버작전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방 사이버훈련장을 활용한 실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사이버전력 확충 및 고도화

우리 군은 변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전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통합·자동화·지능화된 전력으로 지속 개선하고 있다.

네트워크, 서버, PC, 소프트웨어, 데이터, 무기체계, 드론, 디지털 기기 등 보호 대상별로 필요한 기본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요 군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암호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사항을 종합관리하는 '취약점 관리체계'와 각 군의 관제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전군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네트워크 사이버위협 징후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2021년에는 사이버작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시각화하는 '사이버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사이버 위기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였다. 2022년에는 스마트비행단 IoT(Internet of Things) 환경 실시간 위협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보안 통합관제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발맞추어 미래 사이버전에 필요한 작전개념과 사이버 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R&D 투자와 신속한 후속 전력화 사업을 진행하여 미래형 사이버전 대응전력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

전 세계가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위는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4년부터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인력·조직 분야의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해왔다. 2022년 5월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정책, 작전, 훈련, 교육 등 사이버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22년 8월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 간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작전 분야의 교육 및 연습·훈련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22년 10월 개최된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 사이버 군사훈련인 사이버 플래그 23-1(Cyber Flag 23-1)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가하는 등 국제 사이버훈련 참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한-폴란드 사이버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양자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2021년에는 한-콜롬비아 사이버보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국의 국방 사이버 정책·전략을 공유하는 등 사이버 양자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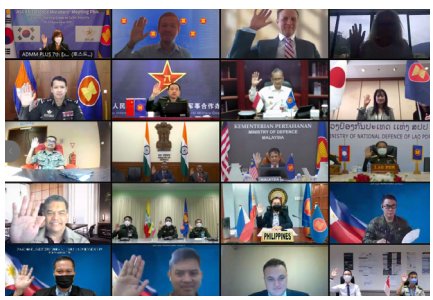
다자간 협력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4년부터 우리 국방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 내에 사이버워킹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30여 개 국가가 사이버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사이버위협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2년 9월에는 45개국 180여 명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22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안보 특별세션 (2022년 9월)

또한, 2018년부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등 8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내의 사이버안보 분과회의(Experts'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에 참가하여 국방 사이버 정책 공유,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이버안보 분과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발전과 국제적인 공조를 선도하고 있다.

2022년 11월 개최된 제9차 사이버안보 분과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최초로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국제훈련을 원격으로 개최하였다.



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회의 (2022년)

또한, 외국 사이버안보 기관의 다양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방사이버사령부 주관 국제 사이버훈련(CYBERNET)에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 등이 2021년 최초로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우승을 차지하여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2022년 4월에는 NATO 주관의 민·관·군 다국적 사이버 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에 우리 군이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11월에는 군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훈련인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에 참관하는 등 앞으로도 사이버 국제협력 다변화를 지속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CYBERNET 2022 한국군 대표 (2022년 5월)

2.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테러 대비 정책·제도·체계 발전

우리 군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 관련 대비계획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 2021년에 「테러대비계획」을 개정하여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테러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부대별 전담 책임지역을 조정하였다. 또한, 「군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하여 테러 혐의를 적기에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테러혐의점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테러 대응체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대테러작전부대와 대화생방테러작전부대의 테러 대비태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테러작전 수행능력 강화

우리 군은 수도권과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대테러작전부대를 광역시·도별로 추가 지정하여 테러 발생 지역에서의 신속한 전개와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대테러작전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대테러 장비·물자 종합발전 로드맵」을 보완하고 노후 장비·물자를 지속적으로 교체·보강하고 있다. 아울러, 대테러

작전부대는 대테러센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화랑훈련과 연계한 지역 단위 민·관·군·경·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항공전개훈련, 선박피랍 대응훈련, 항만 대테러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대테러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추진

최근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드론을 새로운 테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UAE 국제공항과 석유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한빛·고리원전 상공의 미상 드론 무단비행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을 이용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테러센터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드론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군의 대공탐지자산을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레이저대공무기 등 대드론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를 위해 2021년에 「통합방위지침」과 「군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하여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적용·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테러 협조체계 발전

국내에서는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에 의한 테러단체 자금조달 등 간접적인 테러 지원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아시안 정서가 확산되어 재외국민들이 인종차별성 증오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국내·외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국정원,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관·군·경·소방이 통합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우방 국가와 '국제테러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여 대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유엔사무국 대테러실(UNOCT: UN Global Office of Counter-Terrorism)과 테러 예방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등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되었던 대테러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등 국제 대테러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화생방 위협 대응능력 강화

화생방 대응체계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화생방 위협뿐만 아니라 화생방 관련 테러·사고, 감염병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는 긴밀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연합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화생방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공격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유사시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대별 화생방 및 의무부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감시·정찰·제독·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독면, 보호의, 제독제, 치료제 등 방호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화생방 방호시설도 구축하는 등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화생방 보호 및 탐지·식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첨단과학 기술을 적용한 K5 방독면, 화생방정찰차-II 등 신형 화생방 장비를 전력화하는 중이다.

한편, 화생방 관련 사고·테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와 화생방신속대응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중심으로 합참, 연합군사령부, 작전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화생방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화생방 위협, 화생방 관련 사고·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화생방 부대 등 군의 가용전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기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22년 11월에 화생방특수임무단을 창설하여 다양한 화생방 테러·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는 2020년 10월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임상 및 환경시료 공인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에서 화학무기 공격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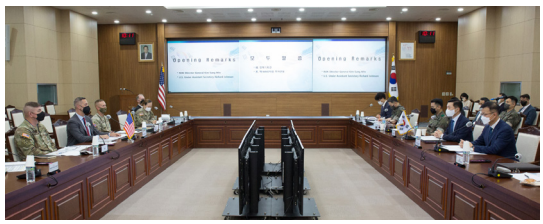
또한, 우리 군은 범정부 차원의 화생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하여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생물테러 위기대응훈련, 원자력안전위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원

회 주관의 국가 방사능 방재연합훈련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국제공조 강화

한·미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공동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국장급 연례 협의체인 대확산회의(CPWG: 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그 명칭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ttee)로 변경하고, 정책적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2년 7월에 개최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강화, 한미 연합훈련 확대, 화생무기 폐기기술 한·미 공동연구 확대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2022년 7월)

한·미는 생물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온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화생방 분야로 훈련 범위를 확대하면서 2017년부터는 '한미 화생방대응연습'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훈련은 한·미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대량 피해에 대비하여 화생방 위기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범국가적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관부처 간 협력·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22년 9월 화생방 분야 국제공조 확대를 위해 NATO 군축비확산센터와 화생방 협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교육, 훈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화생방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속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2년 11월 화학무기 공격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상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 본 훈련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조사절차 숙달, 기술 협력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양 기관은 훈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

한-NATO 화생방 협력회의 (2022년 9월)

다. 또한,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27차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훈련성과를 발표하여 화학무기금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가운데, 화생방 테러,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규모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재난관리체계 발전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비하여 2021년 3월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전면개정하였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재난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신속지원단'의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유사임무를 수행하던 재난대응부대 통합과 지휘권을 각 군에서 합참으로 이관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1년 9월 '국방부 재난대응 매뉴얼 전면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매뉴얼 개선 방향도 마련하였다. 해당 계획에 따라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작성하는 매뉴얼 수립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연간 매뉴얼 개정 및 정기점검 등 전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매뉴얼 개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는 2022년 8월 민간전문가 3명과 매뉴얼 관련자 16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협의체'를 발족하여 개선사항 도출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부터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적시적인 의사결정과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임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육군 종합군수학교와 공군 항공안전단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재난 분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58명을, 2022년 283명을 교육하였다.

우리 군은 범정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1~2022년에는 다중밀집시설 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22년 11월)

이밖에도 계절별, 유형별 재난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각급 부대별로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 및 사고유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다중밀집시설 화재·붕괴사고, 식중독 대응, 부대별 임무 특성을 고려한 방사능방재훈련, 감염병 대응, 테러 등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우리 군은 2020년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태풍, 2021년에는 코로나19, 산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규모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항공기 사고, 2022년에는 지진, 화재, 산불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현장훈련을 재개하여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을 점검하였다. 우리 군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요소인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극복 지원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현장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 종료 이후에도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복구하여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33]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였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갑작스런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에서는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고무보트(IBS)를 지원하여 27명을 구조하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2명을 심해잠수사를 투입하여 구조하였다.

또한, 우리 군은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연인원 170만여 명의 의료·행정인력을 투입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33) 2011~2020년 연평균 인명 18.3명(태풍, 호우 피해), 재산 4,419억 원 (2020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23일)

[도표 3-7] 최근 5년간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현황

연도	지원내용	인원(명)	장비(대)
2018	총계	2,699,121	171,486
	소계	44,560	9,832
	산불지원	8,970	186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16,125	8,168
	실종자 수색·구조	1,165	219
	구제역·AI 방제	10,452	1,246
	폭설, 지진 피해 지원	7,848	13
2019	소계	204,988	11,484
	산불, 화재	22,242	526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64,745	2,319
	실종자 수색·구조	4,208	748(군견15)
	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108,985	7,490
	철도·화물 노조 파업 관련 지원	3,900	-
	해양오염, 인천 적수 등	908	401
2020	소계	674,452	48,405
	산불, 화재	1,984	89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128,699	17,063
	실종자 수색·구조	5,604	778
	AI·ASF 확산 차단	60,161	6,108
	코로나19 대민지원	478,004	24,367
2021	소계	1,111,888	61,108
	산불, 화재	1,031	122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5,672	131
	실종자 수색·구조	5,932	367
	AI·ASF 확산 차단	201,685	17,047
	코로나19 대민지원	869,120	43,439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448	2
2022	소계	663,233	40,657
	산불, 화재	23,265	1,139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74,469	4,639
	실종자 수색·구조	2,856	343
	AI·ASF 확산 차단	153,431	28,430
	코로나19 대민지원	405,961	5,897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33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지원	418	209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대민지원 및 구조활동 (2022년 9월)

강원 동해 산불 진화 (2022년 3월)

하였으며,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과 국방어학원 시설을 각각 감염병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시설로 제공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군 소독차량, 수색 및 포획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2022년 10월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발생 시에도 시추대대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매몰 광부 구조작전에 기여하였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장병 269만여 명과 장비 17만 1천여 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현황은 [도표 3-7]과 같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해외재난 긴급구호 대응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난의 대형화로 인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해외긴급협의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방부는 긴급구호, 구조인력, 물품의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해외긴급구호 군 수송기 임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재난 발생시 해외긴급구호대를 48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공군 C-130 승무원들은 코로나19의 확진 가능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 7월 필리핀과 민간항공 직항 노선이 없는 동티모르에 KF94 방역마스크 40만 장을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2021년 제1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는 재난구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ADMM-Plus 국가의 군 활동 및 역할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였

다. 또한, 제7회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연례회의를 통해 화물 하역 및 승무원 체류, 이동수단 확보 등 우리 군 수송기의 원활한 해외긴급구호 임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지 민간 및 군과 협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공동재난대응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021년 6월 우리 군 수송기가 해외재난 긴급구호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군용 항공기의 해외사고 대응매뉴얼」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상황전파, 상호 협력·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및 수습체계 강화를 위한 절차,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이다.

또한, 해외재난 발생에 따른 군 수송기 지원 시 피해국 재난대응체계와 다국적군 협조체계에 대한 임무 요원들의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긴급구호 임무 시 활용을 위한 민군협력 Guide Book'을 제작하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승무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가이드북은 아태지역의 재난대응 개관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5개 재난 취약국가별 재난대응체계로 구성되었으며, 매 2년 단위 책자 개정에 맞추어 한글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훈련은 온라인 국내 합동모의훈련으로 실시되었으나 2022년에는 군 공중급유기를 지원하여 적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긴급구호대의 해외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2022년 해외긴급구호 모의훈련 (2022년 12월)

5. 범정부 코로나19 대응·지원

의료지원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인적·물적 의료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 국군수도병원을 시작으로 국군 고양·대구·대전·포천병원 등 군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최대 597개의 병상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여 285개 병실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2022년 현재까지 총 1만 3천여 명의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등 국가적 병

상 부족 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16만여 명의 군의관과 간호인력을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신임 군의관 181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전국의 공공의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대응상황실에 투입하는 등 확진 환자 치료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해군 함정을 활용한 도서지역 해상 접종지원

한편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하고자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요양병원 등에도 군 의료인력을 투입하였다. 특히 2021년 6월 의료시설이 없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주민 680여 명에게 해군 함정을 활용한 해상 순회접종을 안전하게 수행하였다. 해군 함정을 이용한 백신접종 지원은 세계 최초 사례로, 2021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행정지원

우리 정부는 3T 전략(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과 사회적 거리두기, 전 국민 백신 접종 등으로 대표되는 종합적 방역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1월 전국 8개 공항과 13개 항만 검역소에 81명의 행정지원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항·항만 검역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등의 업무에 연인원 119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의 방역현장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으로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1천여 명의 인력지원을 추가로 요청받고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의 군으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임시선별검사소 시민 안내

백신 수송·경계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범정부 백신 수송 전담 조직 창설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21년 1월 백신 수송지원본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백신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1년 2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하에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공식 창설하였다. 특히 백신 수송지원본부장에 육군 중장을 임명하고, 국방부 인력을 백신 수송지원본부에 파견하는 등 백신 수송지원본부 창설·운영에 국방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는 백신 도입 방식(해외 도입, 국내 생산)에 따른 지상·해상·항공별 수송·호송 모델을 정립하고, 계획대로 백신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유통 전 9회에 걸쳐 모의 훈련을 시행하였다. 백신 수송지원본부는 2021년 2월부터 대형물류창고(이천, 평택, 오창)에서 전국 282개 예방접종센터와 1만 7천여 개 위탁의료기관에 약 1.2억 회분의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위해 차량 2.9만여 대, 인원 7.7만여 명, 군 항공기 및 함정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백신 수송·호송 거리가 약 860만 ㎞에 달했을 정도로 국방부는 전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백신 수송지원본부는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백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백신 수송용기 고장, 백신 생산·보관시설 누수·정전, 냉동고 이상 등을 적시에 식별하고 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19만여 회분의 백신 폐기를 예방하는 등 약 42억 원의 백신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였다.

백령도와 연평도 백신 공중수송

제4절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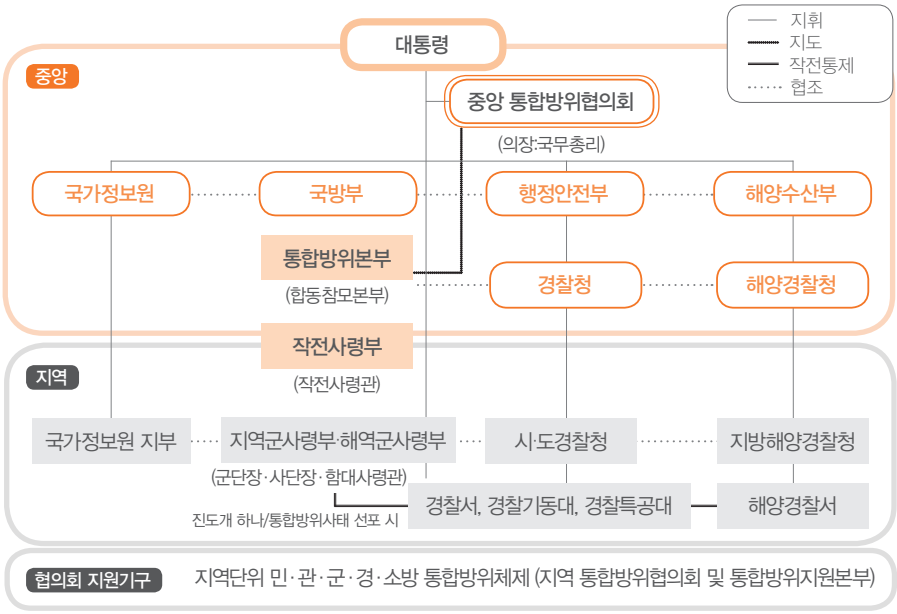
정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민·관·군·경·소방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구체화하고, 관할지역 내 지역(해역)군 및 경찰청장 주도의 지휘관계와 전력 등을 편성하기 위해 상호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체계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기구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중앙·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지휘 및 협조체계는 [도표 3-8]과 같다.

[도표 3-8]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34]



34) 작전사령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역군·해역군사령관을 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제36조) 개정(2021.11.30.)

중앙 통합방위협의회[35]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지침 하달,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 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통합방위작전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 등을 심의·의결한다.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며,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의 원활한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설치되며 의장은 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 통합방위작전 지원 대책 수립, 취약지역 선정·해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35) 통합방위법 제4조에 의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2.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 발전

안보영역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감염병, 재난, 안전사고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복합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전 요소를 통합운용하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방위 역량 강화

통합방위본부는 군사적 위협, 드론을 이용한 신종 테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이버위협, 자연·사회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범정부 차원의 드론 테러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방위요소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용하여 골든타임 내 통합된 대응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2월 통합방위본부 운영예규를 신규 발간하여 통합방위본부와 정부부처·유관기관 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접적지역 민·관·군의 협력 강화,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군과 경찰의 작전수행체계 발전, 국가방위요소별 조직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해 통합방위 역량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통합방위훈련 성과 제고

통합방위본부는 전·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후방지역 종합훈련(화랑훈련)을 시행[36]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통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통합방위작전수행체계를 진단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사태 선포 심의·의결 절차 숙달, 실전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 화생방 사후관리 통합 대응체계 발전 등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실전적인 통합방위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전파 및 주민대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화학·가스시설 등 대량피해 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 대피훈련을 확대 적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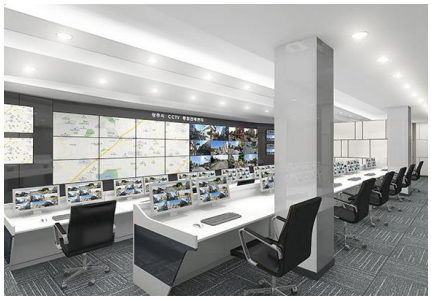
3.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 확대

적 침투 및 도발, 테러, 재난 등 상황발생 시 경찰 112, 재난 CCTV, 지자체 사회안전망이 망라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골든타임 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요소의 통합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36) 2021년 4개 권역(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경기, 경남), 2022년 5개 권역(부산·울산, 강원, 전북, 충북, 제주)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행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정보공유

정부는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대테러 및 대침투작전뿐만 아니라 재난상황 발생 시 지역 책임부대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와 지역 책임부대 간의 영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45개 중 전년 대비 1개소 추가된 13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108개소 지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단위 '스마트시티 플랫폼'[37]과 연계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

37) 112, 119, 재난상황 등 다양한 정보연계를 통한 스마트 도시안전 서비스 지원체계

바다 내비게이션(e-Nav) 정보공유

해양수산부-국방부(합참)-국가정보원은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38]를 기반으로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안경계작전 간 선박(표적)의 추적 및 관리 여건이 개선되었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과 협업하여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고 군 해안경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8) 해수부에서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021.1.30.부 시행)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충돌·좌초 예방지원, 안전항로 지원(내비게이션), 자동 입·출항신고, 긴급구조 요청 등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우리 군은 미래전 양상과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유능한 간부 육성과 창의적인 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 교육훈련 목표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원 및 전투부대 육성'을 위해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화된 학교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실전적 부대훈련으로 혁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1.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우리 군은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민·군 갈등 증가 등 교육훈련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훈련체계의 과학화를 위해 실기동 쌍방훈련이 가능한 마일즈장비 도입 확대, 전술·전기 연마와 장비기능 숙달을 위한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실기동·실사격훈련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구축, 그리고 전 훈련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훈련관리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 훈련체계

마일즈(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는 쌍방 교전을 통해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술과 전기를 숙달할 수 있는 장비이며, 1998년 육군에서 소대급 훈련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가 최초 보급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중대급 훈련이 가능한 장비까지 보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전력화하여 보급하고 있다. 해군·공군에도 기지방어 훈련을 위해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 포병사격훈련용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기갑·기계화부대 마일즈 장비에 대한 연구 및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병력이 가상의 환경에서 장비 기능숙달과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모의훈련체계는 함정, 항공기, 전차 등의 운용 및 조작 절차 숙달을 위한 시뮬레이터 위주로 도

입하고 있다. 또한, 실기동 훈련이 어려운 기갑·기계화부대 등은 전술훈련용 장비를 확대하고 가상환경에서 훈련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여단급 합성훈련환경(STE: 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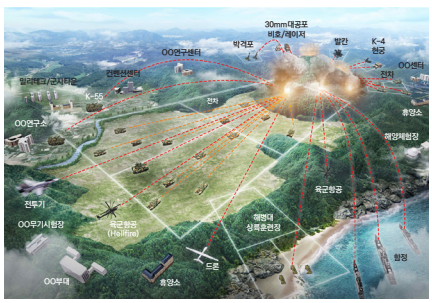
과학화 훈련장 구축

우리 군은 과학화된 장비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장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기동·실사격 능력을 숙달하고 훈련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은 대대급 이하 제대가 편제 장비와 지원 화력을 통합운용하며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부터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승진훈련장 등 군단급 훈련장 3개와 백두훈련장 등 사단급 훈련장 2개를 구축하였으며 2032년까지 군단급 3개, 사단급 8개의 훈련장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화 훈련장은 주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통제실에서 훈련 모습과 표적명중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투사격 통제체계, 전투원의 전투행동 및 교신내용 등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임무확인체계,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국면별 분석 및 사후검토가 가능한 훈련참관 장비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국방종합훈련장 확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실사격 훈련소요가 증가하고 작전공간 확대 및 첨단화·고위력화된 무기체계의 실전배치 등에 부합하는 실사격 훈련장이 필요한 반면, 훈련장 주변 소음·분진·안전사고 등에 의한 주민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화 훈련환경조성 및 확대와 연계하여 연합 및 합동부대가 실사격·실기동 훈련을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국방종합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종합훈련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훈련장 군사요구도 구체화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국방종합훈련장 구축 사업은 지역공모라는 새로운 도입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핵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방종합훈련장 확보를 통해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전적인 훈련여건을 보장할 수 있으며, 훈련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함으로써 민군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종합훈련장 개념도

2. 학교교육 체계 개선

국방부와 각 군은 군사전문성을 갖춘 정예장병을 육성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양성교육, 병과·계급·직책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보수교육 등 학교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교관 중심의 강의 위주 교육에서 교육생 중심의 토론·토의·실습 등 자기주도적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첨단무기체계 도입, 교리 발전, 군무원 증원 등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5G, VR·AR(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디지털 트윈(Digital twin)[39]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육체계(스마트캠퍼스 등)로 교육환경을 전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소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교육과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및 양성을 위한 부사관 학군단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양성·보수교육 과정의 첨단과학기술 교육 강화와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국방 원격교육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의 학교교육 현황은 [도표 3-9]와 같다.

[도표 3-9] 각 군 및 국직·합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과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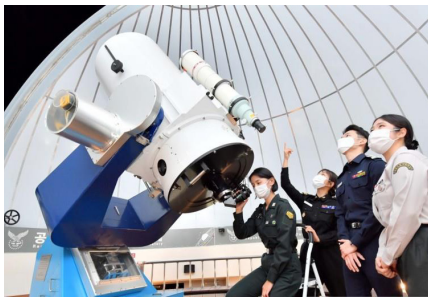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국직·합동부대
양성교육	50	27	8	8	6	1
보수교육	2,455	866	963	475	28	123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국방부는 생도들이 주도하는 토론·발표식 수업과 프로젝트 수행 등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야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투임무 위주의 교과체계로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 우수대학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위해 2022년 8월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관생도를 일반대학에 파견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관련 인공지능학과의 신설 및 교양 기초과목 확대, 융합전공 추가 신설 등을 진행 중이며, 6·25전쟁사, 북한학, 군사전략 등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생도들의 국가관, 대적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3군 사관생도들의 합동성과 합동작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학년부

39)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보는 기술


사관생도 합동교육

터 3학년까지 매년 2~3주간 체험·현장 중심의 합동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는 육군 기계화부대 견학, 워리어플랫폼 체험 등 지상작전 및 육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는 해군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훈련함, 상륙함 등에 승함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와 국내 주요 도서(울릉도·독도, 가거초 근해 등)를 방문하고 다양한 해상훈련과 함상생활을 체험하는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는 공군 비행단 견학, 비행환경적응훈련 및 비행적성훈련 체험 등을 통해 공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3군 사관생도 합동교육을 확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부사관 학군단 운영

우수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6개 전문대학에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하여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2019년에는 부사관 학군단 정식운영 및 확대방안을 확정하여 해군·공군은 2020년 1월부터, 육군·해병대는 2020년 4월부터 '부사관 학군단'을 정식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부사관 학군단 확대를 추진하여 4개 대학(육군 3개, 해군 1개)을 추가로 선발하였으며, 현재 10개 전문대학에서 부사관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군은 부사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부사관 학군단 임관 현황은 [도표 3-10]과 같다.

[도표 3-10] 부사관 학군단 임관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1기 (2017년)	2기 (2018년)	3기 (2019년)	4기 (2020년)	5기 (2021년)	6기 (2022년)
임관인원	992	143	173	169	156	170	181

군무원 교육체계 개선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에 따른 부대·병력구조 변화로 인해 군무원 정원 및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군무원 교육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정책회의를 통해 군무원 신규임용자 통합교육과

미래 리더과정 운영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6급 이하의 실무자 보수교육은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과 소양 함양을 중점으로 교육 과목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2021년부터는 각군별로 실시하던 신규임용자 교육을 국방대학교 통합교육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군무원 부서장 확대에 대비하여 4·5급 관리자 직급 중 역량있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군무원 리더로서의 소양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중견 리더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 구축

우리 군은 미래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동·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갖춘 군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계급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교 양성과정에서는 사관생도 합동교육을 확대하였으며, 학군·학사사관 등 후보생 교육과정에도 합동교육 관련 기본소양 교육과목을 신설하였다. 위관장교 보수교육과정에는 타군의 조직·편성과 합동·연합작전 수행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추가하였다. 특히 소령·중령 장교 중 선발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던 합동·연합작전 전문교육을 더 많은 장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합동 고급과정(단기, 원격)'을 개설하여 2020년부터 시범운영 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단기 및 원격과정을 통합하여 필수과정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부서와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대령을 대상으로 '합동·연합 정책관리자 과정'도 운영 중이며, 준장 진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정책결정자 과정'의 교육과목에 합동·연합작전 관련 과목을 확대하여 편성하는 등 초급장교부터 장군까지 합동·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합동·연합 정책관리자 과정

국방 온라인 교육 활성화

우리 군은 소집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다수의 교육생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 입교 대상자들은 각 교육기관의 소집교육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을 준비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2017년에는 국방 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 Military-Massive Open Online Course)[40]체계를 구축하

40) 군사교육을(Military)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하는(Open), 웹기반으로(Online) 구성된 강좌(Course)

여 모든 장병이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육군 보병학교 등 41개 기관에서 95개의 국방 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우리 군은 안보환경의 변화,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 및 민군갈등 증가 등 변화된 교육훈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전적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각 군의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합훈련을 확대하며, 육·해·공군을 통합한 합동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실기동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주요 훈련

육군은 전장 중심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개인 및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개인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의 체력단련을 통해 전장상황에서의 극복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전투전문가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및 팀 단위의 최정예 300 전투원을 연 1회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또한, '임무에 기초한 교육훈련'을 구현하기 위해 부대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선정한 임무필수과업목록(METL: Mission-Essential Task List)에 의한 훈련별 과업 숙달도를 평가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 기상이변, 민원 등 교육훈련에서의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KCTC(Korea Combat Training Center)훈련은 여단급 쌍방훈련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부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41], 교전마일즈 장비를 야전부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주둔지 또는 임의지역에서 소부대 쌍방교전 훈련을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

연합 과학화훈련(KCTC)

육군 KCTC 여단급 쌍방훈련

41) 2021년 8개 부대 →2022년 14개 부대

게 되었다. 또한, 모의장비(Simulator)를 활용하여 가상의 전장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 등의 훈련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컴퓨터 모의기법을 활용한 전투지휘훈련(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을 통해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과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해 한미특수작전, 비정규전, 제병협동훈련, 공중강습, 고공 강하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8군이 보유하고 있는 밴달(Vandal) 훈련센터에서의 연합 소부대 과학화훈련과 미 본토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의 연합 소부대훈련을 실시하고, 연합 KCTC 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횟수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1]과 같다.

[도표 3-11] 최근 3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회

구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2020년	30	29	29	-	1	1	-
2021년	66	64	64	-	2	2	-
2022년	66	63	62	1	3	3	-

해군은 동·서·남해 각 해역에서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실전적 협동[42]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미 및 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사관생도의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국익 증진을 위해 매년 순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 및 합동훈련은 지상·해양·공중의 합동전력이 참가하며, 대함·대잠·방공작전 등 다양한 작전유형에 부합된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협동 및 합동훈련으로는 해상 기동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합동대응훈련, 합동상륙훈련, 동해영토 수호훈련 등이 있으며, 전투탄 실사격을 통해 정밀유도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군사협력 증진을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작전수행능력 제고와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해 한미 해상기회훈련, 연합 전구대잠전 훈련, 기뢰전·구조전·특수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연합훈련은 코브라골드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다자간 구

42) 특정한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휘관계가 없는 2개 이상의 부대가 상호 협력하는 것

조훈련(KOMODO)[43]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연합기회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2]와 같다.

환태평양훈련(RIMPAC)

순항훈련[44]은 매년 권역별로 구분된 4개 항로를 번갈아 가며 약 100~140일 동안 실시하고 있다. 순항훈련 중 주요 인사 예방, 방산수출 지원, 6·25 참전 보훈 및 재외국민 위문활동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도표 3-12] 최근 3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회

구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2020년	88	75	70	5	13	5	8
2021년	104	87	78	9	17	10	7
2022년	116	94	81	13	22	7	15

공군은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주도적인 항공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단독 및 합동훈련, 국내·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Soaring Eagle), 공격편대군 훈련, 공대공 실사격 및 공대지 폭격훈련, 방어제공 종합훈련, 감시정찰훈련 등의 단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방공, 긴급항공차단, 대화력전, 근접항공지원, 서북지역 공해 합동훈련, 대규모 해상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 등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합훈련으로는 대규모 연합공중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공중훈련(Vigilant Storm)및 연합 특수작전훈련(Teak Knife), 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CSAR-TE: Combat Search And Rescue Training Event)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연합훈련 기회확대를 위해 중규모 연합편대군(CFE: Combined Forces Exercise) 훈련 및 한·미 전투대대 간 소규모로 실시하는 쌍매B 연합훈련을 신설하였다.

다국적 연합 전구급 공중훈련(Red Flag-Alaska)과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인도적

해군
환태평양훈련(RIMPAC)

한미 공군
이동식발사대
타격훈련 및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43) KOMODO는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의 섬 이름

44) 해군사관학교 4학년 사관생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양 항해훈련

지원 및 재난구호 훈련(Cope North), 전시 피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전시 피해복구 훈련(Silver Flag) 등 해외 연합훈련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침투 및 투하전술 등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고급공수 전술훈련에 참가, 2021년에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훈련에 최초로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국가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상호 운용성 확보와 전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3]과 같다.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협력 훈련(Cope North)

[도표 3-13] 최근 3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회

구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2020년	25	20	19	1	5	1	4
2021년	45	43	43	-	2	-	2
2022년	56	50	49	1	6	1	5

이외에도 실제 훈련이 제한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상모의훈련 장비(Simulator), 공중전투기동훈련 장비(GPS-ACMI: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전자전훈련 장비(EWTS: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등을 활용한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국적 우주상황조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을 통해 우주상황인식 능력 제고 및 연합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병대는 강제진입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상륙훈련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기동부대 훈련, 연합·합동훈련, 제대별 전술훈련 등을 통해 최고도의 작전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륙훈련은 쌍룡훈련 및 호국훈련 시 여단급 이상 규모로 시행하여 연합·합동 강제진입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신속기동부대 훈련을 통한 서북도서 방어작전·안정화작전·비군사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서북도서 증원훈련, 울릉도 및 제주도 전지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연합훈련은 한미 해병대 전술제대급 연합훈련(KMEP: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45]을 연중 실시하여 병과별 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브라골드 훈련, 칸퀘스트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등의 해외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er)훈련, 필리핀 카만닥(Kamandag)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미 제병협동훈련도 참가하는 등 다자간 해외 연합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4]와 같다.

제대별 전술훈련은 독립 전장을 주도·관리할 수 있는 작전수행의 완전성을 구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부대별 특화된 공수훈련, 상륙기습훈련, 유격훈련 등과 연계한 전술훈련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쌍방훈련으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상륙함 탑재훈련 및 대대급 이하 상륙작전 기회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도표 3-14] 최근 3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회

구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 연합훈련	다자간 훈련
2020년	20	17	17	-	3	-	3
2021년	18	16	16	-	2	-	2
2022년	18	14	14	-	4	-	4

합동연습 및 훈련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합동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합동 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태극연습은 우리 군 단독 지휘소연습(CPX)으로 작전사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하여 컴퓨터 모의모델을 활용하여 전쟁 이전 단계에서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방어준비태세 격상 등 전시전환 절차를 중점적으로 숙달하고 있다.

호국훈련은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통합전투력 운용 및 작전지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참 주관의 야외 기동훈련이다. 통합된 상황조성을 바탕으로 각 군 및 작전사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모든 기능이 통합된 대응능력과 현존전력 운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민·관·군·경·소방의 모든 작전요소가 참가하는 종합훈련으로 전·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 및 지원 절차를 숙달하고, 지방자치

45) 한국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으로 한·미 해병대가 연합작전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

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및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재난·테러 등 점증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화랑훈련을 통해 모든 국가방위요소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통합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연합연습 및 훈련

한·미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전력의 전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투준비태세와 연합작전수행 및 작전지속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후반기부터 한·미 양국이 협의하여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유의 방패(FS)'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을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합연습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였으며, 2022년 UFS 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FS 연습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장 상황을 조성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야외기동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22년 후반기부터 UFS연습과 연계하여 연합대량살상무기대응훈련, 쌍매훈련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시행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3년 전반기에는 FS연습과 연계하여 그동안 여단급 이하 규모로 시행해오던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연합 KCTC훈련을 중·소대에서 대대급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한미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Maritime Counter Special Operation Force) 훈련 등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과 국군의 날 75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연합합동 화력시범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연습

4. 훈련장 갈등관리

제도 정비 국민들의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훈련장 주변까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훈련 소음·분진 발생, 훈련장 주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갈등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장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4월 '훈련장 갈등관리 구축방안'을 정책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2019년 6월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을 제정하고, 각 군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갈등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증원(20명, 군무원)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군단급에 전담팀을 편성하여 훈련장과 관련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각 군별로 주요 훈련장[46]의 경우 갈등관리위원회에서 과제를 관리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국방부는 2019년 12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을 하고 있다. 2021년까지 49개소의 사격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1단계, 2020~2021년)를 실시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6개소의 사격장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1~2단계, 2021~2022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하였다.

주한미군 훈련장 갈등관리 주한미군 훈련여건 보장과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방부 주도로 훈련장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차·장갑차·박격포 등 미8군의 주요화기를 사격하는 영평훈련장의 경우 2018년 도비탄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사격 훈련이 중지된 적이 있었으나, 도비탄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47]를 통해 지역주민 및 포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48]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는 전차, 박격포, 장갑차 등 실사격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파치 헬기 사격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8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은 영평훈련장에서 사격이 제한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초까지 포항 수성훈련장에서 한시적으로 실시[49]하였으나, 2020년 중반 이후부터는 주민반대로 수성훈련장에서의 사격훈련도 중단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수성·영평훈련장 주민들의 소음보상을 위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포천 승진훈련장 등을 활용하여 훈련소요를 분산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장 주변 지역사회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

46)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포항 수성사격장, 양평 종합훈련장, 가평 거접 훈련장. 포천 승진훈련장, 철원 포병훈련장,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화천 포병 훈련장, 보령 대천사격장, 보령 운천사격장, 상주 낙동사격장

47) 영평훈련장 갈등관리 협의회(의장:국방차관, 구성:국방부,국조실,행안부, 경기도,포천시,범대위 등) 총 6회 실시(2018년 6월, 2019년 1월, 2019년 7월, 2020년 7월, 2021년 4월, 2022년 2월)

48) 28개 사업 중 8개 사업 완료, 17개 사업 추진 중 (최초 19개 사업에서 지속 보완·발전 중)

49) 2019년 전국 훈련장 대상 한미 연합실사를 통해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포항 수성훈련장으로 판단

한 지원사업 추진, 여러 곳의 훈련장에서 연간 계획된 사격훈련의 분배 실시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한미 양국군의 안정적인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교육

우리 군은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6월부터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

2023년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5년 주기 발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재개편 TF 운영, 전문가 감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내에 개편·발간할 계획이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은 신병, 학교,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은 '선 정신무장, 후 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정과교육과 훈련 및 병영생활 전반을 정신전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정예 전투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학교 정신전력교육은 간부들이 정신전력 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해 발표·토의식 교육과 교관화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부대 정신전력교육은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일, 주간, 반기 단위 교육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부터 주간 정신전력교육 프로그램과 방식을 개편하였다. 기본교재 중심의 '강군비타민'[50] 프로그램은 유지하면서 기존 교양 위주의 'TV특강 지식 IN'[51]을 MZ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의 '그날, 군대 이야기'[52]로 새롭게 개편

시사안보영상교육자료 '그날, 군대이야기'

50)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10분 분량으로 제작한 주간정신전력교육 영상 교재

51) 인문학, 스포츠, 자기개발 분야 전문강사의 강의 영상 교재

52) 연평도 포격전 등 시사안보 내용에 대해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영상 교재

하여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장병 모니터 요원을 운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였다. 전·사적지 답사와 안보현장 견학 및 전투영화를 활용한 군인정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애국심과 전투의지 고양을 위한 군인정신 함양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신기술 활용 소통·공감형 교육 정신전력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정신전력교육에 접목하여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강의와 토의 중심 교육에서 AI, VR,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체험형·자기 주도형 교육을 도입하여 MZ세대 장병들의 교육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과학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바일 기반 AI 정신전력교육 플랫폼[53]의 초기 버전을 2021년에 개발한 후 2022년 1월부터 야전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와 전장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VR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교육센터 구축[54] 등을 통해 강인한 군인정신을 체득하게 하고 있다.

국방정신전력원 기능 강화 국방정신전력원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공보정훈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과 전 병과 장병·군무원이 대상인 군인정신 리더과정, 신병 정신전력교육 교관과정 등 다양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야전부대 활용성과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정신전력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신전력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신전력원이 군내 유일한 정신전력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관, 교재 및 콘텐츠 제작 담당, 정책(제도) 연구담당 등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정신전력원 독립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기념관 북한의 군사 도발실 신설 국방부는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와 위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및 장병 안보교육을 위해 2022년 전쟁기념관 내에 북한 도발과 관련한 상설 전시실을 신설하였다. 전시실에는 연대별, 유형별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 사례를 전시

53) 디지털교안, AI챗봇, AI휴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MZ세대 장병들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학습결과가 데이터로 저장-분석-평가-환류되는 정신전력교육 플랫폼

54) 장병 주도형 교육을 위해 VR, 3D 등 다양한 형태의 실감형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교육센터로 2021년에 10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약 12개소씩 신설하여 2026년까지 68개소 구축 예정

하고, 핵실험에 관련된 영상자료 등으로 구성된 체험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평화의 소중함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6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보장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라는 안보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연계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이 선순환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우리 주도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정치·군사 등 분야별 조치가 망라된 포괄적인 접근법이다.

8·15 광복절 축사 (2022년 8월)

국방부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분야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북한의 계속되는 남북합의 위반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2022년에는 신형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대빈도로 발사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핵 불포기'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신뢰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군사분야 조치를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이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은 2021년 9월부터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일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67구의 유해와 15,670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 가운데 국군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는 40구이며, 이중 4분의 신원이 확인되어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발굴은 호국보훈과 인도주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예정된 백마고지 일대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을 군사적 안정성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남북통행의 군사적 보장 남북 사이의 직접통행은 주로 육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해로와 공로를 이용한 통행도 일부 실시되었다. 남북통행은 주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운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왔다. 철도 통행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었고, 도로 통행도 2020년 1월 말 이후 중단되었다. 남북 간 해로 통행 역시 2010년 '5·24조치'[55]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남북 사이의 직접통행이 재개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 간 통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와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통행이 재개되면 유엔군사령부 및 북한 군사당국과 협의하여 남북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비무장지대의 남북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을 지원할 것이다. 해로 및 공로 통행이 필요할 경우 감시·경계,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 통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다.

남북 군 통신선 운용 우리 군은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 채널로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다. 2002년 9월 남북은 각자의 군 상황실 사이에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9월 24일에는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을 구축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 통신선의 일방적 차단을 반복하여 왔다. 2016년 2월 11일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빌미로 서해지구의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으며, 2020년 6월 9일과 2021년 8월 10일에도 군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현재 남북 간 군 통신선은 2021년 10월 4일 다시 복구되어 현재는 정상 운용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정기통화를 시행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 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국제상선공통망'을 운용하고, 같은 해 11월 2일부터는 제3국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를 매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9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국제상선공통망' 통신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후 2021년 10월 4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국제상선공통망'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되었으며, 현재 일일 단위의 정기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군 통신선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은 물

55)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정부가 발표한(2010. 5. 24.) 대북정책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개성공단 제외),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

론,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 군 통신선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어느 일방에 의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남북 군 통신선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남북 간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3. 군비통제 정책 발전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정부는 원칙과 정책적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억제·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 구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군비통제 노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감시 노력과 연계하여 지속될 것이다.

군비통제 정책 및 제도 발전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군비통제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해 변화된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군비통제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과 연계하여 군비통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비통제 이행방안의 다양한 논의를 위한 군비통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1991년부터 군비통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군비통제 이행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군비통제정책서」[56]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군비통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비통제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비통제정책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56)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전략서」에서 제시된 국방정책 방향을 군비통제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획문서로서 한반도 및 주변 안보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2023년에 개정·발간을 추진할 예정

군비통제 국제 협력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군비통제 추진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개최된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군비통제와 관련된 세션을 매년 운영하여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오고 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등 주요 국제 군축·비확산체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군비통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최초 비확산회의 개최를 통해 WMD 위협 평가 및 정보공유, 교육·훈련 협력 등 상호 발전과제를 도출하였고, 11월에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의 도상훈련[57]을 최초로 실시하여 화생방 공격 및 테러에 대비한 협조절차를 숙달하고 향후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OPCW 도상훈련(2022년 11월)

4. 국군포로 정책 발전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국방부는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2006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자력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른다.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환하여 국내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2022년 12월 기준 14명이다.

57) 화학무기 공격상황에서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를 위한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간 절차 숙달훈련

[도표 3-15]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명

연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원	1	1	4	2	9	6	6	5	14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22	총계	
인원	11	7	4	6	3	1	-	80	

국방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범정부 국군포로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을 조속히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2015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에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 협의·해결'을 최초로 명시하였고,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하여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3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는 56명이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 정부는 2019년 12월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범위에 명문화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남북회담 등을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탈북할 경우 안전한 국내송환을 위해 제3국 및 유관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확대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 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귀환 가족도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서의 대우와 지원 이외에 세대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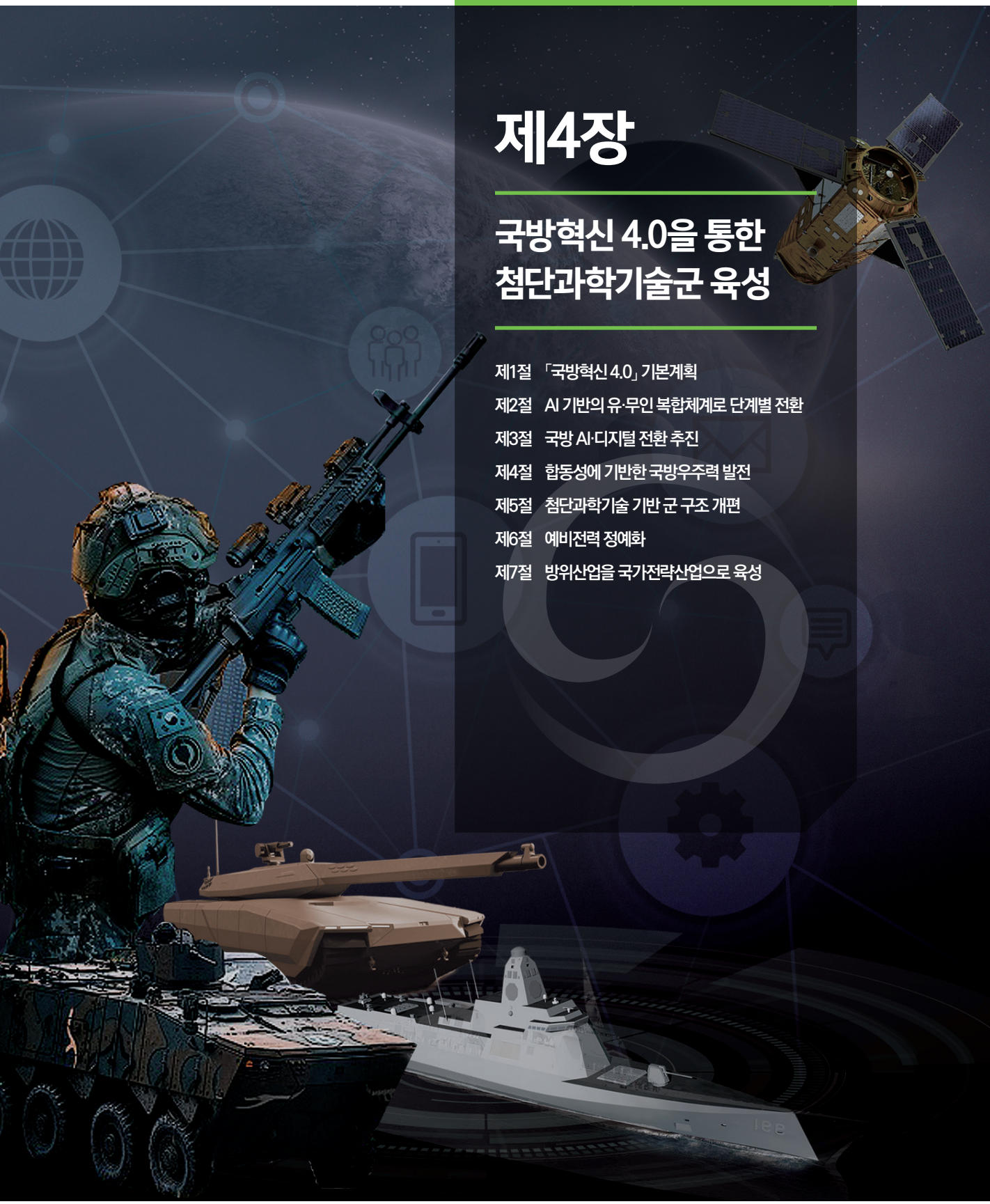
또한,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가정방문과 심리·법률상담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정착지원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군의 날 행사 등에 국군포로를 초청하고 있으며, 국군포로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유관부처와 협조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제1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제2절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별 전환

제3절 국방 AI·디지털 전환 추진

제4절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제5절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

제6절 예비전력 정예화

제7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제1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미래 우리 국방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및 고도화,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감 등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혁신 4.0」은 우리나라가 가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군을 'AI 과학기술강군'으로 혁신하기 위해 5대 중점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1. 「국방개혁 2.0」 추진결과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대한 '군의 정예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된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06~20」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이의 구현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고, 병 복무기간 단축, 많은 부대 해체, 영창제도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력증강 이전에 무리하게 부대 및 병력을 감축하고, 장군 수 감축, 문민화, 영내에서 병 휴대전화 허용 등 외형적 측면의 개혁에 치우쳤으며,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과제들이 근시안적이고 첨단과학기술 활용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군구조 분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합참과 미래연합사간 기능 배분 및 편성을 검토하였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간부 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40.1%로 조정하고, 민간인력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를 개편하였다. 특히, 육군은 상비병력을 2017년 48.3만 명에서 2022년까지 36.5만 명으로 11.8만 명을 감축하고, 군단을 8개에서 6개, 사단을 39개에서 34개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의 개편과 전력증강은 2020년대 후반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운영 분야 국방부 국·과장급 직위 문민화, 책임운영기관 확대, 병 복무기간 90일 단축, 여군 비중 지속 확대, 민간인 중심의 청렴옴브즈만, 어머니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 등 개방형 국방운영을 추진하였다.

병영문화 분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병 봉급 인상,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 허용,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확대 등 병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였다. 반면, 초급간부의 업무 과중과 복지의 상대적 소홀, 군 기강 이완 등의 현상 등이 함께 노출되었다.

방위사업 분야 방위사업은 2019년 방위사업협의회 신설, 신속시범획득제도 신설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무기체계의 전력화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2. 「국방혁신 4.0」 추진계획

필요성 우리나라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국방환경은 [도표 4-1]과 같이 세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불안정성의 증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와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등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4-1] 미래 국방환경 요인

이러한 도전적 안보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가진 과학기술 분야의 강점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적보다 경쟁우위의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미래 전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병력을 절감하고 나아가 인명존중 사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혁신 4.0」 개념

「국방혁신 4.0」은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방혁신 4.0」에서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새롭게 창출하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창군이래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는 4번째 계획, 즉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1980년대) → 5개년 국방발전계획(1990년대) → 국방개혁(2000년대) → 국방혁신(2020년대)으로 이어지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혁신 4.0」 추진중점 및 과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포함된 5대 중점과 이를 구현할 16개 과제는 [도표 4-2]와 같다. 각 과제는 다시 세부과제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각 중점별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표 4-2] 「국방혁신 4.0」 추진중점 및 과제

첫째,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능력 확보, 물리적·비물리적 타격능력과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압도적인 대량응징보복 능력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

령부를 창설한다.

둘째, 군사전략·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과 비전통 위협, 첨단과학기술 발전 등 전략환경을 재평가하여 군사전략을 발전시킨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기반으로 교차영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 신개념 무기체계의 확보와 군 구조 전반의 변화에 방향성을 제공한다.

셋째, AI 기반의 무인·로봇 등 첨단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유·무인복합전투체계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전영역의 무기체계에 대해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원격통제형, 반자율형, 자율형으로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파수, 공역통제, 상호운용성, 보안체계 등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확대된 전장 영역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초연결·초융합하여 적보다 빠른 감시, 결심, 타격이 가능하도록 AI 기반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투 임무수행 능력은 극대화하고 인명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래전에 적합하도록 군구조 및 교육훈련을 혁신한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방위 및 전 영역 통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부대구조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킨다. 전력구조는 핵심 첨단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High-Low 능력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병력구조는 미래 가용 병역자원과 전력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설계한다. 교육훈련분야는 전술·전기 연마와 장비기능 숙달을 위한 가상모의훈련체계 및 과학화훈련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예비전력은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예비군 부대구조와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설계한다. 또한, 과학기술 활용범위 확대와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소요를 구체화하고, 이를 기초로 육성·관리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다섯째, 국방 R&D 및 획득체계를 재설계한다. 국방 R&D는 민간의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군·산·학·연 개방형 체계로 개편하고, 각 군의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과학기술발달 속도에 부합하는 획득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Fast- track 신설, 평가체계를 보다 융통성 있게 개선, 국방부의 전력증강 정책기능 강화 등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 이와 함께 국방 AI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국방데이터 구축·관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방 분야 AI 발전을 주도할 국방AI센터를 창설할 것이다.

「국방혁신 4.0」 추진전략

「국방혁신 4.0」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관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국방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실현과 체감', '소통과 공감'의 3가지 추진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핵심분야 중에서 본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의 추진과제를 엄선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현과 체감'이다. 「국방혁신 4.0」이 정책기획에 그치지 않고 야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 되고,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 추진되는 중·단기과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시범부대 운용, 전투실험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수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10년 이후의 장기과제는 개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되,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화 노력을 해야한다.

셋째, '소통과 공감'이다. 적극적인 대내·외 소통을 통해 「국방혁신 4.0」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 나간다.

「국방혁신 4.0」 기대효과

「국방혁신 4.0」은 우리 군을 경쟁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국방혁신 4.0」의 기대효과는 국방차원과 국가차원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국방차원에서 첫째, 위협 대응능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될 것이다.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능력 강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미래 게임체인저 등을 확보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하여 작전수행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병력 절감형 군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셋째, 작전효율은 극대화하되 전시 인명피해는 감소될 것이다. AI 기반의 무인·로봇전투체계를 통하여 전투능력은 향상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체계가 구현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민간의 기술·인력·역량을 제고시키고, 국가 산업 전반의 소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더욱이, 첨단과학기술과 융합된 국방과학기술은 방산수출 증가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제2절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혁신 4.0」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력 중심의 유인체계에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수립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에 따라 유·무인체계 간의 합동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각 군별 시범부대를 운용하여 검증·평가하면서 단계별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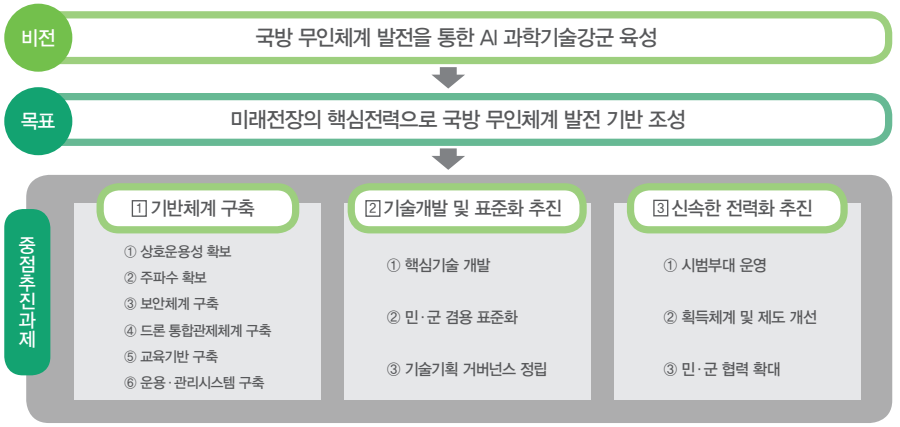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전쟁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론(Drone)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첨단무기들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주파수, 보안, 공역통제 등 기반체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전력화 함에 있어서는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원격통제형, 반자율형, 자율형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 수립

국방부는 미래전장의 핵심전력인 국방무인체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기반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 3개 분야에서 12개 중점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도표 4-3]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3. 시범부대 운영과 기반 구축

시범부대 운영[1]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AI 등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원격통제형, 반자율형, 자율형 3단계로 구축할 것이다. 먼저 원격통제형 체계에서 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하여 2022년 7월 각 군별 시범부대를 지정하였다. 육군은 제25사단 70여단(Army TIGER 여단)에서 무인전투차량, 정찰 및 공격드론 등을 활용한 지상전투를, 해군은 5전단에서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소해함과 연동하여 복합기뢰제거작전을 실험할 계획이다. 또한, 공군은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와 연동한 무인편대기를, 해병대는 제1사단에서 미래 상륙작전 실험을 위해 유·무인복합 상륙형 돌격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시범운용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범부대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면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표 4-4] 각 군별 시범부대 및 대표체계

1)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효율적 전환 을 목표로 최적화된 무기체계 및 부대구조 등을 우선 적용하여 운용하고 전투실험·시험평가 등을 통해 적용부대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군별 대표부대

기반체계 구축 국방부는 국방 무인체계의 개발 및 운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방정보화 표준 방안연구'를 통해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도입될 무인체계에 적용할 표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한다. 둘째, 무인체계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셋째, 국방 무인체계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기술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22년 9월 「국방표준서」를 제정하였으며, 상용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사전 보안인증제도[2]도 추진한다. 넷째, 각 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항을 보장하고 미래 전장에서 합동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드론 통합관제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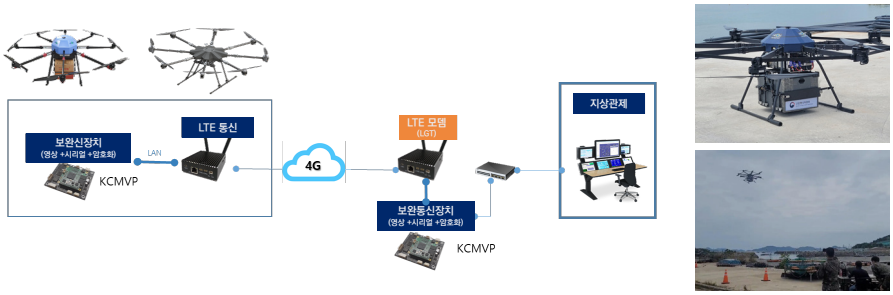
4.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는 우수한 민간의 드론·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군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민군 드론·로봇 실증시험장'을 유휴 군 훈련장에 조성하고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상용 드론·로봇의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여 군 내 도입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타 부처의 드론·로봇 실증사업에 우리 군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산업통상자원부의 '10kg 드론 택배 실증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지정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Korea-Urban Air Mobility) 발전을 위한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하여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였다.

[도표 4-5] 드론 택배 실증사업 및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 현황



2) 상용제품 사전 보안인증제도 : 군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사전에 인증받은 상용제품을 도입할 때는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는 간소화된 보안인증제도

셋째,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함과 동시에 민간 기술의 실증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국토부 도심항공교통 발전 업무협약

제3절

국방 AI·디지털 전환 추진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목표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는 가운데 국방지능정보화 분야에서의 AI·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AI 발전 모델을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한 지능화·고도화된 전력체계를 구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과 AI·SW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방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1. 국방 AI 추진체계 정립 및 국방AI센터 창설

국방 AI 추진체계 정립

국방 분야의 AI는 전장의 전투원을 대체하는 수단이자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무기체계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는 AI를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2년 7월 AI 기술 수준을 고려한 '국방 AI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우리 군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1단계는 '원격통제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및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AI 기술을 감시정찰체계에 적용하고,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무인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전투체계에 적용할 것이다. 3단계는 '자율형'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등을 구현하여 지휘통제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방 AI의 전면적인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 창설 추진

국방부는 AI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합하는 기관으로서 '국방AI센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AI센터'는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연구기관에 분산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합 및 연계하고, AI 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등 국방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

다. 또한, 전군 데이터 수집·관리 협력체계 구축, 데이터 표준화, 보안제도 개선 등 국방 데이터의 원활한 구축, 유통 및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에는 '국방AI센터' 창설을 위해 국방부 내에 국방AI센터추진팀을 편성하였다. 국방AI센터추진팀은 각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AI 업무를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국방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AI 소요를 기획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방AI센터' 창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표 4-6] 국방AI 3단계 발전모델

2. 양질의 국방데이터 구축·관리·활용 활성화

국방데이터 체계적 구축·관리

'국방데이터'란 국방부, 각 군 및 관련기관 등이 업무수행 시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로서, 레이더 및 감시정찰체계 등에서 생성되는 영상·신호정보부터 정책·현안과 관련된 각종 보고문서 및 통계자료까지 망라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AI, 빅데이터 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을 위해서는 국방데이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 12월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을 제정하여 데이터의 생성·수집·등록·폐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데이터 제공 및 표준화·품질관리 등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각 기관(부대)별 데이터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전군의 데이터 관리업무를 조정·통제하기 위해 국방부차관(데이터총괄책임관, CDO(Chief Data Officer))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국방부는 의료영상, 급식, 해안감시경계, 레이더 신호 등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AI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방 전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성을 더욱 증대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방 분야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 정부가 독점적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에 국방부도 여러 기관과 부서에 분산된 국방데이터를 통합하고 폐쇄된 행정 서비스를 개방하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가운데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민·관·군 협업의 국방 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관·부서별로 개별 홈페이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국방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병과 국민은 국방데이터와 서비스가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복지·행정·입영·동원 등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경험과 직관이 아닌 통계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인사·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할 계획이다.

3.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AI, 증강·가상현실(AR·VR)을 포함한 각종 4차 산업혁명의 첨단 ICT를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데이터의 수집, 유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무선의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다.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Military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3]을 고도화하는 차기 M-BcN 구축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4]으로 진행하고 있

3) 전·평시 군의 각종 정보체계들을 모두 수용하는 초고속·대용량의 군 전용 광통신망

4) 민간의 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면서 민간이 관리·운영을 전담하며, 정부가 시설 임대료(Lease)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

으며, 2024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기 M-BcN이 구축되면 제대별로 데이터 전송용량이 5~60배까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 주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광케이블 경로를 이원화함으로써 사용자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생존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통합망관리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네트워크 상태의 실시간 확인 및 서로 다른 기종의 장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고, 통신실 장애 및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감시와 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국가 간 패권경쟁의 핵심요소로 첨단기술이 부상하면서 전략적 기술 우위 확보와 관련하여 5G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방분야 또한 AI, 드론, 로봇, 지능형 CCTV, 무인자율체계, AR·VR,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5G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5G 기술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 공유 및 국방 5G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은 각 군 및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용 5G와 5G 특화망[5]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단말기 보안, 5G 국방암호기술 개발 등 국방 분야에 특화된 요소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하여 안정적 상용 5G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증 및 실험사업을 통해 국방 분야 적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5G 특화망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5G+ 융합서비스의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방분야 5G 고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국방부는 대량의 국방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각종 국방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 AI 학습 및 개발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고성능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 장비와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국방 전 분야에 국방 AI 모델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시정찰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지휘통제체계 등에 AI 모델을 탑재하고, 각 체계에 탑재된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AI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빅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5) 기존 상용 5G 통신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

록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Defense Integrated Data Center)[6]의 컴퓨터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화된 국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를 군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모델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4. AI·SW 인력양성을 통한 국방 디지털 역량 강화

AI·SW 전문인력 양성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 강군 도약을 위해 군내 AI 확산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디지털 예비인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8월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2026년까지 군 AI 전문인력 1천 명, 디지털 인재 5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민간 AI 대학원과 협업을 통해 2022년 5월 군 임무에 특화된 AI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현역 간부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디지털(AI·SW)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의 디지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국방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2026년까지 군 AI를 선도할 인력 1천 명, 디지털산업 예비인력 5만 명을 양성하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국방부와 각 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혁신 기업, 인공지능 대학원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하여 장병들에게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다양한 기술체험 및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였다.

비전 선포식 행사 (2022년 7월)

디지털산업 예비인력 육성 및 교육환경 조성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무기간 자기개발과 전역 후 디지털 분야로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전문 멘토의 양방향 피드백이 제공되는 맞춤형 온라인 AI·SW 교육을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병사들에게는 민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장병에게는 민간 기업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사업

6) 각 군 및 국방기관의 컴퓨터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보호하는 운영기관

인과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이 전역 후 디지털산업 예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병사들의 디지털 교육 붐 조성을 위해 연도별로 교육 시범부대를 지정하고, 디지털 교육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장에는 최신 ICT 기자재 및 팀단위 토론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육군 5군단·6사단, 해군 7전단, 공군 7전대, 해병대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정보통신대대 등 6개 부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AI 경진대회'와 같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장병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하여 디지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제4절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우리 군은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우주개발에 기여하고 우주 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미·국제 우주협력을 심화·확대하고 민·군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우주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여건 조성

정책기반 구축

국방부는 2018년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립에 참여하여 군 정찰위성 및 우주감시체계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변화하는 우주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부 차원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계획서에서는 중·장기 국방우주력 발전 목표에 따라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 확대의 4대 중점분야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국방우주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방향과 우주작전 수행체계 정립 등을 논의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 등을 확인하였다. 2023년에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의 발전목표, 미래 국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한 「국방우주전략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2021년 5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주무기체계를 별도의 무기체계로 분류함으로써 우주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전력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참은 2021년 11월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및 합동우주작전 지휘·통제 아키텍처를 정립할 예정이다.

운영체계 발전

2021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국방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였다. 이로써 안보·외교·과학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국가 우주정책 수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총괄·조정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였다.

제4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 (2022년 12월)

또한, 국가우주위원회 예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우주개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과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국정원 차관급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효율적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안보분야의 우주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안보우주개발시행계획을 2023년부터 매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발전

국방부는 우주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21년 국방대에 우주정책실무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공군은 자군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우주실무연수과정을 모든 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교육기간도 3일에서 2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2년 국방대는 우주정책 석사과정을 신설하였으며, 2023년 1학기부터 각 군 및 해병대 장교들을 대상으로 우주정책·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내·외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을 통해 우주분야 보직 예정자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방우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 합참, 각 군은 군별 특성을 고려한 우주정책 발전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 및 확대하였다. 2021년 국방부는 미사일우주정책과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였고, 육군은 우주관련 부서를 우주·과학기술정책과와 우주·지휘통신전력과로, 공군은 기존 우주발전처를 총장 직속의 우주센터로 개편하였다. 2022년 합참에 군사우주과를 신설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해군은 전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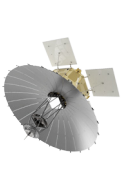
계·우주정책발전과에 우주작전개념 편제보강을 하고, 공군은 우주작전대를 우주작전대대로 확대 창설하는 등 조직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 적용 국방부는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첨단 전력체계의 효과적 확보·운용을 위한 전략 및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체계를 신속하게 개발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령과 제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소요를 검토하였다. 또한, 급속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추기 위해 유관부처와 민·군 기술 공동 활용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주분야 전문연구기관의 「국가 우주산업 수준평가 및 국방 우주발전 정책·전략 연구」 수행을 통해 국방우주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주전력 확충 우리 군은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우주전력을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 등의 4대 범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첫째, '우주정보지원'은 합동작전을 위해 필요한 감시정찰, 통신지원 활동이다. 우리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정보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시정찰, 위성통신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상의 전략표적 등을 획득하기 위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위성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표 4-7] 우리 군의 위성전력 구축



군 정찰위성(레이더 / 광학)

군 통신위성(아나시스 2호)

초소형 위성체계(군집)

특히, 우리 군은 2020년 7월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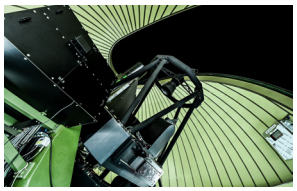
지·해상 통신체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우주기반 통신중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군 위성통신체계-Ⅱ[7]와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7) 아나시스 2호 발사 완료, 지상단말기 전력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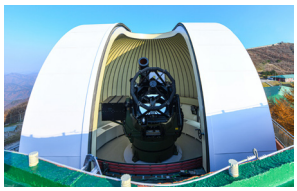
전용 위성통신체계 외에도 민간 통신위성을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우주영역인식'은 우주위험 및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면서 우주영역에서의 복잡성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주위협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주영역에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군은 2022년 1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전력화하여 우주영역인식 능력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고, 우주물체를 탐지·추적하는 정보 획득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 우주작전대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위성 및 우주물체에 대한 궤도와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주요 우주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우주영역인식 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도표 4-8] 우리 군의 우주영역인식 전력 구축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탐색망원경)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식별망원경)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셋째, '우주통제'는 전파 교란·방해 등 우주영역에서의 적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며, 넷째, '우주전력투사'는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가용 예산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한미·국제 우주협력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한·미는 동맹으로서 우주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개최하고,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8] 정보를 공유하고

8)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여 지상시스템과 우주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예·경보)하는 개념

있으며, 연합 우주연습 실시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한·미는 2012년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22년까지 총 18차례의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현안 공유, 우주인력 양성·교류, 우주상황인식 협력, 국제우주상황조치 연습 참가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1년에는 동맹의 우주협력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주역량 강화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2022년 4월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에서 공동연구 결과에 합의하였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양국 국방부 간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문서로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차원의 우주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는 우주영역에서의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의 인식 형성을 위한 정보공유,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연습·훈련,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운용성 향상 등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우주협력회의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미국이 발표한 '파괴적 직접상승 요격미사일 (DA-ASAT: Direct-Ascent Anti Satellite) 실험 금지' 공약에 우리가 아시아국가 최초로 동참을 선언하며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미는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영역에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맹의 포괄적 우주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 우주협력 심화·확대

우리 군은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도 등 우주 선진국과의 국방우주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는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주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21년 국방전략대화에서 양국 간 국방우주협력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우주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2년 3월에는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협의를 통해 프랑스 우주사령부 주관의 우주훈련 참여, 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는 201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21년 3월 양국 국방부장관 회담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2023년에 한·인도 국방우주협력 증진에 관한 시행약정을 체결하여 우주영역인식, 국방우주기술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우주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7년부터 우리 군은 미 우주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국제우주상황 조치연습인 글로벌센티넬(Global Sentinel)에 연례적으로 참가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과 함께 우주위험·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본 연습을 통하여 우리 군은 위성충돌·추락, 탄도탄 발사, 위성공격 등 가상 우주상황에 대한 연합 공조대응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연합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국제우주상황조치 연습(Global Sentinel)

또한, 우리 군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해 왔다. 2021년에는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에서 최초로 우주안보 세션을 개최하였고, 2022년에는 영국 등 37개국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은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 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우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군축연구소 부소장, RAND연구소 유럽사무소 소장 등 권위 있는 전문가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CSpO initiative)[9] 참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2022년 9월)

3. 민·군 우주협력 강화 및 우주 위험·위협 대응체계 구축

민·군 협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2021년에 국방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국가 우주개발역량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민과 군이 함께하는 우주기술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9) 우주영역에 대한 인식 조율을 목적으로 2014년 미, 영, 호, 캐 4개국으로 출범 이후 뉴질랜드(2015), 독일(2019), 프랑스(2020) 참여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고체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군사위성을 포함한 우주전력 투사 시 우리나라 발사체를 사용하여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2022년 12월)

민군 우주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우주분야 미래도전 국방기술, 핵심기술 과제 등을 민간 산·학·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여 수행 중이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국방분야 위성·발사체 등의 기술개발 소요를 적극 제기하여 민간분야 우주기술 발전을 견인할 것이며, 효율적인 민·군 협력 우주개발 추진과 동시에 민간 우주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우주위험[10]·위협[11] 대응체계 구축

우리 군은 우주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부처 우주위험대비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우주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상황 발생에 대하여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경보 발령 및 사고수습, 대응 등 민·군 합동 공조대응 절차를 연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2019년 톈궁 1·2호 추락, 2021년 창정 2B호 추락, 2022년 앙가라로켓 추락, 창정 5B호 추락, 미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위성 추락 시 한국 천문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민군 합동 대응을 실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주위험 상황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12]에 따라 2017년부터 민·관·군 합동 우주상황인식 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군 주요 기관 간 우주감시 및 위성운용 등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공군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가 전력화되면서 우주감시정보 공유절차 수립 등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우주상황인식 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정부기관이 보유한 국가우주자산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전시 군 활용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며, 2023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2년 신설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내 전시운영체계 마련과 민간 우주자산(관측위성, 우주감시체계 등) 동원을 위한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10) 우주기상 악화,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등 자연적·임의적인 상황에 의해 우주활동과 우주자산의 생존성이 저해되는 상황

11) GPS·통신위성 교란, 사이버 공격 및 위성대상 (비)물리적 공격 등 적대적 의도에 따라 타 국가의 우주활동과 우주자산의 생존성을 저해하는 상황

12) 공군,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KAIST, KTsat이 참여하여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2015.7.)

제5절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

국방부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확산,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의 확대, 병역자원의 급감과 같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의 군구조는 전투실험, 시범부대 운영 등을 통해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개편될 것이다.

1. 지휘구조 발전

지휘구조는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와 상비병력 규모 조정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발전시키고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WMD, 무인기 대응 등 새로운 기능의 추가 소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 영역에서 교차영역의 시너지 발휘, 통수권 보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시키고 각군 본부는 첨단무기체계의 소요기획 능력보강과 함께 조직 효율화를 고려하여 개편안을 추진한다.

2. 부대구조 발전

부대구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작전개념의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발전시키고 시범부대 운용과 전투실험을 통해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산시킨다.

첫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를 발전시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각 군의 대응 조직과 전력도 연계하여 보강한다.

둘째, 각 군별로 미래 부대구조를 발전시켜 시범을 진행한다. 육군은 Army TIGER여단, 해군은 무인수상함·잠수정·항공기전대, 해병대는 무인상륙돌격대대, 공군은 유·무인전투기복합체계 기반 부대 등을 시범부대로 지정하였다.

셋째,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의 부대를 창설하고 보강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관련 부대구조는 합참의 영역별 작전개념 발전과 연계하여 발전시킨다.

넷째, 유인위주의 경계체계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경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부대구조를 발전시킨다.

3. 병력구조 개편

국방부는 병역자원 수급 전망, 부대구조 개편, 전력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였다.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투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간부병력[13]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 확대 도입에 따라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능력과 전문기술을 가진 간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간부 편성률을 높이면서, 간부증원을 추진하여 상비병력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7년까지 40.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전투 및 작전지속지원 부대를 중심으로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차질없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GOP 및 해안경계, 공중감시 및 정찰, 초동조치 등 24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현행 작전부대, 대테러부대 등에 병력을 보강하고 있다. 2021년은 경계작전부대 영상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병력을 보강하였고, 2022년에는 작전지속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부대를 보강하였으며, 향후 상시 상황조치·대기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숙련간부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초임 간부 정원은 줄이고, 획득한 인력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간계급[14] 간부의 정원을 늘리는 항아리형 정원구조로 국방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상비병력 대비 중간계급의 정원비율이 2017년 13%에서 2021년 16.8%로 증가하였고, 2022년 18.3%으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까지 19.8%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중간계급 간부 정원의 증가는 장기복무 선발 기회의 증가로 이어져, 청년 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간부를 지속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장기 복무하는 간부 증가로 훈련 경험과 전문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첨단무기체계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병력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민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인력[15]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 행정, 보급 및 정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비전투분야

13) 간부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의미함

14) 중간계급은 장교는 소·중령을, 부사관은 중·상사를 의미함

15) 민간인력은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의미함

의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함으로써 전투부대를 보강하고 있다. 민간인력 중 군무원은 예산, 보급, 정비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민간근로자는 시설관리, 조리, 어학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에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국방인력 중 4.7% 수준이었던 민간인력 비중은 2022년 11.0%까지 높아졌으며, 2023년에는 11.3%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군무원은 군인이 직접 수행하는 전투 등의 업무를 제외한 작전지원, 신영역·신기술 분야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인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상비병력 감축, 부대 해·감편 등과 연계하여 '장군정원 조정 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하였다.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장군 직위를 통합·효율화하고, 교육, 인사행정 등 비전투분야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2021년까지 375명으로 장군정원을 감축하였다. 2022년은 북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한국형 3축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370명으로 장군정원을 조정하였다.

4. 전력증강

전력증강 기본방향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및 전 영역 통합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목표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증강 중점은 첫째, 급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체계를 완비한다. 둘째,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감소하는 병력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무인체계,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한다. 셋째, 미래 도전적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미래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고,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High-Low Mix 개념의 전력증강을 추진한다.

전장기능별로 보면, 전장인식전력은 한반도에 대한 감시능력 보강을 위해 군정찰위성, 다목적위성,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각 제대별 전장가시화 능력과 주·야간 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정찰용무인항공기, 열

상감시장비(TOD-Ⅲ), 다기능관측경 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지휘통제·통신전력 분야는 전구 및 합동지휘통제 능력 보장을 위해 합동 및 각 군 C4I[16]체계의 성능을 개량하고, 전술제대까지 전장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대급 이하 C4I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고속·대용량 정보유통 능력 구비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Ⅲ, 저궤도위성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연합·합동작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전술데이터링크, 공지(空地)통신무전기, Link-16 등의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이다.

지상전력 분야는 북한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및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고속종심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갑 및 기계화, 육군항공전력을 보강할 것이다. 또한, 신속대응 및 결정적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상 및 공중기동능력을 보강하고,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 분야는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한반도 주변 해양우세를 유지하고, 원해(遠海) 해양권익 보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축함(KDX-Ⅲ), 호위함(FFX), 잠수함(KSS-Ⅲ), 해상초계기-Ⅱ, 해상작전헬기, KAAV-Ⅱ 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공중전력 분야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주도적 억제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은밀침투,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전투기(F-X 2차), 한국형전투기(KF-21),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전천후 정밀유도무기 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방호전력 분야는 탄도탄 및 항공기 방어 능력과 장사정포 요격능력 등 복합·다층 방어능력을 구비하고, 전자기펄스(EMP)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전쟁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시설·장비의 방호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16)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전술지휘자동화체계를 의미

2021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2021년 국방비 52조 8,401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보다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9]와 같다.

[도표 4-9] 2021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주요사업	2021년 착수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	•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R&D) •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II(R&D) •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 무인지상감시센서(R&D) • 해안감시레이더-II(R&D) • MCRC 성능개량 • 전투원용무전기
지상전력	• 차륜형장갑차 • 230mm급다련장 • K-2전차	•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 12.7mm저격용소총 • 경기관총-II
해상전력	• 광개토-Ⅲ Batch-II • 장보고-Ⅲ Batch-I • 해상초계기-II	• 근접방어무기체계-II •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 •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
공중전력	• TA-50 Block-II • 항공기항재밍GPS • 한국형전투기(R&D)	• KUH-1 비행훈련시뮬레이터(R&D) • 창공모델 성능개량(R&D)
방호전력	•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 30mm차륜형대공포 • L-SAM(R&D)	• 지뢰탐지기-II • 기동저지탄(R&D) • 적외선차폐연막통

2022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2022년 국방비 54조 6,112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21년보다 1.8% 감액한 16조 6,917억 원이었으며, 2022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10] 과 같다.

[도표 4-10] 2022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주요사업	2022년 착수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 다출처영상융합체계(R&D) • 우주기상예·경보체계 •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 함정용전자전장비-II(R&D) •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기동 / 화력	• K-2전차 • K9자주포 성능개량 • K1E1전차 성능개량	• 전술교량-II Block-I(R&D) • 대포병탐지레이더-III(R&D) • 차륜형지휘소용차량
해상전력	• 한국형구축함(KDDX) • 울산급 Batch-II/Ⅲ • 장보고-III Batch-II	•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 소해함-II
공중전력	• 한국형전투기(R&D) • 공중급유기 • F-15K 성능개량	• 대형수송기 2차 • F-35A 성능개량 • C-130H 성능개량
방호전력	• L-SAM(R&D) • 레이저대공무기 Block-I(R&D) • PAC-III 유도탄	• 장사정포요격체계(R&D)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2023~2027 전력증강 계획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07.4조원을 투자하여 북한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확충하고, 첨단전력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평화유지와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수호에 기여 가능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국방R&D 및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핵·WMD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정찰용무인항공기,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을 전력화하여 첨단·광역화된 원거리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할 것이다. 군위성통신체계-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등을 확보하여 획득된 정보를 통합·전파하고 실시간 타격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할 것이다. 또한, F-X 2차, 장보고-Ⅲ 잠수함, 복합유도폭탄 등을 전력화하여 장거리 정밀·은밀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및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통해 탄도탄 공격에 대한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할 것이다.

첨단전력 중심의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지상전력은 제대별 정찰용무인항공기,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230㎜급다련장,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등을 확보하여 감시 및 타격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소형전술차량-Ⅱ,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존 및 기동성과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운용 병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은 한국형구축함, 장보고-Ⅲ잠수함, 무인수상정·잠수정, 함대공·함대지유도탄, 상륙돌격장갑차-Ⅱ, 상륙헬기 등을 확보하여 한반도 주변 해양우세 유지, 원해 해양권익 보호 및 사단급 입체고속상륙작전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공중전력은 F-X 2차, F-15K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등을 전력화하여 최단시간 내 공중우세 달성으로 은밀침투 및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자전기를 확보하여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제체계 무력화를 위한 비물리적 파괴능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주·사이버·테러·재난 등의 비전통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기상예·경보체계, 레이저대공무기, 잠수함구조함-Ⅱ 등을 전력화하여 실효적인 우주영역 지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테러 발생 시 신속대응 능력과 재난 시 수송 및 구조능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유·무인복합 전투수행 등과 관련된 8대 국방전략기술과 기타 첨단 국방과학기술에 집중투자하여 방위산업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6절

예비전력 정예화

국방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 개편 등과 연계한 군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역의 전투력 증강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원위주부대의 전력을 보강하고,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확대하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예비군훈련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방동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1. 동원위주부대[17] 전투수행 여건 개선

동원위주부대 전력 보강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환경에서도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비사단에 비해 시급성이 저평가되기 쉬운 동원위주부대의 전력 보강을 무기(장비) 및 물자, 인원 분야로 나누어 연도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기 분야에서는 개인화기, 박격포 등 동원사단의 전력 보강 소요를 파악하고 국방기획문서[18]에 반영하여 전력화하고 있다. 물자 분야에서는 생존성 및 전투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탄헬멧 등 동원위주부대 전투긴요물자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까지 부족 및 노후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원 분야에서는 정비인력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동원위주부대가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근예비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각 분야에서 동원위주부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비상근예비군 제도 도입·확대

국방부는 현역 감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에 대비하고 높은 수준의 동원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비상근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비상근예비군은 주요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예비군으로, 의무훈련인 2박 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기간(최대 180일) 추

17) 동원위주부대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로 예비군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을 의미한다.

18) 합동군사전략서(JMS, Joint military strategy),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

가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비상군예비군 제도를 통해 선발된 예비군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을 시키고, 전시와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육군에서 최초 시행한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2018년 육군 분석평가단의 분석[19]에 따르면 비상근예비군 운용으로 인해 전투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전투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선발 시 연평균 재지원율이 58%에 이르는 등 예비군 개인도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활용하여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 이내라는 단기간의 소집·훈련으로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 습득이 어렵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투장비 및 물자관리 등의 직책에서는 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 「병역법」 및 「예비군법」을 개정하여 명칭을 '비상근예비군 제도'로 변경하고, 소집·훈련 기간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군에서 운용 중인 비상근예비군은 3,804명이며, 이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던 2014년의 79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20] 2021년부터는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 연간 약 180일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예비군'을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였다.

앞으로도 비상근예비군 운용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2024년까지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 및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설치 확대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훈련장 관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208개의 예비군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다. 2014년 금곡예비군훈련장에 최초로 과학화훈련체계를 도입하여 시험운용한 결과 훈련방식의 효율성과 훈련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17개소의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였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예비군이 전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관, 시가지전투훈련장, 야지전술훈련장, 실내사격장, 영상모의사격장 등 5개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점 및 기록사격, 분대전투사격, 교전훈련장비를 활용한 분대단위 팀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훈련과 유사한 사격 소음 및 어깨 반동, 분대 단위 팀훈련 환

19) 육군 분석평가단 분석결과 (2018.9~2019.1) : 전투준비시간 16시간 단축 (75시간→59시간), 전투력 13% 향상

20) 연도별 운용 인원 : 2014·2015년 79명, 2016년 169명, 2017년 269명, 2018년 585명, 2019년 1,023명, 2020년 1,769명, 2021년 3,011명, 2022년 단기 3,754명 장기 50명

경 등이 조성되어 있어 전투현장과 유사한 훈련장에서 예비군이 실전감 있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장을 서초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영상모의사격장

그리고 ICT 기반의 모바일 및 무선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는 입소등록 및 퇴소, 실시간 평가, 훈련장 종합관제 및 관리 등 훈련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한 예비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입소, 훈련실시, 평가, 퇴소까지 각 훈련 단계에서 훈련별 대기인원과 훈련과목별 합격여부 등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군에게는 훈련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편익을 제공하고, 훈련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훈련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4-11]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 시행

예비군 디지털행정서비스 활성화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예비군의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예비군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기존의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에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간편인증을 추가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훈련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본인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도 절감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스마트폰 등으로도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분실하거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소집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소집부대는 우편 송달로 인한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였으며, 우편·등기 비용 및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예비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소집통지서 송달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등 예비군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예비군 편익 증대

국방부는 예비군에 합당한 편익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에 1만원 수준이었던 동원훈련보상비를 2022년에 6.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현재 교통비 및 중식비 등 실비만 지급되고 있는 지역예비군훈련에도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비군의 건강과 임무수행 능력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극심하던 2020년, 2021년 2년간은 소집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부방역 지침이 완화된 2022년 6월부터 축소된 형태의 예비군훈련을 재개하였다. 기존의 2박 3일 훈련을 소집훈련 1일, 원격교육 1일로 변경하였으며,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집훈련의 입소 인원을 적정 규모로 제한하였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하였으며, 교장 및 개인 장구류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식당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예비군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 방법 등을 검토하여 대처할 예정이다.

2. 동원준비태세 확립

국방동원체계 발전 국방부는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 시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원소요 제기,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 수립, 기술인력 및 물자동원 운영계획 수립,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효율화 등 국방동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병력동원 분야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 시 군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에 맞도록 예비군을 편성하고, 동원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과 협업하여 전시 초기의 주요전투부대 위주로 우수인력을 동원지정 하는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물자동원 분야는 행정안전부 등 11개 자원관리 주관기관(부처)과 함께 소요 검증, 심의, 자원조사, 지정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협업하여 동원분야별로 전시 필요 물자 및 장비 등이 적합하게 동원되도록 하고, 동원이 제한되는 품목은 대체 또는 유사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비군 자원관리 예비군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관리되고 있으며, 평시 지역방위와 재해·재난에 대비하면서 전시 현역부대의 증·창설이나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군은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간부는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병사는 전역 후 8년까지 편성된다.

2022년 예비군의 규모는 273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6천여 명이 지원예비군[21]에 편성되어 있다. 예비군부대는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예비군부대 2,995개, 직장 단위로 설치되는 직장예비군부대 796개가 편성되어 있으며, 각 수임군부대[22]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21) 예비군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비군에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인원

22) 예비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

제7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획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하고, 군·산·학·연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양적 성장과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 등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1. 국방 R&D 혁신 고도화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전장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에 필요한 무기체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추격형(Fast-follower) 전략에서 선도형(First-mover) 전략으로 전환하여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도형 국방연구개발 전략의 목표는 소요기반(Demand Pull) 연구개발에 기술주도(Technology Push) 연구개발을 추가하여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았을지라도 미래 혁신적 기술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0년 3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미래 신기술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와 연구기관 간 '계약'이 아닌 '협약' 방식을 통해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기존에는 산·학·연 주관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성실수행 인정'이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선진적 연구개발 여건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1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된 방위사업청의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3년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를 활성화하여 혁신·도전적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5년 주기로 작성하는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방기술개발사업 추진 시에 적용할 기본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개방'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방분야로 도입하기 위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범주를 무기체계를 넘어 전력발전업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정보화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방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의 미래전장 난제에 대해 민간 공모로 혁신적·도전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일명 '룬샷 프로젝트(LoonShot Project)'[23]를 2023년 이후부터 도입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국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미래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에서 참여한 국가 R&D의 성과 중 국방 활용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국방 R&D로 후속연구를 추진하는 등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분야로 적극 도입하고 개방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략적 국방 R&D 투자 확대

미래에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전장이 우주 공간까지 다층화·다변화될 것이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국은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전략 기술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비를 비약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23년도 국방R&D 예산은 약 5조 800억 원으

23) 사피 바칼의 저서 『룬샷』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전쟁, 의학,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프로젝트를 의미

로 2018년 약 2조 9,000억 원 대비 연평균 12% 증가한 규모이다. 국방비 중 국방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이며, 장기적으로 그 비중을 10%까지 높이기 위해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에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주, 인공지능, 양자, 에너지' 등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차기 정찰·통신 위성에 필요한 핵심 구성품의 국내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꾀하는 등 개발에 장기간·고비용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등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월등한 기술력으로 격차를 벌려 경쟁국을 압도하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술개발과 소요의 연계 강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방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의 미래 전략·전술 발전과 신개념 무기체계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국방 R&D의 과제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제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군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각 군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 R&D 수행기관과 군 내 관련 부서를 매칭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로 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전력 소요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군의 수행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군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각 군의 연구개발 현상진단을 통해 각 군별 조직구성과 인력확보 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활용 및 인사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민·군 융합형 연구개발 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각 군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0년 3월 제정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기반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관·군 역량 결집에 힘쓰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기 위

해서는 민간전문가의 국방 R&D 참여 및 역할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21년 4월 국방기술 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기술 혁신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국방 R&D 관련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방기술 혁신협의체'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방산업체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AI, 가상현실, 신소재, 신에너지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과 기획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 혁신협의체'의 민간 전문가 풀을 지속적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기술평가 및 성과 확산, 방위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전반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탐색·활용하여 국방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국방 분야 기초·원천 가교 R&D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군 적용을 고려한 과제기획을 추진하고, 가교 R&D 성과물이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2.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의 도약적 성장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자주국방 강화에 기반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천명한 이후 오늘날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방위산업의 발전은 국방력 강화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고용 창출, 과학기술 발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국방부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방 신산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방산혁신기업100 선정에 착수하고, 2022년 7월부터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수행하여 우수 방산기업 및 신규 진입 중소벤처기업에 풀패키지 지원을 하였다. 2022년 11월에 민간주도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방우주 전문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고, 국방 첨단분야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방산분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방위산업 주요 정책 소개 등 방산업체와의 현장 체감형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민간의 방산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2022년 9월에 방산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융자 문턱 완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실질적 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분야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민간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조성된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내 5개 회사의 창업과 212억 원 상당의 계약추진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7월에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드론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전시를 드론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신규 지정하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지역특화 첨단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방산수출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구매국 및 주변국의 외교·안보상황, 정치적 안정도, 경제적 지원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고, 최근에는 구매국들이 계약 협상 시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방부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신설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편한 것으로,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 위원장이고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방위산업진흥회, 각 군까지 확대하여 구매국의 분야별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부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공동 주관하고,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및 획득제도개선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신속·효율성에 기초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먼저, 민간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구매하여 군이 시범 운용한 후 적합한 품목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에 도입하였고, 2021년부터는 기존 구매형태의 사업에 추가하여 일부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획득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 절차 중 소요검증, 선행연구 등을 간소화하였다. 기존 획득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요검증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검증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항목 수를 32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계개발 기간 중 양산물량 일부를 생산하여 야전운영시험(FT)을 할 수 있게 하여 개발완료 후 2년 이상 소요되는 양산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중복업무는 통합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첨단기술을 적기에 전력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과 국방 우주시대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방산 전문인력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획득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을 개원하였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소요부터 전력화, 운영·유지까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분야에 대한 기본적 교육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 수출 진흥, 기술보호 등 방위산업 정책과 관련된 교육부터 급변하는 기술·산업 트렌드에 따른 AI·우주·로봇 등 미래첨단기술 교육까지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교육원은 개원 이후 사업 현장의 문제 상황 및 해결방안을 진단·분석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023년부터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직무 교육의 내실성을 더하고 민·관·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방위적 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획득분야 전문지식의 선진화를 위해 미 국방획득대학(DAU) 등 국내·외 유수의 교육기관과의 공동 워크숍, 교수인력 교류 등 학술자원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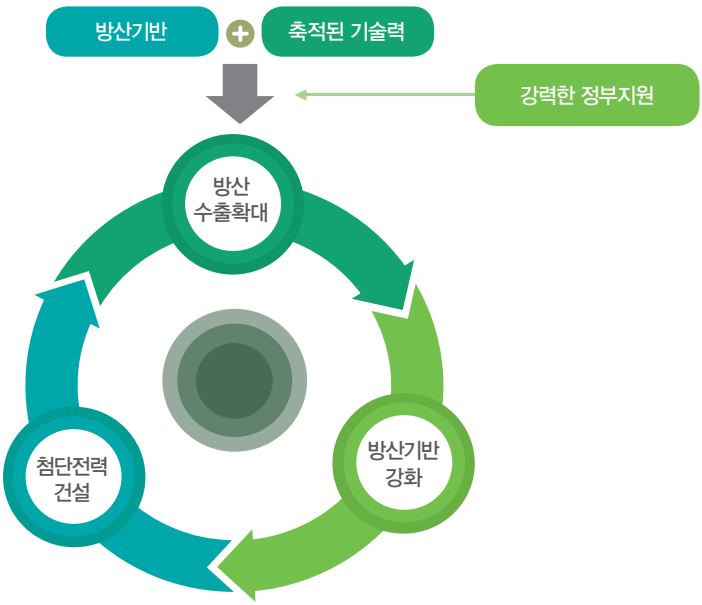
아울러, 방위사업교육원이 운영 중인 '국방사업관리사 전문자격'의 검정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자격 취득으로 검증된 전문인력이 산업 현장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3. 방산수출 활성화

우리나라는 국방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기반을 유지·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또한, 방산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인하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운용·유지 비용이 절감되고, 적시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협력채널 마련, 방산수출 지원제도 운영, 범부처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 홍보 등 각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하여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하면 이것이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 탄탄한 토대가 되어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갈 것이다.

[도표 4-1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



정부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

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2022년 5월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2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2022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 국제 전시회를 철저한 방역 통제 아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국제 방산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하여 8천 2백만불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K2전차 등 21종의 군과 업체 수출 장비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적용한 기동화력시범을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 시 정부에 납입해야 하는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었고, 기술료 경감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대외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한 '레드백 장갑차'를 시범 운용하였으며, 앞으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시범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FA-50, 천궁-II 등 첨단무기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하여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동반 수출 진흥을 위해 2022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민간산업 분야를 연계하는 방산·민간산업 수출 패키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매 희망국의 금융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훈련,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이 포함된 방산협력 패키지를 마련하여 구매국의 장비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구매국과 상호 신뢰·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산수출 확대 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결과, 2010년대 약 3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수출 수주실적이 2021년에는 약 72.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최근 5년 평균의 5배 수준인 173억 달러를 달성하여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및 4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었다. 수출대상 지역은 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었고, 품목도 탄약·총포 위주에서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다양한 무기체계와 유도무기 등 첨단무기체계까지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고정밀 유도미사일,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교전통제소가 결합된 첨단 복합무기체계인 '천궁-Ⅱ' 중거리 요격체계를 UAE에 최초로 수출하였고, 폴란드에 우리 군의 대표 무기체계인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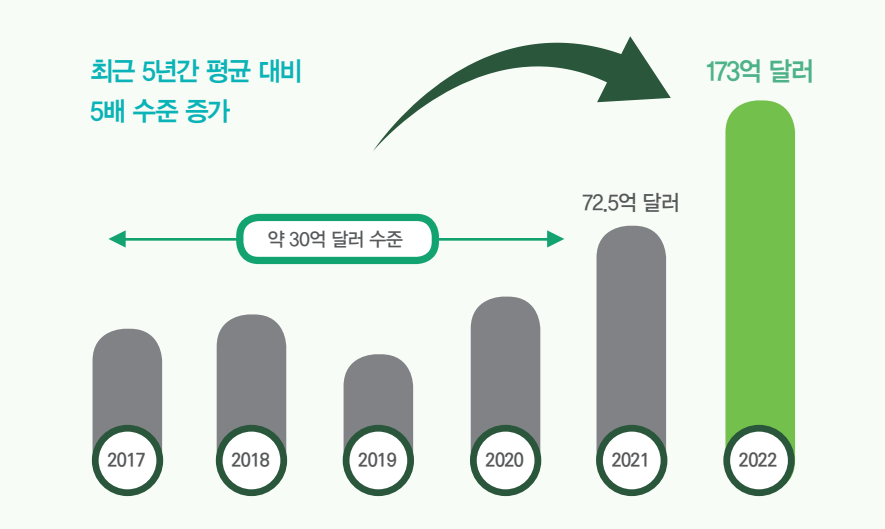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적 경쟁우위를 갖춘 기술혁신형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수출대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시장진출 전략을 구사하여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미 방산협력 심화·확대

한·미 방산협력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기를 도입했던 1세대 방산협력 시기를 지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는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 납품협력이 이뤄진 2세대 시기로 발전해 왔다. 앞으로는 한·미 양국이 초기 단계 연구개발부터 생산·마케팅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3세대 방산협력 시기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를 자체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활발하게

[도표 4-13] 연도별 방산수출 수주액



수출할 정도로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은 2017~2021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의 2.8%[24]를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8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방산 분야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방위산업에서의 한·미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Agreement)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술협력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 국방과학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향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미 양국 간 관계를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24)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2년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5) 국방과학기술연구소, 20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제1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제2절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대응능력 강화
제3절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제4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제5절 국방교류협력 심화·확대
제6절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재외국민 보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22년 11월)

제1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 한·미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 도전에 직면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 확대·심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으로 동맹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주·사이버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의 수준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한미동맹의 협력 확대 및 심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 속에서 양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한·미는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점증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공동의 비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전통적 군사안보에 더하여 우주·사이버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동맹협력의 수준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글로벌 협력 확대

양국 정상 간의 합의와 수차례 장관회담 등으로 마련된 동맹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제사회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방·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의 접점을 확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 하에 포용·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신뢰·호혜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이를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9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방 영역에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구축,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의 과제 제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 틀 내에서 국방분야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1]을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개별 회원국들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역내에서 제기되는 안보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는 한·미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유용한 공조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연합훈련에도 한·미가 함께 참가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 소다자 협력을 통해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맹·우방국을 포함한 다국적 지원 역량 결집에 동참하여 우크라이나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의약품,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협력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 한·미 양국의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유럽국가들과도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에 발맞춰 국방 차원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1)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22년 11월 11일)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
1. 규칙기반 국제질서 증진,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
2. 공동의 번영과 발전 추구
3. 지역적·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심화

2) SCM 분과위 중 하나로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

다양한 분야 협력 심화

한·미 양국은 전통적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과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2] 등 기존의 국방과학기술협의체를 비롯하여 우주, 양자, 인공지능, 자율기술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자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주·사이버 분야에서도 한·미는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와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3]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개최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증진하며, 양자 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강화 등 사이버 영역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방당국 간 긴밀한 정책 공조 강화

한·미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국방당국 간 고위급 정례안보협의체[4]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수시 정책협의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한·미 국방부는 2022년 5월 정상회담 이후 5월, 7월에 연이은 두 차례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동맹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조성하였다. 이어,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미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과 같은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함에 있어 한·미가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식별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수차례 표명하였고, 2023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3) 제54차 SCM SCWG 성과 및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세부내용은 본문 125쪽 참조

4)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협의·정보공유협력·3자 훈련 및 인적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2022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일 3자 훈련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였다.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일 대잠전훈련을 2022년 9월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하였으며, 2022년 10월에는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한 3자의 강력한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5]을 동해 공해상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019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약 2년 반만에 개최하였다. 2023년 전반기에는 2020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6]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한 협의도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효과를 달성하고 도발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잠전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지속하면서 2018년 이후 중단된 수색구조훈련, 대해적작전, 해양차단훈련 등 2018년 이후 중단된 3자 훈련도 재개 및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관계의 진전 추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주한미군 주둔여건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전국에 산재된 미군 기지를 평택 및 대구 지역으로 통합 및 재배치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한반도 무력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방부는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착수한 이후 이전대상 건물들의 준공과 함께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주한미군 핵심 지휘시설과 연합사령부 본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원활한 협의체 운영 및 적극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계획된 공사 및 기지이전

5)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퍼시픽 드래곤)을 통합하여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절차 숙달

6)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도심지역 반환부지 공원화는 물론 용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반환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여건 보장 및 국산 건설자재 사용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창출하였다.

기지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7]에 대한 예외 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8]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9]하였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에 합의하였으며, 2021년 9월 부로 협정이 발효되었다.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하며, 한·미 양국은 협정 기간 중 분담금 총액을 2020년 1조 389억 원, 2021년 1조 1,833억 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협상 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협정 공백 시에는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포함하는 등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는 모두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7)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8)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9)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재정여건 악화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게 지급되고 있으며,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모든 군수지원비는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

[도표 5-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단위: 억 달러

차수	1·2차					3차			4차			5차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액수	1.5	1.8	2.2	2.6	3.0	3.3	3.6	3.9	3.3	3.9	4.4	4.7	5.5	6.2

단위: 억 원

차수	6차		7차		8차					9차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액수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차수	10차		11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액수	10,389		10,389		11,833		12,472		전년도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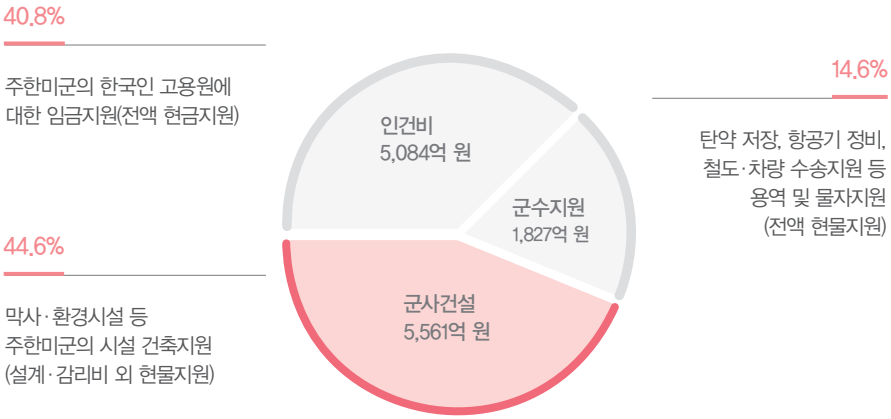
*제6차 협정 이후로는 원화로 지급방식 변경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미측 제기 군사건설 사업 목록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조정 및 추가 사업 제안 권한을 규정하는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 과정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는 등 주한미군에 소속된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10]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간접 지원의 세부항목과 규모는 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미 통신선·연합 C4I 체계 사용 등을 직접 지원하고,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 등 간접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10)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직접지원 : 정부지출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
- 간접지원 : 정부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지원

[도표 5-2]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2022년 기준)



한미동맹 우호 증진 노력

2021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한·미 친선 단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규모 탐방으로 전환하였다.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한국 근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1~2022년도에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속촌 방문, JSA(Joint Security Area) 및 도라전망대 견학, 서울 ADEX(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미동맹의 최첨단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유대감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였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과 정부 주요 인사,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장병, 카투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하여 '한미동맹의 밤'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전 하원의원이 제9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하였다. '백선엽 한미동맹상'[11]은 국방부가 2013년부터 매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한 미국 인사를 선정하여 수여해온 포상 행사로, 월튼 워커(Walton Walker) 예비역 대장[12], 윌리엄 웨버(William Weber) 예비역 대령[13], 제임스 밴플리트(James Van Fleet) 예비역 대장[14], 존 싱글라브(John Singlab) 예비역 소장[15], 존 베시(John Vessey) 예비역 대장[16], 마크 클라크(Mark Clark) 예비역 대장[17], 존 틸렐리(John Tilelli) 예비역 대장[18],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전 국방장관[19]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2022년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20]의 공동의장으로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한 댄 설리번(Dan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수상하였다. 특히, 댄 설리번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 논

11)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 발전에 헌신한 美측 인사에게 포상하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

12)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 사수로 인천상륙작전의 기틀을 마련(2013년 수상)

13)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으로서,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활동(2014년 수상)

14) 美 8군사령관으로 한국전 참전, 전후 한국군 훈련 체계 정비 등 한국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2015년 수상)

15)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크게 기여(2016년 수상)

16) 초대 연합군사령관 역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결정적 역할(2017년 수상)

17) 제3대 유엔군사령관 역임, 유엔군 대표로 정전협정 협상 및 체결(2018년 수상)

18) 제8대 한미연합사령관 역임, 6.25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등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에 기여(2019년 수상)

19) 제26대 미 국방부장관 역임, 재임기간 중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에 기여 (2020년 수상)

의 시 '주한미군의 철수·감축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시키는데 앞장섰으며, 6·25 참전용사를 위한 '추모의 벽'[21]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 (2022년 10월)

20) 美 의회 내 한국 관련 모임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21) 미국 워싱턴 DC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2022년 6월 26일 준공된 추모비로 한국전 전사자 미군 3만 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을 포함 총 4만 3,808명의 이름이 군별, 계급, 알파벳 순으로 각인되어 있음

제2절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대응능력 강화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및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수단 배치 및 운용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한민국에 군사능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최초로 언급하였고,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한민국에 '핵우산(Nuclear Umbrella)'[22]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천명하였다. 이 시기까지의 미국의 군사능력 제공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공 차원이었다. 이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제38차 SCM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를 최초로 언급[23]하였고, 제2차 핵실험 감행 이후 2009년 제41차 SCM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제공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24]하는 등 북한의 위협 대응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제고해 나갔다.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을 고려하여 2022년 제54차 SCM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2022년 5월)

22) 핵보유국이 핵전력이 없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핵능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23)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24)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25]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과거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에 국한되었으나,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최첨단 역량인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의미한다.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tation Group)' 등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운용하고 있다. DSC는 국방 당국 간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함께 매년 전·후반기에 열리고 있으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양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미는 2022년 8월 제13차 DSC를 통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Counter 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EDSCG는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는 EDSCG를 통해 확장억제수단을 군사(M)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DIE) 영역[26]까지 확대하여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개[27]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하고 북한 도발 관련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EDSCG의 연례 개최를 통해 EDSCG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진전된 비핵능력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비물리적 능력을 의미

26) DIME :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

27) 한·미 차관급 EDSCG는 2회 (2016년 12월, 2018년 1월) 이후 미개최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022년 9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2년 11월)

한·미 국방부장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2022년 11월)

한·미는 2022년 11월 제54차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22년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준비 및 공세적인 핵정책 법제화 등 대한민국 영토에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였다. 특히 경고메시지에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최초로 반영하였다. 또한,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협력을 심화하여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TDS의 조속한 개정,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연례개최 등 다양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증가하여 운용하고 전략자산의 대상, 이동, 전개, 훈련 등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54차 SCM 계기에 한·미 국방부장관이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미 전략자산의 능력과 작전 운용을 점검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2022년 10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28]를 발간하였다. 한·미는 2022년 NPR 작성 초기 단계부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메시지 및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작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미국은 2022년 NPR을 통해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핵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계산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전력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여 동맹에게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 보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략핵잠수함의 항구 방문 및 전략폭격기의 전개 등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이는 실행력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앞으로도 한·미는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28) 역대 5번째 NPR로서 핵 정책·전략·전력·태세 구축 관련 대통령 지침을 담은 문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한·미는 2013년 제45차 SCM을 계기로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북한 핵·WMD 억제 및 대응을 위한 TDS를 수립하였다. TDS는 북한의 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에 관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으로써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TDS는 미국이 NATO 외의 동맹국과 수립한 최초의 양자 간 억제전략으로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한·미의 태세와 능력 발전에 기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현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한·미는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 군 및 미군의 능력 등 한반도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TDS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는 제54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다양한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제55차 SCM까지 TDS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는 DSC TTX를 개최하여 TDS 이행방안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는 제54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DSC TTX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과 운용 변화를 고려한 실효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2023년 초에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서 제8차 DSC TTX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동맹의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해군, 동해 연합 해상훈련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재전개,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미국의 전략자산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능력 중 외부의 침략과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자산이다. 이는 전략적 효과를 보장하는 미국의 핵전력 3축[29]과 일부 재래식 전력[30]을 포함한다.

전략자산은 평시 또는 위기 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되어 왔으며,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바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년에 재개되었다. 한·미는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인 핵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위협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A, B-52H), 전략핵잠수함(SSBN)

30) 항모강습단, B-1B 폭격기, 순항미사일탑재 핵추진 잠수함(SSGN)

한미 연합해상훈련 (2022년 9월)

비질런트 스톰 (2022년 11월)

동해상에 전개하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종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항모강습단을 한반도에 재차 전개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전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참가하였다. 한·미는 과거와 다른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2. 동맹의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

동맹의 미사일대응 전략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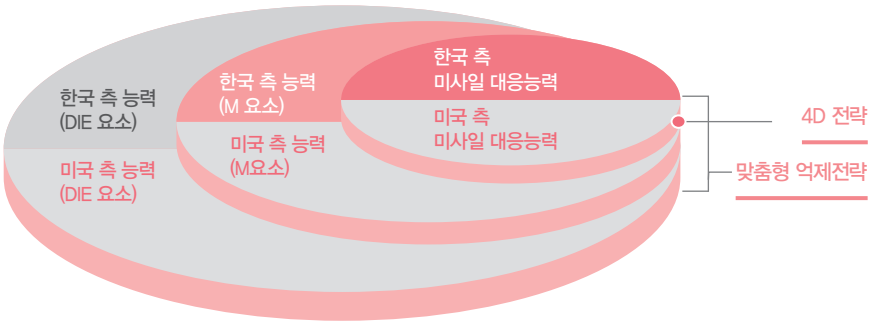
한·미는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을 기반으로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약칭, '4D 작전개념')」[31]을 승인하였으며,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반영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이행지침(약칭,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2019년 제9차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4D 작전수행개념'[32]을 포함하여 「4D 전략 및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향후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변화, 양국의 최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동맹 차원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훈련, 능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31)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으로 '포괄적'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4D)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며, 4D 각 분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탐지(Detect) : 정보·감시·정찰(ISR)자산을 운용하여 교란·파괴·방어 지원
- 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시설 타격
- 파괴(Destroy) :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동 발사대(TEL) 직접적 타격
- 방어(Defend) :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32) '4D 작전수행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작전수행단계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로 구성

[도표 5-3]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전략



* DIE :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 M : 군사(Military)

한·미 미사일 협력 증진

한·미는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 발전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지속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2022년 8월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동맹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신설에 합의하였다. 향후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의 실무 협의기구로 운영되며,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태세 강화와 연계된 다양한 협력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아울러,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정례적으로 보고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공조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한·미는 상기한 정책적 노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미는 동 연구를 통해 북한 신형미사일 위협의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한반도에 맞춤화된 최적 미사일 방어구조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연구결과는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을 한층 발전시키고, 한미 연합 미사일대응 능력·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심화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대응능력과 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제3절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국방·군사당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하고,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연합 군사연습(자유의 방패)을 통합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제고시키고,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한·미는 상당 기간 축소·조정 시행되어온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1.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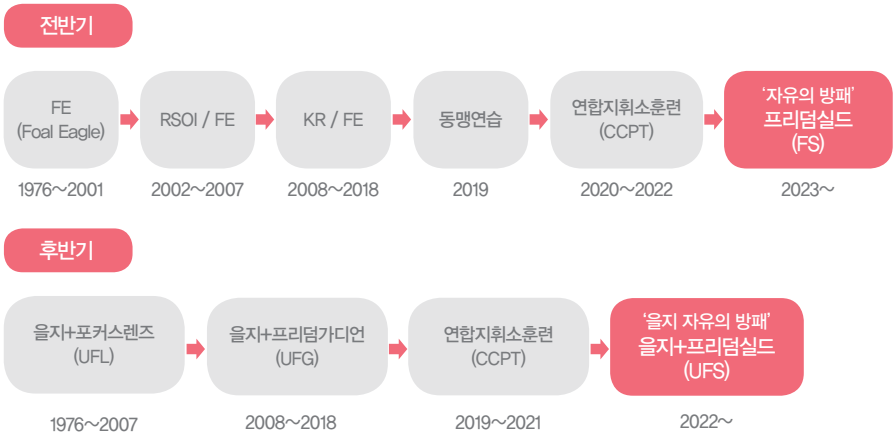
한미연합연습 명칭 변경

한미연합연습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이러한 한미연합연습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미연합연습은 2019년 후반기부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란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연합지휘소훈련은 '연합 전투참모단이 지휘소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북 억제력을 제고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동맹이 추구하는 가치, 연합연습의 의미와 시행목적을 고려하여 연습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으로 변경하였다.

2022년 후반기부터 변경하여 사용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명칭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Ulchi)'과 '전구급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연습명칭에서 'Freedom'은 변하지 않는 한미동맹의 가치인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Shield'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전반기 연합연습 명칭은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연습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후반기 연합연습(UFS)과는 달리 군사적 차원의 연합연습으로 지휘소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과 연합야외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도표 5-4] 한미연합연습 명칭변경



연합연습의 명칭변경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는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고,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연습과 통합 시행

정부연습은 우리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69년 '을지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안보환경 변화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구급 한미연합연습과 통합하여 '을지 포커스렌즈(UFL: Ulchi Focus Lens, 1976~2007)연습'과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Ulchi Freedom Guardian, 2008~2018) 연습'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연습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전면전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켰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정부연습이 한미연합연습과 분리되었고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을지태극연습'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전시 연합작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절차를 숙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을지태극연습' 간 정부연습은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되어 전시 국가역량 통합을 통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미는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정부연습과 연합연습을 통합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매년 후반기에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모든 정부부처의 전쟁수행 기능들이 전시지휘소(B-1)에 전개하여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통

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집중적으로 숙달하였다.

한편, 연습의 실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시설 대상 공격, 민간·공공기관, 군사시설 대상 드론·사이버 공격, 감염병 대응 등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또한, 북한의 고도화·다종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과 복합적인 공격양상을 연습상황에 반영하여 변화되는 북한의 위협양상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대통령 전시지휘소(B-1) 현장 방문 (2022년 8월)

이와 더불어 후방지역 안정화와 전쟁지속능력 보장을 위해 항만, 공항,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피해 상황을 가정한 방호 및 피해복구훈련 등 민·관·군 통합 실제훈련(FTX)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군은 새롭게 시행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지원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한·미는 연합연습과 정부연습 수행체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고

한·미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연합전력의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합작전수행 및 작전지속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전구연습·훈련체계인 합동연습·훈련체계(JTS: Joint Training System)를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까지 확대 적용하여 체계적인 연습·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합동 및 연합연습을 위한 각종 워게임(War-game)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우리 군의 연합연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합연습·훈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후반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자유의 방패(FS)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조성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이다. 이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우리 군의 작전수행 및 연합연습 주도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 하 평가를 병행 추진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년 3월 독수리(FE: Foal Eagle) 훈련 종료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 및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2022년 후반기부터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시행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3년부터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연합 항모강습단,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재개하고, 전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연합작전 수행절차 숙달 및 상호운용성 제고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제4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33] 전환 추진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핵심방위역량 확보 및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 추진 경과

한·미는 1994년 12월 1일부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한 이후,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34]를 통해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한국군 및 미군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해 오고 있다.

한·미는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라고 함) 전환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고, 2007년 6월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35]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피격 등 안보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양국 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동맹현안의 발전계획을 담은 「전략동맹(SA: Strategic Alliance) 2015」[36]에 서명하였다.

이후 한·미는 3차 핵실험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현실화·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 4월 전작권 전환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양국이 상호 합의한 전환 조건[37]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년 11월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2018년 10월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속 유

33)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평시(정전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

34)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협의체

35) 전작권 전환 시까지의 추진 과제와 추진 일정을 담은 한미연합 전략문서

36) 기존의 전작권 전환 기준 문서인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하는 문서

37)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미래지휘구조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군은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38] 등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별지 완성

한·미는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서명한 이후,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선정된 핵심군사능력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이다. 한·미는 공동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분야의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양국

38)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순으로 3단계 평가 진행

은 정보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군사능력과 의도,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더불어 역내 상황 및 환경, 영향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는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각 능력별 세부 평가항목를 준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매년 조건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매년 그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보고 및 점검하고 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에 있어서 우리 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이후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킬체인(Kill-Chain), 복합 다층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전력 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화포를 전력화하고 다수의 아파치 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전력 면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 항공전력과 고성능 전투기를, 해상전력 면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함대지·함대함·잠대지 미사일을 전력화하였다. 또한 패트리어트 체계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천궁 체계 및 현무 미사일 자체개발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력개선비로 107.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전력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 평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향후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는 2019년 8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1단계에 요구되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증하였다. 이후 양국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시행요건 구비와 예행연습 등 FOC 평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5절

국방교류협력 심화·확대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세안·오세아니아·인도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호혜적·맞춤형 국방·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캐나다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 증진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으로 국방외교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다.

1. 일·중·러와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국방교류협력 추진

한·일 국방교류협력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아시아 안보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에 장관회담이 지속 개최되었으며,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시에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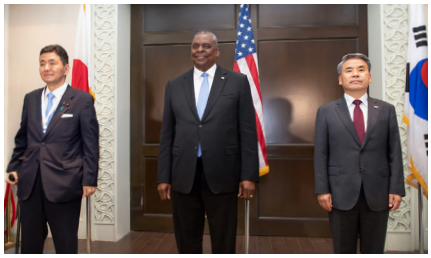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 초계기 갈등[39] 등으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2019년 11월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여 그 이후 필요한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6월 아시아 안

39) 일본측은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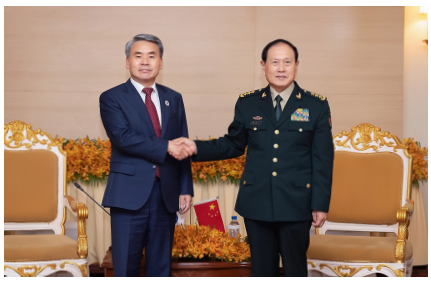
보대화 계기에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2022년 9월 서울 안보대화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차관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해군은 2022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 함정(소양함)을 파견하고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참석하여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해군들과 국방교류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2022년 6월)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중 국방교류협력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시 '우호협력 관계'를 설정한 이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한·중 국방장관회담 (2022년 11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 국방당국은 2018년 12월 국방교류협력 정상화에 합의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소통 및 교류를 지속하면서 두 차례의 국방장관 유선회담을 가졌다.

2022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국방부장관은 3년 만에 대면 회담을 통해 해·공군 직통전화를 추가로 정식개통함으로써 양국군 간 위기관리를 위한 소통수단을 확대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 23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군 고위인사 교류, 국방전략대화 재개, 각 군 간 교류, 중국군 유해송환 등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한·중 인접 해·공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당국 간 다양한 회의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전부대 간 직통전화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인태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국방당국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교류협력을 지속하여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러 국방교류협력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역내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2017·2018·2019년 한·러 정상회담, 2021년 한·러 외교장관회담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의 전략적 소통과 상호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러 국방전략대화,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군사위원회, 각 군 협의체 회의 등 다양한 협의와 소통 창구를 통해 군사당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차관이 2021년 3월 방한하여 「한·러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한반도 해상·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논의한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함에 따라 한·러 국방교류협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고,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여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방교류협력도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중·러 해상·공중연합훈련 등 우발적 충돌의 잠재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분야에서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사회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 노력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서 '한·러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단계적·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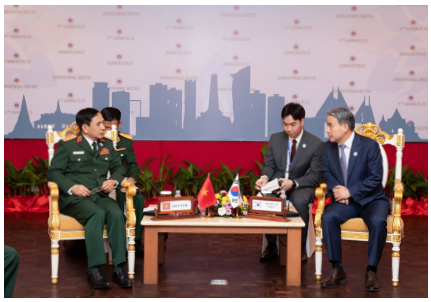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안보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2월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아세안과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중시하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과 특화된 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을 발표하였고, 국방부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정책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KF-21/Indonesian Fighter eXperimental) 공동개발, 고위급 교류, 대테러 연합훈련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2021년 4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2021년 8월과 2022년 10월에 외교·국방 2+2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연합훈련, 해양안보, 방산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추진성과와 이행계획을 점검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협력의 지속 추진, 연합훈련 확대, 한·아세안 간 다자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2022년 11월)

베트남은 아세안과의 상생 협력, 해양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1992년 수교 이후 군사교육, 고위급 인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양국은 정례협의체인 차관급 국방전략대화(9월)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11월)를 통해 한반도 역내 정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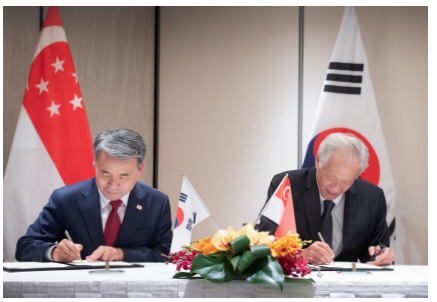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2022년 11월)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방산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퇴역함 양도, 다자연합훈련 참가 등을 통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특히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협력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 수교국가로서 최근 방산분야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1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를 계기로 개최된 국방차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2월 2척의 초계함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6척의 원양경비함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장·차관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도 국방협력의 모멘텀을 발전시켰다. 2022년 10월 차관급 국방공동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훈련 및 교육교류 확대, 방산협력 추진 등의 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1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국 해병대의 필리핀 주관 카만닥 연합훈련 최초 참가 등 양국 국방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함정과 항공기 분야에서 방산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2022년 11월)

싱가포르는 고도성장의 경험과 자유·번영·평화의 미래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국으로서, 최근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협력 등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양국 국방장관회담 계기 기존「국방협력 양해각서」에 비전통 안보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 국방 홍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기획·제작, 미디어 기술 상호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방 홍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개최된 서울 안보대화에서는 양국 국방차관회담을 통해 진화하는 4차산업 기술 등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한·싱가포르 국방양해각서 개정 (2022년 6월)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와는 2022년 4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그동안 양국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우리 국방부는 아세안 10개 전체 회원국과 국방협력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세안과의 국방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안보분과위원회 의장국 지위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태국은 T-50 훈련기 수출(2015년 계약) 이후 방산분야 중점협력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호위함 및 항공기 성능개량 사업 등에 대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군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 각 군간 정례협의체 개설 등을 통한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외교·통상의 핵심 파트너로 1997년 재수교 이후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 5월, 우리 군 기동장비 등 17종 26점의 군수품을 양도하면서 군수분야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캄보디아 PKO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캄보디아의 PKO 활동 지원을 위해 공병장비 양도약정도 체결하였다. 2023년에는 캄보디아 국방대 최초로 우리 군 장교를 대상으로 군사교육이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군사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캄보디아 공병장비 공여식 (2022년 11월)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가로 지정학적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양국은 국방협력을 위해 정례회의체 개설, 군사교육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라오스 군은 한국 내 국방무관부 개설을 추진 중이며, 개설시 한국과 라오스의 국방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루나이와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다자안보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방협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2021년도 아세안의장국인 브루나이와의 협력을 통해 2021년 11월에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양국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와는 군사교육교류(수탁교육) 위주로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2021년 2월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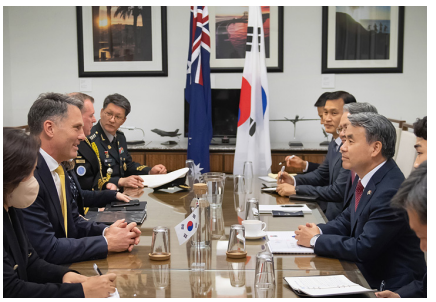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방부 차원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과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감시활동을 지속 시행하고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적극 활동하는 전통적 우방국이다.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역내 유사입장국으로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방부는 호주, 뉴질랜드와 정례협의체, 연합훈련 등을 통해 국방협력 활성화 및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는 2013년 7월부터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각 군 모두에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방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9월 서울에서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와 안보·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 회담을 계기로 「한·호주 상호군수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안 및 「한·미·호주 간 국방연구·개발·시험·평가분야의 삼자 간 협력체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양국 간 방산·군수 협력 증진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부는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 우리 공군 수송기가 호주의 요소수를 국내로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2021



한·호주 국방장관회의 (2022년 8월)

호주 K-9 자주포 공장부지 방문 (2022년 8월)

년 12월에 정부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군은 2013년부터 실시한 해군 간 해돌이·왈라비 양자연합훈련에 이어 2021년 7월 탈리스만세이버 훈련에 우리 해군이 최초 참가하고 2022년 8월 피치블랙 훈련에 우리 공군이 최초 참가하는 등 다자연합훈련에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상호운용성을 증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2021년 12월 정상회담 기간에 양국 간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약 1조원 규모)을 체결하는 등 방산협력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6월에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호주 측은 국방·방산 협력 논의 심화를 위해 우리 국방부장관을 호주로 초청하였다. 이후 약 50여 일 만인 2022년 8월 호주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회담 다음날에는 양국 장관이 우리 K-9 자주포 생산 공장 부지를 동반 방문하며 양일에 걸쳐 양국 간 연합훈련 활성화, 사이버·우주 등 신 안보협력으로의 확대, 국방과학기술협력을 비롯한 방산협력 심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뉴질랜드와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자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며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2022년에는 국방차관회담(3월, 서울)과 국방장관회담(6월, 싱가포르)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두 번의 회담을 계기로 2022년 10월 해군 간 양자연합훈련(ROK-KIWI)을 실시하고 우리 방산업체가 수출한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등 양국 군간 교류 활동이 활발히 시행되었다.

한·뉴질랜드 국방장관회담 (2022년 6월)

국방부는 앞으로도 오세아니아 내 핵심 협력국인 호주·뉴질랜드와 고위급 교류를 지속 추진하며 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역내 우방국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방산협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서남아시아

우리 정부는「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대륙·해양 간 교차로에 위치한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규정하고, 관여와 기여를 증대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라클 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형성된 모멘텀을 활용하여 파키스탄과도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고위급 등 다층적인 인적교류에 기초한 교육훈련 교류,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등의 분야에서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핵심우방국이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2021년 3월 인도를 방문하여 한·인도 우호공원 개장 행사와 6·25전쟁 참전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면서 6·25전쟁 당시 최대 규모의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인도 군의 참전의미를 되새기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추진 중인 인적교류, 우주협력, 사이버협력,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인도 측에서도 2020년 12월 육군참모총장, 2021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를 계기로 방산차관, 12월 공군참모총장이 각각 방한하여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안들을 발전시켰다. 2022년 2월에는 우리 군 최초로 인도가 주관하는 해상연합훈련인 '밀란(MILAN) 훈련'에 참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인도 우호공원

한편, **파키스탄**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구호품을 지원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파키스탄이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은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면서 인적교류, 교육교류, 군 의료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다른 국가들과도 국방분야에서

실무급 인적교류, 교육훈련 교류,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서남아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를 구현하기 위해 서남아 국가들과의 국방외교 외연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국방부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핵심지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방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2018년) 및 한·중앙아시아 국방차관회의(2019년)를 개최하여 역내 안보정세,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9년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의료 및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국방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양국이 화상으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의무분야 교류, 대테러연합훈련 등 국방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2년 6월에는 군진의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군진의학 및 군의료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국방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1년 8월에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방·보훈 분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21년 9월에는 카자흐스탄 국방대에 우리나라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 과정이 최초로 개설되어 양국 간 군사교육 확대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으며, 2022년 11월에는 양국이 대면으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방산 및 PKO분야 협력 등에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방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계기를 통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동 국방부는 세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1980년 수교 이래 경제, 무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06년 「한·UAE 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국회 동의를 거쳐 아크부대를 UAE에 파견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8년

3월, UAE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2+2 협의체를 신설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에 외교·국방 2+2 차관급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2021년 2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UAE를 방문하여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1월에는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연구개발·기술협력 확대 등 양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 3월에는 UAE 국방특임장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인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한·UAE 국방차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사이버분야, 연합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천궁Ⅱ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UAE 군의 조기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집트와의 국방교류협력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2021년 8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이집트 엘시시(Abdul Fatah al-Sisi)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집트 국방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국방부장관은 2021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22년 2월 K9 자주포 방산수출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오만과의 협력도 발전하고 있다. 2021년 9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청해부대의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한 오만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국방부장관은 2021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오만 국방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향후 국방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고위급을 중심으로 국방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총참모장과 우리 국방부장관은 양자회담을, 우리 국방부차관은 제2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과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2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여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카타르와는 2021년 1월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카타르 무관부를 신설하

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육군 군사경찰실 교관들을 카타르 현지에 파견하여 행사안전 및 대테러훈련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방부는 중동지역의 안보정세와 역학관계 변화에 지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과 군 고위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유럽·캐나다 유럽지역에서는 우리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 노력을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을 중심으로 국방외교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2022년 6월 우리 대통령은 정상으로서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유럽 각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연대를 확인하고, 신흥안보 위협 등 초국경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NATO와의 포괄적 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유럽국가들을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연합과의 실질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유럽 각국과 양자 및 소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영국과는 2021년 7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영국의 인태전략 추진 방향과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1년 8월에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항모전단이 우리나라 근해에서 우리 해군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국방 분야에서 이행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양국 차관급 대화체인 한·영국 국방전략대화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의 정례회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아시아 안보대화 등 다자회의 참석 시에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여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2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및 유럽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벨기에와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토대로 국방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8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방부차관과 벨기에 국방총장과의 대담을 실시하였으며,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벨기에 간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한·비세그라드 그룹[40] 정상회의에서는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 심화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헝가리, 한·체코, 한·슬로바키아,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및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와는 한·비세그라드 국방차관회의를 통한 정례적인 협의 외에 양자 간에도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우리나라에서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안보정세를 교환하고 사이버안보, 국제평화유지활동, 군사교육 등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 및 방산 분야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22년 5월에는 폴란드 국방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안보정세 및 국방·방산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특히 폴란드 측의 대규모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 방안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독일과는 2021년 5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방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원방안, 독일의 인태정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독일의 바이에른 호위함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 해군 간 함정견학 등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 2022년 6월에는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독일 측의 지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스웨덴과는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스웨덴 총리실 외교안보차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6월에 스웨덴 국방차관이 방한하여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방 분야 공조를 위한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자 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르웨이와는 상호 고위급 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2022년 2월 노르웨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우리 국방부장관이 노르웨이를 최초로 방문한 사례이기도 하다. 양국은 한반도 및 북부 유럽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전통 및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4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NATO 군사위원장과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유럽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40)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를 의미하며, 1991년 최초 회의가 헝가리 비세그라드시에서 개최된 데서 명칭이 유래

2006년 한국이 NATO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양측이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NATO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22년 6월 우리 대통령이 정상으로서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한·NATO 간 양자협력 문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한·NATO 간 포괄적 안보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고 있다.

북미 지역의 우방국인 **캐나다**와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회담을 지속 추진하며 국방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6·25 전쟁에서 실종된 캐나다 참전군의 신원확인을 위해 2021년 6월 「한·캐나다 유해발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이 모두 자체적인 인태전략을 구상 중임을 공유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2022년 6월)

국방부는 앞으로도 유럽 및 캐나다 등 가치공유국과의 국방 및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중남미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 경제 분야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전통적 우방국이 다수 소재한 지역으로서 우리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였다. 국방분야에서도 국방외교 외연 확대 및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여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콜롬비아 유해발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콜롬비아 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한·콜롬비아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페루에는 2016년 우리 퇴역함을 공여한 이후, 2022년 1월에 2차 공여함인 순천함이 페루에 입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주요국들과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방·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인태전략의 지리적 범주를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로까지 확장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목표로 군 고위급 인사 교류, 군사교육 교류,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2021년 7월 동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내 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나 국방부장관과 유선통화를 통해 양국 국방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국방부차관은 2021년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코트디부아르 국방부차관과, 2022년 9월 서울안보대화 참가를 위해 방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우간다 국방부차관과 각각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국방부차관은 2022년 11월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 컨퍼런스 참가를 위해 방한한 가나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청해부대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가나 고위급 회담 (2022년 11월)

국방부는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국방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다자간 국제안보협력 강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양자 및 다자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세계 각국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위급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평화유지활동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

체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개최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평화유지활동 위한 스마트캠프 추진, 의료 및 방역 역량 강화, 500MD 정찰헬기 지원, 공병부대 운용 경험 공유, 여성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경찰인력 증원 등 6대 기여 공약을 발표하였다.

국방부가 참여하는 역내 주요 다자안보협의체는 [도표 5-5]와 같다.

[도표 5-5] 국방부가 참가하는 다자안보협의체

Track1 다자안보회의[41]	Track1.5 다자안보회의[42]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 동경방위포럼(TDF)	• 서울안보대화(SDD) • 아시아 안보회의(ASS) •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동북아 협력대화(NEACD) • 셰르파 미팅

서울안보대화(SDD)

국방부가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뿐 아니라 국제적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한 대화와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국방분야에서의 신뢰구축과 다자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소다자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태지역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국 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역내 주요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1년 제10회 서울안보대화는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43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10회 회의에 역대 최초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모두에서 외교·국방 분야 고위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 우주안보 위협 등 신안보영역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회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서울안보대화 개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특별대담도 이루어졌다.

2022년 제11회 서울안보대화는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대주제로 선정하고, 54개국 3개 국제기구의 국방·안보 고위관료 및 민간안보전문가를 초청하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속에서 한반도 및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인태지역 내 공통의 안보도전을 식별하고 우리나라에 역내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청취하는 '인태지역 안보 세션'을

2022년 서울안보대화(SDD)

41)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
※ 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RF(ASEAN Regional Forum), TDF(Tokyo Defense Forum)

42)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ASS(Asia Security Summit), HISF(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최초로 개최하였다.

나아가 2014년부터 지속 운영해 온 '사이버워킹그룹'에 이어 '우주안보워킹그룹'을 새롭게 발족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역내 관심을 환기하는 등 서울안보대화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제11회 서울안보대화 (2022년 9월)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국방부는 2017년 서울안보대화 기간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발족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첫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 방향을 토대로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2018년에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의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아세안 간 상생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9년에는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향후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한·아세안 간 정책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22년 회의에서는 2021년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아세안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을 희망하는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군의료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 한·아세안 차관회의 (2022년 9월)

이와 같이 다섯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아세안과의 소통, 정책공유, 비전 제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권위있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국방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21년 제8차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국제규범 존중원칙 확립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다자협력 활성화를 통해 역내 신뢰를 증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2022년 제9차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

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대면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한·아세안 정상회의(2022년 11월 개최)에서 발표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함으로써 참가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2022년 11월)

아시아 안보회의

국방부는 아태지역 최대 다자안보회의체인 '아시아 안보회의'에 2004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22년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개최되지 못했다가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재개되었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있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방향과 함께 아세안, 유럽 등 역외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포함한 대외정책 방향을 소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 (2022년 6월)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국방부는 아태지역 국가의 고위 국방관료 및 안보전문가들과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셰르파 미팅,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그리고 아태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향산포럼 등에도 매년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이 주요 회원국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 국가들과 공유하고, 우리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활동 강화

국제 비확산 활동[43]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국제협약과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마련하고, 관련 물자·장비·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된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왔다.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국방부는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핵무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체제'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44]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45] 회원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의 국제적 이전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46],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47]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48]을 제정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연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국방 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에 대한 확산 통제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49], 2002년 헤이그 행동규약(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50] 등 자발적 성격의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43)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Non-proliferation)

4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전용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1957년 설립, 171개국 가입)

45) 핵물질·기술·장비·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통제체제로 쟁거위원회(ZC)와 달리 핵비확산조약(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비보유국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1978년 설립, 48개국 가입)

46)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생산·비축 전면 금지(1975년 설립, 183개국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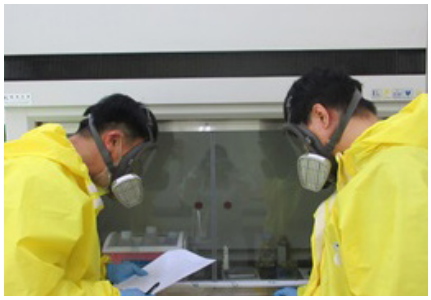
47)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으로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폐기(1997년 설립, 193개국 가입)

4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화학·생물무기금지법) 등

49)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1987년 설립, 35개국 가입)

50)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통제 행동지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을 금지(2002년 설립, 143개국 가입)

방지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및 연례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미사일 관련 장비 및 기술 이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 화학정기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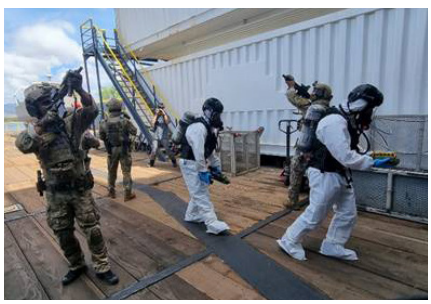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비확산 활동은 재래식무기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51]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52], 기술의 이전 통제를 위한 지침과 통제목록에 합의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한 후 자발적으로 이행정보를 교환한다. 1996년 가입한 이래 국방부는 사무국에 무기 이전 실적을 통보하고, 우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통제목록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53]은 재래식무기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조약으로서 7대 무기체계와 소형무기·경화기, 탄약·부품의 국가 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서 2017년 조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54]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서 국방부는 특히 수출허가시 수출대상국의 통제규범 준수 여부, 수출 관련 군사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55]하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다.

국제 대확산 활동[56]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연계 위협이 대두되면서 수출통제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만으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 적극적인 대확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57]되었다.

국방부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58]에 참가하고 해군함정과 검색팀을 파견하여 국제공조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대량살상무기 검색팀은 2017년부터 본 훈련을 통해 화학·생물·방사능 물질 의심화물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51)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1996년 설립, 42개국 가입)

52) 일반산업 분야와 군사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53)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하고자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2014년 설립, 111개국 가입)

54)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로 구성되며,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Clean Country)는 총 30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

55) 현재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최종 허가는 국방부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담당

56)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적의 사용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력(Counter-proliferation)

57)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 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 등을 상정

58)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 가입국 간 정보의 공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불법무기 등의 수출금지, 합동작전 등을 포함(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검색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 2012년, 2019년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우리나라가 주관하여 확산방지, 압류처리 등에 대한 도상훈련, 해양차단·화물검색 훈련 등을 진행했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은 2014년부터 아태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미국이 주최한 2022년 훈련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이 참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WMD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순환 훈련 등을 지속 강화하고, 대확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표 5-6]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아태지역 순환훈련 주관 국가 현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 가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미개최 (코로나19)	싱가포르	미국

5. 국제 군수협력 강화

국제 군수협력

국방부는 적극적인 국제 군수협력을 통해 전·평시 안정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군수협력위원회(LCC: Logistics Cooperation Commitment)[59],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WCSC: WHNS Combined Steering Committee)[60] 등의 양자 회의와 태평양 지역 고위군수장교세미나(PASOLS: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s Seminar)[61] 등 다자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에서는 한·미 연합작전 간 필요한 한국의 탄약획득계획을 소개하였으며, 탄약 획득·운용 간 상호운용성 제고 및 한국종단송유관 지속 논의 등에 합의하였다.

2019년 4월 한·미는 제26차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에서 유사시 미 증원군의 원활한 전개에 필요한 공병, 정비, 보급 등 12개 분야 전시지원계획발전 방안과 전시지원계획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전시지원계획 발전을 위해 한·미 상호 간 일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3

59)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분과위원회인 군수협력위원회(LCC)는 군수협력 사안들을 논의하는 군수분야 최고위급 회의로서 매년 교차 개최하는 정례협의체

60) 1991년 한미 간 체결된 전시지원 일괄협정을 근거로 미 증원군 전시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서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

61) 태평양·인도양 지역 국가 간 군수정보 및 운용 경험을 공유하는 다자 회의체로서 매년 회원국이 순환 개최

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한·미실무급 회의를 통해 전시지원업무 추진간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미 간 군수협력 강화는 향후 한국군의 대비태세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군수분야 최고급 다자회의체인 고위군수장교 세미나(PASOLS)에서는 미국, 영국 등 30여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국가 간 군수 분야 상호운용성 증진,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 등 군수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년 9월 우리나라는 한국군 군수 빅데이터 기술동향을 발표하고, 군수혁신을 홍보하여 참석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22년 9월에는 미국 등 8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다양한 군수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군수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 등과 정례협의체를 바탕으로 탄약 지원, 군수혁신, 군수정보화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상호군수지원협정이란, 양국 군대가 전·평시 군사활동간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가용자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국제 군수협력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상호군수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군수협정의 신규체결 또는 개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류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2021년 9월 호주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는 등 체결국과의 상호군수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도표 5-7]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가(체결연도)
미국(1988), 태국(1991), 뉴질랜드(2007), 튀르키예(2008), 필리핀(2009), 이스라엘·호주·캐나다(2010), 인도네시아·싱가포르(2011), 캄보디아·스페인·영국(2012), 몽골(2013), 독일(2016), 베트남(2018), 프랑스(2019)

군수품 양도

국방부는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요청 국가에 적극적으로 양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국방·군수협력 증진, 방산수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프라 수출 및 국제 외교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거 동남아 국가 위주의 양도에서 나아가 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양도 국가 범위를 확대해 나가

고 있으며, 양도 품목 또한 함정, 항공기, 기동장비, 화력장비, 공병장비 등 다양해지고 있다. 군수품 양도 현황은 [도표 5-8]과 같다.

[도표 5-8] 군수품 양도 현황

시기	지역	양도품목
1993~1999년	아시아	함정, 항공기, 차량, 장구류 등
2000~2009년	아시아, 남미	함정, 항공기, 공병장비, 기동장비 등
2010년~현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함정, 공병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탄약 등

향후에도 국방부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적소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수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양·다자 국제군수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군의 역량을 홍보하고, 상호군수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6절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재외국민 보호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약 1,000여 명이 다양한 파병활동을 통해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 재난 시 군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2개 임무단[62]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재건지원,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로,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등을 파견하였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278명, 남수단 한빛부대 276명과 개인단위 파병 등 5개국에서 577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도표 5-9]와 같다.

[도표 5-9]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명, 총 인원: 577명

62) 현재 아프리카에 6개 임무단(서부사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아브예이, 남수단), 중동에 3개 임무단(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유럽에 2개 임무단(코소보, 사이프러스), 아시아에 1개 임무단(인도·파키스탄)이 임무수행 중이며,120여 개 국가에서 약 7만 명을 파견

레바논 동명[63]부대

유엔은 197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25호와 426호가 채택됨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1천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01호가 채택되었고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자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7년 6월에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 주민 의료지원, 공공시설과 학교시설 개선, 플라스틱 재생공장 지원사업 등의 인도적 지원과 맞춤형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동순찰 활동

[도표 5-10]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22년 12월 기준

작전 활동	• 작전지역 고정감시 및 연합관측소 운용 • 작전지역 도보 및 기동(항공)정찰 : 단독작전, 레바논군 및 UNIFIL 사령부와 연합작전 실시 • 연합훈련 : UNIFIL 사령부 예비대(FCR)[64] 및 서부여단 예비대(SMR)[65]와 상호 친숙화 훈련 • 공용화기 사격훈련(STEEL STORM) : UNIFIL 사령부 주관 반기 1회 실시 • 레바논군 연합훈련(COTAWL)[66] : 레바논군 역량강화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 UN직원 가족대피훈련(MSUSP)[67] : 우발상황 시 UNIFIL 국제직원 및 레바논 현지직원 안전 보장
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	• 태권도, 한국어, 재봉·비누아트 교실 : 영내 및 5개 마을 순회교육 • 현지 주민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 : 순회진료, 원격의료상담 및 의약품 전달 • 친선교류 활동 : 현지 사회 및 군 주요인사 정례회의, 현지 행사 참여 및 부대초청 행사 등 • 주민 숙원사업 : 태양광 가로등 및 워터펌프 설치, 학교 및 공공시설 보수 및 건축 등 • 인도적 지원(물자공여) : 차량, 행정비품, 학용품, 코로나19 방역물자 등 • 바라쿠다 장갑차 10대 레바논군에 무상 양도

63) 동쪽 나라에서 온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

64) Force Commander Reserve

65) Sector Mobile Reserve

66) Coordinated Training Activities with LAF(Lebanese Armed Forces)

67) Military Support to UNIFIL Security Plan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동명부대가 보관 중인 마스크 등 생필품 6천 세트와 현지에서 구매한 의료품 4천여 세트를 레바논 총사령부에 긴급 지원하였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레바논 군에 바라쿠다 장갑차 10대를 무상 양도하였으며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레바논군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0]과 같다.

남수단 한빛[68]부대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로부터 벗어난 수단에서는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남수단 독립 하루 전인 7월 8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96호에 따라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300명 규모의 토목공병중대(ROKHMEC: Republic of Korea Horizontal Military Engineering Company)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69]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 피보르, 아코보 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과 보수, 나일강 차수벽 설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남수단 현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빛직업학교에 농업, 목공, 토목 등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다양한 종류의 재건지원 활동을 통해 남수단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종족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친화적 민군작전은 유엔 및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1년 한빛부대 14진은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30주년을 맞아 인도적 지원사업 차원에서 구급차, 오토바이 등 일반물자와 응급처치 키트, 환자용 의자 등 의무물자를 공여하였다. 또한, 보르병원 외래병동 신축에 이어 음압 텐트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한빛부대 임무의 중요

보르공항 활주로공사

68)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라는 의미

69) 남수단 파병은 소말리아(1993-1994, 재건지원), 서부 사하라(1994-2006, 의료지원), 앙골라(1995-1996, 재건지원), 동티모르(1999-2003, 치안유지 및 국경선 통제), 레바논(2007-현재, 정전감시), 아이티(2010-2012, 재건지원)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성과 우리나라의 방역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1]과 같다.

[도표 5-11] 한빛부대 주요 활동

2022년 12월 기준

재건지원 작전	• 보르공항 개선 공사(주기장 확장) • 보르 지역 도로 보수, 배수시설 개선 • 보르~피보르 간 주보급로 보수작전 3회(구간거리 195㎞, 누적 408㎞ 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 • 피보르~아코보 간 주보급로 보수작전 2회(구간거리 125㎞, 누적 161㎞ 보수) 및 유실지역 긴급보수지원 • 피보르 지역(Lotilla River) 다리 건설
민군작전 및 인도적 지원	• 보르병원 X-RAY실·수술실·응급실·진입도로 개선공사 실시 • 아코보 초등학교 개선공사 실시, 피보르 공항 레드머램 공여 • 한빛농장 운영 : 6,300평, 작물 14종 재배 • 한빛직업학교(농업 등 6개 분야) 운영 : 577명 수료, 현재 14기 교육 중 • 방한연수 : 8회차 85명 방한, 한국의 농업기술 교육 이수 • 대민의료지원 : 2만 1천 9백여 명 • UNMISS 태권도 • 한국어 교실 운영 • 코로나19 대응 : 남수단정부에 방역마스크 2만장·코로나19 진단키트 1만회 분 지원
난민 보호	• 내·외부도로 보수 및 우기 수몰지역 배수 지원 • 난민보호소 시설보수, 방호벽 보강 및 경계초소(14개소) 신축
유엔 임무단 시설공사 지원	• 보르 기지 경계벽 및 해자개선, 경계초소 신설 • 보르 기지 내부 도로 정비 • 보르 기지 유엔 직원 숙소설치(25동) • 보르 기지 우기대비 배수로 정비 및 집수지 준설 • 피보르 및 아코보 독립 작전기지 방호벽, 외부 해자 및 순찰로(1.8㎞)보강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우리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정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개인파병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남수단임무단(UNMISS) 동부사령부 참모장과 옵서버 직위에 우리 군 장교를 신규로 파견하였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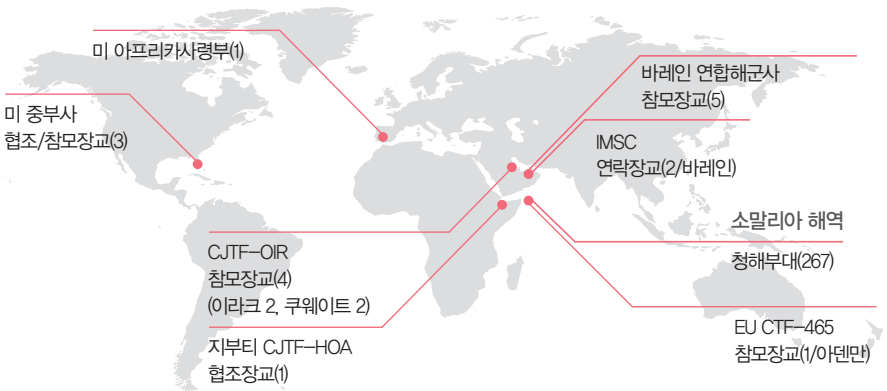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견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파견된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수행하여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청해부대 267명과 개인단위 파병 17명 등 6개국에 총 284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12]와 같다.

[도표 5-12]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명, 총 인원: 284명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38호[70]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아덴만 해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등 전략물자의 주요 수송로이며 연간 약 300여 척의 우리 선박이 통항하는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지역[71]으로,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였다.

청해부대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과 26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선박을 호송하고 안전항해를 지원하며 연합해군사

70) 1. 청해부대 작전구역 : 남위 11° 이북, 동경 68° 이서
2. 회원국들의 군용 함정 및 항공기 파견 촉구
3. 해적 퇴치를 위해 군용 함정 및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 가능
4.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5.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호송

71) 아덴만 해역에는 한국의 함정 1척(청해부대)과 일본의 함정 2척과 초계기 2대, 중국의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대해적작전과 해양안보 작전에 투입 중이며 2010년부터 6차에 걸쳐 한국이 CTF-151 사령관직 임무를 수행

령부와 유럽연합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여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연합해군사 예하의 대해적작전 임무 조직인 CTF-151 사령관직을 대한민국 해군이 수행하여 국제사회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해부대 작전활동

바다의 날 청해부대 UDT 해상훈련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에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예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6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 연락을 유지하고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우리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덴만 해역의 해적활동은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크게 감소하여 2020년 이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9년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기존의 아덴만 지역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2020년 2월에는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약 1주일간 해상 표류 중이던 이란 국적 선박에서 10명을 구조하고 유류와 식량 등을 제공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청해부대는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과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되어 임무 수행 중이다.

또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작전활동을 중동지역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수행하였으며,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한 우리 선박 한국 케미호 억류사건 발생 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투입되어 석방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6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해적에 의해 우리 선원 5명이 피랍되었을 때도 아덴만에서 기니만 해역으로 이동하여 구출을 지원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3]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22년 12월 기준

선박 호송		안전항해 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512척	1,882척	33,357척	3,014척	917회(1,646일)	24회 / 34척

우리 국민 보호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 구출)
2011년 3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우리 국민 37명, 몰타 및 그리스로 철수 지원)
2011년 4월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우리 국민 14명, 인도네시아인 6명 전원 구출)
2012년 12월	제미니호 선원 구출 작전(해적에게 피랍 후 석방된 우리 선원 4명 호송)
2014년 8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 몰타로 철수 지원)
2015년 4월	예멘 재외국민 철수 작전(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 오만으로 철수 지원)
2018년 4월	가나 해상 피랍 국민 호송 작전(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 3명 가나로 호송)
2018년 8월	리비아 무장단체에 피랍된 우리 국민 구출 작전 지원
2019년 11월	예멘 인근해상 피랍된 우리 선원 2명 구출 지원
2021년 1월	이란에 의한 우리 선박(한국 케미호) 억류 시 현장출동 및 대비태세 유지
2021년 6월	기니만 일대 피랍된 우리 선원 5명 구출 지원
2022년 5월	이란 언론(Kayhan), 한국 선박 대상 호르무즈 해협 통항 봉쇄가능 보도에 따른 대비태세 유지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쿠웨이트 다국적군 지원사령부(CJTF-OIR: Combined Joint Task Force-Operation Inherent Resolve),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7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작전지속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S 격퇴를 위해 창설된 다국적군인 CJTF-OIR(이라크)에 참모장교 2명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다국적군 평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국방교류협력 활동

우리 군은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우리 군은 2014년 3월 말레이시아의 실종 여객기에 대한 탐색 지원을 위해 다국적 연합탐색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파견하였다.

UAE 아크[72]부대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1진 13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알 아인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5진부터는 15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6년 9월 28일 UAE 총참모부의 요청으로 아크부대를 스웨이한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사 및 이전비용 320억 원을 UAE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아크부대 연합훈련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제한되는 고공·야간 강하와 민간선박을 이용한 선박 검문검색 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파병 10주년을 맞은 아크부대는 거친 중동의 사막 환경을 극복하여 UAE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교민 보호와 국위 선양 등 새로운 형태의 군사외교 모델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아크부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임무수행은 우리나라와 UAE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 되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산악전 훈련, 사이버·군수분야 등에서의 육·해·공군 대표단 상호방문 등의 활발한 교류와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크부대 주요 활동은 [도표 5-14]와 같다.

72)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으로, UAE 국민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의미임

[도표 5-14] 아크부대 주요 활동

2022년 12월 기준

UAE군의 능력 향상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우리 군의 능력 향상	• UAE의 첨단 시설과 항공자산을 활용한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 악조건 하(5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실시 • 장거리 사격훈련 및 전술·고공강하 훈련, 산악전 훈련 실시 • 건물 및 선박 검문검색·장악·인원구출 등의 전술훈련 실시
국방교류 확대	• 한국군 주요훈련 시 UAE군 참관 및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 UAE 장교 및 부사관 수탁교육, 한국군 위탁교육 실시 • UAE군·가족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4. 국제평화유지활동 기반 확충·발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및 공약 이행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국제평화유지활동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기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유엔 평화·안보분야의 최대·최고위급 정례회의체이다. 2016년 영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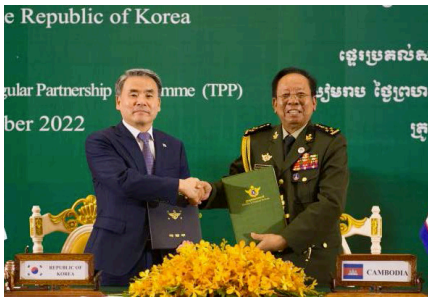
우리 정부는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PKO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국방부장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유엔의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술, 의료, 훈련, 자산, 여성, 경찰 분야에서 6대 기여공약을 제시하였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평화, 회원국 간 협력증진, PKO 요원의 역량강화, 평화유지활동 과정의 안전 보장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한국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평화유지활동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6대 기여공약은 [도표 5-15]와 같다.

국방부는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유엔본부 및 외교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이행 중이다. 스마트캠프 사업의 경우 한국의 기술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움과 10월 우간다 유엔 역량 강화 워크숍 등에서 한국 국방부가 스마트캠프 관련 발제자로 지속 초청받는 등 주도권을 확보

[도표 5-15]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6대 기여공약

스마트캠프 구축	• 한국의 첨단IT기술을 유엔 현지 임무단에 접목한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 남수단 한빛부대 대상 시범사업 추진
헬기 양도	•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정찰헬기(500MD) 16대를 아프리카 임무단 내 헬기부대 운용 국가에 공여
의료역량 강화	• 유엔 의료훈련센터에 우리 군 의무요원 파견하여 의무훈련 지원
공병훈련 지원	• 유엔병력공여국에 공병장비 공여·훈련 지원, 양자 협력을 통해 지뢰제거 등 훈련 지원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	•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에 2023년부터 유엔 여군교육과정 유치 및 여성PKO 참여율 향상
경찰 PKO 요원 역량 강화	• 경찰 PKO 요원 파견 확대, 경찰대 PKO 교육센터 활용 유엔 경찰특별교육과정 운용 등

하였으며, 500MD 헬기 공여의 경우에도 2022년 7월 UN, 미국, 헬기양수국(케냐, 엘살바도르)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유엔 아프리카 임무단에 최종 16대의 헬기가 정상적으로 공여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들 나라와 계획 수립 및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병훈련 지원 역시 캄보디아 및 유엔 삼각협력(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부서와 협력하여 유엔 임무단 내 캄보디아 군의 공병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한·캄보디아 국방장관 간 공병장비 양도약정식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중장비 양도 및 공병훈련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우리의 기술·지식역량을 통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방향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한·캄보디아 PKO MOU 및 공병장비 양도약정서 체결 (2022년 11월)

ADMM-Plus 국제평화유지 분과 및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수행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국제평화유지 분과[73] 공동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 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실시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에 참가[74]하여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전파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 선도 국가로서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또한,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 분과 공동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양국 주도로 역대 최대 규모[75]의 해양안보 분과위 실기동훈련을 한국 및 싱가포르 해역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안보국제회의를 통해 국제해역 내 해양안보 및 신뢰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해양안보 역량과 다자 협력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양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ADMM-Plus 국제평화유지활동 분과회의(EWG)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에는 연2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 기간 수행한 각국 평화유지활동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여성평화유지요원의 역량 강화와 참여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2023년 후반기 베트남에서 예정된 PKO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평화유지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 추진

2022년 12월 현재 국방부는 영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과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2개국과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세부 문안을 협의 중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는 2015년 9월 「한·베트남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5년 12월과 2018년 9월에 베트남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우리 공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 파견지에서 위기상황 발생을 가정한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엔참모과정과 옵서버과정에 10명의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관측·감시, 조사·검증, 협상·중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베트남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영국과는 2017년 3월 영국 공병부대의 남수단 파병을 계기로 2018년 1월 「한·영 국제평화유지활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관련 정보공유는 물론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엔참모과정에 2022년 현재까

73) ADMM-Plus 분과회의는 ①국제평화유지활동, ②대테러, ③해양안보, ④군 의료, ⑤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⑥인도적 지뢰 제거 분과로 구성되며,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 1개국과 Plus 8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 1개국이 공동으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

74) 인도네시아 보고르 PKO 센터에서 개최된 PKO훈련(2019.9.14.~23. 18개 회원국 총 370여 명이 참가)에 국제평화지원단 훈련팀 및 옵서버 12명이 6개 분야(성적착취확대, 지뢰사고, 불법검색, 아동무장, 보안검색, IED)에 대한 훈련 참가

75) 군함 18척, 항공기 10기, 3,500명 이상 병력 참가(2019.4.30.~5.13.)

지 5명의 영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수탁교육을 시행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캄보디아와는 2022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캄보디아 국제평화유지활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캄보디아는 인도주의적 지뢰제거(Humanitarian Demining)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져 선진 장비를 갖춘 우리나라와 협력 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이를 새로운 평화유지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우루과이와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위·수탁교육, 훈련과 정보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루과이는 병력 대비 PKO 파병 비율이 높은 국가로 군 지휘부의 상당수가 PKO 파병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기능 강화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전담기관으로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현재 국내 유일의 PKO전문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해외파병장병에 대한 파병 전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외교부 유엔과, 타 국가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대학 평화유지교육센터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PKO학술활동으로 매년 PKO정책발전을 위한 PKO발전세미나를 통해 PKO교리 및 분쟁지역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PKO 전문 학술지인 'PKO저널'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용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 파병부대 성과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활동국으로부터 최초로 '유엔교육인증'을 획득 후, 2018년과 2022년 11월에 재인증을 받았으며 현재는 유엔 옵서버과정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인원은 [도표 5-16]과 같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

[도표 5-16]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교육 인원

2022년 12월 기준

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	기타
1,891명	8개 과정 1,079명	4개 과정 42명	1개 과정 150명	8개 과정 620명

도록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통합훈련처(ITS: Integrated Training Service)와 협조하여 유엔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유엔보병대대 교관교육을 실시해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2019년 제3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 주관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유엔 교육프로그램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역량 강화프로그램인 유엔 여군 교육과정(FMOC: Female Military Officers' Course) 유치 공약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UN과 공동 개최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회, 세계 PKO센터 협의 총회에 연례적으로 참석하고, 해외 11개국 PKO센터와 교류를 통해 상호교관 교류, 외국군 수탁교육 등을 주관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4,000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부대는 각각 1,000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와 2,000명의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76])'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1115공병단'을 파병 전담부대로 추가 지정하였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이다. 유엔을 통해 공병·의무부대 파견요청이 오면 별도 지정부대로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과 파병인원은 [도표 5-17] 및 [도표 5-18]과 같다.

[도표 5-17]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별도 지정부대 : 공병, 의무, 군사경찰, 무인항공기 소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헬기부대 등

76) 전체, 전부를 뜻하는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

[도표 5-18] 상비부대 파병 인원

2010년~2022년 12월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계
8,437명 (27개진)	1,745명 (8개진)	2,399명 (20개진)	4,336명 (16개진)	16,917명

5.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정립

재외국민 보호 활동

우리 군은 해외에서 대규모 재해·재난·테러 등 위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함정·수송기 등 군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활용하여 피랍 국민 구조·이송과 리비아, 예멘 등에서 내전 발생 시 재외국민 철수 등을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연재해와 재난 상황들에 대응하여 군 수송기와 구조대를 투입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군 자산을 활용한 국방부의 최근 재외국민 보호 주요 활동사례는 [도표 5-19]와 같다.

[도표 5-19] 우리 군의 재외국민 보호 주요 활동 사례

2022년 12월 기준

일시	주요 활동 사례
2018년 10월	• 사이판 태풍 발생으로 고립된 한국인 799명 대피 지원(사이판→괌) (공군 수송기 C-130 1대 투입)
2019년 5월	•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해군 해난구조대(SSU) 파견
2020년 2월	• 일본 크루즈선에 승선한 한국인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국내 이송 지원(도쿄→김포)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 VCN-235 1대 투입)
2020년 5월	• 아프리카 지역 내 교민 60명 귀국 지원(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인천) (한빛부대 12진 투입 후 복귀하는 전세기 활용)
2020년 7월	•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0여 명 국내 이송 지원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 투입)

재외국민 보호 대응체계 정립

국방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의 긴급구호 인력·자원 등 군 자산 투입과 관련한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 12월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국방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군 자산 지원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투입절차, 업무분장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우리 군의 지원사항을 적극 식별하고,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재외국민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부 합동 상황조치 훈련과 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난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각 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대응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군외상센터
Armed Forces Trauma Center

제6장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제1절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제2절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제3절 국민과 상생하는 군 운영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합리적 배분

국군외상센터 / 태풍 '힌남노' 구조활동

제1절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우리 군은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여 외상종결능력을 확보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도입과 의무후송헬기 추가 전력화를 통해 응급 후송체계를 보강하는 등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군 내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립,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진료여건 개선

국방부는 기존의 관행화되고 경직된 공급자 중심의 군 의료체계를 탈피하여 군 의료체계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 증진, 진료시간 확대, 출입절차 개선 등 군 병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가 편하게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군 복무 중 진료를 종결하지 못한 장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군 복무 중에만 국한된 형식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전역 후의 건강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대다수 장병들이 외진셔틀 및 사단 외진버스를 이용하여 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대와 군병원 간 후송용 셔틀버스를 2025년까지 39대로 증차할 예정이며, 교통환경이 열악한 전방 일부지역 사단 외진버스를 2022년 26대로 증차하였고 2025년까지는 53대로 증차할 예정이다.

또한, 국군수도병원, 대전병원 등은 환자가 집중되는 오전 진료시간을 확대하였고 고양병원, 춘천병원 등은 정형외과, 치과 등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진료실을 추가하여 장병들이 외진 시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군 병원 출입·방문 시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장병 가족들이 겪는 불편을 완화하였다. 국군수도병원과 대전병원은 장병 가족들이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병원시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영문을 개방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민간병원과 동일한 정도로 출입을 완전 자유화하였다. 또한, 대전병원, 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는 면회실 신축, 문화공간 조성 등 환자 및 보호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병원 내 편의시설도 확충하였으며, 향후 군병원 리모델링 및 현대화를 통해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진료가 미종결된 상태로 전역한 장병이 전역 후에도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장병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고, 2022년부터는 진료 미종결전역자가 부담하는 약제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군 간부를 대상으로 환자본인이 부담하던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간병원 접근성 향상

국방부는 장병들의 다양해진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장병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존에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을 근거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부대장 승인만으로 민간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다.

2021년 8월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접근성을 높여 장병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 의료기관 개선 및 특성화

국방부는 장병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 가장 먼저 진료를 받게 되는 사단급 이하의 의무대 및 전방 군단 지원병원 중 노후화된 시설을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단급 의무대 총 72동 중 노후한 의무대 24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2년말 기준으로 13개 사단급 의무대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24개 동에 대한 신축, 증·개축 및 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육군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전방 군단 지원병원 중 홍천·강릉·양주·춘천 국군병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한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병원을 수술집중, 정신건강, 외래·요양 등으로 특성화하고 15개 군 병원별 진료수준 및 진료과목을 재조정하여 군 병원 특성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민·관·군 협력을 통해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 이동형 원격진료 등 최신기술을 군 의료기관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 개소·확대

2022년 4월 우리 군은 군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외상진료체계에 기여하고자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였다. 국군외상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군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소방·경찰 분야 및 민간 외상환자까지 환자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 개소에 따라 군 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현장 응급처치,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신속후송, 국군외상센터 치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군외상센터를 통해 우리 군은 국가적 외상진료체계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상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외상수술실

군 의무후송전용헬기

군 의료전문인력 양성·확보

국방부는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수질환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외상·외과, 정신과 분야 등에서 증가하는 진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 내 전임의 양성을 위해 매년 5명 내외로 선발하던 장기군의관 직무연수 인원을 2023년부터는 1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상·감염·PTS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장교의 임상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수도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중환자·응급·수술 등 주특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군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22년부터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 내 간호군무원 직급을 상향하고, 간호장교 정원도 확대함으로써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대하여 군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수한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확보한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도표 6-1] 군병원 현황

2022년 12월 기준

의무사 예하 병원												해군		공군
수도	대전	양주	고양	포천	춘천	홍천	강릉	함평	대구	구리	서울	해양의료원	포항	항공우주의료원

응급후송체계 구축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격오지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후송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전군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환자후송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2020년에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여 중증환자는 국군수도병원까지 1시간 30분 내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항공후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전투중대급 부대 위주로 '응급구조사'를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긴급후송 중에도 병원과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여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32개 부대에서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부대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전군 응급환자지원 컨트롤타워인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내 최적의 응급상황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단위 시스템을 하나의 지능형 신고처리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실시간 관제·지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국방부는 2019년부터 소방청,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사업을 통해 해당 부처 응급의료헬기 및 전국 민·관 보유 헬기 이착륙장 3,469개소에 대한 공동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내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19건의 헬기후송을 지원받았다. 향후에는 소방청과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응급후송체계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군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

국방부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적 협력 차원에서 군의관 등 의료인력(연인원 16만여 명)을 지원하고 군병원을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군 내부적으로도 장병 건강권을 보장하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대비 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격리 지침을 적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단체생활로 인해 군 복무 중 발생할 우려가 높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영장병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계절독감), 파상풍 등 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군 감염병 감시지원체계(가칭) 개발을 추진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감염병 보고·관리 체계를 통한 신속·정확한 보고와 적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학전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관리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2.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정립

우리 군은 다양한 환경에서 위험성이 높은 각종 훈련과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징병제로 운영되는 군의 특성상 매년 부대 인력의 35%가 신병으로 교체되어 비숙련자에 의한 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 운용의 복잡성 증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군 내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는 1995년 6월 공군 항공안전단 창설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창설, 2019년 7월 해군 안전단 창설에 이어 2020년 4월 국방부에 국방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안전정책팀을 신설하였다. 국방부 전담조직 마련을 통해 전군 차원의 통합적 안전관리, 부대운영 전반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교육 및 초빙강좌를 통한 군 내 안전 전문가 양성 지원, 국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자문, 고위험시설 컨설팅 및 안전진단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민군협력을 통한 국방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범위와 실천과제를 확대하고 국방 분야의 안전 직무 수행역량과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에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 안전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장기 국방안전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국방안전훈령」을 제정하여 국방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정의 및 분류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안전사고 유형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정책 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26개 훈령에 산재해 있던 안전관리의 공통 사항을 종합

하고 사고 예방, 작업환경 개선, 보건 증진과 관련된 부서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부서 및 각 군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선진 안전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진단 등 주요 위험관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예방의 기반이 되는 위험관리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 절차도 규정하였다. 넷째, 안전교육훈련을 명시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방안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책무 규정, 공정한 안전성과평가 및 사고사례 전파 근거 규정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국방 무기체계, 군사시설, 그 밖의 군의 특수한 장비·물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립하였으며, 무기체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적용 범위 및 임무 규정도 포함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안전훈령」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예방 및 대비 관점으로 안전관리의 개념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에는 '2021-2025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방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국방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방 분야 안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국방 분야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별 특성을 반영한 국방 안전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2월부터 안전사고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각 군 사고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방안전관리 정보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계획 수립, 안전점검의 날 강화, 안전문화캠페인 지속 시행을 통해 군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복무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우리 군은 전투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군 내 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많은 부대가 산악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노후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후현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방부는 군 내 재난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연차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재난예방공사[1]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여름철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함에 따라 야외 활동이 많은 장

1) 2020년 239개소 124억 원, 2021년 253개소 160억 원, 2022년 200개소 15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공사 추진

2) 2021년 여름철 폭염일수는 평년 대비 4.0일 증가한 8.1일 기록(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합동)

병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폭염응급키트, 보냉가방 등 폭염대비 물자를 선정하여 전군에 보급하였다. 향후에도 일선 부대의 소요를 고려하여 폭염예방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제2절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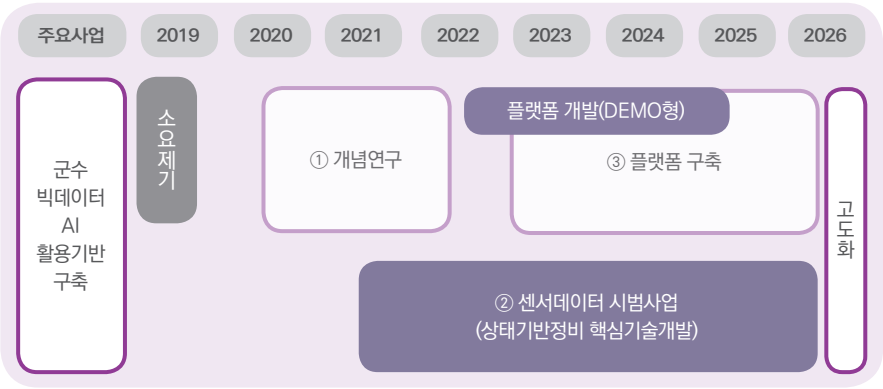
국방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첨단기술 기반의 군수지원 혁신을 추진하고, 국방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안정적 병력충원과 인재관리를 위해 병력·부대구조를 개편하고 스마트인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다.

1. 총수명주기 개념과 첨단기술에 기반한 군수지원 혁신

빅데이터·AI 기반의 군수혁신

국방부는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달라진 국방환경에 맞는 군수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군수 빅데이터·AI 플랫폼 구축 등 군수지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력화된 주요 무기체계는 기계식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전자식 장비로 바뀌고 있고, 진단과 예측을 위한 다양한 군수 데이터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신형 항공기, 궤도장비, 신형함정, 잠수함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센서 데이터의 활용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센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3]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도표 6-2] 군수 빅데이터·AI 플랫폼 구축 추진 로드맵



3) 일례로 육군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약 300개의 센서에서 데이터 생성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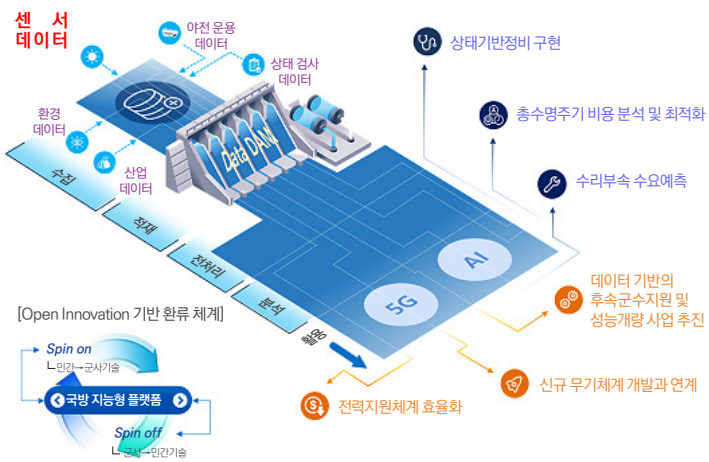
군수지원 혁신은 개념연구, 센서 데이터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념연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무기체계 센서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실시[4]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전력화된 무기체계는 전자식 장비를 중심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신규 무기체계는 센서 데이터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센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 수준,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하여 상태기반정비 적용 개념을 정립하였고, 군수 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센서 데이터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장비를 선정하였다.

2022년 진행되고 있는 센서 데이터 시범사업은 무기체계별 누락요소를 줄이기 위해 국방실험사업,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국방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센서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하여 2022년 12월부터 센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기체계 상태기반정비(CBM+)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핵심기술개발 과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플랫폼 구축사업은 민·군 환류방안 연구, R&D 투자 효율성 증대, 국가산업 전반으로의 파급효과 확산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2022년 3월 부처연계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부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념연구 및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부터는 플랫폼 구축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 및 검증해 보는 시범체계[5](DEMO형)를 구축하고 있다.

군수 빅데이터·AI 플랫폼의 구축은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중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

[도표 6-3] 군수 빅데이터·AI 플랫폼 구축 및 기대효과



4) 데이터 추출·정제 및 자동 연계·융합 기술을 통해 데이터 셋(data set)을 구축하고, 지능형 데이터 관리 실시

5)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앞서 감시·기동·함정·항공·방호 등 14개 무기체계(~2025년)를 대상으로 소형 빅데이터 체계 우선 구축

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단일화된 정보시스템에 축적·관리하며, 데이터 분석 및 군수기술정보체계를 통합 개발할 계획이다.

민군 MRO 산업 육성 및 부품관리정책 발전

국방부는 무기체계 운용의 안정성과 전투준비태세를 제고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민군 MRO[6] 육성 및 부품관리정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관리 업무체계 개선, 국방인증 기반 조성, 민군 상생 협력 강화를 구현하고 있으며, 민·군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보유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가칭)'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 센터 설립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22년 3월 '국방 MRO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 설립 이후 무기체계 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정비 부문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 MRO 산업발전 세미나

앞으로도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국방 MRO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군 무기체계의 운용성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국내 MRO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 효율화

국방부는 장비의 소요, 획득, 운영 및 처분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과정에서 성능, 비용, 기술, 정보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이하, 총수명주기관리)함으로써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적시에 작전지원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총수명주기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21년 2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제정함으로써 운영유지비 분석, 부품단종관리 활동, 국방RAM[7] 업무,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등 총수명주기관리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훈령은 수명주기관리 절차의 시행근거와 수명주기관리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 업무수행절차를 담고 있다.

2022년에는 총수명주기관점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 가동률을 보장하고, 후속군수

6) 무기체계 유지(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 점검(Overhaul)에 필요한 부품·기술·인력 등 전반적인 것을 통칭

7) Reliability(신뢰도), Availability(가용도) Maintainability(정비도)의 약어로 장비가동률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수명주기 비용 절감의 핵심지표이며, RAM 업무는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에 걸쳐 이루어짐

지원[8]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먼저 무기체계 도입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정비 개념인 '창정비'를 무기체계의 상태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운영유지 여건을 보장하는 개념인 '창성능개선'으로 재정립하였다. 또한, 미국 등 방산 선진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9]를 활용하여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는 방산업체의 해외수출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이며 군과 방산업체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방예산의 절감과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

국방부는 장병복지 향상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을 군수품으로 도입하고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방규격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대체함으로써 군수품의 공급원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급속한 상용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10]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범사용 품목 중 군사용 적합제품[11]을 조달청 나라장터 '국방상용물자 쇼핑몰'에 등록함으로써 군 수요자의 우수 상용품 구매 여건을 개선하고 참여기업의 판로 확장 및 군수품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조달청과 '혁신조달[12] 및 군수품 상용화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군수품 개선을 통한 장병 근무여건 향상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2022년 9월)

조달청 나라장터
'국방상용물자 쇼핑몰'

국방부-조달청 업무협약 체결
(2022년 9월)

8)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한 전력화 이후 운영유지를 위하여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 요소를 계속 지원하는 활동

9) RAM 목표를 충족하면서 수명주기비용(Cost) 최소화 대안을 제공하는 공학적 분석 기법

10) 군에 민간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장비 등 민간제품을 시범사용한 후 우수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조달하는 제도

11)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에 참여하여 각 군별 시범사용 후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2021년 138개, 2022년 129개가 있다.

12)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2. 개방형 국방운영

정책홍보 활성화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 온라인, 현장소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소통전문가단'[13]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국민소통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에 관심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서포터즈(M-프렌즈)'[14]가 제작한 국방관련 컨텐츠를 SNS에 게재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국민과 장병들이 더 쉽게 국방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먼저 'PRIDE', 'Gunvogue', '레알군대썰전' 등 병영생활, 훈련, 무기체계 관련 내용을 담은 기획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국방부 공식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국군의 날, 서울안보대화, 서울ADEX,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등 국방 관련 주요행사 개최 시 언론·온라인 홍보, 현장영상,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정책현장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였다.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개선된 급식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선된 군 급식 정책이 반영된 모습과 조리병력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인 'tvN 백패커'를 제작지원 하였고, 군 급식 발전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진행하는 군 급식 요리대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를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KBS 다큐On'에 방영하는 한편, 요리 관련 유튜버와 협업하여 해당 채널에 군 급식 관련 컨텐츠를 게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21년에 인기가수 '데이브

2022 국군 화보 프로젝트 '강한 국군'

국군화보 프로젝트 '강한 국군'

13) 2015년부터 국방정책 홍보 아이디어 발굴과 스마트 혁신, 문화, 의료, 언론 및 홍보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 활용을 위해 30여 명을 위촉하여 운영

14)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기자단

레이크'와 육·해·공·해병대 군악대가 함께 일상회복을 응원하는 캠페인송인 '꽃길만 걷게 해 줄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우리 사회에 희망과 격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일상을 지킵니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군이 군사적 측면의 안보만이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국민의 군대라는 인식을 대외에 전달하였고, '2021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2022년에는 제1·2연평해전 참전 현역 장병과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인 한·미 현역 장병이 프로야구 시구·시타에 나서는 행사를 통해 연평해전 승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조국 수호를 위한 국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2022년 SNS 달리기 챌린지 'WE대한RUN', '국군의 날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SNS를 활용한 국민참여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년 「국군 화보」를 제작하여 우리 군의 강한 모습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강한 국군', '강한 동맹'을 주제로 화보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고 화보 이미지를 활용한 달력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증정하였다.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그 중 2021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내 유해발굴을 소재로 한 광고영상 '70년의 기다림'은 큰 울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광고제에도 출품하여 '대한민국 광고 대상',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등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방정책, 병영생활 개선 등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정책소비자 시각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국민과의 소통 확대

국방부는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정부혁신 전략 중 하나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대하고 조직에 혁신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선발 과정에서는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적극행정 추진의 공감대 형성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방부와 국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 공개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보공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 중이고, 국방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정

공익광고
'70년의 기다림'

책디자인단'을 매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의 개요와 주요 추진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화된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전문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군 내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감사·개선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 국방기관과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각층이 협력하여 군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장병 권익 증진 및 국방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 장병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 뉴스레터' 배포 '국방 청렴 에세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청렴을 공직자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게 하였다. 더불어, 내부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강화된 처분기준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부의 청렴도는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여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입증하였다. 앞으로 국방 발전에 기여한 내부 신고자에게는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청렴옴부즈만',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와 같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개방형 국방운영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적인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방 규제 개선

국방 규제혁신과제 발굴·확대

국방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방향으로 매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도 '국방 규제혁신 TF'[15]를 운영하여 국방 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신산업 활성화, 국민불편 해소, 기업부담 해소 분야의 규제정비과제 1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을 제정하여 군 내 데이터 공유·융합 개선을 통한 데이터 개방성을 확대함으로써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예비군이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군병원 외에 민간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송달방법으로 기존의 우편·등기·인편 교부 방식 외에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부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주민 편익을 높였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입찰 시 추가 감점이 되지 않도록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30개월 이상 현역 복무하였으나 당시 진급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신산업 활성화, 기업부담 해소, 국민불편 해소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분야의 규제정비과제 23건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16]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안전성 및 보안검증제도 등 보안규정을 정비하여 국방 분야에 AI·무인체계·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표준화된 보안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방산기술 수출허가 시 기술보호의 중요도가 낮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분과위 심의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수출허가 기간을 단축하였다. 군 마트 위탁판매 물품의 시장가격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과열품목의 집중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시장가격 교란행위 제품의 조기 퇴출 등 물품선정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전원에 대해 실시 중인 신원조사를 비밀취급자 및 통제구역 상시출입자에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 모바일 고속버스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병 편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고속버스 모바일 서비스

15)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2022년 6월 '국방 규제혁신 TF(TF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를 신설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국방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추진 중

16) 군 도입 여부에 대한 소요결정 전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히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범 운용함으로써 군 활용성을 검토하는 사업

의를 제고하였고,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17]을 개발하여 군인·군무원 모집창구를 단일화하고, 장병 인사상담 및 전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장병의 편익을 높였다.

이외에도 국방 분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국방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18]에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규제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국방 분야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국직기관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규제정비과제 수시공모를 실시하여 총 34건의 과제를 접수·심사한 결과, 최우수과제 1건, 우수과제 2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3건의 과제 및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3건의 과제는 단기 또는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민과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규제개혁 대표사례 선정 시 국민 온라인 심사 등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획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탄약 저장시설 관련 제도 재정비

국방부는 탄약 저장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주민들의 건물 신축과 증축, 지자체의 공공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체 탄약고의 31%인 노후 지상형탄약고를 최대한 이글루형과 지하탄약고로 교체하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탄약저장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하탄약고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과 협력하여 한국의 지형과 저장된 탄약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형 안전거리를 재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7) AI·빅데이터 기반의 전군 인재선발, 인재육성, 전역지원 및 인사행정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화 시스템으로 2025년까지 구축 예정임

4. 병무행정 개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제도 운영

정부는 2017년 3월 「병역법(제77조의4)」을 개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공직자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이며,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 등 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병역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부

18)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규제업무운영훈령(국방부훈령)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위원은 6명 이상 15명 이내의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안건 소관국장) 및 외부위원 (법률·규제개혁 전문가 등)으로 구성

[도표 6-4] 불공정 제도개선 사례

구분	기존	변경
입영일자 연기제도	• 민간 자격시험 등 응시 시 연령제한 없이 연기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민간 자격시험 등 응시 시 연기 제한(2018년 8월~)
	• 대학원 진학예정 시 연령 제한 없이 졸업 다음해 5월말까지 연기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시 연기 제한(2019년 1월~)
단기국외여행 허가 제도	• 1회 1년 범위 내, 통틀어 3년	• 1회 6개월 범위 내, 통틀어 2년(2018년 5월~) * 최대 5회 제한 폐지(2022년 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 불안정성 발목·손목관절 등 4급 판정	• 불안정성 발목·손목관절 등 3급으로 판정 (2021년 2월~)

터 2022년 8월까지 고의적인 체중 증량과 손목 수술 등의 병역면탈 의심자를 19명 적발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또한, 일부 대중문화예술인·체육선수들이 병역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병역이행을 미루는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28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입영연기 사유를 더 엄격히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제도 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정병역 문화 확산과 제도의 인식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 병역사항 공개 대상 확대

1999년 병역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19]만을 대상으로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국무위원후보자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병역사항 공개항목에 복무부대 및 병과를 추가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여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병역을 이행한 경우,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병역판정검사 개선 및 입영신체검사 제도 개선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검사 제도를 운영하여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특히, 2022년은 심리검사체계를 1차 심리검사, 정

19)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후보자

신건강의학과 검사의 기존 3단계에서, 심리취약자 대상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될 경우, 재입영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병역의무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입영판정검사는 2021년 제2작전사령부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시작으로 2022년 7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동부권역 6개 사단 입영자까지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보충역[20] 대체복무제도 개선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1973년 국가기간산업 육성, 국위선양, 병역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국가 위상 변화에 따른 도입 취지 약화 등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합동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또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을 제한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제고하는 등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미래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국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도표 6-5] 산업지원 분야 개선 주요 내용

		추진과제
1	병역자원 확보 및 형평성 제고	• 배정인원 감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개선
2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 소재·부품·장비업체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 소관 부처 역할 강화
3	복무관리 및 복무 부실자 처벌 강화	• 복무 부실인원 처벌 규정 강화
4	권익·인권보호 강화	•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유연복무제 도입 • 승선근무예비역 국제선박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20) 보충역 대체복무제도에서 의미하는 보충역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체·경제적 배려 대상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은 2019년부터 신체적·경제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병역의무자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악성혈액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병역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 및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2,123명의 병역의무자가 국고 지원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무료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등 혜택을 주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2013년에는 한국광복군을, 2020년에는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인 1,816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표 6-6]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개, 명

구분	계	200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 문	9,447	1,062	301	545	497	466	560	492	714	741	1,017	1,236	1,816
병역 이행자	47,650	4,857	1,444	2,642	2,520	2,490	2,932	2,670	3,779	3,820	5,222	6,289	8,985

5. 안정적 병력충원 및 효율적 인력관리

병력충원 대책 시행

국방부는 인구급감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병력충원을 위해 인력 충원체계를 개편하여 중장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기 병역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의 전환복무 요원은 2021년까지만 배정하고, 2023년에는 완전 폐지할 예정이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2022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2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근예비역은 2023년에 1.6만 명에서 8천 명으로 감축하여 현역병으로 전환시키고, 2015년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강화한 현역판정 기준(체질량지수, 시력 등)을 2021년부터 다시 완화하여 현역판정률을 2014년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현역입영이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과 함께 간부 인력풀 확대를 위해 임용연령 상한의 완화를 추진하고 여군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방혁신 4.0」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적정 상비병력 수준을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간부획득·운영 제도 개선

병력구조가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우수 간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상비병력은 감축하면서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간부를 증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자원의 감소 등으로 간부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우수한 간부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장기복무 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위와 하사의 정원을 줄이고 중간계급의 정원은 확대함으로써, 초임획득 규모는 줄이고 직업군인으로 장기복무하는 간부를 늘려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운영체계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장기복무 장교의 정년연장, 부사관의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제도 운영, 수당체계 개편 등 간부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단기복무 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중기복무 간부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들에게 학자금 수준으로 군가산복무지원금[21]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인력획득이 어려워지는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우수한 중·단기복무 간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사 전문인력 육성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방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군사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학위교육과 국외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학위교육은 군 교수, 연구개발, 정책 분야 등의 군사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21)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기본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는 조건으로 대학 및 전문대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써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 학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우주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35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국외군사교육은 군사지식·신기술 습득, 무기체계 운용, 전투기술 숙달 및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40여 개국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50여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연합·합동 전문인력 양성 및 군사외교 역량 확대를 위해 동남아, 유라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파견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혁신 4.0」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육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6. 미래 국방 인재관리

스마트 인재관리체계 구축

우리 군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 인력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2023년에 착수하여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스마트한 인재관리체계'를 통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 및 관리, 인재채용 분야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전역 장병 취업 지원 등 미래 인사업무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현재도 우리 군은 전산화된 시스템인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산관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인재관리에도 적용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한 인재관리체계'를 통해 장병 및 군무원들의 Life-Cycle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단순정보가 아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를 판단하게 되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018년 육군이 최초로 'AI 인재관리 개념연구'에 착수한 이래 2021년까지 3년간 개념연구, 체계 상세설계, 예산반영을 완료하였다. 이후 국방인사데이터 관리팀을 편성하여 국방부 및 각 군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인재선발, 인재육성 및 운영, 전역지원, 진급관리 플랫폼 등 분야별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에는 9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분석·설계 단계를 거친 후, 2023년부터 '스마트한 인재관리체계'를 개발하여 2025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도표 6-7]과 같다.

[도표 6-7] 스마트 인재관리체계 연도별 목표 및 과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 목표	내실있는 요구기능 분석·설계, SW 개발공정 체계적 관리	상시 개발시험평가, 피드백을 통한 사용자 요구기능 충족	철저한 운용시험평가를 통한 최적의 시스템 전력화·안정화
중점 과업	• 시스템·기능·SW규격 설계 • 요구기능개발 워크숍 • SW코딩 및 기능 단위시험 • 요구정의, 설계감리	• 시험평가단 구성, 운영 • SW통합시험, 개발시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HW/상용SW납품설치	• 운용시험평가, 감리 • 납품검수 및 사업종결 • 전력화, 유지보수 / 안정화 지원

전문 분야별 인사관리제도 개선

국방부는 미래전 양상 변화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합·합동 전문인력'과 '사이버·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성 제고를 중점으로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연합·합동 전문인력은 전작권 전환 과정과 이후의 연합작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합동성과 어학능력의 수준에 따라 전문직위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다. 먼저 전문직위 지정 시 검증을 강화하여 직위 지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고,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던 어학능력 기준을 등급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전문직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연합·합동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만을 선별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전문직위를 지정하였다. 아울러 연합·합동전문직위에는 해당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적격자가 보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인력 보직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한 선발·분류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위별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인력이 보직되도록 하였으며, 사이버 핵심기술직위 선정 및 시범운영을 통해 국방사이버 핵심인재의 역량을 활용하고 복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관리 개선을 추진하였다. AI 등 첨단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을 「국방혁신 4.0」의 과제로 선정하여 조직구조 개선, 관련 전문학위 교육 확대, 인사관리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7. 군무원[22] 종합발전계획 추진

국방부는 최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군무원의 대규모 증원 필요성과 우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분야 군무원 수요 증가 등 대외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군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은 군무원의 역할과 활용 분야 재정립과 관련된 조직 및 정원 분야, 채용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채용 분야, 군무원 주거지원 및 수당 등 처우개선 사항의 사기/복지 분야, 승진 및 보직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인사관리 분야, 직급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이다.

조직 및 정원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비전투분야 현역직위를 군무원 직위로 전환하고,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해 기술분야 군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군무원으로 정원이 전환된 직위 중 일부 직위의 경우 군무원의 임무수행이 실제로 제한되는 문제, 부대별 상이한 정원구조로 인한 승진 기회 불균형 문제, 신기술 발전에 따라 축소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직렬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식별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군무원의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직위를 현역 직위로 전환하고, 국직부대에 중간 직급 편제 신설로 끊어진 승진 사다리를 연결함으로써 승진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직무값을 고려하여 부대별 직급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직렬을 통폐합

[도표 6-8]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

구분	주요내용
조직/정원	• 군무원 역할 및 활용 분야 재정립 • 군무원 정원 구조 개선 등
채용	• 채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 유연화 • 채용의 효율성 제고 • 비상사태 등 유사시 채용기간 단축 • 지역학교와 연계한 지역인재 채용 등
사기/복지	• 군무원 주거지원 제도 개선 • 수당 등 처우 개선 • 약제 지원 개선 • 휴가 규정 개선, 복지시설 혜택 확대 등
인사관리	• 격오지 및 접적지역 근무자 승진 가점 확대 • 군무원 대상 인성검사 도입 / 시행 등 • 군간 인사교류 개선
교육훈련	• 국방관리자과정 역량 강화 • 군무원 상시학습 제도 도입 • 중견리더과정 신설 및 운영 • 위탁교육 확대 등 교육기회 확대 등

22) 군무원은 군에 소속되어 기술, 연구, 교육훈련 행정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

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신기술의 발전과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하는 신규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군무원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채용 현재 군무원 채용은 부대별로 지원자격 및 선발요소 등이 유사함에도 각 군 및 국직부대가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6급 이하 국직부대 군무원을 각 군에서 시범적으로 통합 채용하였다. 또한, 채용 공고 20일 준수사항도 국가 비상사태 등 유사시에는 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향후에는 응시자가 학위, 자격증 등 채용 서류를 수기 제출하고, 지원서류를 인력에 의해 검증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 없는 원서접수'와 '군무원 채용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 및 벽지 등 특수한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학교와 연계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기 및 복지 군무원은 연고가 없는 접적지역과 격오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인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포함되어 군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군무원의 경우는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약제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군무원에게도 약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군무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직책수행경비, 당직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복지시설 이용에 군무원의 배정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인사관리 격오지 및 접적지역 근무 기피를 해소하고, 위험지역 근무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해당 지역 근무자에게 승진 시 가점을 확대하고, 2~3년 근무한 경우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인사교류의 경우는 일대일(1:1)로 국한된 상호교류에서 개인의 고충해소 및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군간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군무원의 복무적응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인성검사를 도입하여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는 각 군에서 건의된 군무원 대우기준표와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내용을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국방부는 4급 및 5급 군무원 임무수행 능력 및 역량 개발, 미래 군무원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중견 리더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국외 군사교육 및 능력개발 교육 중 군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상시학습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군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4만 7천여 명에 육박하는 군무원의 비중과 역할을 고려하여, 직무보수교육은 각 군에서 실시하되, 군무원의 기본 소양 및 리더십 배양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통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군무원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3절

국민과 상생하는 군 운영

국방부는 군부대 인근지역의 개발제한, 훈련·작전 수행에 따른 소음, 분진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복무 중 자기개발지원, 창업지원, 전역후 전직 및 취업지원 등 군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굴·확대하고 있다.

1.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수행해왔다. 그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협의위탁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해왔다.

[도표 6-9]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단위: ㎢

연도 면적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제	50	1.6	28	27	20	25	37	337	77	100.7	9.1
완화	5.7	6.3	0.8	46.5	4.5	0.2	0	13.2	0.5	1.3	3.7

최근에는 현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재검토하여 '필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제' 원칙 아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비접경지역, 항공작전기지를 포함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재정립하는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그동안 군 작전 및 훈련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첫해인 2022년에 군소음 피해주민 41.5만 명에게 1,17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국회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군 공항 이전

국방부는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요구로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2020년 8월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는 2014년 대구시의 이전건의서 제출 이후 약 6년만의 결과이다. 사업 추진 중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국방부는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갈등을 극복하였고, 특히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방식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는 활주로 및 주요 시설배치, 건축물 규모 등을 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는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대구시와 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이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 군 공항 내 미군시설의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도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

다. 2020년 10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군공항이전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분과위원회 산하에 포괄협정, 기술양해각서, 기본계획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합동실무단을 통해 양측은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기본원칙 및 이행절차를 규정하는 포괄협정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하는 기술양해각서를 협의하고 있고, 미군시설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설배치,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전라남도 내 예비이전후보지 적합 지역을 식별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함에 따라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국무총리실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건의에 따라 2021년 4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협의체에서는 후보지별 이전사업비를 산출한 이후 이전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국방부·광주시·전남도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지자체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및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이후 이전후보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화와 설득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

과거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군이 일부 사·공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매입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임차하며, 부대이전·재배치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의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 반환하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41만㎡를 정리하였고,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약 16%의 예산 증액을 통해 331만㎡를 정리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19년부터 군 무단점유지 소유자 약 15,000명에게 선제적으로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15억 원 내외에 그치던 무단점유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1억 원 지급되어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장받게 되었다.

향후 국방부는 관련 예산 증액, 반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무단점유 사·공유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유휴·방치시설 철거

국방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전국의 군 시설에 대한 철거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말 영내·외 유휴·방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작전성 검토를 통해 철거대상을 식별하여 2021년까지 9,120개소를 철거하였다.

2022년에는 영내·외 유휴·방치시설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 및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등을 확인하고, 긴급성과 작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1,500개소를 철거하였다. 2023년에도 유휴·방치시설 철거 사업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향후에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휴·방치시설 철거과정(철거전–철거후)

접경지역 민군 상생 협력 및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국방부는 병력집약형 부대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구조로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된 부대들을 해체하고 신편 및 증편하는 등의 통합 조정을 통해 재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인구와 경제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강원도 접경지역은 부대와 병력 감축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는 접경지

역이 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안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병력 및 부대 감축으로 특히 어려움이 큰 강원도 내 접경지역(고성, 양구, 인제, 철원, 화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국방부–강원도 및 접경지역 5개 군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2년까지 6차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안과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와 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사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군인 및 군인 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작전과 훈련을 위한 '군사구역'과 주거, 복지, 문화, 학교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할 것이다. 특히, '민군상생구역'은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것이다.

2.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군 환경오염방지시설 확충 및 개선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된 오·폐수 중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23] 및 폐수[24]처리시설을 군 주둔지 내에 설치하고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자체 관로 연결 등을 통해 지자체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연생태계의 터전인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군 유류저장탱크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25]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토양오염 검사와 오염이 발견된 부지에 대해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류 누출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유류배관을 지상화[26]하고, 지상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유류 누출을 차단하는 구조물(방유조)[27]을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유류배관 지상화(총 7,025개소) 및 방유조 설치 사업(총 7,169개소)을 완료하였고, 이후에는 노후에 의한 소요 발생 시 관련 시설을 적극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유류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순찰 강화, 현장 점검 등 사고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면서, 군 환경시설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3)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하수도법」제2조)

24)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물환경보전법」제2조)

25)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로 20,000ℓ 이상 유류저장시설이 포함됨

26) 유류배관을 적시에 보수하고, 누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중 유류배관을 지상으로 노출시키는 것

27)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차단하는 욕조 형태의 구조물(방유조)

오염토양정화

토양오염방지시설(방유조)

친환경적인 국방시설사업 추진

국방부는 장병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정비, 유해환경작업장 개선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주둔지별 군수담당관 등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임명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해성평가를 통해 유지관리·보수·밀봉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군 장병들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전수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 12,494동에 대한 전면 제거 또는 철거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 4년간(2019~2022년) 총 9,428동(75.2%)을 전면제거·철거하였다. 잔여 3,066동도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보수·밀봉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전면제거·철거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군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목공 등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 방식 및 인원을 조정하고 입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500여 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및 집진기[28] 등 시설을 개선하여 유해인자를 제거하고 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장 및 작업자 현황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있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 및 능력 확대

탄약 비군사화는 탄약을 본래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 파괴, 변형, 마멸 등으로 원형을 변경하는 조치이다. 과거에는 폐탄약을 비군사화함에 있어 야외 처리장에서 소각 및 기폭하는 등의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경 및 토양오염과 대형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

28)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군사화 시설과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2012년 충청북도 영동지역에 최초로 소각·용출·분해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2021년에는 내열형 소각시설과 대형탄 분해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2022년 7월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형탄약 위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대형탄과 추진체 등 100여 개 탄종을 연간 1,2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환경 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배출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금강유역 환경청과 면사무소의 전광판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중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비군사화 후에 발생하는 화약, 탄체, 납 등의 회수물질은 매각하여 국고에 납입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국고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건설된 탄약 비군사화 시설

우리 군은 탄약 비군사화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처리가 불가능했던 확산탄 내의 자탄을 처리하기 위한 '자탄 분해시설'과 신호탄 및 조명탄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탄약 비군사화 능력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3. 장병 미래역량 강화

군 복무 중 자기개발지원 확대

국방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다양한 자기개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장병은 '대학 원격강좌'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으로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고 있다. '대학 원격강좌'는 본인이 다니던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서울대 등 17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강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에서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2019년 경인교대 등 12개 대학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대 등 7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 독학사[29]·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고교 학력 이하 장병은 학습교재비와 1:1 학습도우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군특성화고 졸업 장병은 e-MU[30] 제도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29) 독학자에게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4단계(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종합시험) 인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30) e-MU (electronic-Military University) : 군특성화고 졸업자 대상으로 상병~임기제부사관 기간 중 군 협약대학(6개)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전문)학사학위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셋째,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3개 종목에 대해 연 2회 정기검정을, 지게차와 굴착기운전기능사에 대해서는 상시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만 8천여 명의 장병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기시험 연기·중단 등으로 자격취득 장병이 감소하였다. 연도별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은 [도표 6-10]과 같다.

[도표 6-10] 연도별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학 원격강좌 개설대학 수	145	154	161	173	176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수	-	17	35	63	76
고졸학력인정(검정고시) 인원	258	117	89	102	66
국가기술자격 취득 장병	19,530	17,920	8,914	6,224	11,178

*코로나19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실기시험 연기(2020년 후반기) 및 중단(2021년 전반기)

나아가,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병들의 자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병 자기개발비용지원 제도'[31]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국방부는 복무 중인 장병들의 학업·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내 창업인재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방면의 예비창업 관련 지원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장병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는 단계로, 창업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기초적 소양교육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병영 내 창의적 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대별로 창업에 관심 있는 장병들이 '창업동아리'를 결성하도록 권장하고, 전문강사가 창업동아리를 결성한 부대로 찾아가서 창업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장병들이 관심 있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컨설팅과 의견교환 등을 통해 관련 능력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단계는 전문적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로, 전역 후 창업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장병들에게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창업관련 전문멘토가 부대로 찾아가 창업동아리가 연구한 아이템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31) 2018년 시범사업(예산 1억, 개인별 연 5만 원, 본인부담 50%)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20억(개인별 연 5만 원, 본인부담 50%), 2020년에는 80억(개인별 연 10만 원, 본인부담 20%), 2021년에는 235억 (개인별 연 10만 원, 본인부담 20%), 2022년에는 387억(개인별 연 12만 원, 본인부담 20%)으로 예산 확대

창업동아리를 구성하는 장병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3단계는 각 군 및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 교육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이다.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은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등 경진대회의 단계구조를 통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팀들의 창업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국방 창업경진대회 (2022년 8월)

마지막 4단계는 사업화 지원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 실제 창업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과 기술·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병영 내에서 생산된 아이디어가 실제 스타트업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이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창업 인재육성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잠재적인 창업역량을 조기에 개발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을 마련하며, 나아가 미래 한국의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했던 국방부 창업경진대회 운영비용을 2022년부터는 국방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창업멘토링 과정 등을 추가 신설하는 등 미래 창업주역을 육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청년장병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장병들의 전역 후 진로 및 취·창업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군 복무 중 학업·경력의 단절을 예방하여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입대–복무–전역 후까지 군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교육과 1:1 취·창업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단계는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로, 전역 후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기초적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가 각급 부대로 직접 찾아가서 고용환경 및 최신 직업진로를 소개하고 직업심리검사 및 자기진단 등의 진로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하는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단계는 교육에 지원한 장병을 대상으로 직업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단계로, 대상 장병의 구직역량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희망진로 분야별 직업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지역별로 부대 외부에 마련된 민간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연평균 5,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교육인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병이 희망하는 직종의 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3단계는 1, 2단계를 거친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채용되길 희망하는 기업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로, 정부 유관기관 및 제대군인 채용 우대 기업과 협력하여 실전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맞춤형 취업 과정인 '취업사관학교'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해당 기업이 직접 교육 후 채용전형을 거쳐 취업시키는 '기업맞춤형 취업과정', 직접 부대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매월 운영하여 더 많은 장병들이 직접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진로도움 교육

기업맞춤형 취업과정

중·장기복무자에 대한 전직 및 취업지원

국방부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전직교육체계 개선, 전직지원기간 확대 등 군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직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군 복무설계 교육대상을 기존 대위·중사에서 소위·하사까지 확대하여 임관 이후 군인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스스로 인생목표와 연계한 자기 주도적인 군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전역예정간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상별 '진로교육'[32]과 전직 목표별 '맞춤형 전직기본교육'[33]과정을 운영하고, 기본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화교육과정[34]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역 2년 전부터 진로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모든 중기복무자들이 보다

32) 군 복무 중 개발·향상된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 탐색·수립

33) 중·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의 전직목표(취업·창업·귀농·귀촌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구직역량 향상과정

34) 직무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자격과정 개발 및 맞춤식 교육

체계적으로 전직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중·장기 복무자 전직지원기간에는 진로목표에 맞는 기본교육과 다양한 맞춤형 전문교육(2개 과정 이내)을 제공·이수토록 하여 대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전직지원기간 내에 최대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역 전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각 군의 운영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과 전직 취약계층인 중기 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 군 직무표준화 추진

국방부는 전역예정 장병의 군 경력과 직무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군 관련 일자리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행정·교육·군수 등 비전투분야에서 제대군인 및 민간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를 발굴하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하고 있다.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완화, 군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경비지도사 등 기술자격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병과 및 특기 지정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장병들이 군 경력에 기반한 공공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2022년 9월)

또한, 국방부는 매년 구직장병과 구인기업 간 상호 만남의 장인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2~3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위주의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대규모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박람회를 구현하였다. 장병과 기업의 대면 구직·구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면접과 입사상담을 진행하였고, 장병들은 1:1 현직자 멘토링과 진로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실전 취업역량을 점검하였다. 특히,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여 현장방문이 제한되는 장병들도 온라인으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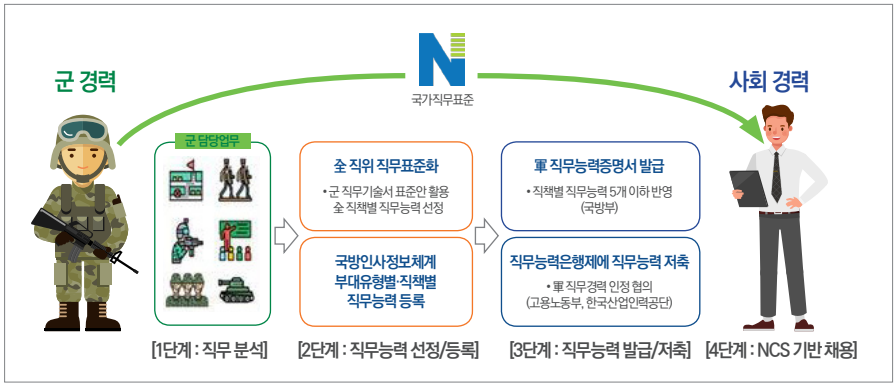
아울러 전역장병 채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국방부장관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기업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초청 간담회 등 유대강화 행사를 통해 장병 취업 촉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35] 체계를 도입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양성·교육·인재채용 정책을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에서는 이러한 NCS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 직무용어가 사회용어와 다르고 NCS와 연계되지 않아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쌓은 제반 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 동종 직무분야에서 복무경력과 직무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NCS에 따라 체계화하고, NCS와 연계된 직무능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하여 해당 경력이 근무경력과 학점으로 학교·기업·국가기술자격검정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군은 NCS에 맞추어 부대별 직책별 능력단위(코드) 설정 및 표준 직무기술서 작성과 관련 DB(Data Base) 구축을 통해 직무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 경력증명서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구축되는 국방부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

[도표 6-11] 군 경력(증명서)의 사회연계 활용 효과



35)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도표 6-12] 군 경력의 사회연계·인정 추진계획

1단계(2019년~2024년)		2단계(2025년~)
군 – 사회 경력연계 기반 구축		군 경력의 사회인정 확대
• 군 직무표준화 추진(직책별 직무능력 선정) • 군 경력증명서 개선/발급 시범적용 • 국방인사정보체계 내 군 직무능력 DB 구축	➡	• 군 직무능력 기반 경력증명서 정식 발급 •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반영·활용 •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 연계 저축

무능력은행제(NCS Bank)와 연계하여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쌓은 교육·자격·경력과 연계된 직무능력을 전역 후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합리적 배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한편 한정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1.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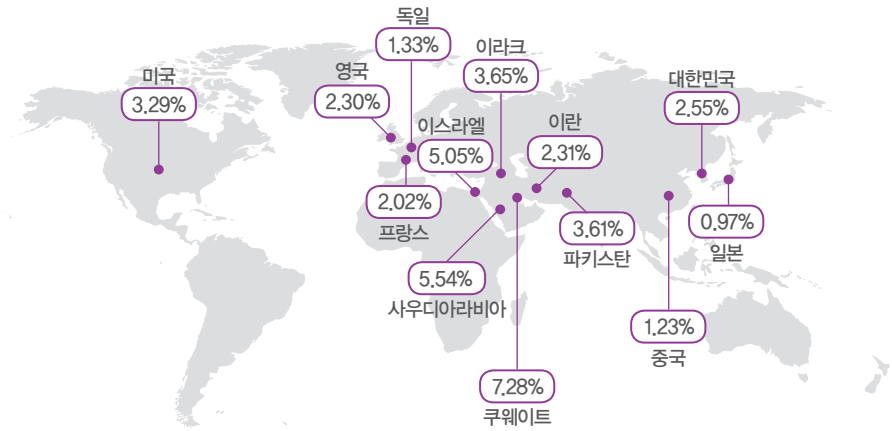
국방예산은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방정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적정 국방예산 규모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유지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국방예산 부담률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의 정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 6-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안보위협이 비교적 낮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예산 부담률은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021년 기준 2.55%로, 세계 평균인 1.85%보다는 높지만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 건설을 통해 국방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전장의 패러다임,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한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도표 6-13]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2021년 기준)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2」(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2월), 대한민국은 정부통계 기준

강화하는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도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전력운영의 필수소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및 미래세대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양적·질적 수요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방위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영환경·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적정 국방예산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참고로, 최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도 국방예산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정부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하는 가운데 안보위협 대응능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한 국방예산은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0.97%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로 증액할 계획이다.[36)]

[도표 6-14] 주요국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구 분	미국(2023)	독일(2022)	프랑스(2022)	호주(2022)	일본(2022)	중국(2022)
정부예산	△1.0%	△19.1%	△0.2%	△1.7%	+0.9%	+8.4%
국방예산	+3.7%	+7.2%	+4.3%	+6.6%	+1.0%	+7.1%

36) 2023~2027년간 43조 엔(2022년 5.4조 엔→2027년 8.9조 엔)의 방위비 확보 추진 (일본 방위력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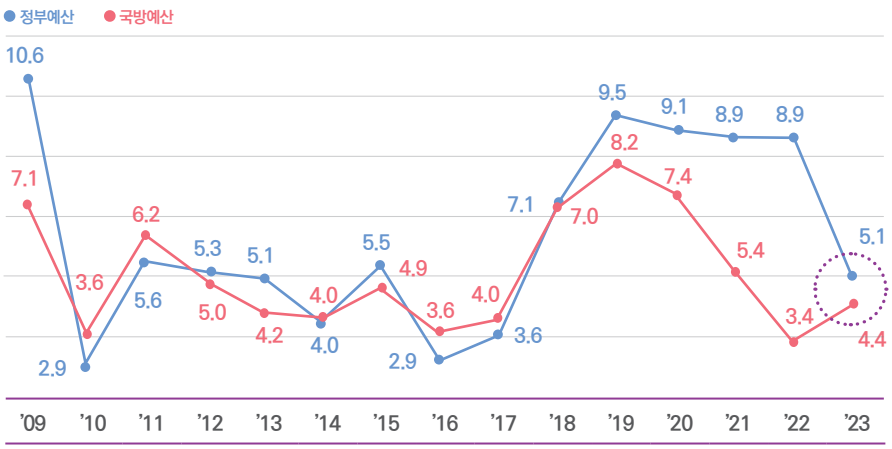
2. 2023년 국방예산

정부의 2023년 예산편성은 고유가·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장기화,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의 억제·대응능력 강화 및 장병복지 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 역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을 국방 분야에 집중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도표 6-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22년 8.9%에서 2023년 5.1%로 대폭 감축되는 상황[37]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2년 3.4%에서 2023년 4.4%로 오히려 확대되었다.[38]

[도표 6-15]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단위 : %



2023년 국방예산은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장병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따뜻한 병영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57조 14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병력과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40조 974억 원,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 국방예산 현황은 [도표 6-16]과 같다.

37) 법률상 의무적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2023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은 1%대에 불과

38) 2023년 정부 중점 투자분야를 국방(+4.4%)과 복지(+3.8%)로 발표(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도표 6-16] 2023년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프로그램	2022년예산(A)	2023년예산(B)	증 감(B-A)	%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	57조 143억 원	2조 4,031억 원	4.4
전력운영비	37조 9,195억 원	40조 974억 원	2조 1,779억 원	5.7
방위력개선비	16조 6,917억 원	16조 9,169억 원	2,252억 원	1.3

2023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하여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에 필요한 핵심전력 확보에 최우선 배분되었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3조 원으로 2022년 4.8조 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F-X 2차,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전쟁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활용하는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및 과학화훈련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동원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마일즈장비 및 영상모의사격장비, 스마트관리체계를 확보하는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편성하였다.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 확대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예산도 중점 반영하였다. 최첨단 무기기술을 확보하고, 수출·전략 무기부품을 국산화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규 및 우수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2023년 국방예산은 장병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 따뜻한 병영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 배분되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방부는 병 봉급과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예산에는 병장 기준 월급 10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2023년 병사들의 계급별 봉급은 [도표 6-17]과 같다. 또한, 단기복무간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50% 인상 반영하였다.[39)]

39) 단기복무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원(부사관 2022년 500만 원→ 2023년 750만 원, 장교 2022년 600만 원 → 2023년 900만 원

[도표 6-17] 2023년 병사 계급별 봉급 인상계획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원	552,100원	610,200원	676,100원
2023년	600,000원 (+89,900원)	680,000원 (+127,900원)	800,000원 (+189,800원)	1,000,000원 (+323,900원)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 및 식기류의 보급과 함께 민간조리원을 증원하여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민과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장병특식'[40] 사업도 신설하였다. 또한,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며, 일반적인 건축 방식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건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모듈러형 건축[41] 방식을 간부숙소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포·포단〉 〈상용이불〉

2023년 침구류 개선

모듈러형 간부숙소 예시

40)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1인당 1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

41)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하여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 투자하였다. 우선, 소대장이 생일축하·체육활동 등 장병 사기진작에 사용하는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하여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주임원사가 부사관 인사관리·병사 고충상담 등에 사용하는 주임원사활동비를 대대 기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주임원사의 원활한 부대원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도 2배로 인상하였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표 6-18] 2023년 소대지휘활동비·주임원사활동비·주택수당 인상현황(월)

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소대원 25명 기준)	주임원사활동비 (대대급 기준)	주택수당
2022년	62,500원	20만 원	8만 원
2023년	125,000원	30만 원	16만 원

3. 2023~2027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이다.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불확실한 국방환경과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엄중한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전력 확보에 최우선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투자하였다.

총 재원 규모는 331.4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8% 증가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107.4조 원(연평균 10.5% 증가율), 병력과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에 224조 원(연평균 5.1% 증가율)을 배분하였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272개 사업에 99.8조 원을 투자하였다.

[도표 6-19]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단위 : 조 원

구분	2022년	대상기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국방비	54.6	57.1	61.4	66.0	70.9	76.0	331.4
(증가율, %)	(3.4)	(4.6)	(7.5)	(7.5)	(7.3)	(7.3)	(6.8)
전력운영비	37.9	40.1	42.9	45.3	47.2	48.5	224.0
(증가율, %)	(5.8)	(5.8)	(6.9)	(5.7)	(4.2)	(3.0)	(5.1)
(점유율, %)	(69.4)	(70.2)	(69.8)	(68.6)	(66.6)	(63.9)	(67.6)
방위력개선비	16.7	17.0	18.5	20.7	23.7	27.5	107.4
(증가율, %)	(△1.8)	(2.0)	(8.8)	(11.8)	(14.2)	(16.1)	(10.5)
(점유율, %)	(30.6)	(29.8)	(30.2)	(31.4)	(33.4)	(36.1)	(32.4)

* 2023년은 정부안 기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주요사업 반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킬체인(Kill 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Kill Chain 능력을 위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3,000톤급 잠수함, 함대지탄도유도탄 등을 확보하여 핵심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KAMD는 중·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어트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복합다층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KMPR은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 개발과 특수부대 침투 및 타격능력을 보강하여 대응능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군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지상·해상·공중 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 영역에서의 통합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전장기능별 전력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지상분야는 종심지역 정밀타격능력과 기동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련장, K계열 전차 및 차륜형장갑차를 배치할 것이다. 해상·상륙분야는 해역함대 첨단 전력화와 대함·대공·대지 전투능력 강화, 사단급 원거리 입체고속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울산급 Batch-Ⅲ, 검독수리-B Batch-Ⅱ, 상륙공격헬기 등이 전력화될 것이다. 공중분야는 방위권역 내 공중우세확보와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능력 제고를 위해 KF-21 전력화, KF-16·F-15K 성능개량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핵심표적 및 군사분계선 이북 주요 감시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정보자산을 고도별로 전력화할 것이다. 또한 병력위주의 전투방식을 탈피하여 전투피해를 최소

화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무인체계(개인전장가시화체계, 무인수색차량 등)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2024년 국방AI센터 창설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간부 1천 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국방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터 확보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으로 국방AI 기반을 적극 갖춰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능형 스마트부대도 지속 확충하여 국방분야에 첨단과학기술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넷째, 국방 R&D 역량 강화,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존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극초음속·우주·양자·무인자율 등 미래전장 운용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신속획득,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기술보호 등 방위산업 육성,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병 봉급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하여 월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도 지속 추진하여 간부 지원율을 제고시키고 처우도 개선할 것이다.

[도표 6-20]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계획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67.6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14.1만 원	30만 원	40만 원	55만 원

또한,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 급식질 제고를 위해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고 현재 6종인 방한복을 4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하여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병영생활관은 병사들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사·여단급 104개 부대에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장병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여건도 개선할 것이다.

끝으로, 군 간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보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형 간부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관사나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에

게는 주거보조비[42]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대지휘활동비와 주임원사활동비 인상을 통해 실소요 대비 부족한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장병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42) 주택수당과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었던 주거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지급 단가를 현실화 반영

이 웅 설
LEE
육군 복무신조

제7장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제1절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

제2절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 및 보상 강화

제3절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

제4절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제1절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들의 의식주는 강군 육성 및 장병 복지의 기본요소로써 국민과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 중심의 선택형 급식체계'의 도입, '피복 및 장구류'의 품질 개선, 안락한 병영생활을 위한 '2~4인실로의 생활관 개선'등의 의식주 개선을 통해 장병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장병 급식 개선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 개선

국방부는 장병 병영생활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의식주 개선(선택형 급식체계로의 전환)'에 근거해 한정된 식재료로 식단을 편성하던 방식에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재료로 식단을 편성하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군 급식 조달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정된 식재료를 100%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조달한 후 식단을 편성하여 실수요자인 장병들의 건강과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 완전경쟁으로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단을 먼저 편성한 후 필요한 식재료를 조달하여 장병들의 기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는 '선택형 급식체계'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식단편성 시 고단가·비선호 품목에 대한 의무급식 제공 규정을 폐지하고, 돈가스, 미트볼, 탕수육, 팝콘치킨, 치킨텐더 등 장병들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 급식 반영 여부 및 횟수 등을 부대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쌀 함유 급식 품목에 대한 의무급식 제공 규정을 폐지하고, 흰우유 의무 제공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대별 장병 선호에 따라 가공우유(초코우유, 딸기우유 등), 두유, 주스 등의 다양한 후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2022년부터 밥과 국, 김치와 반찬 2개로 구성된 1식 4찬 제공 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신세대 장병 취향에 맞는 일품요리 중심의 식사, 국 없는 식단 등 자유로운 식단편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브런치 데이나 병영식당

외 식사(도시락, 푸드트럭 등) 등을 통해 장병들이 희망하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장병이 참여하는 '병영식당 급식운영위원회'를 제대별로 운영하여, 부대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식단편성과 급식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 중심의 급식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급식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기존의 획일적인 식단편성에서 벗어나 사단급 부대에서 자율적인 식단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사단급부대까지 영양사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메뉴에 대한 조리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조식 및 휴일에도 조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증원[1]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조리원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2022년부터 교통보조비(월 7만원)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리병의 조리부담 경감과 휴식 보장을 위해 조리병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부터 조리병 증식비(1일 1,000원)를 신설하여 조리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고 조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븐기, 튀김기, 컨베이어형 토스터 등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병영식당이 단순한 취식장소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병영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리실 개선

병영식당 개선

1) 민간조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 식수인원 80명당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2021년 2,278명에서 2022년 3,188명으로 910명 증원하여, 조리 인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음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 국방부는 장병이 선호하는 급식 품목을 확대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대규모 취사를 하는 18개 군 교육훈련기관 병영식당에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은 급식전문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부족한 조리인력을 대신함으로써 장병들이 병영생활과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성과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별 지휘관의 책임 아래 급양관리관, 영양사 등 급식관리 인력들이 모든 조리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휘관과 간부들이 직접 조리인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급식현장에 참여하여 소통하는 등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도표 7-1]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반기	후반기
1인 1일 기본 급식비	7,855원	8,012원	8,493원	8,790원	11,000원	13,000원
증가율	5.0%	2.0%	6.0%	3.5%	25.1%	18.2%
연간예산	1조 4,974억원	1조 4,531억원	1조 4,325억원	1조 3,990억원	1조 5,538억원	1조 6,663억원

2.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피복 및 개인장구는 장병들의 전투력 발휘와 병영생활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보급품으로 국방부는 품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하기 위해 국내제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2]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군 피복류 조달 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하고, 중소기업인 국내 제조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군은 고기능성의 우수한 피복을 도입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는 국내에 생산시설 기반을 갖춘 중소기업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까지 상생토록 하여 국내 섬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방한피복·방한외피 등 중복된 기능의 다수 피복류(6종)를 고기능성 피복(4종)으로 통합하는 피복 레이어링체계[3]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피복체계에서는 혹한기

2)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방식

에 다수의 방한피복을 착용해야 하므로 착용감 및 활동성이 제한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2021년에는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술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분석을 마쳤다. 향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피복류의 기능 중복을 줄이고 활동성, 쾌적함, 보온력을 향상시켜 장병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 보장을 위해 육군·해병대 침구류(모포, 포단)를 상용 이불류(여름이불, 겨울이불, 패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과거 각 군은 동일한 형태의 침구류를 운영하다가 공군은 1974년부터, 해군은 1999년부터 상용 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하여 해·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전 장병들에게 상용 이불류를 보급[4]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

넷째, 장병들의 전투력 및 생존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장구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수통보다 위생 및 저장량을 개선한 신형 수통의 보급을 시작하였다. 신형 수통은 알루미늄보다 열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입구 부분의 지름을 2배 이상 확대하여 보다 쉽게 세척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또한, 2023년부터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형 방탄헬멧

신형 방탄조끼

신형 수통

한편, 개인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일용품도 다수 보급[5]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선호도와 사용량이 다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6]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지급 품목을 확대하였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지난 3년간 5종으로 고정되었던 현금지급 대상 품목에 스킨과 로션을 추가하면서 월 지급금액도 2020년 7,870원에서 2021년 11,55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개인 선호를 반영하여 개인용품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 대상 품목과 지급금액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복 및 개

3) 'Layering'은 '겹침'의 의미로 '여러층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며, 레이어링 체계는 기상(기온, 바람, 우천), 신체조건(땀, 호흡) 등으로 인한 인간의 열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성 의류 착용 체계를 의미

4) 육군·해병대 총 32만 세트

5) 일용품 : 구두솔, 구두약, 면도기, 면도날, 비누케이스, 샤워타월, 세수비누, 세탁망, 세탁세제, 손톱깎이, 화장지, 칫솔케이스

6) 현금지급 품목 : 세안제,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스킨, 로션

인장구류의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된 피복 및 개인장구류를 조기에 보급하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3. 병영생활관 개선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 (2004~2022년 추진)

병사들에게 쾌적한 병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병영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활관을 단순 병사 수용 공간에서 병사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를 분대단위(8~10명) 침대형 구조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1인당 생활면적을 2.3㎡에서 6.3㎡로 대폭 확대하였고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 위생·편의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하였다.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

국방부는 높아진 국민 생활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병영생활관 내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4인실로 개선되면 1인당 생활면적이 기존 6.3㎡에서 10.78㎡로 확대되어 장병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2~4인 생활실의 시설기준을 정립하였고, 신축 병영생활관 중 3개 동을 대상으로 2~4인 기준 생활실을 실제 설계에 시범 적용하였다.

2023년 54개동을 시작으로 2~4인실로의 병영생활관을 전군으로 확대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사들의 병영시설 환경은 현재보다 현격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대단위 침상형 생활실
(~2003년 까지)

분대단위 침대형 생활실
(2004~2022년 추진)

4인 생활실
(2023년부터 추진)

제2절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 및 보상 강화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2022년까지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였고, 2025년까지는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수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직업군인의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위국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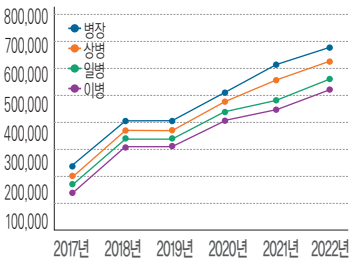
1.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17년 216,0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이 2022년에는 676,1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도표 7-2] 병 봉급 연차적 인상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	30%	-	40%	45%	50%
병 봉급(원)	병장	216,000	405,700	405,700	540,900	608,500	676,100
	상병	195,000	366,200	366,200	488,200	549,200	610,200
	일병	176,400	331,300	331,300	441,700	496,900	552,100
	이병	163,000	306,100	306,100	408,100	459,100	510,100



병사 월 200만원 수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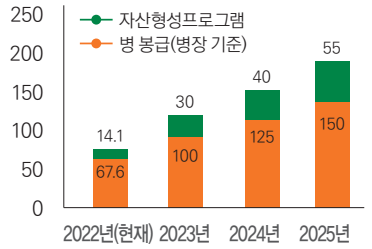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력단절, 경제적 손실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조합하여 병장 기준 월 200만 원 수준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7) 2022년 병 봉급 인상 (2017년 대비) : 병장(216,000원 →676,100원), 상병(195,000원 →610,200원), 일병(176,400원 →552,100원), 이병(163,000원 →510,100원)

이에 따라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8]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9]과 연계하여 시행된 병 자산형성프로그램[10]의 정부지원금을 2022년 최대 14만 원에서 2025년 55만 원까지 확대[11]하여 200만 원 수준 지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도표 7-3]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구분 \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81.7만 원	130만 원	165만 원	205만 원
병 봉급 (병장 기준)	67.6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만 원	30만 원	40만 원	55만 원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전역 시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납입금액과 이자, 정부지원금을 합한 최대 수령액이 2025년 입대자 기준 2,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남으로써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 개선

군인의 봉급과 수당 인상

군 특수성과 작전·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의 대폭 인상,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타 공무원 대비 지급하지 않거나 현실화가 필요한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고, GP·GOP, 도서지역, 잠수함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였으며, 장기간 동결되었던 수당을 인상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수당분야 처우개선은 33건으로 연평균 6건을 개선하였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잠수함 승조경력 4년차부터 승조원들에게 잠수함 승조원 근무기간 동안 약 2,000만 원 수준을 지원하는 연장복무장려수당을 신설하였고, GP·GOP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등 6건의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였다.

8)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 2023년(100만 원)→ 2024년(125만 원 → 2025년(150만 원)

9) 2018년 병 급여 인상 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

10) 병역의무 이행기간(복무기간)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전역) 시 1% 추가 이자와 원리금(납입원금+이자)의 33%를 국가가 직접지원
- (1% 이자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 기본금리(5% 수준)에 추가하여 1%의 이자를 국가재정으로 지원
- (3대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납입액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

11) 자산형성프로그램(병 내일준비지원금) : 2023년(월 최대 30만 원) → 2024년(월 최대 40만 원) → 2025년(월 최대 55만 원)

[도표 7-4] 직업군인 처우개선

구분	처우개선 내용(총 33건)
2018년 (9건)	① 잠수함 승조원(하사~중위) 함정근무수당(월 7~8.5만 원) 인상 ②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기준액 10% 인상 ③ 항공수당 10% 인상 ④ 전투기조종사 비상출동 가산금(1회, 1만 원) 신설 ⑤ 간부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⑥ 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 대상자 확대 ⑦ 유급지원병 장려수당 5만 원 인상 ⑧ 현장감식 및 부검보조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신설(4만 원) ⑨ 특수무기 운용요원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연합사 연합표적기구)
2019년 (8건)	① 유급지원병 보수 지급체계 일반하사 수준으로 개선 ②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250만 원→500만 원) ③ 병 함정출동가산금 인상(3천 원→4천 원) ④ 잠수함 승조자격유지 훈련자 장려수당 지급기간 확대 ⑤ 함정탑재 UAV운용요원 함정근무수당 신설 ⑥ UDT/SSU 피교육생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15만 원) ⑦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 5천 원→1만 원 / 휴일 : 1만 원→2만 원) ⑧ 병 휴가 전역여비 인상
2020년 (6건)	①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 ②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수당 10% 인상 ③ 수송기 동승장교 항공수당 인상 ④ E-737 항공통제장교 항공수당 인상 ⑤ 공군 조종사 자격유지비행 훈련자 지급대상 확대 ⑥ 전투함 승조원 함정근무수당 5% 인상
2021년 (4건)	① 영상 및 판독업무요원 장려수당 지급(월 8~13만 원) ② 잠수함 승조원 출동가산금 인상(1일 출동시 1만 원→3만 원) ③ 챔버운용 잠수의무병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7만 원) ④ F-35 정보체계 전담인력 장려수당 지급(월 8~12만 원)
2022년 (6건)	①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5천 원~1만 원) 인상 ②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승조경력 4년차부터 월 30~50만 원) ③ 무인기조종사(글로벌 호크) 장려수당 신설(월 18만 원) ④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임기제부사관까지 확대 ⑤ 해상시설물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⑥ 특수장비 운용요원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년에는 2023년 처우개선 사항으로 주택수당을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및 수당을 50% 인상, 직책별 임무수행 여건 개선을 위해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월 6.25만 원에서 월 12.5만 원으로 2배 인상, 제대별 월 20~30만 원인 주임원사 활동비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휴일·야간근무수당 지급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군 특수성과 작전 및 근무환경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 수준의 군인 수당 개선을 추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주거지원 개선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보장은 삶의 기본요소이자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써, 「군인복지기본법」에 군 주거지원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군 주거지원 정책은 군인이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지원 발전이 군 복무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2020년에 군 주거정책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사회환경 변화,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급간부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다. 숙소 부족으로 '다인 1실'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인 가구형' 간부숙소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최대물량인 6천 4백여 호를 반영하여 개선하였고, 간부숙소에 제공되는 비품을 확대하여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를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32평)의 '국민평형'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하여, 2023년 신축되는 물량부터 국민평형 면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 소요의 기초가 되는 부대별 정원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검증하여 주거 소요 산출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무원의 정원 증가, 군인 임무대체 등으로 군무원 주거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급등한 주택가격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3천만 원에서 22년 1억8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상환유예제도를 확대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더라도 자녀교육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주거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거시설 운영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대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관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군인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 선정방식을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에서 국방부가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각 군이 부대별 특성에 맞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주거지원 서비스가 유기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지원 정보체계가 선진화되고,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군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 거주와 잦은 전학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군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격오지 근무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EBS 및 LG U+ 등 교육전문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교육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EBS와 협업을 통해 시행 중인 격오지 군인자녀 교육멘토링 지원 대상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군인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민간 장학재단과 연계한 군인자녀 장학사업 확대 등 직업군인이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군인연금제도 발전

군인연금제도 의미 및 특성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전투나 위험한 직무 훈련에 참가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격오지나 전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전 임무나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계급별 연령정년으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은 연금의 기본적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회 보험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 대상자인 일반직 공무원, 교원·경찰·소방 등의 타 특정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비해 조기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 보장,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군인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 개선 국방부는 전역 군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을 식별하여 군인연금법에 반영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6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보장하였고, 실효적인 군인연금 수급권 보호와 생계기본권 보장을 위해 채권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 범위(185만원) 내의 연금 압류를 차단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였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군인연금 전부 지급정지제도 운영 중 기초의회 의원의 보수가 군인연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4. 위국헌신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는 예우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추서)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를 추서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에게 추서 진급을 허용한 규정의 취지에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급여,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전사·순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적 존중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확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남겨진 호국용사 유해를 찾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국가 차원의 호국보훈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0년 육군에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 1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창설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에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

한 업무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12개 정부 부처[12]가 참여하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소재확인,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대국민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30여개 사·여단에서 연간 10만여 명(일일 평균 900여 명)을 40여개 지역에 투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총 13,131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2019년 3월부터 시작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은 '화살머리고지' 사업을 2021년 6월부로 종료하고, 같은 해 9월부터 '백마고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은 [도표 7-5]와 같다.

[도표 7-5]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구

구분	계	2000~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굴유해	13,147	9,671	623	435	420	356	551	511	363	217

* 비무장지대(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발굴유해 424구 포함

백마고지 발굴유해

백마고지 약식제례

백마고지 유해발굴

12) 국무조정실,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경찰청

13) 경북 청도군(3.8.~12./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경북·대구·경남 진해구(6.1.~30./육군 50사단,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경남·부산·울산(10.1.~31./육군 39사단)

국방부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량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총 86,575개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였다.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재향군인회 등이 협업하여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군과 지자체의 탐문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특정 지역(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에 대한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13]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1년에만 1만 여개 이상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에는 경기·인천·제주·충청·강원지역에 대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현황

및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군-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현황은 [도표 7-6] 및 [도표 7-7]과 같다.

[도표 7-6] 연도별 유가족 DNA 시료확보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200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료확보	86,575	32,160	4,041	4,072	4,155	8,936	8,973	12,959	11,279

[도표 7-7] 2021~2022년 군-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유가족 DNA 시료확보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경북·대구·경남 진해	경남·부산·울산	경기·인천·제주·충청·강원
시료확보	4,196	1,731	1,690	775

국방부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유전자분석 관련 조직을 개편[14]하여 신원확인 업무를 국유단으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국유단 내 신원확인센터[15]를 개소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 전 과정(보관→감식→유전자분석)을 단일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신원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국유단 개편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66구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신원확인 결과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신원확인센터는 2023년을 목표로 국제공인인정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신원확인 현황은 [도표 7-8]과 같다.

[도표 7-8] 연도별 신원확인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구

구분	계	2000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원확인	204	109	9	9	4	7	19	24	23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매년 한미 유해발굴 연례회의와 공동감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미국에 모셔져 있던 국군전사자의 유해 총 307구를 국내로 봉환하였고 미군유해 26구를 발견 후 미측으로 봉송하는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는 물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정부 의지를 구현하였다. 한·미의 상호 유해봉환 현황은 [도표 7-9]와 같다.

14) 2020년 1월, 국방부 조사본부 유전자과를 국유단으로 소속 변경

15) 신원확인센터(2021.3.24. 개소)는 유해의 감식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제반 신원확인 과정을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유해보관실, 유해감식실, 유전자검사/분석실 등으로 구성

[도표 7-9] 한·미 상호 유해봉환 현황

단위 : 구

구분	계	2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군유해 국내 봉환	307	27	0	65	0	147	68	0
미군유해 미측 봉송	26	12	1	2	0	5	6	0

지자체 연계 홍보

민간은행 협력 홍보

또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실종자 신원확인 협력을 위해 6개 참전국과의 양해각서(MOU)[16]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신원이 확인된 영국군 유해 3구를 최초로 유엔군 묘지에 안장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부터 한·중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913구를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민·관·군의 노력을 통합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기법의 현대화, 국민 참여 확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2022년 9월)

중국군 유해 인도식 (2022년 9월)

16) MOU 체결 국가 : 미국(2000년), 벨기에(2015년), 호주(2019년), 네덜란드(2020년), 캐나다·콜롬비아(2021년)

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더불어, 연간 약 5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약 12만여 구의 미수습유해 전체를 발굴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국토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6·25참전용사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에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현실적인 한계와 극복 방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미래 유해발굴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군인 재해보상 강화

국방부는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3월 국방부에 군인 재해보상 정책을 전담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하였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사망보상금을 인상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였다.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경우 일반장애보다 각각 2.5배, 1.88배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간부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등 재해보상 수준을 대폭 현실화하였다.

2022년 2월 흉터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던 남성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은 1994년 7월부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되어왔음에 반해, 남성은 2006년 10월부터 지급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이전에 흉터 장해가 발생한 남성은 경과규정이 없어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성별 간 불평등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현역장병에 대한 전직지원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지원, 일자리 발굴·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민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과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보훈특별고용 추천,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대부지원, 의료지원,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에 전직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2년에 장기복무자는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중기복무자는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민간 구직급여의 50%인 99만 원까지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구직급여에 상응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21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여 2022년에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서울시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 농협·신한·SC제일은행 여신금리 우대 등 9개 인센티브를 발굴하였다. 앞으로도 기업이 선호하는 우대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에서는 공식행사에 이어 토크쇼를 진행하여 직접 제대군인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제대군인 주간 동안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온라인 취업박람회, 제대군인 초청 홈커밍데이(부대개방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리스펙)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스펙 재설계)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리:스펙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하였다.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2022년 10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2022년 10월)

아울러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3절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

국방부와 군은 병영 내 악성사고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엄정한 기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장병들의 자율과 인권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1.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문화 정착

병영문화 혁신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병 휴대전화 사용, 외출 및 휴가제도 개선 등)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내 군무이탈이 감소[17] 추세이고, 장병 군 생활 여건 개선 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은 수준[18]이다. 하지만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군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인해 병영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6월에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의식주를 포함한 복무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국방부와 군은 권고내용을 구체화(추진개념, 시기 등)하여, 102개의 과제를 도출하였고, 지속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군인복무기본정책서」 등 법률상의 인권·복무정책에 주요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가안보 수호와 국토방위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엄정한 기강 유지와 장병 기본권 보장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며, 장병의 창의적인 생각이 존중되는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성숙하게 책임지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7) 군무이탈 건수는 2011년 705건에서 2021년 73건으로 감소

18) 2021년 KIDA 정기조사(국방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병의 군 생활 여건 개선 정도에 대해 3년 간 긍정적 평가가 90% 이상 높은 수준 유지 (2019년 93.9%, 2020년 94.4%, 2021년 90.1%)

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우리 군은 '안전하고, 공정하며, 사기 높은 병영환경·문화 구축'을 목표로 군 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 선발 현장점검 등 현장 확인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병사 스스로 규율을 지키며 자정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병 자치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에서는 병 자치위원회인 '으뜸병사제'를 2005년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해군에서도 2022년부터 '대표수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육군과 해병대도 특성에 맞는 병 자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를 선발해 포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병 자치위원회(공군 으뜸병사제)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

국방부는 2020년 7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은 의무복무에 따른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대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대 전투력 향상과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강좌 수강, 자격증 취득, 취·창업 정보 획득 등 자기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전하고 생산적인 병영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가·외출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감염병 정보 검색, 온라인 종교예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원격심리상담, 가족·친구들과의 영상통화 등은 병사들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병 휴대전화 사용 모습(자기개발,외부와의 소통)

한편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사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칙 위반행위 등을 세분화하고 위반 시 합당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시행과 함께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영내 사진 촬영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개발하여 간부와 병을 포함한 전 장병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의 유혹으로부터 장병을 지키기 위해 군 외부의 전문기관과 함께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군 전문교관을 양성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의 적절한 범위를 판단하고,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및 휴가제도 개선

국방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일과 외 시간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을 2019년 2월 전면 시행하였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별 월 2회 이내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결 활동, 병원 진료, 가족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병사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 부대원 단합, 군 생활 만족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한편, 2021년부터 병사도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직접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휴가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병 스스로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부대 지휘관에게 신청하고 승인받는 등의 절차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장병의 휴식권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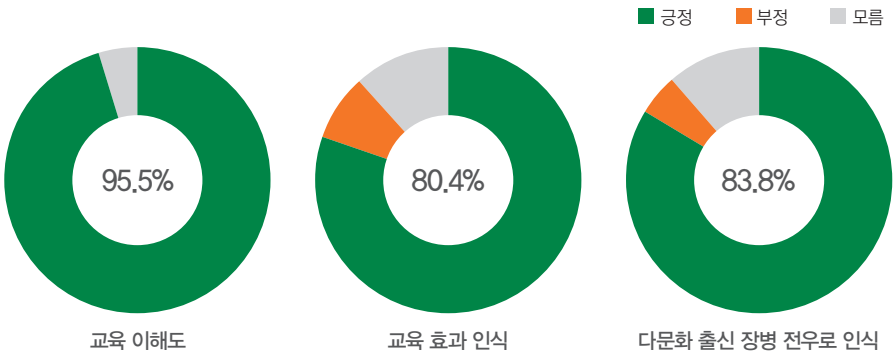
평일 일과 후 외출 중인 병사

19) 2019년 KIDA 정기조사(장병 의식 및 생활 조사) 결과,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스트레스 해소(90.5%), 고립감 해소(89.6%), 부대원 간의 단합(89.1%), 군 생활 만족정도(89.6%)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고, 평일 일과 후 외출에 대해 5명 중 4명 정도(79.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2000년 21만여 명에서 2022년 114만여 명으로 증가[20] 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군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다문화 가정 장병 등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다문화 이해교육 등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사유 등으로 특정 음식(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취식하기 어려운 장병을 위해 두부, 야채, 계란후라이 등 대체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종교를 믿는 장병들이 부대 시설이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장병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도표 7-10] 다문화 관련 교육 이해도·효과 등 장병 인식도 조사



*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1)

2. 인격과 생명존중의 문화 확산

자살 예방 활동 강화

우리 군은 소중한 장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장병들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21]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각 군별 맞춤형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콘텐츠[22]를 제작하고 자살 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해 반기 1회 이상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군 복무 적응을 지원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관리-분리'의 3단계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무청,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정신적 어려움 등 복무 부적응으로 조기 전역한 장병이 전역 후에도 심리지원·복지서비스·취업 알선을 포함한 사회보장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

20)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명시된 등록외국인 현황 : 2000년 210,249명, 2022년 9월 1,143,696명

21)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지원하는 사람

22) 자살 위험자들의 자살 징후를 '보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에게 조언해줄 수 있도록 '말하는' 교육콘텐츠

록 하였다. 최근에는 군내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지킴이 포스터 및 수기 공모, 민·군 합동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자살의 위험을 일깨우고, 자살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생명존중문화 발전 세미나(육군)

국방부는 자살 예방 전문교관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전문교관들은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 특성에 맞는 영상제작, 역할극,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 자살 예방 교육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며, 동료·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도표 7-11] 자살 예방 전문교관 연도별 양성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원	534	653	664	668	822	650	808	377	413	516

*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제한되어 양성 인원 일부 감소

장병 고충 해소

국방부와 군은 장병들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군 생활에서의 고충을 식별하여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한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병영환경과 단체생활로 고충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복무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4단계[23]로 실시하고, 장병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대대급까지 확대하여 배치하였으며, 고충을 겪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유를 위한 '그린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고충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국방헬프콜' 센터 상담창구와 소원 수리제도, '군인권지키미' 등 각종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고충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2021년까지 초급간부 대상으로 실시하던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는 모든 간부 및 군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고충처리 창구인 '국방헬프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23) 정신과적 문제, 복무부적응 가능성을 1차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과학적 도구로 병역판정 시 복무 적합도 검사(1단계), 입영신검 시 복무 적합도 검사(2단계), 신병교육 시 군 생활 적응 검사(3단계), 자대복무 시 복무적응 및 관계유형 검사(4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국방헬프콜센터

[도표 7-12] 국방헬프콜센터 연도별 일일 평균 상담 건수

2022년 12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담 건수	47	111	159	176	170	134	159	155	139

* 2018년 9월 1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 공개상담은 중단

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인성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장병 고충의 적시 해소를 위한 상담 시스템 강화 및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올바른 언어사용 활성화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이 군내 각종 사건·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우리 군은 병영 내 올바른 언어사용을 생활화하여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활성화를 위해 병영 언어지침서와 병영 언어순화 만화책을 발간하는 등 병영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병영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언어 사용 문화를 형성하고, 비속어 사용이 많은 언어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밝은 병영문화는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병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다.

3.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기반 조성

국방부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 등 양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 성인지 통계집'을 매년 발간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8~2022 여군인력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군 간부(장교·부사관) 중 여군의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22년에는 9.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1년도에는 해병대 보병대대장, 공군 특수탐색구조대대장, 육군 DMZ 작전팀장, 2022년도에는 해안감시기동대대장 등 다양한 직위에 여군이 최초 보직되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병역자원 획득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여군인력 15.3%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3~2027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8월에는 육아휴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를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 직위에 최우선으로 보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군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직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여성 필수시설 확충

국방부는 여군 초임획득·장기복무 선발확대로 인한 여군 인력의 증가와 민간직위 확대에 따른 여성 군무원 및 여성 근로자 증가를 반영하여 각 군에 화장실, 샤워실 등 여성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19년 여군 필수시설 전수조사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부족소요를 파악하여 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대 내에 여성 필수시설 54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19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향후에도 여성 인력의 확대를 고려하여 필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감으로써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국방부는 군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별로 계층별, 신분별 토의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양성평등 소통 자치협의체'를 도입하여 상호이해와 소통을 도모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는 군별 대표성을 갖는 사단급 부대를 각 1개씩 선정하여, 부대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코칭을 해주는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군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령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인지 수준 평가'를 2022년 후반기부터는 각 군별 상황에 맞게 지휘관급, 부사관급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중견간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장병과 군무원들이 내실있는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표준교안, 원격교육 동영상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였고, 성인지교육 군 전담교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2021년 330명에서 2022년 50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및 각 군별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 장병 및 군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국방부는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모성보호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에는 육아휴직과 불(난)임 휴직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만 12세 이하 장애 자녀에 대한 탄력근무를 만 19세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자녀돌봄휴가의 적용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허용일수도 연간 2~3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다. 2022년에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임신·출산 여성인력의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비상시 부부 군인·군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난임시 치료시술휴가를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은 2022년 말 기준 군 어린이집 159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야간훈련, 비상소집 등으로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

군 어린이집

원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의 보육여건이 열악한 전방 및 격오지 군부대에 군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등 군인 및 군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국방부와 군은 병영 내 악성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출범한 군인권개선추진단 주도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여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1.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

군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보호 제도 개선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 복무주기와 부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지휘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대별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교육, 의료·수사·교정·법무·훈육 등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인권교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교육 활성화 및 장병 참여형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부대별 장병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장병 인권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군 인권 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법령·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만 실시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정책·제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였고, 장병들이 손쉽게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군인권지키미시스템[24]을 운영 중이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방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병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각 군 본부의 군인권자문위원회, 사단급 부대의 군인권자문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국방인권모니터단이 분야별 인권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24) 장병들이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발생 시 상담·진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를 시스템으로 확인

*상담 및 진정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인트라넷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군인권지키미시스템' 이용
인터넷 : 국방부 홈페이지 →주요정보 바로가기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 및 진정' 클릭
인트라넷 : 국방허브 → 상담/제안→군인권지키미→'인권상담 및 진정' 클릭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의료지원방식 효율화와 급식 관리체계 개선요청 등 다양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일선 부대의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방문의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고 방문대상을 10개 부대에서 30개 부대로 늘리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반 강화

국방부는 2022년 2월 '군인권개선추진단'[25]을 신설하여 과거 인사, 복지, 법무 등 분야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하던 인권 정책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의식주와 복무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장병 인권보장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독립적인 군내 인권침해 조사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이 설치되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이 군의 임무 수행 여건과 군사보안이 보장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유가족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유가족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5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하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자와 그 유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군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수사교육원 창설 준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수사연수원 실무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2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정책과와 인사복지실 양성평등정책과, 병영문화혁신팀을 통합하여 군인권총괄담당관실,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양성평등정책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여 차관직속으로 신설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군인과 군무원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수사 및 재판권을 민간경찰로 이관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장병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2.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우리 군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휘관 주도 아래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을 하달하여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20년부터 성인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인지력 향상과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에 양성평등 분야를 추가 편성하였다. 의무교육으로 소집교육과 원격교육을 각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소집교육 중 전문강사에 의한 토의식 소집교육 대상자에 영관장교 이상·주임원(상)사 이외 5급 이상 군무원을 추가 대상자로 편성하여 관리자 집단의 성인지력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취약시기를 고려하여 하절기·연말연시 성폭력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지휘관 주관 성폭력 예방관련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교육을 통해 전 장병의 경각심 고취 및 성 관련 사건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다.

군내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정책 정착을 위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전·후반기 야전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방문 간 각 군의 이행실태 확인과 지휘관 및 주요직위자 간담회, 5년차 미만 여성인력 간담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계자 간담회, 남·여 부대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부대별 성인지력 수준을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여건을 점검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 주기 표본조사로 시행하던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매년 모든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21년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과제인 성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총괄 예방·관리·대응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의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과 각 군 성고

충예방대응센터가 신설되었다.

피해자 보호 2021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15개의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이 중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 의료지원, 인사조치, 법률조언 등 피해자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2021년 9월부로 시행하였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하여 '2차 피해' 정의 및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상담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021년 군단급 제대 50명에서 2023년까지 사단급 제대 150명으로 확대 예정이며, 그에 따라 독립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피해자의 조기 일상회복을 위해 성폭력 피해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채널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고율 제고를 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신고앱'과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수립을 위한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군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구성원의 인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군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3.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운영

군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방부는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8년 2월 군 사법 개혁안을 마련하고, 2019년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고, 1심 군사법원을 각 군에서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등 군사법원 및 군 수사기관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법 개정과 별도로 시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2019년 3월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이나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및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

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영장 없는 인신 구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군사경찰의 적법한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 일선 지휘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독립적인 수사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속의 수사단을 창설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군사법원법」 개정

2022년 7월 1일 새로운 군사법제도가 반영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었다. 장병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소심 기능을 고등군사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는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평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 지휘관의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폐지하고, 군판사를 별도로 선발 및 운영하는 동시에 그 신분을 보장하며, 그 밖에 각 군의 1심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으로 개편하고, 장성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여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등 군 수사기관의 수사 및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도표 7-13]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형사절차 이원화

군인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이원화에 따른 적용 법률 비교

구분	기관명	적용법률
3심	대법원	군사법원법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심	보통군사법원	
수사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절차 개정
형사절차 이원화

구분	군사법원 재판권 있는 범죄		민간이관 범죄	
	기관명	적용법률	기관명	적용법률
3심	대법원	군사법원법	대법원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1심	군사법원		지방법원 (형사부)	
수사	군검사		검사(기소)	
	군사법경찰관		경찰	

군 사법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군사법기관의 임무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2022년 3월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간 협력 의무를 구체화하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범죄 등 민간으로 이관되는

범죄에 대한 민·군 수사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병역과 인권이 조화된 대체역[26] 복무제도 시행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27]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28일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을 담은 대체복무 법률 제정안을 2019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6월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대체역 편입 심사를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였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말까지 총 64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편입신청 2,989건 중 2,684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군 복무 거부 신념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 결정한 5건, 서류 미보완으로 각하 결정한 6건을 제외한 2,673건을 인용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을 2020년 106명, 2021년 545명, 2022년 403명으로 결정하였다. 병무청은 대체역 제도가 2020년 1월 도입된 이후 2020년 10월 최초로 63명을 소집하였으며, 2022년 12월 말까지 총 1,070명을 소집하였다. 이들은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기본·직무교육을 받은 후 교도소, 구치소 등 19개의 대체복무기관으로 배치되어 36개월 간 합숙하면서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차질 없는 의무부과와 엄정한 복무관리로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당당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병역의무와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조화된 대체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6)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27)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협력하여 휴대전화 할인요금제, 어학시험 응시료 할인 등 현역병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대체복무요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및 복무 만료 후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복무 중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튼튼한 국방
제74주년 국군의 날
THE 74TH ROK ARMED FORCES DAY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2022년 10월)

부록

특별부록

1.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2.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3.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4.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 현황
3.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4. 남북 군사력 현황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8.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평가
9.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12.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
13.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유형
14.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5.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6.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3. 국방기구도
24.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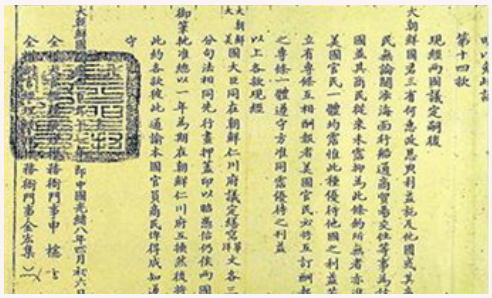
1871 ~ 1950.1. 한미관계의 태동

1871년 미국의 통상 요구로 한미관계가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동맹관계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한미 군사관계의 맹아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71.6.1.	1882.5.22.	1945.8.15.	1945.9.8.	1948.8.15.	1949.6.29.	1950.1.12.
신미양요	「조미수호통상조약」	2차 세계대전 종전	美24군단 인천 진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주한미군 철수	애치슨라인 발표

신미양요(1871.6.1.~6.11.) 당시 미 극동함대 콜로라도호

한미관계의 시작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년)으로 비롯된 신미양요다. 당시 미국은 콜로라도호를 비롯하여 호위함 3척, 포함 2척, 병력 1,230명을 조선에 파견하여 통상을 요구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조선이 서구 열강과 최초로 맺은 근대식 조약이다. 본 조약에 따라 조선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한반도 진주와 철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미 육군성의 한국 점령계획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11월까지 남한지역에 7만여 명의 미군을 전개시켜 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미국은 종전 후 급속한 병력감축을 단행하면서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해외주둔 병력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1947년 4월 29일 미 합참 합동전략조사위원회 (JSSC : Joint Strategy Survey Committee)의 보고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본 타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서 한국 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 같은 전략 평가에 기초하여 미 군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도서변방전략 (Island Perimeter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이 전략은 이후 1950년 '에치슨 선언'으로 공표되었다.

미국은 1948년 4월 8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한국에 대해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회의 문서 8호 (NSC8)를 채택하였다. 1949년 3월 22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시한을 1949년 6월 말로 조정하고 한국에 보다 많은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수정 문서 (NSC 8/2)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3만 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 철수를 개시, 이듬해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KMAG :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479명 (인가 병력)만 남기고 철수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당시 소련의 지원하에 꾸준히 군사력을 확충해온 북한에 비해 남한은 적정한 수준의 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철수하는 미군들 (1949.6.29.)

미국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남한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남한에는 479명의 군사고문단만이 잔류하게 된다.

애치슨라인 (1950.1.12.)

딘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에서의 위기'에 대해 연설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면서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 ~ 1953 미국의 6·25 전쟁 참전과 한미동맹 성립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등 16개 참전국 포함 총 63개 지원국의 도움에 힘입어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 후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되었다.

1950.6.25.	1950.6.30.	1950.7.1.~7.4	1950.7.14.	1951.7.10.	1953.7.27.	1953.10.1.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 발발	트루먼 대통령 지상군 투입 승인	미 24사단 전개	국군 작전지휘권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발효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 * 한미동맹 공식 출범

6·25 전쟁 일지

일 자	주요 내용
1950.6.25.	북한군 남침 - 미국, 즉각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 - 한국 정부, 미국에 군사원조 요청
6.27.	유엔안보리, 대북한 군사 제재 및 한국 군사 지원 결의
6.30.	트루먼 미 대통령, 미 지상군 한국 출동 명령
7.3.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 미 해병대 한국 출동 명령
7.7.	유엔안보리, 유엔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 채택
7.8.	트루먼 대통령, 유엔군 총사령관에 맥아더 원수 임명
7.14.	이승만 대통령,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
8.1.~9.14.	낙동강 방어선 전투
9.15.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
9.28.	유엔군, 서울 수복
10.19.	유엔군, 평양 점령
10.26.	유엔군, 압록강 도달
1951.1.15.	중공군, 서울 점령
3.15.	유엔군, 서울 재수복
4.11.	유엔군 총사령관에 리지웨이 중장 임명
1952.5.11.	유엔군 총사령관에 클라크 장군 임명
12.2.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 방한, 전투지역 시찰
1953.7.12.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합의
7.27.	「정전협정」 체결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953.8.8.)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부장관이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고 있다. 정식 조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동 조약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공동으로 방위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1950.8.1.~9.14.)

인천 상륙작전(1950.9.15.)

유엔군 진격 상황도(1950.10.)

6·25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

- 전사자 36,940명
- 부상자 92,134명
- 실 종 3,737명
- 포 로 4,439명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1.)

6.25 전쟁 중 한반도의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원했던 미국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하는 대가로 휴전 이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공식 출현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1954 ~ 1968 미국의 군사 원조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맺어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한미관계는 지원-피지원 관계였다.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한미 군사관계는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1954.11.17.	1961.11.14.	1964.5.8.	1964.9.22.	1967.2.9.	1968.4.17.~28.	1968.5.27.~28.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 채택	박정희 의장-케네디 대통령 정상회담	미국, 한국에 베트남전 지원 요청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개시	「주한미군지위협정」 발효	박정희 대통령-존슨 대통령 정상회담	1차 한미 국방 각료 회담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 조인 (1954.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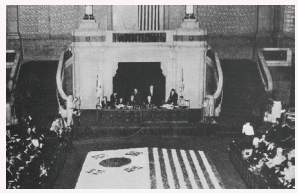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브릭스 주한 미 대사 간에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은 미국이 한국에 1955년도 회계연도에 4억 2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와 2억 8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10개 예비 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 및 약 100대의 제트 전투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권하에 둔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동 의사록의 조인으로 한국은 총 70여만 명의 국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50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군사원조는 군원계획(MAP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54억 7,000만 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 Training) 1억 7,000만 달러이며, 유상 군원은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50억 5,000만 달러, 상용판매 14억 3,000만 달러, FMS차관 2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박정희 의장 – 케네디 대통령 정상회담 (1961.11.17.)

1961년 5월 16일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케네디는 1963년 민정 이양 약속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최대한의 경제원조를 약속했다. 또한,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즉각' 제공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비둘기 부대 출국 환송식(1965.2.9.)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1964~1973)

미국은 베트남전에 깊이 개입하면서 1964년 5월 한국 등 자유 우방 25개국에 베트남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1964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1964년 9월 1차 파병 이후 1966년 4차 파병까지 지속적 증원으로 한국군 파병 병력은 약 4만 8천여 명에 달했으며, 1973년 베트남전쟁 종식을 위한 「 파리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전투경험을 축적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공공·상업 차관의 도입, 미국의 군원 이관 중지, 주한미군 계속 주둔, 대미 수출 증가, 베트남 시장에서의 외화획득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호놀룰루 한미 정상회담 (1968.4.17.)

1968년 북한에 의한 청와대 습격(1.21.)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23.) 등이 발생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호놀룰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안전보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동년 5월 워싱턴에서 1차 한미 국방각료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한·미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었으며, 71년 4차 회의 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행정협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협정은 전문과 본문 31개 조 이외에도 합의 의사록, 합의 양해각서 및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 시 필요한 토지, 시설, 출입국 관리, 통관과 관세, 형사재판권 등 양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69 ~ 1979 자주국방 모색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부대 창설 및 율곡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연합군사령부 창설로 이어져 실질적으로는 한미 군사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69.7.25.	1971.3.27.	1971.7.12.~13	1973.3.29.	1976.8.18.	1977.3.9.	1978.11.7.	1979.7.1
「닉슨 독트린」 발표	미 7사단 철수	제4차 안보협의회의	주월 한국군 베트남 철수 완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 발표	한미 연합 사령부 창설(CFC)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계속 주둔 언명

「닉슨 독트린」 발표 (1969.7.25.)

닉슨 행정부의 대외 및 군사 정책 기조는 「닉슨 독트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시키려는 「닉슨 독트린」은 1970년 외교백서를 통하여 "어떤 나라의 국방,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 없다.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서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우방국이 핵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군사 및 경제적 원조만 제공하며, 당사국은 미 지상군 병력을 기대하지 말고 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천명했다.

미 정부는 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권고에 따라 1971년 6월까지 아시아에서 총 42만 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하고, 그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2만 명의 미군을 철수하고 동시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2월,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의 조건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 육군 7사단을 비롯한 2만 명의 병력이 철수하였다.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레어드 미 국방부장관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1971.7.12.~13. 서울)

한미 국방각료회담이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칭되어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연합방위태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CFC :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 (1978.11.7.)

CFC창설과 더불어 「전략지시 1호」에 의거, 연합군 사령관은 구성군 사령부를 통해 한미 양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F-4D 팬텀 전폭기 도입 (1969.9.28.)

1·21사태를 계기로 1968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69년도에 F-4D 18대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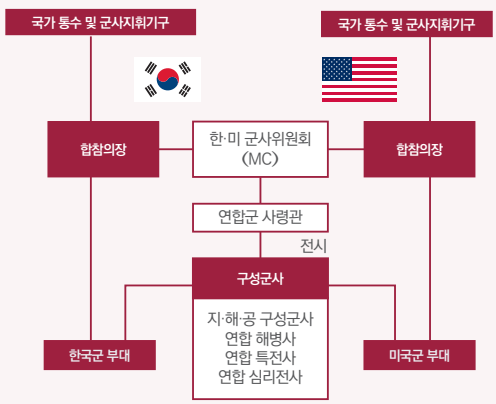
〈미 제7사단 이한 행사〉 (1971.3.27./서울 용산 제8군 연병장)

미 제7사단 철수 (1971.3.27.)

1971년 미 7사단 2만 명의 병력이 철수하였다.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 공수기동훈련인 포커스레티나 훈련과 프리덤 볼트 훈련을 강화하고, 현존 전력의 공백 보완을 위해 1971년 7월 1일 한미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 발표 (1977.3.9.)

당시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1단계(1978~1979)에서는 미 제2사단 1개 여단과 기타 지원병력 등 6천 명을 철수하고, 2단계(~1980.6.)에서는 보급 및 지원 병력 등 9천 명을, 그리고 3단계(1981~1982)에서는 남은 2개 여단과 사단본부를 철수시키되, 공군전력과 정보·통신부대는 계속 주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1978년까지 3,400명의 병력이 철수하였으나,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전면 취소되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의 한미동맹 지휘체계

1980 ~ 1992 동맹의 재결속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미 간 군수지원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미 군사관계는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1981.1.28.	1988.6.8.	1989.8.2.	1990.4.19.	1990.3.24.	1990.11.13.	1991.12.25.	1991.12.31.
전두환 대통령 방미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	미 의회 「넌-워너 수정안」 채택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구상(EASI) 보고	환태평양훈련 최초 참가	제22차 SCM, 방위비 분담금 최초 합의	소비에트연방 해체, 탈냉전시대 도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대미 외교 강화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월과 1985년 4월, 2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하고, 1983년 11월에는 레이건 미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하여 3차례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시 대비 한미 군수지원체계 정립

1) 전시주둔국지원(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위기 또는 전쟁 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군의 접수와 이동 및 전쟁지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1985년 제1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되어 1987년 제19차 SCM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1991년 제23차 SCM에서 「전시지원일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93년에는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강령」을 체결하였다.

2) 전쟁예비물자(WR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전쟁예비물자'란 미국이 동맹국 내 비축한 전쟁물자를 말하며, '소요 부족품 목록'(CRDL : 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은 미군의 평시 운영 재고 또는 전쟁 예비 물자 중에서 WRSA로 지정된 물자 이외에 동맹국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방위물자를 말한다. 미국 소유 전쟁물자의 한국 판매 관련 협의는 각각 1982년, 1984년에 한미 국방장관 간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판매의 경우 미 의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 초기에 한국군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 적시에 보충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3)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전·평시 연합 연습 및 훈련, 작전 및 합동 임무기간 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소요 발생 시 한·미 양국 간 상호 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1988년 한미 국방장관 간 체결한 협정이다.
상호 군수지원의 절차는 어느 일방의 요청 시 지원하고, 사후에 동종의 물자, 용역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보급품, 용역 등이다.

「넌-워너 수정안」과 '동아시아 전략구상'

1) 넌-워너 수정안(Nunn-Warner Amendment)
1989년 7월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이 법안은 ① 미국은 동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주둔 군사력의 위치, 전력구조, 임무를 재평가하고, ② 한국은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③ 한·미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군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에 주한미군에 관한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4월까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2)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1990년 4월, 미 국방부는 상원에서 통과된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EASI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EASI의 핵심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구소련에 의한 안보위협의 감소, 국방예산의 삭감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아·태지역에서의 주둔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하고 우리 정부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미 군사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환태평양훈련(RIMPAC : Rim of the Pacific)

환태평양훈련은 유사시 태평양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태평양 연안국들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미 태평양사령부 주관하에 1971년부터 2년에 1회씩 태평양 상에서 실시해 온 대규모 연합해상기동훈련으로서 우리 해군은 1990년 12회 훈련부터 참가해 오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1.12.31.)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동 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 19일 「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오자복 국방부장관과 칼루치 미 국방부장관이 「상호군수지원 협정」 협정서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1988.6.8.)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에서 임동원 남측대표와 최우진 북측대표가 「비핵화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1992.1.14.)

1993 ~ 2000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됨으로써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전시 대비 연합방위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1995년 신 아·태전략(EASR)을 발표함으로써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전면 중지시켰다.

1994.10.21.	1994.12.1.	1995.2.27.	1995.5.8.~5.19.	2000.6.23.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체결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 아태전략(EASR) 발표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실시	한미 국방부 간 대한민국 내 유해발굴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미·북 제네바기본합의」(1994.10.21.)

북한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연구를 해왔으며,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후 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해 오다가 1992년 1월 협정을 체결하고 '핵 물질 및 핵 시설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였다.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IAEA는 6차례 임시 핵사찰을 실시했고,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된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양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북 고위급회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해체하는 대신 200만 Kw 경수로와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미·북 제네바기본합의」를 체결하였다.

영변 핵 시설 내부 사진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1994.12.1.)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1978년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1994년 10월 6일 제26차 SCM 및 제16차 MCM 시 '전략지시 2호'를 승인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부로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되었다.

한승주 외무부 장관과 레이니 주한 미대사가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1994.11.30.)

김영삼 대통령이 이양호 합참의장으로부터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고를 받고 합동참모본부기에 '정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1994.12.1.)

신 아·태전략 (EASR, 1995.2.27.)

1995년 2월 작성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 일명 '신 아·태전략(EASR : East Asia Strategic Report)'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태지역 주둔 미군을 적어도 20세기 말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연합전시증원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합전시증원연습은 전시 미 증원군이 최초 한반도 도착 시 수용, 대기, 전방으로 이동 및 전장으로 통합되는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동시에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이 훈련은 1994년부터(한미연합훈련은 1995년부터) 실시해 오다 2008년 키리졸브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2007.3.22.)

「미군 유해발굴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2000.6.23.)

육군 50사단 장병과 주한미군 501여단 소속 장병들이 경북 칠곡 작오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 ~ 2009 전략적 동반자로의 동맹관계 격상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군사변혁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에 따라 우방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한국 또한 국력 신장에 따른 보다 성숙한 동맹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발현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2001.12.18.	2002.3.29.	2003.4.30.	2004.10.6.	2004.10.22.	2007.2.23.
아프가니스탄 해성부대 파병	「한미 연합토지관리 계획(LPP) 협정」 체결	이라크 서희부대 파병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협정」 및 「LPP 개정 협정」 체결	제36차 SCM,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추진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4.17일로 합의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전략 변화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는 더욱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비대칭 위협은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유형도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이며 비군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변혁(Transformation)을 추진하였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군사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전력 구조의 조정을 진행하였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위협중심(Threat-Based)에서 능력중심(Capability-Based)으로 군사력 기반을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WMD를 개발·사용하는 적성국과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냉전시대 전략인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신속한 전력투사와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변혁 (Transformation)

군사변혁의 목적은 새롭고 불확실한 비대칭적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인 미군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병력으로 보다 많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아울러 위협 발생 시 미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기동성과 작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육군을 신속성·치명성·전개성이 향상된 여단급부대로 재편하고, 각 군 간의 합동성을 증진시키며, 특수전 부대의 능력과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해상 경계용 최신예 구축함을 편성하는 등 본토 방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GPR : Global Posture Review)

GPR은 동맹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진시켜, 범세계적·지역적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동맹국을 지원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전개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기지는 동맹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정밀무기의 치명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켜 병력, 부대 또는 기지의 숫자가 아닌 능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2007.2.23.)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 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은 50여 년 만에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가 되었다.

1) 아프가니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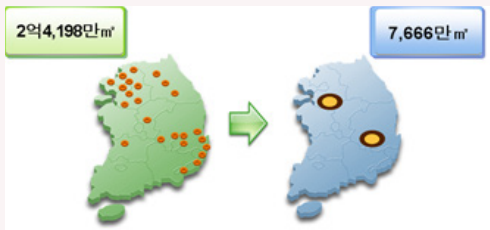
9·11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 '항구적 자유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한국은 2001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군·공군수송지원단, 의료·건설 지원단을 파병하여 다국적군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였다.

2) 이라크

2003년 3월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되자 한국은 동년 4월 건설·의료 지원단을 파병했다. 2004년 2월에는 자이툰부대가 창설돼 2008년 12월까지 아르빌지역의 재건을 위한 각종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자이툰부대는 9진까지 연인원 1만 9,000여명이 파병된 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으로 기록됐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 대구)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Yongsan Relocation Plan, 서울 도심 9개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 Land Partnership Plan, 미 2사단 등을 평택·김천·왜관지역 등으로 이전)으로 구분된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추진 합의 (2004.10.22.)

제36차 SCM에서 2005년부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이라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동 협의체는 한측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측 국방부 아·태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하며, SCM으로부터 회의 운영지침을 받고 필요시 결과를 SCM에 보고하게 된다.

2010 ~ 2021 호혜적·상호보완적 동맹관계 발전

미국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주력하였으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12년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천명하면서 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등 역내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0.6.27	2011.10.28.	2013.2.12.	2014.10.23.	2018.10.31.	2020.11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으로 조정 합의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신설	제3차 북한 핵실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연합방위지침 승인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표

미국의 아시아 재형(Asia Rebalancing)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로 대표되는 신국방전략지침(New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고, 군사력 운용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군력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력 주둔(military presence)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러에 대해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중견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역내 지상·해상·공중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에 한·미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북한의 국지도발 시 도발성격과 강도에 따른 한·미 양국의 역할 분담과 업무 협조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양국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신설·개편

한·미는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체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43차 SCM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5년 제8차 KIDD에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와 EDPC(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확장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로 통합하였으며, 2016년 제9차 KIDD에서는 SAWG(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를 대체하여 전작권전환실무단(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을 출범시켰다. 한·미는 KIDD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발전 과제는 물론, 확장억제 실효성 보장,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보건협력 – 코로나19 공조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은 방역·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5월 한국은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하였고,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2021년 6월 한국의 국방·외교 관련자를 대상으로 101만 명분의 얀센백신을 공여하였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는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한·미 양국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합의한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한·미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를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계로 변경하는 연합지휘구조를 포함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였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한·미는 제50차 SCM에서 동맹 국방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1년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2020년 11월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하였다. 국방비전에는 한·미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 추구,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 항행 등 공동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 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통해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미동맹은 美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항모전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통해 전략적 억제를 시행하고 있다.

B-52와 F-22 한반도 전개

2022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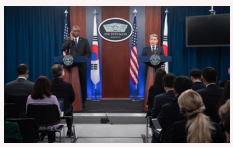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변화하는 전략환경과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22.5.21.	2022.8.16.~17.	2022.9.16.	2022.11.3.	2022.11.15.	2022.12.28.
한미정상회담	제21차 KIDD	제3차 EDSCG	제54차 SCM	연합사 이전 완료	한국 인태전략 발표

한미 정상회담 (2022.5.21.)

양 정상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하기로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여타 지역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맹협력 범위와 수준의 확대·심화



제54차 SCM

한·미는 정상 간 합의와 KIDD, EDSCG, MCM, SCM 등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국방당국은 제54차 SCM을 통해 △대북 공조,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분야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EDSCG)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였다. EDSCG는 동맹의 억제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양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제3차 EDSCG 회의는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실행력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정책 공조)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노력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는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도전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미 원자력추진 항모 레이건함 부산입항

한편,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에 따라 한·미 국방당국은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

한·미는 2023년 연합연습과 연계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에 합의하고, 사드 기지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확대) 한·미는 첨단기술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양자, 센서 및 전자전,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미는 동맹 7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역내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관계 현대화,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 등 역내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함께 번영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22년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 구현을 3대 비전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를 표방하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연합사 이전 완료

연합사 부대이전 기념식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8년 창설 이래 한반도 전쟁 억제 및 대한민국 방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2년 11월 연합사는 평택 (Camp Humphreys)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층 더 강화된 작전적 능력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이다.

특별부록
02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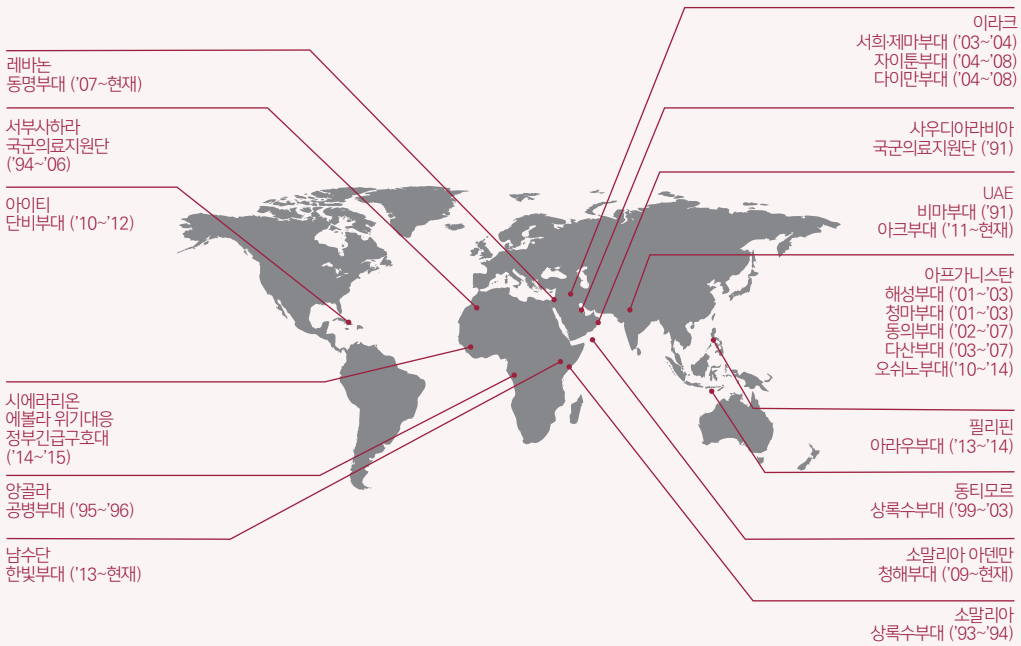
1. 개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한 세대만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걸프 전쟁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2년 12월 현재까지 세계 30개국에 총 6만여 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글로벌 안보 증진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군의 파병활동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다. 2009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0년에는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창설하는 등 파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체계가 정립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관련 최고위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첨단기술과 의료역량에 기반한 6대 기여공약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엔 및 관련 국가들과 협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엔에 새로운 평화유지활동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서 국가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표-1] 해외파병활동 지역

(2022년 12월말 기준)



[표-2] 역대 정부별 파병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노태우 정부 ('88~'93)	• '91년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 '91년 UAE 공군수송단 파견
김영삼 정부 ('93~'98)	• '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견 • '95년 앙골라 공병부대 파견	• '94년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파견
김대중 정부 ('98~'03)	• '99년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견 • '02년 아프간 동의부대 파견	• '01년 아프간 해성/청마부대 파견
노무현 정부 ('03~'08)	• '03년 아프간 다산부대 파견 • '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 • '07년 레바논 동명부대 파견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라이베리아('03), 부룬디('04), 수단('05), 네팔('07), 수단 다푸르('07)	• '03년 이라크 서희/제마 부대 파견 • '04년 이라크 다이만부대 파견
이명박 정부 ('08~'13)	• '09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파견 • '10년 아프간 오쉬노부대 파견 • '11년 UAE 아크부대 파견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코트디부아르('09), 서부사하라('09), 아이티('09), 남수단('11)	• '10년 아이티 단비부대 파견 • '10년 해외파병 전담부대 '온누리부대' 창설
박근혜 정부 ('13~'17)	• '13년 남수단 한빛부대 파견 • '14년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	• '13년 필리핀 아라우부대 파견
문재인 정부 ('17~'22)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예멘('19)	

1991. 1.	1991. 2.	1993. 7.	1994. 8.	1995. 10.	1999. 10.	2001. 12.	2002. 2.	2003. 3.
사우디아라비아 국군의료지원단	UAE 비마부대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아프가니스탄 해성·청마부대	아프가니스탄 동의부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2003. 4.	2004. 4.	2004. 10.	2007. 7.	2009. 3.	2010. 2.	2010. 6.	2011. 1.	2013. 3.	2013. 3.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이라크 다이만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간 오쉬노부대	UAE 아크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필리핀 아라우부대

2. 유엔평화유지활동

유엔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유지활동(PKO : PeaceKeeping Operation)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1988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현재까지 25개 임무지역에 2만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대 단위로는 7개 임무지역에 1만 9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임무 유형 별로 공병부대 4개(소말리아 상록수부대, 앙골라 공병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전투부대 2개(동티모르 상록수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의료부대 1개가 파병되었다. 이 중에서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는 현재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3] 부대단위 유엔 PKO 참여현황 (2022년 12월 기준)

기 간	부 대	연인원(명)	기 간	부 대	연인원(명)
1994년 7월 ~ 1994년 8월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	516	2007년 7월 ~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8,437
1994년 8월 ~ 2006년 5월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542	2010년 2월 ~ 2012년 12월	아이티 단비부대	1,425
1995년 10월 ~ 1996년 12월	앙골라 공병부대	600	2013년 3월 ~ 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4,238
1999년 10월 ~ 2003년 10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3,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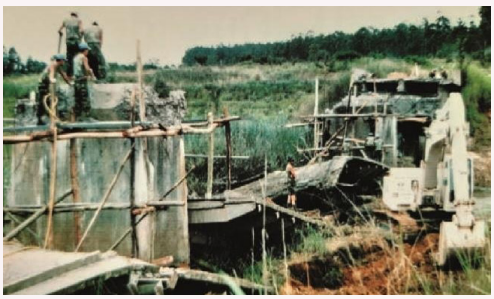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1993.7. ~ 1994.3.)

소말리아 발라드에 파견된 상록수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도로(80km)를 보수하고 관개수로(18km)를 개통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사랑의 학교와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94년 3월 지역 정세의 악화로 9개월 만에 철수하였지만, 상록수부대의 완벽한 임무수행은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록수부대 : 소말리아 땅을 푸른 옥토로 바꾸겠다는 의미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1994.8. ~ 2006.5.)

1994년 8월부터 12년 동안 서부 사하라에 파견된 국군의료부대는 현지 유엔요원에 대한 의료지원, 지역 주민에 대한 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서부사하라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1만 여km 떨어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부대까지의 보급과 지원과정에서 습득된 노하우는 우리 군의 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앙골라 공병부대 (1995.10. ~ 1996.12.)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앙골라 우암보에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내전으로 파괴된 교량을 건설하고 비행장을 복구하는 등 앙골라 평화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앙골라에서의 파병활동은 1996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1999.10. ~ 2003.10.)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동티모르에 우리 군 최초로 보병부대를 파견하여 지역재건과 치안회복을 지원하여 동티모르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동티모르 상록수부대는 1999년 10월 파병 당시에는 다국적군에 참여하여 치안회복에 주력하다가 2000년 2월부터 UN PKO로 전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레바논 동명부대 (2007.7. ~ 현재)

동티모르에 이은 두 번째 보병부대이자 한국군 최장기 파병부대로 정전감시 등 군사작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도로포장, 학교 및 관공서 시설물 개선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명부대 전 장병은 UN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유엔메달을 받았으며, 현지주민들은 '신이 내린 선물', '친숙한 이웃'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아이티 단비부대 (2010.2. ~ 2012.12.)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의 잔해제거, 도로복구, 심정개발 등의 재건지원과 태권도, 컴퓨터 등의 교육 프로지원 등의 민군작전을 실시하였다. 특히 콜레라가 창궐한 2011년 10월 이후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주력하면서 난민촌 방역활동 등 전염병 예방활동도 수행하였다.

남수단 한빛부대 (2013.3.~현재)

현지주민의 이동과 물류에 필수적인 도로건설 및 보수공사와 백나일강 범람 대비 차수벽 설치 등 다양한 재건사업을 실시하고, 한빛직업학교, 한빛농장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군작전을 모색하여 21세기 아프리카 신생국인 남수단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남수단 주민에게 한빛부대는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

부대 단위 파병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도 실시하고 있다. 18개 임무지역에서 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임무단장, 참모요원 및 연락장교, 옵서버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장성급으로는 지금까지 4명이 임무단장 또는 군사령관을, 1명은 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였다.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는 참모요원 및 연락장교 200여 명, 군 옵서버 요원 500여 명이 분쟁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현재에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레바논평화유지군,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남수단 임무단 등 4개 임무단에서 23명이 임무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 유엔 PKO의 본산인 유엔 평화활동국에도 많은 장교들이 근무하면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개인 단위 UN PKO 파견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개인 단위 파견현황

(2022년 12월 기준)

기 간	유엔 임무단	연인원(명)	주요 임무
1994년 10월 ~ 현재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224	정전 감시
1994년 11월 ~ 2009년 7월	그루지아 정전감시단	88	정전 감시
2000년 1월 ~ 2004년 6월	동티모르 임무단	59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2년 1월 ~ 2003년 12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1	평화유지군 사령관
2003년 7월 ~ 2010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임무단	7	참모 활동
2003년 10월 ~ 2016년 1월	라이베리아 임무단	24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4년 9월 ~ 2006년 12월	부룬디 임무단	4	참모 활동
2005년 11월 ~ 2011년 7월	수단 카르툼 임무단	46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7년 1월 ~ 현재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	57	참모 활동
2007년 3월 ~ 2011년 1월	네팔 임무단	13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7년 6월 ~ 2021년 6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	19	정전 감시
2009년 7월 ~ 현재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44	정전 감시
2009년 7월 ~ 2017년 1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14	정전 감시
2009년 11월 ~ 2014년 12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10	참모 활동
2011년 7월 ~ 현재	남수단 임무단	72	참모 및 협조 활동

3. 다국적군 평화활동

20세기 말 냉전 종식 이후 테러, 해적활동 등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해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걸프전쟁 기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파병하였으며, 이후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우리 군을 파견하였다. 2022년 12월 현재까지 26개 임무지역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에도 6개 임무지역에서 312명이 임무수행 중에 있다. 부대 단위 다국적군 파병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부대단위 다국적군 참여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 분	기 간	파병지역, 부대	연인원(명)
걸프전쟁	1991년 1월 ~ 1991년 4월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154
	1991년 2월 ~ 1991년 4월	UAE, 비마부대	160
아프간전쟁	2001년 12월 ~ 2003년 9월	싱가포르, 해성부대	823
	2001년 12월 ~ 2003년 12월	싱가포르, 청마부대	1,245
	2002년 2월 ~ 2007년 12월	아프간, 동의부대	786
	2003년 3월 ~ 2007년 12월	아프간, 다산부대	1,329
	2010년 6월 ~ 2014년 6월	아프간, 오쉬노부대	1,745
이라크전쟁	2003년 4월 ~ 2004년 4월	이라크, 서희부대	952
	2003년 4월 ~ 2004년 4월	이라크, 제마부대	185
	2004년 4월 ~ 2008년 12월	이라크, 자이툰부대	17,708
	2004년 10월 ~ 2008년 12월	이라크, 다이만부대	1,324
대해적작전	2009년 3월 ~ 현재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12,218

걸프전쟁 파병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군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이라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과의 걸프전쟁이 발발하였다. 우리 정부도 동맹국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던 중에 1990년 8월 18일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동맹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국군의료지원단, 아랍에미리트(UAE)에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을 파견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사우디의 알누아이리아 병원에서 총 1,634명의 군인진료와 87명의 대민진료를 하였으며, 공군 비마부대는 37일간 국내 공수임무 대비 3배에 달하는 323소티의 화물 · 인원 공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다. 걸프전쟁 파병은 냉전 이후 최초의 파병으로, 우리 군에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동맹국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군의료지원단 (1991. 1~1991. 4)

사우디 알누아이리아 병원에 총 154명의 의료요원 및 지원요원이 파견, 사막전 및 현대전 하에서의 전상자 처치 경험을 통해 군진의학 및 의무근무 · 운용 등 전시 의무지원체계 발전에 관한 소중한 경험 및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UAE 비마부대 (1991.2~1991.4)

한국 공군 보유의 C-130H 항공기와 160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총 323소티, 461시간 57분의 비행시간동안 약 24만km를 비행하면서 병력 1,405명과 화물 713.3톤의 공수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UAE, 사우디, 오만 등 아라비아 반도 일대의 27개 기지를 오가면서 한국 공군전력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실전경험을 축적하였다.

아프간전쟁 파병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는 '항구적 자유작전'(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였다. 2001년 12월에 해·공군 수송지원단 해성·청마부대, 2002년 2월에 국군의료지원단 동의부대, 2003년 3월에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를 파견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설치하였고 지방재건팀 방호를 위해 오쉬노부대를 파견하였다.

해군 수송지원단인 해성부대(상륙함 1척, 승무원 171명)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해상수송임무 15회, 탐색지원 2회 등 총 17회의 임무를 실시, 총 92,692NM을 항해하면서 약 5,300여 톤의 물자를 수송하였다.

공군 수송지원단인 청마부대는 2001년 12월 승무원 76명으로 임무를 개시한 후 김해 비행장을 모기지로 하여 싱가포르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왕래하면서 2003년 12월까지 총 81회의 수송작전을 실시하여 600명의 병력과 310톤의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약 777,182NM을 비행하였다.

동의부대는 약 90명 규모의 의료·지원인력으로 구성하여 2002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6만여 명의 동맹군과 현지 주민을 진료하였다.

* 동의부대는 조선 중기 명의인 허준의 의학서적 「동의보감」에서 따온 명칭

다산부대는 약 150명 규모의 공병부대로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토목 건축 등 400여 건의 공병지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에 민사반을 참여시켜 전쟁난민과 지역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 다산부대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거중기 발명과 수원 화성을 축조한 정약용의 호에서 따온 명칭

우리 PRT 요원들에 대한 경호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오쉬노 부대

유엔의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촉구 및 아프간 정부의 재건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 6월 민·관·군 통합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파르완주에 설치하고 오쉬노(Ashena)부대를 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는 민간주도의 우리 PRT가 안전하게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PRT 요원 보호와 기지방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울타리 작전'을 통해 지역 10개 마을의 원로들을 부대로 초청하고 파르완 축구팀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현지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기지에 대한 위협을 경감하였다.

이라크전쟁 파병

우리 정부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자유작전'(OIF: Operation Iraqi Freedom)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4월 공병·의료지원단인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하였고, 2004년 이라크 평화지원단인 자이툰 사단을 파견하였다. 서희·제마부대는 2004년 4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다국적군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하였고 2004년 1월 추가 파병된 자이툰부대에 통합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희부대는 미군, 이탈리아군, 루마니아군 등 동맹군 기지 보강 및 건설지원으로 70여 건의 공사와 학교보수와 급수 및 오·폐수 처리 등 전후 복구공사 50여 건을 완수하였다. 제마부대는 미군과 동맹군에 대한 의료지원과 전후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라크 대민 의무지원을 위하여 유엔 LEVEL Ⅱ(+)급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운용하여 2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에 서희·제마부대는 자이툰부대의 직할대인 공병대대와 의무대대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이라크 나시리야 일대에서 시설 보수작업 중인 서희부대

자이툰이라고 명명된 평화·재건지원 부대는 한국군 최초로 파병된 민사지원부대로 이라크 평화재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맹군들 사이에 '민사작전의 모델'로 평가받았다. 또한, 자이툰 병원 운영, 학교 및 도로 개통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상호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자이툰은 이라크 주민들이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올리브를 뜻하며, 평화를 상징

자이툰 부대의 공중 재보급과 교대병력 수송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된 공군 제58항공수송단인 다이만 부대는 2004년 10월 임무를 시작하였다. 다이만 부대는 병력 143명과 C-130항공기 4대로 편성되었고 2008년 12월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지구둘레 67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 270만㎞를 무사고로 운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이만은 아랍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뜻

대해적작전 파병

1990년대 소말리아의 오랜 내전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적활동이 급증하였고, 2006년 우리 원양어선 도원호가 피랍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8년 유엔의 해적퇴치 활동 적극 동참 요청을 계기로,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역 해상 안전확보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창군 이래 최초의 전투함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청해부대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등 해적퇴치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작전들을 수행해왔다.

이 밖에도 청해부대와 다국적군과의 협력을 위해 연합해군사령부(CMF:Combined Maritime Forces) 등에 참모 및 협조장교를 파견하였다. 특히, 2010년 4월 우리 해군 최초로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 해역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다국적 연합해군부대인 CTF-151의 지휘관에 임명되어 2012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9년까지 총 5명이 CTF-151 지휘관을 역임하였으며, 다국적 참모진의 보좌를 받아 미국·영국·파키스탄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지휘하였다. 또한, CTF-151에 참모장교들도 41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45명의 한국군 장교가 파병되어 연합해군의 대해적작전에 동참하였다.

해적대응 해상종합훈련 중인 청해부대

우리 해군 최초의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연합해군사령부(CMF)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해적들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에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와 우리 선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 전원을 구출하였다. 또한 2011년 3월에는 리비아 정세불안에 따라 리비아의 우리 교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이 밖에 청해부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핵심지역인 아덴만 연안 전략수송로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4. 국방교류협력 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과 국제공조 등을 위해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과는 다른 한국군의 확장된 해외파병 활동 형태이다. 이러한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아크부대와 같이 다른 국가(UAE)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군사협력활동'과, 아라우부대와 같이 다른 국가(필리핀, 시에라리온 등)에 대한 태풍피해복구 지원, 에볼라 질병 지역에 긴급구호대 파견, 실종 항공기에 대한 해상탐색 지원 등을 실시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의 두 유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현재까지 실시된 한국군의 국방교류협력 활동 관련 파병 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한국군의 국방교류협력 활동 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 분	기 간	파병지역, 부대	연인원(명)
군사훈련협력	2011년 1월 ~ 현재	UAE, 아크부대	2,399
태풍피해복구	2013년 12월 ~ 2014년 12월	필리핀, 아라우부대	824
해상탐색	2014년 3월 ~ 2014년 5월	말레이 해역, 해상탐색단대	39
	2014년 12월 ~ 2015년 1월	인니 해역, 해상탐색단대	21
에볼라 대응	2013년 12월 ~ 2014년 3월	시에라리온, 긴급구호대	16

UAE 아크부대 (2011.1. ~ 현재)

2011년 1월 UAE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파견된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및 군사협력 목적으로 파견된 최초의 부대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아크부대 파견은 UAE군의 특수전 역량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의 연합작전능력 · 특수전 수행능력 신장 및 경제협력 확대 등 국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

필리핀 아라우부대 (2013. 12. ~ 2014. 12.)

아라우부대는 2013년 12월 9일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통합된 합동부대로 창설된 '필리핀합동지원단'이다. 2014년 12월 22일까지 필리핀을 덮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태풍 잔해물 제거, 공공시설 복구와 의료지원활동 등 민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아라우부대는 유엔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필리핀의 요청에 응해 재해지역에 파병된 부대로, 6.25참전국인 필리핀에게 한국은 반드시 보은하는 국가임을 각인시켰다.

* 아라우는 필리핀어로 '태양'이라는 뜻으로,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의미

5.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미래

지난 30년 동안 한국군은 세계평화의 수호를 위해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 왔다. 짧은 파병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제평화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군사외교의 영역을 확대하며, 분쟁지역에 한국을 알려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우리 군은 가는 곳마다 현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티모르 상록수부대는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신이 내린 선물', 그리고 아이티 단비부대는 '레오간의 천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남수단 한빛부대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리고 있다.

[표-7]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6대 기여공약

스마트캠프 구축	• 한국의 첨단IT기술을 유엔 현지 임무단에 접목한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 남수단 한빛부대 대상 시범사업 추진
헬기 양도	•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정찰헬기(500MD) 16대를 아프리카 임무단 내 헬기부대 운용 국가에 공여
의료역량 강화	• 유엔 의료훈련센터에 우리 군 의무요원을 파견하여 의무훈련 지원
공병훈련 지원	• 유엔 병력공여국에 공병장비 공여·훈련 지원, 양자 협력을 통해 지뢰제거 등 훈련 지원
여성 PKO요원 역량 강화	•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에 2023년부터 유엔 여군교육과정 유치 및 여성 PKO 참여율 향상
경찰 PKO요원 역량 강화	• 경찰 PKO 요원 파견 확대, 경찰대 PKO 교육센터 활용 유엔 경찰특별교육과정 운용 등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재정기여 9위, 병력기여 37위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유엔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개최국으로서 6개의 기여공약을 제시하였다. 각 공약은 유엔이 현재 당면한 문제(환경보호, 평화유지요원 안전보장, 여성·아동보호 등)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강점이 유엔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 자산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는 기여공약과 연계하여 유엔 및 병력공여국과 다차원적 관계를 수립하였다. 스마트캠프 사업의 경우 한국의 기술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움과 10월 우간다 유엔 역량 강화 워크숍 등에서 한국 국방부가 스마트캠프 관련 발제자로 초청받았다. 500MD 헬기 공여의 경우에도 2022년 7월 유엔, 미국, 헬기양수국(케냐, 엘살바도르)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유엔 아프리카 임무단에 최종 16대의 헬기가 정상적으로 공여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들 나라와 계획 수립 및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공병훈련 지원 역시 캄보디아 및 유엔 삼각협력(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부서와 협력하여 유엔 임무단 내 캄보디아 군의 공병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한·캄보디아 국방장관 간 공병장비 양도약정식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중 장비 양도 및 공병훈련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외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 및 의무요원 양성을 위한 유엔 인증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지식역량을 바탕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방향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미래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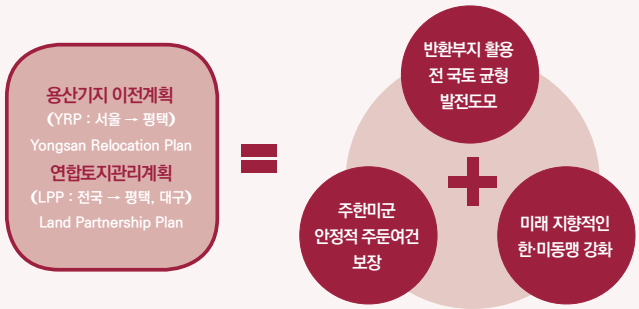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1. 기지이전의 경과 및 역사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 대구 등 2개 허브 기지로 재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에게는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내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있는 미2사단을 비롯한 미군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 공사에 착수한 이후 2013년 8월에 학교시설을 시작으로 이전대상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부대가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병원 등 지원부대들이 이전했으며, 2022년에는 작전센터·통신센터 등 주한미군 핵심지휘시설과 연합사령부 본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평택미군기지는 기존의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1,467만 7,686㎡(444만여 평)로 여의도 면적의 5배이고, 해외에 주둔한 단일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지 내 도로길이는 64km, 지휘통신시설 케이블 67km, 하수관길이 25km, 전선길이 1,548km, 각종 회로시설길이가 806km에 이른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목적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2. 미군기지 반환 및 환경 정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함께 미군기지반환 및 환경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정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6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용산기지를 포함한 11개의 미군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반환된 기지를 깨끗한 상태로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환경정화사업에 착수한 31개 기지 중 18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에 대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로 반환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캠프 마켓에서 발견된 다이옥신 토양오염을 국내 최초로 정화하는 등 국내 토양환경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캠프 마켓 지역의 다이옥신 정화는 '국무조정실 집중관리 갈등과제'와 '국방부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되어 관리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다이옥신 정화

환경정화절차

정밀 조사	실시 설계	시설 철거	정화 공사	완료 검증	이행 완료	부지 처분
환경부 지정 환경관리공단	토양정화업체	철거전문업체	토양정화업체	환경부 지정 오염조사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3. 기지이전의 효과

2022년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완료하여 전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평택기지 이전행사를 실시하는 등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완료하는 매우 중요한 해였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국가 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등 도심지역 반환부지 공원화 및 용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반환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평택지역 개

발에 수조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여건 보장 및 국산 건설자재 사용확대 등을 통한 국내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으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6조 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지역 소비도 연간 약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하여 평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였다. 이전사업의 효과는 수치 이상의 가치가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해 전력을 향상시키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음으로써 전국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숫자로 환산하기 힘든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얻어지는 한미동맹 강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경제적 효과

향후 국방부는 연합사령부 본부 이전을 핵심으로 용산공원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등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4. '연합사 평택시대'의 개막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한미 양국은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후 조속히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10월, 마침내 연합사가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연합사 평택시대'가 막을 열었다.

연합사령부 이전행사 (2022년 11월)

연합사는 지난 1978년 창설된 이래 44년간 용산기지에 주둔해 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역할해 왔다. 동시에, 세계 유일의 단일 연합사령부로서 북한의 침략 위협과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평택 이전을 통해 44년간의 '연합사 용산시대'를 마감한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이 될 평택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능력을 갖춘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를 약속하게 되었다.

연합사 이전의 기대효과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과 평택으로 나뉘어 근무해 온 연합사 요원들이 한 곳에서 어깨를 맞대고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등 연합방위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대들이 서로 인접하게 됨으로써 작전적 효율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연합사 평택 이전을 통해 한미 양국의 동맹정신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한미 장병들 간의 인적 상호운용성을 배양하는 터전이 되어온 연합사는, 평택 이전을 통해 장병들이 더욱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연합사를 통해 성장한 장병들은 미래 한미 군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인재가 될 것이며, 향후 '평택 연합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사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향후 동맹현안 공조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연합사에 근무 중인 주한미군 장병들은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에게는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번 연합사 이전은 한미 공조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한 성공 사례로서, 향후 동맹현안들의 추진과 잔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1. 방위산업 수출 증진

방산수출 확대 실적

2022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2021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고 전 세계 무기수출량의 2.8%를 차지하여 2012~2016년의 수출량 1.0%와 비교시 세계시장 점유율이 177% 가량 증가하였다.

세계 주요 무기수출국 현황

* 출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

순위	수출국	점유율(%)		
		2017년~2021년	2012년~2016년	증감률(%)
1	미국	39.0	32.0	14
2	러시아	19.0	24.0	-26
3	프랑스	11.0	6.4	59
4	중국	4.6	6.4	-31
5	독일	4.5	5.4	-19
6	이탈리아	3.1	2.5	16
7	영국	2.9	4.7	-41
8	한국	2.8	1.0	177
9	스페인	2.5	2.2	10
10	이스라엘	2.4	2.5	-5.6
11	네덜란드	1.9	2.0	-12
12	튀르키예	0.9	0.7	31
13	스웨덴	0.8	1.2	-35
14	우크라이나	0.7	2.5	-72
15	스위스	0.7	1.0	-35

2022년에는 M-SAM II(2022년 1월, UAE), K9 자주포(2022년 2월, 이집트/2022년 8월, 폴란드), 원양경비함(2022년 6월, 필리핀), K2 전차(2022년 8월, 폴란드), FA-50(2022년 9월, 폴란드), 천무(2022년 11월, 폴란드) 등 대규모 수주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며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인 173억불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방산수출 대상 권역이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지역까지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대형 수출사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방산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민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품목의 다양화

1970년대 태동한 국내 방위산업은 수류탄, 박격포와 같은 기본적인 무기의 국산화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끝에 육·해·공군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첨단 유도무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이후 K-9 자주포와 T-50 항공기 등 기존 주요 수출품목과 더불어, 해성 미사일 및 청상어 어뢰 등 고부가가치 유도무기까지 수출품목이 다양해졌다. 이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높아져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무기체계는 세계 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여 다수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2022년 주요 수출품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 수출품목	K-9 자주포 T-50	K-9 자주포 청상어 어뢰 T-50 KT-1B	K-9 자주포 잠수함 해성 미사일	K-9 자주포	K-9 자주포 T-50 초계함	MSAM II K-9 자주포 원양경비함 K2 전차 FA-50 천무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확대

정부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는 상대국가와 방산협력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 2016년 33개국 38건에서 2022년 48개국 57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호혜적 방산협력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연도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국 현황

년도	국가	년도	국가
1988	미국	2008	콜롬비아
1991	태국	2009	이집트
1992	스페인, 프랑스	2010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페루, UAE, 노르웨이
1993	영국	2011	덴마크
1994	필리핀	2014	폴란드
1995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2015	칠레, 체코
1996	캐나다	2016	핀란드, 헝가리
1997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2017	보츠와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사우디, 카자흐스탄
1999	네덜란드,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2019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스웨덴, 파라과이
2001	베트남, 호주	2020	에티오피아
2004	방글라데시	2021	바레인, 요르단
2005	인도	2022	케냐, 그리스
2006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체결국 수 : 48개국			

범부처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상대국의 다변화된 방산협력 요구에 대해 외교·안보·산업분야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2020년 2월 제정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2021~2022년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방위산업 진흥 및 방산수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활용한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패키지 딜 형태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실효적 협의체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대통령 주관으로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병행하여 국가별로 핵심 수출사업에 대한 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육·해·공군, KODITS[1],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일괄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일괄 지원팀에서의 국방부와 각 군의 기능은 수출대상국의 국방부와 협력 증대, 수출대상장비의 운영시범을 통한 장비 우수성 홍보, 구매국의 장비운용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등 방산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KOTRA, 수출입은행 등과 산업협력 패키지 발굴과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의 도약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사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KF-21은 21세기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현재 운용중인 F-4, F-5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 전력이자 공군의 기반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전투기 개발은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며, KF-21 전투기 사업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첨단기술 구현 등을 위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하여 Block-I과 Block-II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양산된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는 Block-I 개발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후속양산된 전투기의 전력화는 Block-II 개발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공표한 이후 2002년 11월 장기신규소요로 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업추진 초기에는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에 따른 경제성과 독자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0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사업타당성 조사만 7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KF-21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1) Korea Defense Industry Trade Support Center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그러나, 관계관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 끝에 2010년 제41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승인을 통해 획득방안(국내 연구개발)과 개발주관기관(국과연 주관 탐색개발, 업체 주관 체계개발)을 결정하였고, 2011년~2012년 탐색개발을 실시하여 KF-21의 체계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4년 KF-21의 개발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2015년 체계개발 주관업체로 한국항공(KAI)이 선정되었다.

2016년 1월 사업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대장정에 올랐고 2019년 KF-21 시제기 제작에 돌입하여 사업착수 5년만인 2021년 4월 9일에 KF-21 시제 1호기의 출고행사를 진행하였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일에 맞춰 그동안 KF-X로 불렸던 시제기의 고유명칭을 KF-21로, 통상명칭을 보라매로 공표하였다. 통상명칭은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매에서 유래되었다.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체계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제기(2021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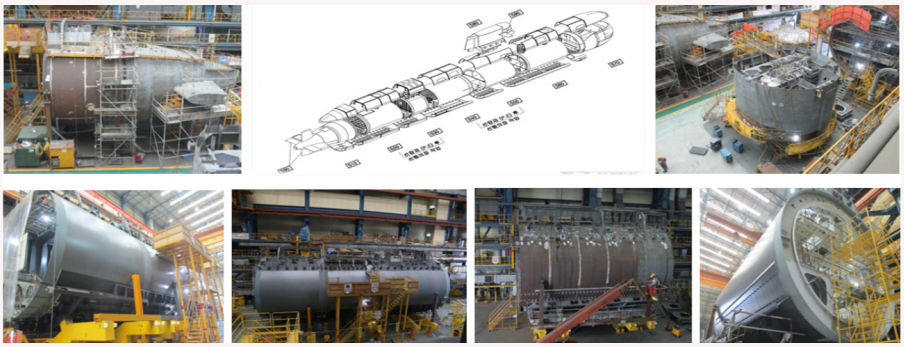
KF-21 최초비행(2022년 7월)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크기가 F-15보다 작지만 F-16보다는 크며, 단좌형상과 복좌형상을 모두 개발하고 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미국 GE(General Electric)사의 F414 엔진으로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고, 미국의 전투기에도 동일엔진이 장착되는 등 성능이 검증된 모델이다. KF-21의 국내개발은 전투기 핵심부품 산업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민수분야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우리 전투기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인하 및 군수지원 적시성 확보 등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율을 낮추고, 전투기 생산분야와 연관된 반도체, 자동차, IT 기술 등의 산업도 동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우리 해군은 1987년부터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장보고-I 및 장보고-II 잠수함을 건조하여 운용해 왔다. 그러나 독일산 장비를 장착한 장보고-I/II급 잠수함은 장비 고장 발생 시 외국의 정비기술지원을 받거나 수리를 위해 독일 제작사까지 보내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잠수함의 은밀성과 타격능력을 현저히 높이기 위해 2007년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인 장보고-Ⅲ 사업을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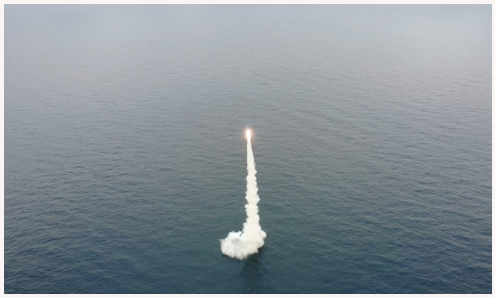
해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독일 잠수함 도입과정에서 확보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 수십년간의 잠수함 운용경험,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 등 연구소·대학의 보유기술 등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수십 개의 탑재장비 개발업체들도 높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였다. 2014년부터 건조된 최초의 3,000톤급 국산 중형잠수함은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산안창호함'으로 명명되었고, 합참과 해군 주관으로 수행된 약 3년간의 엄격한 시험평가를 마친 후 2021년 8월 마침내 해군에 인도되었다.



장보고-Ⅲ급 선도함(도산안창호함) 섹션별 건조 과정

도산안창호함은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지상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기존 잠수함보다 소나체계[2]의 탐지능력과 전투체계의 표적처리 능력 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또한, 은밀성 측면에서 수소기술을 활용한 국산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에서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고, 다양한 소음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세계 최정상급 성능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이라 할 수 있다.

도산안창호함의 부상 항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2) 잠수함에 탑재하여 수상 및 수중 표적을 탐지·추적·식별하기 위한 체계를 의미

도산안창호함의 국산화율은 기존의 잠수함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76%에 이른다. 전투·소나체계 및 추진체계 등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적시적인 정비지원과 부품단종 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함정의 가동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잠수함을 수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수출통제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향상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진작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도입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앞으로 장보고-Ⅲ 잠수함은 전략적 억제 및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에 투입되어, 해양에서의 국익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 잠수함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상륙작전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해상·공중 전력을 투사함으로써 우군에게 유리한 전쟁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육·해·공 합동기동작전이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많은 전쟁에서 상륙작전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상륙작전의 유용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역분쟁 빈발 및 대규모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해외 평화유지 활동과 재난대응 국제협력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상 작전 지속능력이 우수하고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대형수송함(LPX :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마라도함은 1만 4,500톤급 대형수송함으로, 길이 199m, 폭 31m이고 최대속력이 시속 23노트이며, 승조원과 상륙군 등 병력 1,000여명, 헬기 11대, 전차 6대, 고속상륙정 2척 등을 동시 탑재할 수 있다. 함명은 한반도 남방 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함'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대형수송함 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와 건조과정을 거쳐 약 7년만인 2005년 7월 12일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첫 번째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을 처음으로 바다에 진수하였고,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해군이 인수·운영하고 있다. 독도함에 이은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은 2014년 12월 건조를 시작하여 약 7년만인 2021년 6월 해군에 인도되었다.

마라도함의 항해

첫 번째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건조시 해외에서 도입하였던 탐색레이더, 적외선탐지장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체계를 국내개발하여 마라도함에 탑재함으로써 정비가 용이해지고 유지비용이 절감되었다. 그리고 독도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최신 4면 고정형 레이더(AESA)를 탑재함으로써 지휘통제함 임무수행 능력과 함정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비행갑판을 강화하여 회전익 항공기(MV-22)의 운용이 용이해졌으며, 현측 램프[3] 보강을 통해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원활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상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3) 현측 램프는 전차 등 탑재 차량과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측면 출입구를 의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우리 군의 대규모 상륙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대규모 재해·재난 시 구조작전 지휘와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대표함정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북한은 한국전쟁기를 포함해 휴전 이후에도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야포, 방사포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포병위협을 질적으로 압도하고 자주국방을 굳건히 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K9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999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1,100여문 이상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와 장전장치 등을 장착한 K9 자주포는 방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 등 타 국가의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K9 자주포 사격 훈련

우리 군은 화력의 질적 우세를 달성하고 뛰어난 기술 수준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K9 자주포 1차 성능개량(K9A1)을 거쳐 2022년부터 2차 성능개량(K9A2)을 추진하고 있다. 탄두와 장약을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는 등 성능을 개선하고, 운영에 필요한 승무원 수를 줄여 더 적은 인원으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무기체계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능개량을 누적시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용을 구현하기 위한 원격·무인화 기술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현재 8개 국가에 1,000여 문 이상이 수출되며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경쟁력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국 군사력 현황

총괄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 병력	1,395,350		900,000		2,035,000		247,150	
육군	489,050		280,000		965,000		150,700	
해군	349,600		150,000		260,000		45,300	
공군	329,400		165,000		395,000		46,950	
기타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	179,250 6,400 41,650	공수 전략로켓군 지휘/지원 철도군 특수군	45,000 50,000 180,000 29,000 1,000	전략로켓군 전략지원군 기타	120,000 145,000 150,000	통막	4,200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 단	10(여단 57)		11(여단 103)		집단군 13		9(여단 6)	
전차 (대)	MBT	6,095	MBT	13,127	MBT LT TK	6.400 750	MBT	579
보병전투차량(대)	IFV	4,931	IFV	13,680	IFV	7,200	IFV	68
장 갑 차(대)	APC ASLT RECCE AUV	18,607 100 2,545 19,516	APC RECCE	12,050 2,700	APC ASLT AAV	4,350 1,000 900	APC ASLT AAV RECCE	804 123 52 111
견 인 포(문)		1,339		12,565		1,234		229
자 주 포(문)		1,539		6,228		2,910		166
다련장포(문)		588		4,276		1,640		54
박 격 포(문)		2,507		4,310		2,800		1,113
대 전 차 유도무기(기)	SP	1,133	GUN	2,526	SP RCL GUN	1,100 3,966 1,788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187		1,520		614		311
헬 기(대)		3,812				906		348
고정익 항공기(대)		218				6		15

해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술잠수함(척)		53	38	53	22
전략핵잠수함(척)		14	11	6	-
항공모함(척)		11	1	2	-
순양함(척)		24	4	3	4
구축함(척)		68	11	36	39
호위함(척)		21	16	45	6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86	129	196	6
소해함(척)		8	42	57	22
상륙지휘함·상륙함(척)		33	21	58	3
상륙정(척)		143	28	60	8
지원함(척)		13	278	157	24
고정익 항공기(대)		954	219	446	73
헬기(대)		707	127	109	120
해병전력	해병사단(개)	해병원정군 3	1(여단 13)	여단 7	
	전차(대)	215	330	80	
	보병전투차량(대)	488	1,100	10	
	상륙돌격장갑차(대)	1,254	-	290	
	병력수송장갑차(대)	207	400	150	
	다목적장갑차(대)	6,129	-	-	
	야포(문)	1,459	405	40	
	대전차미사일차량(대)	106	60	-	
	UAV·ISR(대)	180	-	-	
	전투기(대)	366	-	-	
	틸트로터 수송기(대)	309	-	-	
	헬기(대)	422	-	5	

공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략폭격기(대)	BBR	123	BBR	137	BBR	176		-
정찰기(대)	ISR	38	ISR	58	ISR	52		-
지휘기(대)	C2	4	C2	8	C2	5		-
전투기(대)	FTR·FGA·ATK	1,451	FTR·FGA·ATK	876	FTR·FGA·ATK	1,629	FTR·FGA	317
수송기(대)	TPT	333	TPT	448	TPT	247	TPT	54
급유기(대)	TKR TKR/TPT	156 82	TKR	15	TKR TKR/TPT	13 3	TKR/TPT	7
조기경보기(대)	AWE&C	31	AWE&C	9	AWE&C	19	AWE&C	18
훈련기(대)	TRG	1,126	TRG	262	TRG	1,012	TRG	246
헬기(대)	CSAR TPT	82 62	ATK EW TPT TRG	399 20 333 69	MRH TPT	22 31	SAR TPT	39 15
민간예비(대)	국제/국내선 민항기	553		-		-		-
전자전·정보기(대)	ELINT·EW	35	ELINT·EW	34	ELINT·EW	25	SIGINT·EW	7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22」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2월)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 현황

2021년 기준

국가	국방예산 (억 달러)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력(천 명)
대한민국	437	844	2.55	530
미국	7,540	2,251	3.29	1,395
일본	493	395	0.97	247
중국	2,073	148	1.23	2,035
러시아	458	322	2.78	900
대만	162	688	2.06	169
영국	716	1,084	2.30	153
프랑스	593	872	2.02	203
독일	561	701	1.33	183
이스라엘	203	2,310	5.05	170
이집트	48	45	1.55	439
사우디아라비아	467	1,342	5.54	257
호주	343	1,329	2.13	60
튀르키예	102	123	1.28	355
말레이시아	39	116	1.05	113
태국	73	105	1.33	361
싱가포르	116	1,972	3.05	51
캐나다	232	612	1.15	67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2」(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 2월), 대한민국은 정부통계 기준

일반부록 3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연도	국방비(억원)		GDP대비 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1991	74,524	74,764	3.07	3.08	27.4	23.8	12.3	12.6
1992	84,100	84,100	3.03	3.03	25.1	25.1	12.8	12.5
1993	92,154	92,154	2.92	2.92	24.2	24.2	9.6	9.6
1994	100,753	100,753	2.70	2.70	23.3	23.3	9.3	9.3
1995	110,744	110,744	2.53	2.53	21.3	21.3	9.9	9.9
1996	122,434	122,434	2.49	2.49	21.1	20.8	10.6	10.6
1997	137,865	137,865	2.54	2.54	20.4	20.7	12.6	12.6
1998	146,275	138,000	2.72	2.57	20.8	18.3	6.1	0.1
1999	137,490	137,490	2.32	2.32	17.2	16.4	△6.0	△0.4
2000	144,390	144,774	2.22	2.22	16.7	16.3	5.0	5.3
2001	153,884	153,884	2.18	2.18	16.3	15.5	6.6	6.3
2002	163,640	163,640	2.09	2.09	15.5	14.9	6.3	6.3
2003	174,264	175,148	2.08	2.09	15.6	14.8	6.5	7.0
2004	189,412	189,412	2.09	2.09	16.0	15.8	8.7	8.1
2005	208,226	211,026	2.17	2.20	15.5	15.6	9.9	11.4
2006	225,129	225,129	2.24	2.24	15.5	15.3	8.1	6.7
2007	244,972	244,972	2.25	2.25	15.7	15.7	8.8	8.8
2008	266,490	266,490	2.31	2.31	15.2	14.8	8.8	8.8
2009	285,326	289,803	2.37	2.40	14.5	14.2	7.1	8.7
2010	295,627	295,627	2.24	2.24	14.7	14.7	3.6	2.0
2011	314,031	314,031	2.26	2.26	15.0	15.0	6.2	6.2
2012	329,576	329,576	2.29	2.29	14.8	14.8	5.0	5.0
2013	343,453	344,970	2.29	2.30	14.5	14.3	4.2	4.7
2014	357,056	357,056	2.28	2.28	14.4	14.4	4.0	3.5
2015	374,560	375,550	2.26	2.27	14.5	14.3	4.9	5.2
2016	387,995	388,421	2.23	2.23	14.5	13.9	3.6	3.4
2017	403,347	403,347	2.20	2.20	14.7	14.2	4.0	3.8
2018	431,581	431,581	2.27	2.27	14.3	14.2	7.0	7.0
2019	466,971	466,971	2.43	2.43	14.1	14.0	8.2	8.2
2020	501,527	483,782	2.58	2.49	14.1	12.4	7.4	3.6
2021	528,401	522,771	2.55	2.52	13.9	12.3	5.4	8.1
2022	546,112	531,043	2.53	2.46	13.0	10.7	3.4	1.6
2023	570,143	-	2.54	-	12.8	-	4.4	-

*GDP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2022년, 2023년은 기획재정부 예상치,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2022.12.)
*정부재정 및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는 본문 254쪽 참조

남북 군사력 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평시)	육군				36.5만여명		110만여 명
	해군				7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50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해병대 포함)	12		15
			사단	(해병대 포함)	36		84
			여단(독립여단)	(해병대 포함)	32		117
		장비	전차	(해병대 포함)	2,200여 대		4,300여 대
			장갑차	(해병대 포함)	3,100여 대		2,600여 대
			야포	(해병대 포함)	5,600여 문		8,800여 문
			다련장 / 방사포		31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전략군)	발사대 100여 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9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해군 항공기 포함)	70여 대	(정찰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50여 대		35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80여 대
	헬기(육·해·공군)				70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타군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하였음.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육군 여단 비교의 경우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독립여단인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 북한 특수작전군 병력은 육군·해군·공군 등에 포함되어 있음

일반부록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분	한국		북한		한국/북한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명목GNI(조원)	1,941.1	1,948	35.6	35	54.5배	55.6배
1인당GNI(만원)	3,753.9	3,762.1	140.8	137.9	26.6배	27.2배
경제성장률(%)	2.0	-0.9	0.4	-4.5	5배	-
무역총액(억달러)	10,455.8	9,801.3	32.4	8.6	322.7배	1139.6배
총인구(천명)	51,765	51,836	25,250	25,368	2배	2배

* 출처 :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구분	배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2006.7.15.)	장거리미사일 발사 (2006.7.5.)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 (2006.10.9.)	·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2009.6.12.)	2차 핵실험 (2009.5.25.)	·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1.22.)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3.7.)	3차 핵실험 (2013.2.12.)	·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금지 등)
2270호 (2016.3.2.)	4차 핵실험 (2016.1.6)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2.7.)	·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 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9.9.)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2356호 (2017.6.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5.14.)	·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8.5.)	탄도미사일 발사 (2017.7.4., 7.28.)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9.11.)	6차 핵실험 (2017.9.3.)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정유제품 연간 200만 배럴 상한, 원유 현 수준 동결 ·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12.22.)	화성-15형 발사 (2017.11.29.)	·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대상 나포, 검색, 억류 ·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대북 유류 공급 추가 제한 *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 원유 연간 400만 배럴 · 북한의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일반부록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의	주요 내용(요약)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 10. 21.)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 미·북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② 9·19 공동성명 (2005. 9. 19.)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③ 2·13합의 (2007. 2. 13.)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 미·북·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직접적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④ 10·3합의 (2007. 10. 3.)	· 북한의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⑤ 2·29합의 (2012. 2. 29.)	·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 미국,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 미국, 대북 적대의사 없음을 확인 · 미·북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⑥ 판문점선언 (2018. 4. 27.)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⑦ 미·북공동성명 (2018. 6. 12.)	·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송환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 미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평가

| 핵 기반시설 구축 | 북한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복구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인력 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강좌를 개설하였고 1956년에는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 드브나(Dubna)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산, 순천, 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개발과 채광된 우라늄을 정련하기 위한 시설 등도 건설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핵시설들을 차례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 핵 개발 본격화 |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생산시설 구비, 우수한 핵 전문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등이 차례대로 완공되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5MWe 흑연감속용 원자로를 1986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85년에 착공, 1989년부터 가동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변 핵단지 내 5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가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태천에는 20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5MWe 원자로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91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북한의 핵활동 신고내역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고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옵션까지 검토하였으나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기본합의[1]」 타결로 북핵문제가 극적으로 봉합[2]됨으로써 북한의 핵 활동은 이후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3차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 (1994.10.21.)
2) 북한의 핵개발 동결·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중유 제공, 경수로 2기 건설, 미북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안정성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중수지원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월) 10:36	2009.5.25.(월) 09:54	2013.2.12.(화) 11:57	2016.1.6.(수) 10:30	2016.9.9.(금) 09:30	2017.9.3.(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수차례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 달성'을 주장[3]하였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병진노선 승리'와 '핵무기 병기화 검증 완료'를 주장하며 추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 선언하였고 2018년 5월 24일에는 내외신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와 지원시설을 폭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2021년 초부터 영변 핵단지 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물질 생산을 재개하였다. 또한, 2022년 초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북한이 주장하는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의미(2013.5.21. 노동신문 / 2016.9.9.핵무기연구소 성명)
- 표준화 :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 규격화 :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의미
- 소형화 : 핵탄두의 폭발력이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
- 경량화 :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을 의미
- 다종화 : 해당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핵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수소·중성자탄, 파괴력·사거리에 따라 전략·전술·전역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2021년 이후

일자	주요내용
2021. 3. 25.	함남 함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
2021. 9.15.	평남 양덕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
2021. 9.28.	자강 무평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발사
2021.10.19.	함남 신포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발사
2022. 1. 5.	자강도 일대에서 준중거리(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11.	자강도 일대에서 준중거리(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 탄도미사일발사
2022. 1.14.	평북 의주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17.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27.	함남 함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30.	자강 무평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2. 27.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북한은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발사
2022. 3. 5.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북한은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발사
2022. 3.16.	평양 순안에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2022. 3.24.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2022. 4.16.	함남 함흥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 4.	평양 순안에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 7.	함남 신포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12.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25.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6. 5.	평양 순안·평남 개천·평북 동창리·함남 함흥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22. 9.25.	평북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9.28.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9.29.	평남 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1.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4.	자강 무평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6.	평양 삼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9.	강원 문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14.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28.	강원 통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 2.	평북 정주·평북 피현·강원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1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탄착
2022.11. 3.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평남 개천, 황북 곡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 5.	평북 동림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 9.	평남 숙천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17.	강원 원산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18.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2022.12. 18.	평북 동창리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북한은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발사
2022.12. 23.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2. 31.	황북 중화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20. 12. 1. ~ 2022. 12. 31.

북 측	일자	남 측
김여정 담화 발표 *외교부장관의 북한 비상방역조치 관련 의문 제기에 비난	12.9.	
	12.15.	**판문점 견학 잠정 중단** *코로나19 방역 강화
김정은 주관, 당 중앙위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 *8차 당대회 일정 공표, 집행부 구성안 등 토의	12.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제25조 벌칙 등 신설
제8차 당대회(1.5.~12.)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등	2021.1.5.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당 중앙위 제8기1차 전원회의** *정치국 지도그룹 대폭 교체, 규율조사부·법무부 신설 등	1.10.	
	1.11.	**대통령, '21년 신년사** *한미동맹 강화, 미북대화 및 남북대화에서 대전환 언급 **합참, 언론의 열병식 동향 관련 보도에 답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 정밀추적 중
김여정 담화 발표 *합참의 '열병식 동향 정밀추적'발표 관련 비난	1.12.	
제8차 당대회(1.5.~12.) 기념 열병식 *당대회기념 열병식 최초 시행(전술유도무기, 북극성5형 최초공개)	1.14.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8.~11.) *부문별 경제목표 조정, 경제관리 개선 등 주문	2.8.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인민군대내 혁명적 도덕규율 확립 문제 토의	2.24.	
	3.1.	**대통령, 3·1절 102주년 기념사** *남북관계 발전에서의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3대 원칙 강조
	3.8.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3.8.~18.)**
김여정 담화 발표 *'한미연합지휘소훈련'(3.8.~18.)비난	3.16.	**정부, 김여정 담화 관련 유감 표명**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 표명, 남북미 대화 중요성 강조
	3.17.	**한미 외교·국방 회담(3.17.~18.서울)**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한미동맹 현안 논의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 *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주장	3.18.	**한미 외교·국방 공동성명 채택** *북핵문제는 시급한 사안, 양국간 긴밀한 공조 중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함남 함주)	3.25.	
	3.26.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민들 우려 언급

북 측	일자	남 측
당 중앙위 비서(이병철)담화 발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주권국가 자위권 주장	3.27.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발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중기준 비난	3.28.	
김여정 담화 발표 *'서해수호의 날'(3.26)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관련 언급에 대해 비난	3.30.	**정부, 김여정 담화에 유감 표명** *서로를 향한 언행에 최소한의 예법 준수 강조
	4.1.	**정부,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
	4.30.	**탈북민단체, DMZ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2회(4.25.~29.)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 살포
김여정 담화 발표 *민간단체 대북전단살포를 도발이라고 주장 및 비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발표** *북핵위협에 대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기조로 대처한다는 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난	5.2.	**정부, 외무성 담화 관련 입장**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미북대화 재개 노력에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점을 발표
	5.3.	**정부,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
	5.12.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
	5.21.	**한미 정상회담** (미국 워싱턴 D.C.)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등 논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비난 보도 (조중통)	5.31.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6.15.~18.) *김정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강조	6.17.	
김여정 담화 발표 *북의 대미입장에 대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흥미로운 신호'라는 발언에 반발, 비난	6.22.	
외무상 담화 발표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 일축, 거부입장 표명	6.23.	
	6.24.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종료** ('19.4.1.~'21.6.24.)
남북 군통신선 복원 *'20.6.9일 차단이후 414일 만에 복원	7.27.	**정부, 남북 군통신선 전면 복원 발표** *오전 10시부 복원
김여정 담화 발표 *통신선 복원조치 발표, 연합연습시행 시행여부 예의주시	8.1.	
김여정 담화 발표 *한미연합연습 개시 비난,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 **남북통신선(남북공동연락사무소·軍통신선)차단**	8.10.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8.10.~13.)**

북 측	일자	남 측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담화 발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재강조, 한미연합연습 비난	8.11.	**정부, 북 담화 관련 입장 표명**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
	8.15.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남북공존'·'한반도비핵화'·'항구적 평화' 강조
	8.16.	**한미연합지휘소훈련 (CCPT, 8.16.~26.)**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주관, 당의 국토관리정책 철저히 관철, 방역대책 강화, 올해 농사결속 등 논의	9.2.	
	9.3.	**DMZ내 백마고지 1단계 지역 유해발굴 (9.3~11.26) 개시**
정권수립일 73주년 기념 민간·안전무력 열병식 *김정은 주관, 정주년 수준의 열병식 등 행사 진행	9.9.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남 양덕) **김여정 담화 발표** *대통령의 SLBM 시험발사 참관시 '북 도발'언급 관련 비난	9.15.	**대통령, '한국 독자개발 SLBM 시험 발사' 참관** *우리 미사일 전력은 북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
	9.21.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를 위해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 제안
김여정 담화 발표 *종전선언은 긍정적 평가, 상호존중,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 **외무성 부상 담화 발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언급	9.24.	
김여정 담화 발표 *이중기준 철폐 재강조, 상호존중 유지될 때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의 관계개선 가능 언급	9.25.	
	9.27.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협력 증진 강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자강 무평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개최** (9.28.~29.)	9.28.	
김정은,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남북관계 관련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회 강조,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 표명	9.29.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발표 *북 탄도미사일 발사관련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10.1) 개최 비난	10.3.	
남북 군통신선 복원 *8.10. 단절 후 55일 만에 복원	10.4.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최 (10.11.~22.) *김정은 기념연설, 한미의 '이중적 태도' 지적, '주적은 전쟁이고, 한미가 아님'을 언급	10.16.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함남 신포)	10.19.	**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관련 유감 표명**

북 측	일자	남 측
	10.25.	**대통령, '22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노력 강조
	10.27.	**을지태극연습 (10.27.~29.)**
	11.30.	**판문점 견학 재개**
	12.2.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억제태세 강화, 북 위협의 효과적 억제·대응위한 新전략기획지침 하달
	12.7.	**'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2022.1.1.	**대통령, '22년 신년사** *"남은 임기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탈북민 1명, 강원도 동부전선 월북**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자강도 일대)	1.5.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자강도 일대)	1.11.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 의주일대)	1.14.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1.17.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전면 중지하기로한 활동의 재가동 문제 검토"	1.19.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함남 함흥)	1.27.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자강 무평)	1.30.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2.27.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3.5.	
	3.8.	**서해 북 선박 (7명 탑승) NLL월선, 나포 (백령도)** *지역합동정보조사결과 대공혐의점 없음
	3.9.	**서해 북 선박·인원(7명) NLL선상 송환**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보도 *우주국방과학기술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개발 독려	3.10.	
김정은,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지도 보도 *위성발사장 개건 현대화 목표 제시	3.11.	**정부, '김정은 위성발사장 확장·개건 지시' 관련 입장** *'북은 긴장행위 중단, 대화 복귀' 강조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3.16.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3.24.	
	4.1.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舊육군미사일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舊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확대·개편**
김여정, 당비서(박정천) 담화 발표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관련 비난, 우리군이 선제 타격시 서울과 우리군을 괴멸시키겠다는 수사적 위협	4.3.	

북 측	일자	남 측
김여정 담화 발표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관련 비난, 핵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4.5.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함남 함흥)	4.16.	
	4.18.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4.18.~28.)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 개최	4.25.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5.4.	**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규탄 및 대화·외교 촉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함남 신포)	5.7.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국가최중대비상사태' 발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인정, 전국적 방역 봉쇄령 하달	5.12.	
김정은 주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 *인민군 군의부문 투입 특별명령 하달	5.16.	
	5.21.	**한미정상회담 개최** (서울)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한미 연합훈련 확대, EDSCG 재가동 등 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5.25.	**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시행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6.5.	
	6.6.	**한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동해상 ATACMS 8발 발사
	6.11.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싱가포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공감
김정은 주관,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 (1일차)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논의(부위원장 직제, 각급 군사위원회 역할 제고 등)	6.21.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 (2일차)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확정,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 논의	6.22.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 (3일차) *전쟁억제력확대 강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논의	6.23.	
노동신문, 코로나 유입경로 분석결과 보도 *'강원 금강군' 일대 색다른 물건 접촉후 발생, 전국적 확산됐다고 주장, 대북전단으로 유입 시사	7.1.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김정은, 남측이 선제타격시 정권·군대 전멸 등 위협적 수사	7.27.	

북 측	일자	남 측
	8.1.	**김정은 발언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한미일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8.1.~14.)
김정은 주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김여정, "코로나19 유입 남측 책임, 강력한 보복" 언급	8.10.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 담화 발표 *'CVID'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주권침해행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동조하는 유엔사무총장 비난	8.14.	
	8.15.	**대통령, 광복절 77주년 경축사**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호응 촉구
김여정 담화 발표 *'담대한 구상' 관련 비난	8.19.	
	8.22.	**한미연합연습 (UFS, 8.22.~9.1.)**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9.7~8) *김정은 시정연설, 「핵무력정책」 법제화(9.8)	9.7.	
	9.13.	**국방부, 북 「핵무력정책법」 관련 입장 발표** *"북, 핵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
	9.16.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DSCG)개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 발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설' 부인 및 미국 비난	9.22.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 태천) **제8기 제10차 당 정치국 회의**	9.25.	**정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9.26.	**한미 연합해상훈련 (9.26.~29.)**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9.28.	**정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남 순천)	9.29.	**미 부통령, DMZ 방문**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강조 **정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10.1.	**정부,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자강 무평)	10.4.	**정부,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한반도와 국제평화 위협
	10.5.	**한미,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지대지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삼석) **전투기(8대)·폭격기(4대) 시위 비행**	10.6.	**합참, 전투기(30여대) 대응 출격**
전투기 (150여 대) 무력시위	10.8.	**공군, F-35A 대응출격**

북 측	일자	남 측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원 문천)	10.9.	**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합참, 북 도발 강력 규탄, 즉각 중단 촉구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9.25~10.9) 보도 *김정은 주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응 명분으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진행 주장	10.10.	
장거리 순항미사일 (평남온천일대 2발) **발사보도** *김정은 현지지도, △핵전략무력운용공간 확대, △국가핵전투무력 무한대 △가속적 강화발전 강조	10.13.	**한미연합 MLRS사격훈련** *MDL이남 5km 밖에 위치한 '담터사격장'에서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방사포·해안포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남측 전선지역에서의 포사격으로 도발적 행위 감행에 따른 대응조치 주장	10.14.	**정부,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합참, 대북 경고입장 발표** **국방부, 「9·19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정부,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개인 15명, 기관 16개소
	10.17.	**'22년 호국훈련** (10.17.~28.)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방사포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0.18.	
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0.19.	**국방부, 「9·19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거듭 확인
서해 해상완충구역내 방사포 10발 발사 *합참의 NLL침범 북 상선에 경고사격에 대한 대응 주장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0.24.	**북 상선 1척, 서북방 북방한계선(NLL) 침범** *합참, NLL침범 북상선에 경고사격 및 퇴거 조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원 통천)	10.28.	
	10.31.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개시**
북·러 열차 재개 *코로나19로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	11.1.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담화 발표** *한미의 연합훈련 및 대응에 대한 비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 정주, 평북 피현, 강원 원산) * 1발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탄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 방사포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1.2.	**합참, 북 미사일 NLL이남 낙탄 관련 경고 및 대응** *작전본부장, 대북 경고,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F-15, KF-16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 사격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박정천) 담화 발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 비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남 개천, 황북 곡산) **동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1.3.	**정부,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 불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 강조

북 측	일자	남 측
전투기 180여 대 동원하 공중 비행훈련 **외무성 대변인 성명**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을 당장 중지 경고	11.4.	**합참,F-35A 등 80여 대 긴급 대응** **'비질런트 스톰' 훈련 1일 연장 결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 동림일대)	11.5.	**'비질런트 스톰' 훈련 종료 (10.31~11.5.)**
총참모부, '비질런트 스톰' 대응 군사작전 시행 발표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하여 11.2~5일간 미사일·방사포 발사, 500여대 대규모 비행훈련 등 진행 주장	11.7.	**태극연습 (11.7.~10.)**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만 진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 지휘소 연습(CPX)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담화 발표 *미 백악관에서 제기한 '북러 무기거래설'부인	11.8.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남 숙천일대)	11.9.	**합참,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11.10.	**합참,「핵·WMD 대응본부」 신설**
	11.13	**한·미·일 정상회담, 「프놈펜 선언」 발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각 공조 재확인
외무상 담화 발표 *'한미일 프놈펜 성명'비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원도 원산일대)	11.17.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11.18.	**정부, 북 ICBM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도발 즉각 중단,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한미, 북 ICBM 도발에 대응하여 F-35A 스텔스기 출격** **국방부, '제1회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개최**
	11.19.	**한미 연합공중훈련실시** *B-1B 한반도 재전개
외무상 담화 발표 *구테흐스 총장의 북 ICBM 발사 '도발'규정을 비난	11.21.	
김여정 담화 발표 *유엔 안보리의 북 ICBM 발사문제 논의를 '명백한 이중기준' 이라며 비난	11.22.	
	11.23.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캄보디아) *북한이 핵포기 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 요청 **한·중 국방장관회담** (캄보디아)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 당부 **L-SAM, 표적 미사일 요격 시험 첫 성공**
김여정 담화 발표 *남측 독자제재 검토 비난	11.24.	
	11.26.	**DMZ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2단계 1차 유해발굴 종료**
김정은, ICBM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촬영 및 포상 *둘째 자녀 대동	11.27.	
김정은 주관,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 *8기 6차 전원회의 소집 논의, 12월 하순 소집 결정	11.30.	

북 측	일자	남 측
	12.2.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개인 8명, 기관 7개) 추가 지정** *북 핵·미사일 개발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를 운송한 대상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한미의 사격훈련을 전선근접지대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중단 경고 **동해상** (강원도 금강군일대) **방사포** (추정) **45여발 사격**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내 탄착, 「9·19군사합의」위반 **서해상** (황해남도 장산곶일대) **방사포**(추정) **85여발 사격**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내 탄착, 「9·19군사합의」위반	12.5.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 (12.5.~6.)** *다연장로켓(MLRS), K-9 자주포 *MDL이남 5km 밖에 위치한 '담터사격장'에서 사격 **합참, 북 방사포 발사에 대한 경고 통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중단"주장 **총참모부, 대응 목적 '해상실탄포사격 단행' 명령** **동해상** (강원도 고성군일대) **방사포** (추정) **90여 발 사격** **동해상** (강원도 금강일대) **방사포** (추정) **10여 발 사격**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남측의 「9·19군사합의」위반 주장은 궤변, 자극적인 군사행동 중단 주장	12.6.	**합참, 북 포병사격 중단 강력 촉구**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성공' 보도 *12.15. 김정은 현지지도하 진행, 140tf 출력 주장	12.16.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 동창리) *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12.18.	**정부,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경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 및 도발을 계속하는 행태에 대해 북정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 경고
김여정 담화 발표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 강변, ICBM 정상각도 발사 시사, 「담대한 구상」 비난	12.20.	
	12.21.	**한미 연합공군훈련 (12.21~22)** *F-22, B-52H 전략자산 전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미국이 북의 자위권 행사를 비난하려는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비난 **외무성 대변인 대답** *일본언론의 '북러무기거래설' 보도에 사실무근 주장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양 순안)	12.23.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12.26~31) **북 무인기(5) MDL 이남 침범** *경기 강화(4)·서울북부지역(1)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 위반	12.26.	**합참,경기 강화 및 서울북부지역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대응** *무인기 침범 탐지, 유무인 정찰자산 투입하 작전 시행 *북 무인기의 우리 관할구역 침범에 따른 자위권차원의 상응조치로 MDL이북지역에 우리군 무인기 정찰활동 시행 *작전부장, 북 무인기 침범은 명백한 도발,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12.28.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12.29.	**합참, 소형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방공훈련 시행** **유엔사, 북 무인기 침범 관련 특별조사**

북 측	일자	남 측
	12.30.	**국방부, '고체연료추진 방식 우주발사체' 비행시험 성공 발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황북 중화) **김정은 주관, '초대형 방사포증정식' 행사** *남측지역 전역이 전술핵 사정권임을 언급	12.31.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3,121	398	1,336	403	227	250
침투	2,002	379	1,009	310	167	94
국지도발	1,119	19	327	93	60	156

구분	2000년대	2010~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41	264	0	1	0	1
침투	16	27	0	0	0	0
국지도발	225	237	0	1	0	1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 (2020.12.1. ~ 2022.12.31.)

일자	주요 내용
2022.12.26.	북 소형 무인기 5대, 김포 전방 MDL 침범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121	398	1,336	403	227	250	241	264	0	1	0	1
침투	직접 침투	1,749	375	988	298	38	50	0	0	0	0	0	0
	간접 침투	214	0	0	0	127	44	16	27	0	0	0	0
	월북·납북자 남파	39	4	21	12	2	0	0	0	0	0	0	0
	소계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7	0	0	0	0
국지도발	지상 도발	503	7	298	51	44	48	42	12	0	1	0	0
	해상 도발	559	2	22	27	12	107	180	209	0	0	0	0
	공중 도발	52	10	7	15	4	1	3	11	0	0	0	1
	GPS 교란	5	0	0	0	0	0	0	5	0	0	0	0
	소계	1,119	19	327	93	60	156	225	237	0	1	0	1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일 시	장 소	위반 종류
1	'19.11.23.	북한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
2	'20.5.3.	중부전선 우리측 GP	우리 GP에 총격
3	'22.10.14.	황해 마장동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4	'22.10.14.	강원 구읍리 일대	
5	'22.10.14.	강원 장전 일대	
6	'22.10.14.	황해 해주만 일대	
7	'22.10.14.	황해 장산곶 일대	
8	'22.10.18.	황해 장산곶 일대	
9	'22.10.18.	강원 장전 일대	
10	'22.10.19.	황해 연안군 일대	
11	'22.10.24.	황해 장산곶 일대	
12	'22.11.2.	NLL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해상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
13	'22.11.2.	강원 고성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14	'22.11.3.	강원 금강 일대	
15	'22.12.5.	강원 금강·황해 장산곶 일대	
16	'22.12.6.	강원 고성·금강 일대	
17	'22.12.26.	서울 북부·경기 강화 일대	북한소형무인기(5대) 우리 관할지역 침입

※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 등 기타 위반사례 다수 발생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유형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자유의 방패 (FS, Freedom Shield)	전구급 연합 지휘소 연습	· 한미 연합방위체제 下 전구작전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안정화, 전쟁지속능력 배양 *UFS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 통합 시행으로 국가 총력전 수행체계 숙달	· 공동위기관리 · 전시전환 · 전시 작전계획 시행 *UFS시 정부연습 병행, 충무계획 시행
을지 자유의 방패 (UFS, Ulchi Freedom Shield)	전구급 연합 지휘소 연습+ 정부연습		

*2022년 7월, 한미 군사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 체계를 재확립하기 위해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
(연합지휘소훈련, CCPT ⇨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UFS)
└,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태극연습	전구급 합동 지휘소연습	· 합참 주도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 위기관리 · 전시전환 · 전시 작전계획 시행
호국훈련	전구·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 전구·작전사급 합동작전 수행능력제고 · 합동작전 운용 및 지원능력 배양	· 국지도발 및 전시 작전계획 시행 · 합동성 및 실전성 강화를 위한 실기동 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 테러대비작전 · 침투·국지도발대비작전 · 전시전환 및 전면전 대비작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서울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이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연중 균형되게 실시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측 시설 및 공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 및 협력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발전방안 모색과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공유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해 2022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등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적시성 강화를 위한 양자 협의체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정치적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 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금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 직원 및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대한민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주목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정부와 모든 미군 장병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국방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유관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1.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을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2년 11월 3일, 미국 워싱턴 D.C.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및 확산 활동에 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

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상호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

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 기지(U.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양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8.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내역 : 약 3.4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21년
직접지원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5,598), 군사건설(4,368), 군수지원(1,867)	11,833
		방위비분담금 외	美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	210
			카투사 병력지원	169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2,789
			부동산 지원	95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5,917
	직접지원 합계			**21,013**
간접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10,739
			카투사 기회 비용	904
			훈련장 사용지원	337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247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7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93
	간접지원 합계			**13,417**
총계				**34,430**

항목별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美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	美 통신선 사용료 및 연합C4I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보상호 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간 구두협약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반환기지 내 구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화비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역 등	SOFA 제2조·제5조, SOFA 양해사항 제2조·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제5조, SOFA 양해사항 제2조·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지 주변 정비비용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비용 (주변 도로정비, 지역개발 지원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제3조·제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여 토지의 임대료 기회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카투사 기회 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일 경우를 가정시,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간 구두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훈련장·사격장 이용 지원 비용	SOFA 제2조·제5조, 한국군 훈련장·사격장의 주한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 및 감면 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SOFA 제6조·제10조·제14조·제16조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48개국

2022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프랑스	1992. 3.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인도네시아	1995. 10.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루마니아	1997. 11.
네덜란드	1999. 6.	튀르키예	1999. 12.	베네수엘라	1999. 12.	베트남	2001. 8.
호주	2001. 8.	방글라데시	2004. 1.	인도	2005. 9.	파키스탄	2006. 5.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에콰도르	2010. 1.
우즈베키스탄	2010. 2.	페루	2010. 6.	UAE	2010. 9.	노르웨이	2010. 9.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체코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보츠와나	2017. 1.	에스토니아	2017. 2.
크로아티아	2017. 2.	사우디아라비아	2017. 9.	카자흐스탄	2017. 10.	아르헨티나	2019. 2.
뉴질랜드	2019. 5.	스웨덴	2019. 6.	파라과이	2019. 10.	에티오피아	2020. 12.
바레인	2021. 9.	요르단	2021. 10.	케냐	2022. 8.	그리스	2022. 9.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보호 협정(21개국)	품질보증 협정(25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UAE,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다자간* * 미국 등 14개국 다자간 체결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튀르키예,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국방협력협정[1] 체결 현황

2022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독일	1994. 5.	싱가포르	2009.12.	아제르바이잔	2013.12.	미얀마	2017. 9.
캐나다	1995. 5.	리투아니아	2010. 2.	뉴질랜드	2014. 5.	캄보디아	2018. 9.
이스라엘	1995. 8.	인도	2010. 9.	카타르(조약)	2014.11.	브루나이	2018. 9.
러시아	1996.11.	카자흐스탄	2010. 9.	체코	2015. 2.	이탈리아(조약)	2018.10.
튀르키예	1999.11.	베트남	2010.10.	콜롬비아	2015. 3.	칠레(조약)	2019. 4.
몽골	1999.12.	루마니아	2010.10.	불가리아	2015. 5.	바레인	2019. 6.
쿠웨이트	2004.11.	가봉	2011.10.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오만	2019.10.
브라질(조약)	2006. 3.	페루	2011.10.	파라과이	2016. 1.	세네갈	2019.10.
우크라이나	2006. 9.	호주	2011.12.	에티오피아	2016. 5.	헝가리	2019.11.
UAE(조약)	2006.11.	태국	2012. 3.	우간다	2016. 5.	러시아(조약)	2021. 3.
스페인	2006.12.	중국	2012. 7.	에콰도르	2016. 7.	라오스	2021. 6.
우즈베키스탄	2008. 6.	사우디아라비아(조약)	2013. 2.	보츠와나	2017. 1.	말레이시아	2022. 4.
일본	2009. 4.	인도네시아(조약)	2013.10.	피지	2017. 1.	슬로바키아	2022. 9.
스웨덴	2009. 7.	필리핀	2013.10.	이집트	2017. 3.	파키스탄	2022. 10.
요르단(조약)	2009.10.	폴란드(조약)	2013.10.	앙골라	2017. 3.		

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발생 등) 등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22년 12월 기준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10.)	한국(1991.9.) 북한(1991.9.)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논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1.)	한국(1991.9.) 북한(1991.9.)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제네바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84.2.)	한국(1996.6.) 북한(1996.6.)	·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1개국 (1970.3.)	한국(1975.4.) 북한(1985.12.) *2003.1. 탈퇴	·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3개국 (1957.7.)	한국(1957.8.) 북한(1974.9.) *1994.6. 탈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74개국 (미발효, 186개국 서명)	한국(1999.9.) 북한(미가입)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핵무기금지조약 (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68개국 (2021.1)	남·북한 미가입	·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 등을 통한 획득·보유·축적 금지 · 핵무기 또는 그 통제권의 직간접 이전·접수 금지 ·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 금지
미사일 및 우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43개국 (2002.11.)	한국(2002.11.) 북한(미가입)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00개국 (1959.12)	한국(1994.9.) 북한(미가입)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생물화학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84개국 (1975.3.)	한국(1987.6.) 북한(1987.3.)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폐기 *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화학무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재래식무기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13개국 (2014.12.)	한국(2017.2.)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6개국 (1983.12.)	한국1의정서 (2001.5.) (개정)2의정서 (2001.5.) 5의정서(2008.1.) 북한(미가입)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12.)	한국(1993.3.) 북한(미참여)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대인지뢰금지협약 (Ottawa Convention)	164개국 (1999.3.)	남·북한 미가입	·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금지 · 대인지뢰 폐기(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10개국 (2010.8.)	남·북한 미가입	·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다자수출통제체제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8.)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NPT 미가입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1.)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3개국 (1985.6.)	한국(1996.10.) 북한(미가입)	·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4.)	한국(2001.3.) 북한(미가입)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및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2개국 (1996.7.)	한국(1996.7.)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7개국 (2003.6.)	한국(2009.5.) 북한(미가입)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일반부록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3개 지역 1,005명

2022년 12월 기준

구분				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교대주기
UN 평화 유지 활동	부대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278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76	보르	2013. 3.	
	개인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6	이슬라마바드 등	1994. 11.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10	주바 등	2011. 7.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	라윤 등	2009. 7.	
	소계			577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263	소말리아해역	2009. 3.	6개월
	개인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5	바레인	2008.1.	1년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연락장교	2	바레인	2020. 2.	
		지부티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2009. 3.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3	플로리다	2001. 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 3.	
		이라크·쿠웨이트 다국적군지원사령부 (CJTF-OIR)	참모장교	2	쿠웨이트 아리프잔	2019. 12.	
			참모장교	2	이라크 바그다드	2022. 8.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참모장교	1	소말리아해역	2020. 3.	9개월
	소계			280			
국방협력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148	아부다비	2011. 1.	8개월
	소계			148			
총계				1,005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73년	동결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75년	동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1981년	동결			
1982년	4,200	3,700	3,300	3,0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1984년	동결			
1985년	4,600	4,000	3,600	3,3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결			
1999년	동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2009년	동결			
2010년	동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2019년	동결			
2020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2021년	608,500	549,200	496,900	459,100
2022년	676,100	610,200	552,100	510,100

*출처 : – 1983년~2021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년~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 → 18	26 → 20	27 → 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2018년	21 → 18	23 → 20	24 → 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2020년	18	20	22 → 21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국방기구도

소속기관(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개별법상 조직(4)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직부대·기관(26)
(*가나다순)
· 계룡대근무지원단
· 고등군사법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복지단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심리전단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체육부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방대학교
· 국방부검찰단
·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근무지원단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국방부조사본부
· 국방시설본부
· 국방정보본부
· 국방정신전력원
· 국방출판지원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군방첩사령부
· 사이버작전사령부
· 합동군사대학교
장관
군사보좌관
대변인
차관
정책보좌관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군인권개선추진단
법무관리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지능정보화정책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방위정책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군공항이전사업단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행사 실시 · 참배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국방누리(뉴미디어)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본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전산장비 획득·운영 · 국방부본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사무용 전산기기/SW 획득·운영 및 지원 ·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 자료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지원단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여부심사,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 자료확인 및 조사 · 그 밖에 지뢰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준비 및 사무업무 지원 · 공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 자료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운영 · 전쟁 및 군사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 전역예정군인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 전역예정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20.12.1. ~ 2022.12.31.)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160	46	66	48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제17680호 (2020.12.22.)	·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제17683호 (2020.12.22.)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제17686호 (2020.12.22.)	·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 · 분담하고, 적의 침투 · 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지의 상황을 조사 · 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한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7823호 (2021.1.5.)	· 이 법의 목적과 5 · 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며, 5 ·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 · 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17991호 (2021.4.13.)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제정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992호 (2021.4.13.)	· 6 · 25전쟁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6 · 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개정
6 · 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17993호 (2021.4.13.)	· 6 · 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994호 (2021.4.13.)	·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함)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7995호 (2021.4.13.)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7996호 (2021.4.13.)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전사 · 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개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제17997호 (2021.4.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입회"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참관"으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998호 (2021.4.13.)	·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고려"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7999호 (2021.4.13.)	·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8000호 (2021.4.13.)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 · 유학 ·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001호 (2021.4.13.)	·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법률 제16924호, 2021.1.1.시행), 대체복무요원의 예외적인 복무기간 인정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석방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002호 (2021.4.13.)	· 일본식 한자어인 "저리"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저금리"로 순화하려는 개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8004호 (2021.4.13.)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005호 (2021.4.13.)	· 일본식 한자어인 "개호"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간병"으로 순화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8007호 (2021.4.13.)	·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내 · 외국인간 문화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인적 ·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화계획지구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신도시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8465호 (2021.9.24.)	·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제18486호 (2021.10.19.)	·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8540호 (2021.12.7.)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 ·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일부개정 제18541호 (2021.12.7.)	·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679호 (2022.1.4.)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 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 · 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8680호 (2022.1.4.)	·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처분근거 및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 ·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8681호 (2022.1.4.)	·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800호 (2022.2.3.)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 대응 ·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8801호 (2022.2.3.)	·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한편,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802호 (2022.2.3.)	· 전쟁 ·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군의 응급환자 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 · 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군작전 수행 중에는 군시설 등 한정된 영역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군인 등도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8803호 (2022.2.3.)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법」상 성년인 19세에 이르더라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녀 및 손자녀의 퇴직유족급여 수급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제18804호 (2022.2.3.)	·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에만 상이등급 제7급으로 인정하였는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는바, 남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8805호 (2022.2.3.)	·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 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는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한바,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제18806호 (2022.2.3.)	·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 · 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1호 (2022.12.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掘土)"를 "땅파기"로 순화하려는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2호 (2022.12.1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3호 (2022.12.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勘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9074호 (2022.12.13.)	· 군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5호 (2022.12.13.)	·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제19076호 (2022.12.13.)	·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9077호 (2022.12.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용어인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圖示)하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9078호 (2022. 12. 13.)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제19079호 (2022. 12. 13.)	· 국가가 군인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제19080호 (2022. 12. 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구(補助器具)"로 순화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일부개정 제19082호 (2022. 12. 13.)	·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및 훈련 도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9083호 (2022. 12. 13.)	·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9084호 (2022. 12. 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개정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98호 (2020.12.1.)	· 국방과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에 해병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해병대 소관 방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듣기 위해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당연직 이사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려는 개정
사단령	일부개정 제31275호 (2020.12.22.)	· 앞으로는 보병사단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이 아닌 사단도 두기 위하여 보병사단령의 제명을 사단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도 함께 정비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540호 (2021.3.16.)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청사건의 심사 · 결정을 위원과 소청인 등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542호 (2021.3.23.)	· 「통합방위법」이 개정(법률 제17686호, 2021.3.23.시행)됨에 따라 정보센터와 합동정보조사팀의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에 소방본부장을 추가하려는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 제31557호 (2021.3.30.)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의 기준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1560호 (2021.3.30.)	·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 ·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626호 (2021.4.20.)	·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자녀를 비롯한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 제31627호 (2021.4.20.)	·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군 참모총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인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국외에 유학 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일시 귀국 승인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군위탁생이 수학 중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를 하여 해임된 경우 등에 반납해야 하는 지급경비를 감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674호 (2021.5.11.)	·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체계지원요소의 개념을 도입하고, 무기체계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분품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방위산업물자의 범위에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724호 (2021.6.8.)	·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31796호 (2021.6.22.)	·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 사용 기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제31799호 (2021.6.22.)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의 상한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기제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800호 (2021.6.22.)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881호 (2021.7.13.)	·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던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1904호 (2021.7.23.)	· 국방개혁실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3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908호 (2021.7.27.)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교수 등의 징계에 관하여 모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개정
국방출판지원단령	전부개정 제31909호 (2021.7.27.)	· 종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국방출판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 제31910호 (2021.7.27.)	· 군 조직 운영 및 계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계엄사령부의 각 처장 및 실장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924호 (2021.8.3)	· 예비군대원의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 제한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21호 (2021.10.5.)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가격에 따르도록 하며,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제32032호 (2021.10.14.)	· 육군 · 해군 ·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1세 연장하는 등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33호 (2021.10.14.)	· 입학연령의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1세 연장하는 등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32034호 (2021.10.14.)	· 군인의 부정청탁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32036호 (2021.10.14.)	·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91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특별진급의 신청 방법 및 특별진급의 제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6 · 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32037호 (2021.10.14.)	· 「6 · 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93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공로금의 지급 기준 · 금액, 공로금의 지급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39호 (2021.10.14.)	· 신고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 보충역 ·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 및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등으로 정하려는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40호 (2021.10.14.)	·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주택관리전문기관은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41호 (2021.10.14.)	· 우리나라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유엔군 유해를 조사 · 발굴하여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 유해의 국적을 결정한 후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유엔군 유해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전사자유해의 조사 · 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개정 제32153호 (2021.11.30.)	· 현재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개정
육군항공사령부령	일부개정 제32154호 (2021.11.30.)	· 육군미사일사령부, 해군잠수함사령부와 같이 특정분야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하고, 군 인사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군항공사령부에 두는 참모장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155호 (2021.11.30.)	·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의 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 전에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과 유사한 신분을 갖는 군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250호 (2021.12.28.)	·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규모에 더하여 본인의 적금 입금액,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2257호 (2021.12.28.)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2명(가군 1명, 나군 1명)을 행정 · 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으로 전환하는 개정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 제32289호 (2021.12.31.)	· 국군재정관리단의 기능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312호 (2021.12.31.)	· 장병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위하여 하사 이상 군인은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인의 임신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408호 (2022.2.11.)	·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본부 등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소요제기서에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 등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조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459호 (2022.2.22.)	·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는 부대를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는 병력규모와 부대위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부대나 격오지(隔奧地)에 위치한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도 전문상담관에 의한 조력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2467호 (2022.2.22.)	·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 · 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518호 (2022.3.8.)	· 비상근 예비군을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구분하고, 그 정원을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5,000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을 연 1회 선발하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정원, 선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제32519호 (2022.3.8.)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장병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32520호 (2022.3.8.)	·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 및 방법, 군 수사기관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민간 수사기관인 검사, 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32530호 (2022.3.11.)	·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두는 조직과 군검사의 정원 등을 정하려는 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32531호 (2022.3.11.)	· 지역별 군사법원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두도록 하고,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지역별 군사법원 재판부에 두는 부장(部長)군판사는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일부개정 제32560호 (2022.4.1.)	·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 · 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지역적 의미가 강조된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으로 한정된 임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전략적 중심 등에 대한 타격을 포괄하는 '전략적 · 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로 확대 · 발전시키려는 개정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32561호 (2022.4.1.)	· 최근 탄도탄(彈道彈)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배치 등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보다 향상된 전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영공 및 군사 주요시설에 대한 지대공 방어'로 한정된 임무를 '전략적 · 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 · 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으로 확대 · 발전시키려는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32580호 (2022.4.19.)	·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32737호 (2022.6.30.)	· 군검사에 대한 지휘 · 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 ·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38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이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39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해군참모총장이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해군본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40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이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41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있는 군검찰 조직을 재편하여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평시 군사법원 및 평시 군 검찰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및 평시 군 검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 제32742호 (2022.6.30.)	· 군인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군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에 맞추어, 군위탁생 선발의 결격사유에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 일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743호 (2022.6.30.)	·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 하면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휘관 직위 중 '고등군사법원장' 직위가 폐지되고 '국방부검찰단장' 직위가 신설된 것에 맞추어, 국방부 직할부대 내 육 · 해 · 공군 간 순환보직의 대상인 지휘관 직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745호 (2022.6.30.)	·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역준비역이나 예비역 등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편입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병역 편입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 · 방식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치원이나 초 · 중 · 고등학교 등에서 장애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필요적으로 그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 제32799호 (2022.7.14.)	· 해양안보를 위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해상항공부대를 효율적으로 통제 ·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군6항공전단을 확대 · 개편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임무, 사령관의 직무, 사령부에 두는 부서 · 부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 제32800호 (2022.7.14.)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대의 규모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된 훈련 규모에 맞는 효율적 지휘 · 통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군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사단급' 부대로 격상하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임무, 단장의 직무, 훈련단에 두는 부서 · 부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834호 (2022. 8. 2.)	· 전쟁 등 특수상황 발생 시 군(軍)의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 · 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 작전 수행 중에는 군 시설 등 한정된 영역에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군인 등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02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관련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제32835호 (2022. 8. 2.)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관생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 · 해군 · 공군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나 부대 등 군 관련 교육기관 외에 국내외 민간대학에도 파견하여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32919호 (2022. 9.27.)	· 군(軍)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무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중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수당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수당의 지급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928호 (2022.10. 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929호 (2022.10. 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3018호 (2022.12. 6.)	·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인 · 간호조무사 · 약사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군인 · 군무원 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도 포함시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려는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019호 (2022.12. 6.)	· 국방대학교에서 국방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수행하는 직무연수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영관급 장교 또는 교수에서 3급 이상의 군무원 또는 교수로 변경하는 한편, 국방대학교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교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협력실을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안전보장대학원 ·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에 4급 이상의 군무원을 추가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020호 (2022.12. 6.)	· 인력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정하여 진급시킬 수 있는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대해 부대 개편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직위 중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5개 직위를 변경하고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과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 2개 직위를 삭제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중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지휘관 등에 대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순환 보직이 가능하도록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의 군 분류를 삭제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3054호 (2022.12.13.)	·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의 발전과 첨단무인전력체계의 확대 및 획득제도의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 1개 과장급 직위를 군인으로 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184호 (2022.12.3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 · 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경우 종전에는 적금의 입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8호 (2020.12.30.)	·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9호 (2020.12.30.)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에 대체복무요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42호 (2020.12.30.)	· 종전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결정하던 것을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하도록 하고,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입증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방위산업체가 조달계약 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1043호 (2021.02.01.)	·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7미만, 33이상에서 BMI 16미만 35이상 등으로 조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따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새로 정하며, 문신의 4급 기준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044호 (2021.02.02.)	· 방위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나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각각의 신청 방법, 방위산업 발전협의회에 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47호 (2021.03.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560호, 2021. 3. 3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군소음보상팀을 신설하려는 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48호 (2021.03.31.)	·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병 등을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F-35 항공작전을 위하여 정보체계 운용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며,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종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출동가산금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제1049호 (2021.03.30.)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절차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0호 (2021.04.16.)	·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종전의 「항공법」을 인용하고 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2호 (2021.04.16.)	·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군 참모총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위탁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군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을 위한 성적기준을 종전에는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평균 평점을 기준으로 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3호 (2021.05.11.)	·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전의 종합군수지원요소 대신 통합체계지원요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군용총포 등의 운반 허가 신청 시 안전 운반 · 관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4호 (2021.05.14.)	· 군 특수 분야 기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종목에 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를 추가하고, 국방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실기시험의 방법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국방자격의 검정시험을 필기시험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며, 국방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5호 (2021.06.2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683호, 2021.6. 23.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출석요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6호 (2021.06.23.)	·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체육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추천 신청서 및 연기 취소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8호 (2021.07.16.)	·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881호, 2022.1.1. 시행)됨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서 접수기관을 국군재정관리단 등으로 변경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9호 (2021.07.2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904호, 2021.7.2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및 국방개혁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조정실 및 국방개혁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1061호 (2021.07.29.)	· 종전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병역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요족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반슬의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2호 (2021.08.06.)	· 병(兵)의 전투부대 복무를 활성화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전투부대의 경우에는 10분의 2까지로 확대하고,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전투부대는 2명까지, 그 밖의 부대는 1명까지 조기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3호 (2021.08.06.)	· 전역증(군 경력증명서)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전역증(군 경력증명서)보다 크기가 작고 사진란을 추가한 전역증(군 경력증명서)의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5호 (2021.10.14.)	· 예술 · 체육요원에 대하여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 ·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예술 · 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 및 교육일 연기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6호 (2021.10.14.)	·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공개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7호 (2021.10.14.)	·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
의무 ·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69호 (2021.11.30.)	· 「병역법」에 따라 의무 · 수의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 · 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을 의무 · 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로 포함하여 그 선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한편, 병무청장이 선발 대상자 명단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의무 · 수의 분야 현역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1호 (2021.12.10.)	· 예비군 교육훈련 업무처리자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제 및 연기 관련 비위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 예비군 업무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한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4호 (2021.12.14.)	·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북핵대응정책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5호 (2021.12.28.)	·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방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4급 1명)으로 환원하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이 전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며,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76호 (2021.12.30.)	·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노무량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계약목적물 생산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인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1077호 (2021.12.30.)	· 지금까지는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정하여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노무비, 경비 등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그 기간을 360일로 확대하고,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선업체들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1078호 (2021.12.31.)	· 선발시험 응시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체력검정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력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법을 개선하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요소의 내용과 배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9호 (2022.02.09.)	· 병적증명서, 병역증 재발급, 전역증 재발급 신청서가 통합되어 있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신청인이 필요한 기재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용이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복학 외에도 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0호 (2022.02.09.)	·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편입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고, 대체역 편입 신청 시의 첨부서류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념의 형성 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 중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은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6호 (2022.02.15.)	· 심신장애인을 군병원으로 전속시키는 기준이 종전에는 진료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1호 (2022.02.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67호, 2022. 2. 22.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대신에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영문화혁신팀을 폐지하면서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사이버대응전력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1일까지에서 2024년 5월 1일까지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6일까지에서 2024년 5월 6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방홍보원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려는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4호 (2022.02.28.)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당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제1087호 (2022.7.12.)	·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8호 (2022.7.5.)	·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체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병적기록표'에 대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45호, 2022. 6. 30.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병적기록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이 그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 서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내용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0호 (2022.7.15.)	·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이버대응전력팀과 안전정책팀을 폐지하면서 국방디지털혁신과 군수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군수지능화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1호 (2022.7.28.)	· 기존에는 '전문인력 직위'를 영관급 장교 및 위관급 장교의 정원 직위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준사관 및 부사관은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에서도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 군수 등 기술 · 기능 전문 분야 등에 속하는 직위에 준사관이나 부사관도 보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92호 (2022.7.28.)	·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 장비 조작 · 운용 요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기술자에 대한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에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신설하여 그 월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잠수함 승조원에 대하여 1년만 지급하던 특수업무수당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에게 계속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함 승조원의 실제 승조기간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제1093호 (2022.8.4.)	· 현재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동 등에 따라 예산소요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으로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더라도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의 증감분이 기존 개산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설계변동과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 증감분의 규모와 관계없이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도 원가 증감분이 기본 대비 100분의 3 이상이면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1094호 (2022.8.9.)	· 예비군부대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중 장교 또는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여부 및 의무복무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전역 장교 · 부사관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현역복무실적 평가의 근무평정 점수 반영 기준을 절대평가 점수에서 종합판정 점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6호 (2022.9.13.)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7호 (2022.10.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등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8호 (2022.10.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의 등분 청구 및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등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100호 (2022.11.18.)	· 군 형사사건기록 중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 복사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검찰관'의 명칭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 · 복사를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범위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101호 (2022.12.5.)	·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 도서 · 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에 대한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는 범위를 2.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군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102호 (2022.12.13.)	·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의 발전과 첨단무인전력체계의 확대 및 획득제도의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 1개 과장급 직위를 군인으로 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054호, 2022. 12. 1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104호 (2022.12.30.)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산정한 기준노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노무량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방산노임단가를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한 단위당 가격에서 업체별 노임단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위원장(국민의힘)

한기호(52년생,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선(18·19·21대) 육사 31기
(현)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
(현)한국-호주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사)한국청소년연맹 명예총재,
(전)국민의힘 사무총장,
(전)육군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

본관 421호
784-1364
6788-5291
F)6788-5295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 병 주 (62년생, 비례대표)
초선
경기대 외교안보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영학 석사,
육사 40기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안보대변인, (전)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회관447호
O)784-4177
6788-6181
F)6788-6185

김 영 배 (67년생, 서울 성북구갑)
초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문재인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민정비서관, (전)민선5·6기 성북구청장

회관 627호
O)784-1521
6788-6241
F)6788-6245

설 훈 (53년생, 경기 부천시을)
5선(15·16·19·20·21대)
고려대 사학과 학사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김대중 총재 보좌관

회관948호
O)784-8570
6788-6616
F)6788-6620

송 갑 석 (66년생, 광주 서구갑)
재선(20·21대)
전남대학교 무역학 학사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전)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회관1020호
O)784-5750
6788-6636
F)6788-6640

송 옥 주 (65년생, 경기 화성시갑)
재선(20·21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행정대학원 졸업
(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회관319호
O)784-9470
6788-6661
F)6788-6665

안 규 백 (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4선(18·19·20·21대)
성균관대 및 同 무역대학원 수료
(전)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전)민주당 조직위원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전)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사무총장·최고위원·서울시당위원장, (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회관807호
O)784-4181
6788-6701
F)6788-6705

윤 후 덕 (57년생, 경기 파주시갑)
3선(19·20·21대)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경제학 석사
(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회관943호
O)784-5041
6788-6901
F)6788-6905

이 재 명 (64년생, 인천 계양구을)
초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전)제35대 경기도 도지사,
(전)제19·20대 성남 시장

회관818호
O)784-8957
6788-6656
F)6788-6660

정 성 호 (61년생, 경기 양주시)
4선(17·19·20·21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제28회 사법고시, (전)제2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2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전)제19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혁신특위 간사

회관646호
O)784-8991
6788-7201
F)6788-7205

국민의힘

간사

신 원 식 (58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사 37기·국민대 경영학 박사
(전)제3보병사단장, (전)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수도방위사령관, (전)합참 작전본부장,
(전)국민의힘 제4정책조정위원장(외교안보)

회관745호
O)784-9630
6788-6681
F)6788-6685

김 기 현 (59년생, 울산 남구을)
4선(17·18·19·21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법학 석사
(전)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울산광역시장,
(전)대구지법·부산법원 울산지원 판사

회관550호
O)784-3874
6788-6126
F)6788-6130

성 일 종 (63년생, 충남 서산시태안군)
재선(20·21대)
고려대 경영학과·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현)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제21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회관423호
O)784-6291
6788-6621
F)6788-6625

이 헌 승 (63년생, 부산 부산진구을)
3선(19·20·21대)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전)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 (전)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전)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회관425호
O)784-7911
6788-7106
F)6788-7110

임 병 헌 (53년생, 대구 중구남구)
초선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영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제23회 행정고시, (전)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전)대구광역시 남구청 남구청장(3선)

회관1014호
O)784-8450
6788-6066
F)6788-6070

비교섭(1)

배 진 교 (68년생, 비례대표)
초선
인천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정의당 민생특위 위원장, (전)정의당 원내대표,
(전)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회관517호
O)784-3080
6788-6551
F)6788-6555

국방위원회
NATIONAL DEFENSE COMMITTEE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21. 1. ~ 2022. 12.)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1대 전반기 국회
제384회 임시회 (2021.2.1.~2.28.)	2021.2.17.	· 업무보고(국방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군인사법」등 법률안 상정
	2021.2.23.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의결
제385회 임시회 (2021.3.2.~3.31.)	2021.3.16.	· 「사관학교 설치법」 등 법률안 의결
제386회 임시회 (2021.4.1.~4.30.)	2021.4.28.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87회 임시회 (2021.5.3.~6.1.)	2021.5.31.	·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88회 임시회 (2021.6.4.~7.3.)	2021.6.9.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제389회 임시회 (2021.7.5.~7.31.)	2021.7.26.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제390회 임시회 (2021.8.17.~8.31.)	2021.8.20.	· 업무보고(국방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상정
제391회 정기회 (2021.9.1.~12.9.)	2021.9.8.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21.9.15.	· 2021년도 국정 감사계획서 채택 · 「예비군법」 등 법률안 의결
	2021.10.5. ~10.21.	· 2021년도 국정감사 실시
	2021.11.9.	· 2022년도 예산안 상정
	2021.11.16.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
	2021.12.1.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의결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제392회 임시회 (2021.12.13. ~2022.1.11.)	2022.1.5.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 「군인재해보상법」 등 법률안 의결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제393회 임시회 (2022.1.27.~2.25.)	2022.2.28.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제394회 임시회 (2022.3.7.~4.5.)	2022.3.22.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2022.3.29.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397회 임시회 (2022.5.3.~6.1.)	2022.5.17.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제21대 후반기 국회
제398회 임시회 (2022.7.4.~8.2.)	2022.8.1.	•업무보고(국방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99회 임시회 (2022.8.16.~8.31.)	2022.8.29.	· 2021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상정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상정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2022.8.31	· 2021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제400회 정기회 (2022.9.1.~12.9.)	2022.9.19.	·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방위사업기술보호법」 등 법률안 상정 ·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의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상정
	2022.10.4. ~10.24.	· 2022년도 국정감사 실시
	2022.10.31.	· 2023년도 예산안 상정
	2022.11.4.	· 2023년도 예산안 의결 · 「군무원인사법」 등 법률안 의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법률안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2022.11.18.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 「군인연금법」 등 법률안 의결
제401회 임시회 (2022.12.10. ~2023.1.8.)	2022.12.28.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 「광주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상정

동영상

국군 홍보영상
p047

육군 홍보영상
p047

해군 홍보영상
p048

해병대
홍보영상
p048

공군 홍보영상
p049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p072

육군 KCTC 여단급
쌍방훈련
p087

해군
환태평양훈련(RIMPAC)
p089

한미 공군 이동식발사대
타격훈련 및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p089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사업
p119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p127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 시행
p137

DX KOREA 2022
p146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p152

한미 해군, 동해
연합 해상훈련
p163

美 전략폭격기(B-1B)
한반도 재전개,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p163

2022년
서울안보대화(SDD)
p189

바다의 날 청해부대
UDT 해상훈련
p202

2022 국군 화보
프로젝트 '강한 국군'
p225

공익광고
'70년의 기다림'
p226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고속버스 모바일
서비스
p228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p232

백마고지
유해발굴
p275

KF-21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p327

색인

ㄱ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58
과학화경계시스템 51
국군외상센터 214, 216
국군포로 101, 102, 103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69
국방AI센터 109, 115, 116, 259
국방과학연구소 68, 127, 14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74, 275
국방우주발전위원회 122
국방인권모니터단 290
국방정신전력원 87, 95
국방헬프콜센터 285, 286
군 공항 이전 240, 241
군 직무표준화 249, 250, 251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263
군비통제검증단 376
군인권개선추진단 290, 291
군인권보호관 291
군인권지키미시스템 290
군인연금제도 273, 274
군인재해보상법 278
국제평화지원단 206, 208, 315
가상현실 117, 136, 142
국제평화활동센터 205, 206, 207, 208
국방안전훈령 218, 219
국민소통전문가단 225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226
국민정책디자인단 226
군사시설 보호구역 228, 239, 240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249, 279
국가직무능력표준 250

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3
남북공동유해발굴 98

ㄷ

다련장 47, 50, 132, 133, 258
담대한 구상 23, 38, 97, 98, 100, 155, 190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193
대량응징보복 57, 60, 61, 108, 130, 255, 258
대륙간탄도미사일 15, 16, 30, 163
대체복무제도 231, 295
대한민국방위산업전 146
동명부대 196, 197, 198, 209, 309, 310 311
드론 택배 113
드론봇 전투체계 48

ㄹ

룬샷 프로젝트 140

ㅁ

마일즈 82, 255
무인수상정 133
무인잠수정 18, 128, 133
무인항공기 18, 49, 51, 58, 130, 132, 133, 208, 258
미래도전국방기술 127, 139, 140
민군상생 복합타운 242, 243
메디온 216

ㅂ

방위력개선비 131, 132, 172, 254, 255, 257, 258
방위비분담금 156, 157, 158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56, 157
병역명문가 232
북방한계선 52, 88
비무장지대 98, 226, 275
비질런트 스톰 164

ㅅ

서울안보대화 11, 66, 101, 126, 183, 188, 189, 190
순항훈련 85, 88, 89
스마트 인재관리체계 221, 234, 235
스마트팩토리 54

스톡홀름 합의 24
신뢰성기반비용관리 224
신속시범획득사업 107, 144
상륙돌격장갑차 133
성실수행 인정제도 139, 140
상호군수지원협정 195
상태기반정비 54, 221, 222
상생발전협의회 243
선택형 급식체계 264

ㅇ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89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10, 11, 13, 66, 74, 174, 175, 177, 178, 179, 189, 191, 206, 207
아크부대 183, 203, 204, 209, 309, 310, 316, 317
아태경제협력체 10
아프리카돼지열병 69, 73, 74
연합지휘소 훈련 54, 92, 166, 167
오쉬노부대 200, 209, 309, 310, 313, 314
우주안보워킹그룹 126, 190
원격정비지원체계 54
유엔 남수단임무단 198, 19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188, 204, 208, 309, 317
유휴·방치시설 242
인플루엔자 74, 218

ㅈ

자산형성프로그램 269, 27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5, 31, 32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9, 72
전쟁기념관 95
지휘소연습 91, 166, 169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49, 51, 58, 130, 132, 258
자기개발비용지원 제도 246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226

ㅊ

창업경진대회 247
천무 147, 172, 323, 324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227
청해부대 184, 188, 200, 201, 202, 209, 309, 310, 313, 315, 316
청렴옴부즈만 제도 227
창업지원 프로젝트 246, 247

ㅋ

킬체인 57, 59, 130, 172, 255, 258
코브라훈련 88, 91
칸퀘스트훈련 91
카만닥훈련 91, 178

ㅌ

탄약 비군사화 244, 245
태평양억제구상 15
통합방위협의회 78, 79

ㅍ

플루토늄 29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96

ㅎ

한국형 3축체계 23, 38, 41, 57, 108, 110, 128, 129, 130, 133, 255, 257, 258
한국형미사일방어 49, 57, 59, 130, 133, 255, 258
한미안보협의회의 54, 125, 152, 154, 158, 160, 161, 164, 165, 170, 172, 173, 194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161
한빛부대 196, 198, 199, 205, 209, 309, 310, 312, 317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74
해외긴급구호대 75
화이트햇 콘테스트 64
환태평양훈련 88, 91, 304
힌남노 72, 74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70

한미상호방위조약 50, 160, 301, 302
화랑훈련 68, 80, 91, 92
화학무기금지기구 69, 70, 71, 101
해외파병 상비부대 208, 209, 309

A

ADEX 146, 158, 178, 182, 187, 225
ADMM-Plus 10, 13, 66, 74, 177, 178, 179, 189, 190, 191, 206, 207
APS 50
AR 84, 117, 118
ARF 11, 189, 191
ASF 69, 73, 74
APEC 10
AOIP 13
AI 42, 51, 68, 73, 84, 94, 95, 108, 109, 110, 111, 112, 115, 118, 129, 144, 221, 235, 259
AUKUS 19

B

BRICS 18
BWC 192
BCTP 88

C

CCPT 54, 92, 166, 167
CCWG 65, 154
CIS 18
CPX 91, 166
CSTO 9, 18
CWC 71, 101, 192
CWMDC 70
CYBERNET 67
CBM+ 54, 222

D

DSC 161, 162, 163, 165
DX-Korea 146

E

EDSCG 161
e-MU 246
e-Nav 81
EU 9, 13

F

FA-50 146, 147, 323, 324
FDO 50
FOC 167, 171, 173

G

GSOMIA 174
GFP 15
GOP 51, 115, 116, 129, 270

H

HEU 29
HGV 16
HUAV 58

I

ICBM 15, 18, 21, 22, 23, 29, 30, 31, 98, 163
IOC 171, 173
IoT 54, 65
IRBM 31, 155, 164

J

JCPOA 9

K

KAAV 72, 131
KADIZ 176
KAMD 57, 59, 129, 172, 255, 258
KASI 153, 177
KCTC 87, 88, 92
KDRT 75, 203

KF-21 131, 177, 258, 325, 326
KIDD 154, 161, 165
KMPR 57, 60, 61, 130, 255, 258

L

L-SAM 60, 132

M

MADEX 146
MDL 348, 350, 352
MUAV 58

N

NASA 127
NATO 9, 10, 14, 67, 70, 101, 163, 185 186
NDS 8, 14
NLL 23, 31, 39, 52, 88, 98
NPR 162
NPT 101, 192, 305
NSS 8, 14

O

OPCW 69, 70, 101

P

PBL 55, 224
PDI 15
PKO 179, 182, 183, 204, 205, 206, 207, 208, 310, 312, 317

R

RAA 19
RHCC 11
RAM-C 55, 224
RIMPAC 88, 89, 91, 304

S

SCM 54, 125, 152, 154, 160, 162, 163, 165, 170, 171, 172, 173
SCO 8, 9, 18
SDD 11, 66, 101, 188, 189
SLBM 15, 28, 31, 155, 258, 327
SMA 91, 156
SOFA 19, 156, 241, 302, 320
SPD 54
SPG 54
SSA 18, 124
SAREX 89

T

TPFDD 50

U

UAV 18, 271
UNOCT 68
UFS 54, 92, 166, 167, 168, 173
USV 18
UUV 18

V

VR 84, 95, 117, 118, 136, 255

W

WMD 25, 37, 38, 41, 60, 61, 101, 128, 130, 133, 161, 163, 193

Y

YRP 306, 319

2022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	대한민국 국방부
편찬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
편집디자인	㈜다니기획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방전략과(02-748-62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대표전화 : 02)748-1111 민원안내 : 02)748-6891 Fax : 02)748-6895
www.mnd.go.kr